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외교학 박사학위논문

# 반역의 정치학

- 대한제국기 혁명개념연구 -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이헌미

# 반역의 정치학

- 대한제국기 혁명개념연구 -

지도교수 하 영 선

이 논문을 외교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이 헌 미

이헌미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7월

위 원 장 최 정 운 (인)

부위원장 장 인 성 (인)

위 원 전 재 성 (인)

위 원 강 상 규 (인)

위 원 하 영 선 (인)

## 국문초록

이 연구의 주제는 1895년에서 1910년 사이 한국에서 국문으로 번역된 서양 정치사 단행본과 신문 기사, 잡지 논설 등을 비교 분석하여 근대 혁명의 한국적 개념화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자의 관심은 혁명이 실패하였거나, 미완성되었거나, 유산되었거나, ‘부족’한 곳에서 혁명에 관한 언어가 넘쳐나는 부조화적인 현상에 있다. 연구자는 혁명의 실재를 반영하는 도구로써 혁명의 언어를 취급하기보다는, 혁명에 관한 언어가 그 자체로 혁명적인 현실을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라고 주장한다. 연구의 초점은 대중매체와 인쇄물을 통해 이 시기에 유포되고 공유된 혁명에 관한 언설 그 자체의 지형을 부각시키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외래의 근대가 언어를 통해 먼저 학습되고, 그 언어에 정합적인 혹은 부정합적인 현실 경험을 통해 언어가 토착적으로 전유되는 개념사 사례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대한제국기 혁명개념은 서로 다른 역사해석과 정치적 전망의 교차점이자 전선으로 작용하였다. 혁명이라는 어휘의 채택 여부와 혁명 서사의 논조는 이 시기 체제 개혁의 정도와 방법에 대한 저자의 지향과 밀접하게 맞물린다. 1895년에 발행된 유길준의 『서유견문』에는 ‘혁명(革命)’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다. 1896년 『만국약사(萬國略史)』에서는 ‘프랑스혁명(佛蘭西革命)’이라는 말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갑오내각이 붕괴한 뒤 1898년 발행된 『아국약사(俄國略史)』에서는 ‘혁명’이라는 말이 삭제되고 ‘민란(民亂)’으로 대체되었다. 갑오개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본인 고문관이 쓴 『만국약사』를 통해 ‘프랑스혁명’이라는 말이 들어왔지만, 『만국약사』에서도 프랑스혁명의 폭력적 과정과 합중정치는 부정적으로 서술되고, 강력한 황제 중심의 입헌정체가 혁명의 최종적 형태로서 옹호된다.

또, 학부를 통해 발행된 관찬(官撰) 외국사 교과서들은 1900년까지 정치체제 변경을 목적으로 한 인민 폭동을 ‘민란’으로 개념화하였다.

『만국약사』 이후 외국사 단행본에서 ‘혁명’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한 것은, 1899년 6월 황성신문사에서 번역, 간행된 『미국독립사』에 서다. 1900년 6월 황성신문사에서 발행된 『법국혁신헌사(法國革新戰史)』에서는 프랑스혁명의 전 과정이 상세히 기술된다. 독립협회 해산 직후 황성신문사에서 연달아 출판된 『미국독립사』와 『법국혁신헌사』는 정부에 의해 좌절된 독립협회의 개혁 구상안을 계몽하고 선동하기 위한 정치 팸플릿이었다. 건양과 광무 초기 대한제국의 개혁 세력은 우리 정치사회에 적합한 “군주, 귀족, 평민간의 권력균형”을 구현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모색하고 있었다. 독립협회와 박영효로 대표되는 급진적 개혁론자들은 1787년 미국 헌법과 1795년 프랑스 헌법으로부터 군주, 양반, 계몽된 평민의 일부가 권력을 분점하는 혼합정을 구상하였다. 그에 비해 유길준 등의 온건 개혁론자들은 근대 이행기에 국가 근대화에 드는 비용을 확보하고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의 통일성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프러시아의 계몽전제군주정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왕실과 권문세대로 이루어진 기득권 보수 세력은 개량의 수준을 넘어서는 제도 차원의 개혁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었다. 오히려 개혁 세력의 대중 운동과 민권 신장에 위협을 느끼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개혁의 요구를 억압하였다.

1899년을 기점으로 대한제국의 서양사 단행본과 황성신문 지면에서는 ‘혁명’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세계 곳곳에서 혁명이 임박했거나 혁명이 일어났다는 기사들이 대거 출현하였다. 이것은 1898년 말 독립협회 해체를 계기로 개혁세력이 왕조 정부를 통

한 체제 전환의 희망을 버리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시기 급진개혁파의 핵심인물이었던 박영효는 1899년 이래 망명지 일본에서 중국 및 필리핀의 혁명파와 밀접하게 교류하였다. 1900년에서 1903년까지 진행된 박영효의 활빈당 운동은 쑨원의 중국 혁명 프로그램을 모방한 것이었다. 인민 선동용 정치 팸플릿인 1900년의 ‘인권론(人權論)’에서 박영효는 민본(“民維邦本”)과 탕무혁명이라는 전통적 혁명 레토릭을 통해 인민의 자유와 권리 및 저항권이라는 근대 혁명의 이념을 개진한다.

박영효가 이 시기 혁명파의 중심이었다면, 개량파의 중심에는 유길준이 있다. 유길준은 미간행 원고 『정치학(政治學)』에서 프랑스혁명 이후 설립된 민주 의회가 통일성 있는 권력을 창출하지 못함으로써 인민의 뜻에 의해 전제군주정으로 회귀하는 양상이 반복되는 것을 비판한다. 박영효가 젊은 의친왕을 옹립하는 ‘혁명’을 통해 체제 변혁을 이루고자 한 반면, 유길준이 대한제국에 적용 가능하며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정치체제는 프러시아식 계몽절대군주제였다. 이러한 입장은 1900년 유길준이 연루된 혁명협약서 사건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애국계몽기 혁명담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루소가 부각되면서 인민의 일반의지와 천부적 자연권에 기반한 혁명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혁명의 선취요건으로 민지(民智)를 강조, 실력양성론으로 귀결된다. 둘째, “혁명유신(革命維新)”이라는 일본발 어휘가 출현하면서 혁명의 급진성이 부인되고, 한국의 현 상황에서 혁명의 불가능성이 강조된다. 의병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신문지법에 의한 통감부의 언론 검열 속에서 ‘혁명’을 직접적으로 찬성하고 선동하는 언설을 지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세 종류의 글에 주목하게 된다. 첫째, 1907년 발행된 『비율빈전사』와 그 속에 전문이 기재되어 있는 민주공화헌법이다. 둘째, 러시아와 중국 혁명당의 혁명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일련의 외국 단신들이다. 셋째, 이러한 프로그램의 한국적 수용이라고 할 수 있는 1909년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관련 논설이다.

1895년 이래 대한제국의 혁명개념은 모두 혼합정의 형태를 취한 입헌군주정을 지향했다. 가장 급진적 개혁세력이었던 박영효의 혁명구상도 젊은 의친왕을 옹립하는 것이었지, 왕정 자체의 폐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1907년 고종이 강제 양위함으로써, 전통의 부담 없이 민주공화주의가 본격적으로 개진된다. 1907년 발행된 『비율빈전사』에는 혁명이라는 어휘가 수도 없이 사용될 뿐 아니라, 필리핀 제 1공화국 헌법의 전문이 게재되어 있다. 같은 시기 청국에서 ‘입헌’이 반혁명 개량주의의 구호였던 데 반해, 준 식민지 상황의 대한제국 말기에 ‘민주공화’를 천명하는 ‘헌법’을 논하는 것은 매우 급진적인 행위였다.

정치적 자유와 독립을 위한 폭력 투쟁이 역사 진보의 불가피한 방향임을 보여주는 러시아와 중국의 혁명 동향 기사가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1909년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였다. 그리고 해외 무장독립투쟁 단체들이 스스로를 ‘한국혁명군’과 ‘조선혁명당’으로 개념화하기 시작한다. 이제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의 이념은 러시아, 중국, 필리핀의 혁명 현실과 결합하여 한국적 혁명의 프로그램을 낳기에 이르렀다. 1910년대에 발표된 독립선언서들은 거의 예외 없이 민주공화정체를 지향한다. 1920년대 한성, 상해, 러시아령의 임시정부들 헌법에서도 일제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천명한다. 이것은 1948년 제헌헌법으로까지 이어진다. 대한제국에는 혁

명이 없었다. 그러나 혁명의 언어는 면면히 살아남아 역사적 의미의  
층위를 더해가며 그 자체로 또 다른 혁명적 현실을 추동하였다.

주요어 : 대한제국, 혁명, 개념사, 박영효, 유길준

학 번 : 2004-30900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제기 .....	1
제 2 절 패자의 정치사상사 .....	8
제 3 절 번역의 국제정치 .....	16
제 4 절 개념사 .....	21
제 2 장 예비적 고찰 .....	36
제 1 절 서양의 혁명개념 .....	36
제 2 절 중국의 혁명개념 .....	45
1. 중국 전통적 혁명개념 .....	45
2. 중국 근대의 혁명개념 .....	48
제 3 절 조선왕조실록의 혁명개념 .....	53
제 3 장 갑오개혁기의 혁명개념 .....	67
제 1 절 혁명, 개혁, 계몽의 연속성과 단절 .....	67
제 2 절 근대적 혁명개념의 출현 .....	73
1. 프랑스혁명의 번역어 I: 『만국약사』의 ‘혁명’ .....	73
2. 프랑스혁명의 번역어 II: 『아국약사』의 ‘민란’ .....	89
3. 프랑스혁명의 번역어 III: 『서유견문』의 침묵 .....	94
제 4 장 광무개혁기(1897-1904)의 혁명개념 .....	100
제 1 절 독립협회의 정체구상과 혁명개념 .....	100
1. 미국독립혁명과 ‘합중입국’ .....	100
2. 프랑스 ‘혁명난’: ‘민주’의 이상과 현실 .....	109
제 2 절 망명 개혁세력의 혁명론과 반혁명론 .....	120

1. 박영호의 혁명 공작과 「인권론」 .....	120
2. 유길준과 반혁명의 『정치학』 .....	139
<b>제 3 절 혁명개념의 부상</b> .....	<b>150</b>
1. 폐쇄시대의 도래 .....	150
2. 혁명세계의 가시화와 혁명의 개념화 .....	154
<b>제 5 장 애국계몽기(1905-1910)의 혁명개념</b> .....	<b>169</b>
<b>제 1 절 반혁명의 레토릭과 혁명개념</b> .....	<b>170</b>
1. 반혁명의 레토릭 I: 혁명과 계몽 .....	170
2. 반혁명의 레토릭 II: 유신혁명과 사회진화론 .....	173
<b>제 2 절 혁명과 독립투쟁</b> .....	<b>178</b>
1. 러시아와 중국의 혁명동향 .....	178
2. 한국혁명군과 조선혁명당의 출현 .....	187
<b>제 3 절 『비율빈전사』와 민주공화헌법</b> .....	<b>190</b>
1. 한 권의 책 .....	190
2. 유학생의 귀국 .....	194
3. 혁명과 정체(正體): 안국선의 (정치원론) .....	201
4. 헌법혁명: 식민지 인민주권의 행방 .....	212
<b>제 6 장 결론</b> .....	<b>218</b>
<b>참고문헌</b> .....	<b>231</b>
<b>Abstract</b> .....	<b>249</b>

## 표 목 차

[표 1]	.....	228
-------	-------	-----

## 제 1장. 서론

### 1절. 문제제기

한국 근대 정치사에는 왜 혁명이 부재하는가? 이 질문은, 구미 선진국의 역사를 넘어서는 세계사적으로 다양한 근대의 경험들과, 근대성 자체에 대한 비판, 성찰, 극복에 대한 논의가 이미 오랫동안 진행된 마당에,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근대화의 경로로 부르주아 시민혁명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진부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민 민주주의로 요약되는 정치적 근대화 내지 정치발전의 문제는 개화 사상가들에 의해 최초로 제기된 이래,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서 우리 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화두이다.<sup>1)</sup>

근대의 혁명과 전쟁은 피를 대가로 정치가 쇄신되는 양대 기제이다. 시민혁명과 독립전쟁을 통해서 개인은 정치공동체에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국가기구에 권력을 위임하는 사회계약을 창출하거나 갱신한다. 그런데 조선왕조의 멸망은 내재적 혁명이 아니라 일제의 침략에 의해 이루어졌다. 왕조국가에서 국민국가로 변환되는 과정에 식민국가가 개입하였고, 시민혁명 없이 사회의 구조적 변화들이 일어난 것이다. 독립 또한, 일제와 싸워 이김으로써 자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미일전쟁의 부수적 산물로 주어졌다. 이처럼 국내 정치에 대한 국제적 간섭이라는 변수가 지정학적으로 상존하는 상황에서, 근대이행기 한국의 변혁운동에 지속적으로 길항하는 반봉건

---

1) 1950년대 한국 학계의 서양근대사 연구는 시민혁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자본주의에 토대를 둔 합리적 시민사회의 건설이라는 문제의식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임지연, “한국서양사학의 근현대의 변혁운동과 90년대 한국서양사학의 반성과 전망: ‘시민계급적 관점’에서 ‘민중적 관점’까지”, 역사비평, Vol.10 (1990.2), pp.107-113.

과 반제의 양대 과제는 역사발전의 합목적적인 방향성과 투쟁주체에 대한 인식을 분열시키고, 그 결과 통합성 있는 한국 근대사 서술을 쉽지 않게 만든다.

그러므로 최초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첫째, ‘근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또, 한국사에 있어 근대의 기점과 종점은 언제인가? 둘째, 시민혁명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 적용 가능한 혁명에 관한 보편이론이 존재하는가? 셋째, 한국 근대 정치사에서 혁명에 가장 유사한 계기들은 언제, 어떤 형태로 발생했는가? 그것은 왜 혁명으로 성취되지 못했는가? 넷째, 혁명이 없었다고 혁명에 대한 말과 생각도 없었는가? 정치사적 실패가 정치사상사 기술에서 누락되는 것으로 이어질 때, 실현되지 못한 혁명 담론의 역사적 실상과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는가?

역사서술에 있어 시기구분의 문제는 왕조의 교체나 전쟁, 생산양식의 변화, 기술혁신 등 일련의 사실에 의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역사에 대한 해석 및 평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런 의미에서 “시기 구분은 절대 순수한 작업이 아니다.”<sup>2)</sup> 한국사 서술에 있어 근대의 기점은 시기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해방 이전까지는 근대 대신 ‘근세’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서양사에서는 1789년의 프랑스대혁명이 통상 근세의 기점인 반면, 한국사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채 14세기 말 조선건국부터를 근세로 보았다. 그로 인해 근세가 너무 길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세’라는 시대구분이 새로 등장하였다. 처음에는 1860년대 대원군 집정 이후부터를 최근세로 보다가, 이후 1894년 동학혁명 이전을 최근세의 전기(前

---

2) Benno Teschke, *The Myth of 1648: Class, Geopolitics, and the Making of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 New York: Verso, 2003), p.2.

期), 즉 '개국기'(開國期)로 잡고, 청일전쟁과 갑오경장 이후 1919년의 기미독립운동 직전까지를 최근세 후기, 즉 '민족수난기'로 잡는 쪽으로 인식이 변화되었다. 근세의 종점 및 현대의 기점 또한 초기에는 1910년 경술국치로 삼았다가, 구미외교사에서 제1차대전을 현대사의 구분선으로 삼음에 따라 1919년 독립운동 쪽으로 이동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내재적 발전론, 근대화론, 세계체제론 등의 상이한 문제의식에 따라 영정조 시대, 개항기, 1894년 등이 한국근대의 기점으로 다투어졌다. 한국 근대의 종점 또한 민족국가 수립과 완성의 시점을 문제를 놓고 1945년 해방설과 미래의 통일설로 입장이 나뉘어져 논의가 진행되었다.<sup>3)</sup>

영·정조시대 이래의 사회문화적 동향을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변화와 연결시키는 내재적 발전론을 일정 부분 수용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본주의적 맹아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 근대의 기점으로 삼기는 어렵다.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 구미적인 근대로의 이행이 강요된 한국적 근대의 현실을 감안하면, 개항 이후를 근대의 기점으로 삼는 근대화론자들의 시대구분 논리가 더 적합해 보인다. 그러나 근대화론에 따르면 후진국의 근대화는 서양제국에 대한 모방과 추수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들의 역사인식에서는 식민지적 자본주의 주체와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주체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반봉건 사회의 근대는 본질적으로 제국주의 사회의 근대와 다르며, 한민족이 수익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자본주의 발달 정도가 아니라 반제 투쟁의 관점에서 한국 근대사를 인식해야 한다는 사회구성체론자의 주장이 타당한 면이 있다. 쟁점은 결국 한국 근대사를 인식하는 특수하고도 결정적인 요소로서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 강요된 구미적인 근대로의 이행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

3) 강만길, (한국사 24: 한국사의 이론과 방법 2) (서울: 한길사, 1995).

에 있다.

이 논문의 관심사는 한국 근대의 기점과 종점을 확정하는 데 있지 않다. 그러나 엥겔스가 파악한 서양 근대문명의 특징이 산업혁명, 정치혁명, 사상혁명에 있었으며, 이 가운데 사상과 철학의 혁명은 정치혁명으로 수렴된다고 할 때,<sup>4)</sup> 정치혁명은 한국사 인식에 있어 근대를 규정하는 핵심 기획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 근현대 정치사를 통틀어 ‘혁명’이라고 명명된 사건들을 꼽자면, 1894년의 갑오농민봉기와 1919년의 3·1운동, 1960년의 4·19의거 정도이다. 그 가운데 독재정권을 타도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성공한 것은 4·19혁명 뿐, 1919년과 1894년의 시도는 모두 처참하게 실패했고, 이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혁명이라는 용어의 채택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다.<sup>5)</sup> 다시 말해서,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중국혁명과 같은 ‘한국혁명’은 없다.

스카치폴은 국가가 국제적 압력에 시달리고 국내개혁에 실패하면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붕괴하는 과정에서 대중이 봉기함으로써 사회혁명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 때 사회혁명은 아래로부터의 폭동에 의해 국가구조와 계급구조가 급격하고도 근본적인 변혁을 경험하는 것이다. 갑오농민봉기의 경우, 국제세력 침투와 국내정치 위기 심화를 배경으로 했다는 점에서, 스카치폴이 제시한 사회혁명의 독립변수가 존재했다. 그러나 농민봉기의 실제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는 정치변혁과 사회변혁이 결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혁명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렇다면, 성공하지 못한 혁명은 전혀 혁

---

4)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2: 근대 동아시아와 말기조선의 시대구분과 역사 인식) (파주: 한길사, 2011[2009]), p.31.

5) 1894년 사건의 명칭을 놓고 동학란, 동학혁명, 동학농민운동, 갑오농민전쟁 등 다양한 용어가 다투어진 연구사에 대해서는 양현종, “동학농민전쟁 용어 및 성격 토론: 1894년 농민봉기, 어떻게 부를 것인가”, 역사비평, Vol.12 (1990) 참조.

명일 수 없는가? “농민봉기가 국가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혁명으로 발전되지 못했다거나 혹은 ‘식민지 국가’로의 역사 전환기에서 근대입헌민주주의 정치체제 수립을 보장하지 못한 채 외세의 개입과 ‘국가붕괴’의 잔여시기를 오히려 단축”시켰다는 비판과는 별개로, 이 사건의 혁명성을 논할 여지는 없는가?<sup>6)</sup>

조소앙이 기초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 후 민족국가 건설계획으로 1941년 공포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서는, 1919년 3·1독립선언이 ‘혁명’으로, 독립선언서가 ‘헌전(憲典)’으로 표현된다. 1943년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3월 1일을 맞아 발표한 글의 제목은 「석(釋) 3.1혁명정신」이었다. 1948년 제헌의회 본회의에 보고된 헌법기초안의 전문(前文) 도입부에서는 대한민국이 ‘3.1혁명’의 독립정신을 계승했다고 천명하였다. 제헌국회의장 이승만은 전문(前文)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정신적 기원은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한 ‘기미년 3.1혁명’과 이후의 독립투쟁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3.1혁명’이라는 용어를 헌법 전문에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논의과정에서 혁명은 국내정치 변혁운동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민족적 항쟁에 사용하기 부적절하다는 이의가 제기되어 헌법전문에는 ‘3.1혁명’ 대신 ‘3.1운동’이라는 용어가 채택되었다.<sup>7)</sup> 성공한 혁명들을 분석하여 추출된 과학적 엄밀성을 관찰시킨다면, 3.1운동은 혁명이 될 수 없고, 독립선언서는 선언서에 불과할 뿐 헌법이 아니다. ‘혁명적’ 현상에 그친 갑오농민봉기 또한 혁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

6) Theda Skocpol,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17; 박종성, “갑오농민봉기의 혁명성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12 (1995), pp.333-335에서 재인용.

7) 신동진, “제헌의회속기록: ‘3.1혁명’이 ‘3.1운동’이 된 사연”  
[<http://www.socialdesign.kr/news/articleView.html?idxno=5486>]



혁명'이나 '동학혁명'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왜? 이 말들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 연구의 주제는 1895년에서 1910년 사이 한국에서 국문으로 번역된 서양 정치사 단행본과 신문 기사, 잡지 논설 등을 비교 분석하여 근대 혁명의 한국적 개념화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자의 관심은 혁명이 실패하였거나, 미완성되었거나, 유산되었거나, '부족'한 곳에서 혁명에 관한 언어가 넘쳐나는 부조화적인 현상에 있다. 연구자는 혁명의 실재를 반영하는 도구로써 혁명의 언어를 취급하기보다는, 혁명에 관한 언어가 그 자체로 혁명적인 현실을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라고 주장한다. 이하에서 상술하겠지만, 개념사에 대한 이해가 척박한 채로 개념 연구가 유행하고 있는 지금의 학문 풍토에서, 논문의 주제인 혁명을 다루는 단위로써 연구자가 개념을 선택한 이유에 관해 설명할 필요성을 느낀다. 필자는 대한제국기 혁명운동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대한제국기에는 혁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는 성립하기 어렵다. 혁명 운동에 관여한 주동세력의 사상을 다루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연구의 초점은 대중매체와 인쇄물을 통해 이 시기에 유포되고 공유된 혁명에 관한 언설 그 자체의 지형을 부각시키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외래의 근대가 언어를 통해 먼저 학습되고, 그 언어에 정합적인 혹은 부정합적인 현실 경험을 통해 언어가 토착적으로 전유되는 개념사 사례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개념 형성의 초기 단계로서 대한제국기의 중요성에 착목하였다. 이 시기 '혁명(革命)' 개념은 여러 겹의 의미론적 층위(semantic layers)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겹겹의 의미를 당대의 문헌을 원전간(intertextual) 분석과 어휘 통계학적인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하고 해석함으로써, 갑오개혁기, 광무개혁기, 애국계몽기 혁명의 정치사와

지성사를 매개하는 것이 연구자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 ‘개념사  
(概念史)’적 접근방법을 사용했다.

## 2절. 패자의 정치사상사

정치사회는 스스로의 역사를 창조하고, 서술한다. 하지만 정치사와 사상사가 정합성을 띠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자신의 역사를 관리할 능력이 있고, 과거 인식 속에서 그것을 재고하고 쇄신할 수 있는 정치사회”에서 가능한 일이다. 생존에 급급한 주변부 후발 약소 세력에게는 정치를 자발적으로 성찰하여 기록할 시간과 여력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 결과 역사적 패자의 정치언어는 정치사상사 기술에서 탈락되어 망각되거나 승자의 이념에 흡수되기 쉽다. 그것이 “정치사상사가 압도적으로 서유럽과 북미에 편향되어 진행된 반면, 역사철학이 독일, 중부 유럽, 러시아 및 유럽 밖에서 순차적으로 유행한 까닭”<sup>8)</sup>이다. 어떤 이들에게 역사가 인간의 행위에 의해 합리적으로 계획될 수 있는 것이라면 다른 이들에게 역사는 역사 자체의 힘과 논리를 가진 투쟁의 장으로 경험되기 때문이다.

구한말과 식민지시기를 관통하여 시도된 일련의 계몽적 기획들은 ‘구망(救亡)’<sup>9)</sup>의 과제를 결국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나라를 독립시킬 전략과 성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종종 폄하된다. 이 시기 지식인들은 서구 문명을 모방하고 학습했을 뿐, 이것을 의미 있는 정치사상으로 심화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처럼 정치적 실패는 종종 정치사상 자체의 오류나 부족, 존재 부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한국 근대 정치사상사는 정말 이처럼 ‘바보’와 ‘광인’<sup>10)</sup>과 변절자들로 가득차 있을까? 과거의 사상가들이 우리와는

---

8) J. G. A. Pocock, “Quentin Skinner: The History of Politics and the Politics of History”, *Common Knowledge*, Vol.10 No.3 (2004), p.549.

9) ‘계몽’과 ‘구망’의 대당에 대해서는 리찌허우, 「계몽과 구망의 이중변주」, 『중국현대사상사론』(파주: 한길사, 2005), pp.42-101. 여기에서 리찌허우는 중국 근대 사상사를 집단주의적 반제 봉건 운동이 개인주의적 반봉건 계몽 운동을 압도한 과정이라고 보았다.

매우 다른 물음들에 골몰해 있었을 가능성과, 그들의 저작에서 우리가 아닌 그들 자신의 질문과 답변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sup>11)</sup>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역사적인 자세로 철학사를 서술하기 원한다면, 대상 원전을, 저자의 의도를 밝혀줄 수 있는 지적 콘텍스트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 관건”이 된다.<sup>12)</sup> 그리고 “역사가가 어떤 고전을 두고 해당 저자가 자신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지 못했다는든지 이른바 항구적 주제들에 관한 이론을 세우지 못했다는 비판.....이 타당한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바로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거나 최소한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만 한다.”<sup>13)</sup>

영국의 정치사상사가 스킨너(Quentin Skinner)는 말한다. “역사학자들은 사회 인류학자들이 진즉에 깨우친 다음의 사실에 여전히 둔감

---

11) ‘광인’의 비유에서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다음의 질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 이론에서, 만약 누군가가 ‘외국어’로 말을 한다면,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면, 그는 게임에 참가하고 있는 것인가? 그의 발화행위는 전적으로 무의미한가? 비트겐슈타인은 학문인생 후기에 언어활동과 게임의 유사점을 다음과 같이 들면서 언어게임 이론을 제창하였다. 1. 둘 다 규칙에 지배받는다. 2. 체스의 말이 그 소재와는 전혀 상관없이 참가자들 간의 룰에 의해 움직여지듯이 말의 의미도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시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의 구체적인 사용에 의해 결정된다. 즉 말의 의미나 언어활동은 개별적인 언어사용의 문맥에 의존한다. 3. 체스의 참가자가 그 게임 전체의 일부로서만 의미를 지니듯이 언어게임도 언어활동 전체 혹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전체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4. 게임에서는 실제로 참가자와 현실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게임에 참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언어게임에서도 공통의 언어에서 실제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이 분명히 알 만한 표정이나 몸짓을 하지 않는 한 커뮤니케이션은 성립하지 않는다. 기다 겐, 『현대사상지도』(서울: 산치럼, 2005), pp.198-200. 4번 규칙을 적용하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는 사람은 이 언어게임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한다.

11) Quentin Skinner, *Visions of Politics Vol.1: Regarding method*, Introduction: Seeing things their way(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3.; 스킨너, 「사상사에서 의미와 이해」, 제임스 탈리 엮음, 유종선 옮김, 『의미와 콘텍스트-퀸틴 스킨너의 정치사상사 방법론과 비판』(서울: 도서출판 아르케, 1999[1988]), pp.138-139.

12) Quentin Skinner(2002), p.3.

13) 제임스 탈리(1999), p.103.

한 듯하다. 자신에 게 낯익은 개념이나 관습을 적용할 경우 과거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위험.”<sup>14)</sup> 그는 “합리적 행위자란.....자신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을 믿는 사람”<sup>15)</sup>이라고 하면서, “합리적으로 틀린 신념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sup>16)</sup>까지 상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합리적 신념을 역사가의 판단에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이다. 어떤 신념도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다시 말해 당대의 신념 네트워크의 한 부분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스킨너는 “누군가에 대해 그의 신념이 비합리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마지막에나 할 수 있는 말”이며 최대한 동정적인 시각에서 그들이 가졌던 개념, 그들의 분류법, 그들이 따랐던 사고과정을 발굴하고 재구성해볼 것을 촉구한다.<sup>17)</sup> 현재의 합리성에 의해 사후적으로 과거의 사상가를 바보나 실패자로 만들기 이전에, 과거 시점에서 저술의 의도와 의미가 역사적으로 탐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 근대사는 지역사 및 세계사와 밀접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논문의 주제인 ‘혁명’이라는 용어를 비롯하여, 근대사 연구의 기본 범주들이 대부분 선진 강국에서 탄생하고 이론화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객관적 ‘설명’ 못지않게 중요한 정치사상사 서술 과정에서 정작 우리 자신의 경험과 의미는 소외되는 모순이 있어 왔다. 현대 민주주의나 자유주의, 민족주의 등의 요소를 얼마나 함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저술의 가치가 평가되는 경우는 더욱 곤란하다. 이런 식의 접근은 정치사상사를 이념의 자기전개 과정으로 파악하

---

14) Quentin Skinner, “One Performing and Explaining Linguistic Actions”, *The Philosophical Quarterly* Vol. 20 (1971), p.36; Kari Palonen, “Rhetorical and Temporal Perspectives on Conceptual Change” in *Finnish Yearbook of Political Thought* Vol.3 (Jyväskylä: SoPhi, 1999), p.45

15) 제임스 탈리(1999), p.470.

16) 제임스 탈리(1999), p.473.

17) 제임스 탈리(1999), pp.481-482.

고 인간의 행위주체성을 괄호에 넣어버림으로써, 정치사상을 탈정치화시킨다. 인간은 사상의 대리자이거나 현실에 압도되어 아예 사상 자체를 창출하지 못한 패배자로 취급된다. 일제 강점기라는 단절을 안고 있는 한국 근대 정치사상사에서 이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1895년에서 1910년은 나라가 망해가는 암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서구 지식의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때이다. 1883년 한성순보를 필두로 1896년 독립신문, 1898년 제국신문과 황성신문, 1904년 대한매일신보 등 신문이 등장했고, 1896년의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이후 1910년까지 학회보·학보·월보·회보 등의 명칭으로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하여 서구의 사상과 제도를 다방면에서 소개하고 당시의 정치·사회·경제를 논한 잡지들이 무려 40여종 발행되었다. 해외유학생, 전현직 관리, 지주·상인층, 개신유학자, 기독교계, 천도교계 등 지적·사회경제적·종교적 배경을 막론한 대한제국의 인사들이 일제히 참여하여 정치·경제·사회·과학기술·도덕·철학 전반에 걸쳐 신지식을 계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지면의 출현은 유례없는 일이었다.

문제는, 개별 저술이 만들어 내고 있는 담론 지형 전체를 올바르게 재구성하기 쉽지 않다는 데서 발생한다. 이러한 정보의 양적 증가를 정치사상의 질적 변화 내지 ‘근대화’와 연결시켜 설명할 방법이 있는가? 한 가지 방식은, 사상사적 변화의 계기를 사회사에서 찾는 것이다. 일례로, 신문, 잡지를 비롯하여 구한말에 출현한 대중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밝히는 작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세계적 차원에서 인쇄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상상의 공동체’<sup>18)</sup>와, 지역적 차

---

18)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서울: 나남출판, 2002); 로제 샤르티에, 백인호 옮김, 『프랑스 혁명의 문화적 기원』(서울: 일월서각, 1998); 굴리엘모 카발로로제 샤르티에 편, 이종삼 옮김.

원에서 19세기 후반 동양의 선발주자로서 일본의 근대화 기획이 역내에 전파되는 양상<sup>19)</sup>, 국내적 차원에서 학회설립 및 언론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청말 개혁사상가 량치차오의 기여<sup>20)</sup>가 모두 언급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설사 당시 사람들이 근대적 언론 매체에 노출된 정도를 통계 수치로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사상에 미친 영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변화의 과정과 양상을 밝히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그렇다면, 정치사상을 행위주체의 문제로 환원시켜, 모임을 결성하고 신문 잡지를 발행하고 기사 및 논설을 쓴 사람들의 생애와 성향을 통해 그의 저작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의존하고 있는 이러한 ‘지성사적 전기(intellectual biographies)’의 접근법이 안고 있는 결함은, 역사적 인물들의 사고방식을 사후적으로 재구성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술의 내용과 저자의 삶, 사상사와 정치사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이 순환론적 해석을 통해 봉합된다. 행위자들은 출신성분, 교육배경, 활동단체 등에 따라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 위정척사파나 친일, 친미, 친청, 친러파 혹은 실력양성론자, 무장투쟁론자로 분류되고, 그들의 저작은 그 꼬리표에 맞게 독해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사상적 불연속성을 보여줄 때, 어떻게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가? 특히 본인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때, 사상의 변화를 정치현실이나 사회적 상황으로 환

---

『읽는다는 것의 역사』(서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6); 마에다 아이, 유은경. 이원희 옮김, 『일본 근대 독자의 성립』(서울: 이룸, 2003); 천정환, 『근대의 책임기: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서울: 푸른역사, 2004).

19) 山室信一, 『法制官僚の時代 國家の設計と知の歷程』(東京: 木鐸社, 1994); 『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 基軸.連鎖.投企』(東京: 岩波書店, 2001).

20) 山室信一(2001), pp.425-430; 이만열, 「개화기 언론과 중국」, 정진석 외 공저, 『한국근대언론의 재조명』, (서울: 민음사, 1996); 우림걸(牛林杰), 『한국 개화기문학과 양계초』(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2002).

원시케 설명하는 것이 온당한가? 주어진 시기 정파에 따른 입장 차이를 사안별로 서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변할 때 동일한 애국계몽운동진영에서 혹자는 실력양성론으로 혹자는 무장투쟁론으로 갈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왕조국가에서 국민국가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식민국가가 개입하는 1895년에서 1910년 사이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것’ 자체의 정의가 달라지게 만드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정치에 관한 지식의 내용과 출처도 달라졌고, 정치적 언설의 언중(言衆)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여기에, 19세기 후반 만국 우편 연맹의 발족, 대양 횡단 해저 케이블과 전신의 발명, 증기선, 기차 등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해 가속화된 인적·물적·지적 교류는 외국의 지식과 정보 유입을 훨씬 용이하게 만들었다. 그간 대한제국기 애국계몽운동<sup>21)</sup>에 영향을 끼친 구미의 이론으로 사회진화론, 국가유기체설, 자유주의 등이 연구되어 왔다.<sup>22)</sup> 특정 사건이나 개별 사상가들에 집중되어 있던 과거의 연구 성향에서 벗어나, 대한제국 시기에 공유되던 저작물의 지적 계보를 추적하는 작업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다.<sup>23)</sup> 그러

21) ‘애국계몽운동’이라는 용어를 둘러싼 그 간의 논쟁에 대해서는, 안외순, “‘애국계몽운동’과 준 식민지에서의 자유주의: ‘계몽’의 양면성” 한국사상과 문화, Vol.21(2003), pp.192-194. 이 글에서는 ‘애국계몽운동’이라는 용어가 국내 학계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일반화된, 나름의 역사를 가진 고유명사가 되었다고 간주하고 사용하기로 하였다. ‘계몽운동’이든 ‘자강운동’이든, 주권을 실질적으로 박탈당한 상태에서 국가 기구를 통한 정상적인 통치행위가 아니라 지식인들의 사회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1910년 이후의 본격적인 무장투쟁론과 차별된다는 점에서 ‘애국계몽운동’이라는 명명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2) 전복희,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구한말을 중심으로)(서울: 한울, 1996); 박성진, ((한말~일제하) 사회진화론과 식민지사회사상)(서울: 선인, 2003); 김도형, (대한제국기의 정치 사상 연구)(서울: 지식산업사, 1994);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민족주의 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서울: 역사비평사, 1992); 구대열, “자유주의 열강의 한반도 진출과 그 성격(1870-1910)”, 한국사상과 문화, Vol.21(2003), pp.7-54; 안외순, 위의 글, pp.189-214.

23) 이광린, “구한말 진화론의 수용과 그 영향”, 『한국개화사상연구』(서울:일조각, 1981); 이만열, “개화기 언론과 중국”, 정진석 외 공저, 『한국근대언론의 재조명』(서울: 민음사, 1996) pp.77-111; 우림결(牛林杰), 『한국 개화기문학과 양계초』(서



나 대한제국 정치사와 지성사를 접목시킨 정치사상사 분야는 여전히 연구가 소홀한 감이 있으며, 특히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러일전쟁이 발발하기까지의 1900년대 전반기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게다가 기존의 작업들 또한 원전 텍스트를 개인 저자나 그 소속한 단체로 환원시켜 해석함으로써 보다 넓은 사회적 수용과 정치사상의 근대화 문제를 조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대한제국기 정치사상사는 정치에 관한 서구 지식 수용 문제를 정치적 근대화의 사회과정과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시기의 정치언어를 정치사를 보충하기 위한 자료로 취급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이 시기에 일어난 정치언어의 변화는 정치적 근대화의 중요한 요소이며 그 자체가 분석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갑오개혁관료, 광무정권, 독립협회, 애국계몽운동가들이 세계 대세를 파악하고 정세 판단을 내리기 위해 공유했던 자료와 용어를 천착할 필요가 있다. 각 정치세력의 입장 차이를 역사적으로 밝히고 정치적 수사(修辭) 이면의 숨은 목표를 규명하려면, 역으로 이들의 정치언어를 규정하고 있는 문법이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정치언어에 대한 역사적 분석틀로서 개념사적 접근법을 채택, 대한제국기의 ‘혁명’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의 주제는 대한제국기(1895-1910) 국한문혼

---

을: 도서출판 박이정, 2002) pp.51-94, pp.154-163; 신연재, 「동아시아 3국의 사회진화론 수용에 관한 연구:加藤弘之, 梁啓超, 신채호의 사상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사회진화론과 자유주의”, 국제정치논총 제 34집 1호 (1994) pp.201-219; “동아시아 3국의 서구문명 수용과 그 사상적 영향: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 9권 2호(1999) pp.75-93; 이송희, “한말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전개”, 부산사학 제 22권 1호(1992) pp.99-139; 우남숙, “한국 근대사에서의 사회진화론 수용 양식: 장지연, 박은식, 신채호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21권 1호(1999) pp.27-59; “한국 근대 국가론의 이론적 원형에 관한 연구: 불륜출리와 양계초의 유기체 국가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2, No.1(2000), pp.113-145; “사회진화론과 한국 민족주의”, 동양정치사상사, Vol.7, No.2(2008), pp.139-169.

용체나 국문으로 된 서양 정치사 번역서와 신문, 잡지 기사를 분석하여 근대 혁명의 한국적 개념화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시기 ‘혁명(革命)’ 개념의 의미론적 층위를 규명하고, 이 개념을 매개로 갑오개혁기와 광무개혁기와 애국계몽기 세 정치세력의 국제정치적·국내정치적 입장을 당대의 문헌과 용어로 재구성하겠다.

### 3절. 번역의 국제정치

근대 정치의 사상과 제도의 원산지는 서유럽이다. 새로운 세계 인식의 질료가 된 근대 국제정치에 관한 지식 또한 대부분 청과 일본을 거쳐 입수된 서유럽의 것이다. 구미의 국제정치론은 메이지 일본과 청의 이중 번역을 거쳐 대한제국으로 유입되었다. 대한제국은 전과 단계의 가장 끝 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청과 일본이 수입하고 번역한 서구의 이론과 저술을 3차적으로 수용한 한국에는 새로운 지식이 그만큼 늦게 전파될 수밖에 없었다. 민족국가로서 이해가 상반되는 제국주의자 일본은 구미 국제체제와 근대 정치에 관한 권력과 지식 양쪽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하였다. 일본이 양산한 정치 담론이 대한제국의 지식계를 주도함으로써, 한국의 개혁 지식인들은 보편을 가장한 제국의 언어를 통해 자기 현실을 이해하게 되는 모순을 안게 되었다. 1895년에서 19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동아시아 지역의 민족주의 개혁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공유되는 어휘목록이 발견된다.<sup>24)</sup>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뒤, 아시아에서 정치담론의 중심은 청에서 일본으로 이동한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한 일본은 서구적인 제도와 사상 수용의 최전방에 위치한 선두주자였다. 지역 내 근대화의 선발 주자로서 메이지 일본의 지식체계는 다른 아시아 국가로 수출되고 전파되어 그들 국가의 국민국가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야마무로 신이치(山實信一)는 이것을 ‘사상연쇄’라고 표현하였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청을 중심으로 하던 기존의 사상연쇄 구조는 붕괴되고 일본이 사상연쇄의 중심으로 등장한다.<sup>25)</sup> 강동국은 조선을 둘러싼 지식과 정보의 그물망이 청일전쟁

24) Andre Schmid,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pp.102-113.

25) 山室信一, (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 基軸,連鎖,投企)(東京: 岩波書店, 2001),

이후 유길준, 서재필 등 초창기 미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서양과의 직접적인 연결회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는 한편, 일본과의 회로가 팽창·제도화되면서 이전 시기의 청 회로를 대신하는 형태로 재구성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이 회로를 통해 일본이 양산한 ‘인종 중심의 국제정치론’이 조선에 왜도함으로써 친일적 이념으로 작용했고, 량치차오는 한문화 작업을 통해 메이지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sup>26)</sup>

그러나 국제정치 지식과 담론의 영역에서 일방적으로 제국의 패권이 작동한다는 비판론에 빠지기 전에, 근대초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언어가 지닌 ‘동음이의성(同音異意性)’<sup>27)</sup>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근대 국제체제에서 현실적 약자일 뿐 아니라 지식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도 주변에 처했던 이중적 취약성으로 인해 일종의 ‘세계 표준’으로 수입된 지식은 우리의 현실을 설명하거나 해결하는데 반드시 적절하지는 않았고, 정치나 사회이론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번역의 문제로 우리를 인도하고, 번역과 해석의 정치학은 다시 각 사회가 처한 역사 발전의 상이한 국면과 근대 국제체제의 지구적 전파와 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이종동형(異種同型)의 문제로 이어진다. 메이지 일본과 청, 대한제국을 거치는 삼중의 번역 과정에서 개입되는 번역의 전략과 각 정치사회의 상황 차이에서 생기는 우발성은 국제정치 지식과 담론의 영역에서 일방적으로 제국의 패권이 작동한다고 간단히 치부해 버릴 수 없게 만든다.

---

pp.13-21, pp.233-261.

26) 강동국, “조선을 둘러싼 러·일의 각축과 조선인의 국제정치인식: ‘공아론(恐俄論)’과 ‘인종중심의 국제정치론’의 사상연쇄”, 일본연구논총, 제 20호 (2004), p.170, pp.186-187.

27) 이현미, “대한제국의 영웅 개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Vol.25, No.2 (2004), p.145.

이 당시 ‘번역’은 어떤 글을 다른 나라 말로 ‘이전’시키는 가치중립적 행위가 아니라 개념을 창출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작업이었다. 나아가 정치 투쟁에서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 정치적 기획이기도 했다.<sup>28)</sup> 번역의 문제를 비교문명사적이고 비교 정치사상적으로 접근하여 연구한 조아킴 커츠(Joachim Kurtz)와 더글라스 하울랜드(Douglas Howland), 리디아 리우(Lydia Liu)는 공히 제국이 지식을 독점함으로써 식민지는 여기에 전면적으로 포섭되거나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흑백논리를 거절한다. 그 대신 번역 과정에 개입되는 창조적 재해석을 강조하며, 번역을 주도한 중요 행위자들에 주목한다. 나아가 사상이나 이념의 이전은 원본과 번역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물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비교함으로써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29)</sup>

근대 민족주의 확산에 있어 인쇄 자본주의가 지니는 중요성은 베네딕트 앤더슨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혁명’과 ‘민족’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시공간이 낳은 역사적 발명품이지만, 인쇄 자본주의 발달은 후발지역의 정치공동체에서 이것을 ‘표절’하여 새로운 변종을 주조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적 민주 혁명의 시초인 프랑스 혁명 자체는 조직되고 계획된 것이 아니었지만,

---

28) D. R. Howland, *Translating the West: Language and Political Reason in Nineteenth-Century Jap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pp. 5-8.

29) Michael Lackner, Iwo Amelung and Joachim Kurtz eds., *New terms for new ideas : Western knowledge and lexical change in Late Imperial China* (Leiden; Boston: Brill, 2001); Lydia H. Liu, *Translingual practice: literature, national culture, and translated modernity-China, 1900-1937*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Douglas Howland, *Personal liberty and public good: the introduction of John Stuart Mill to Japan and China*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5); Melvin Richter, "More than a two-way traffic: analyzing, translating, and comparing political concepts from other cultures", *Contributions*, Vol.1, No.1 (2005), pp.15-16.

볼셰비키 혁명은 프랑스 혁명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나름의 조직적인 이론화와 실천적 실험을 통해 ‘계획된’ 혁명이었다. 산업자본주의의 기반이 존재하지 않았던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혁명이 주조된 덕분이었고, 볼셰비키 혁명은 다시 중국의 마오쩌둥에 의해 후발사회 혁명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또한 18세기 이래 정치체제, 경제사회구조에 따라 조정과 적응의 과정을 거치면서, ‘뚜렷한 경계와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라는 ‘민족’ 이념을 근대사회 전체에 전파시켰다. 이처럼 ‘혁명’과 ‘민족주의’는 “조립되고 이전될 수 있다.”<sup>30)</sup>

‘정치학’이나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 분과가 전문 교육 기관에서 제도화되기 이전인 근대 이행기의 특성상, 이 시기에는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 혹은 정치이론이 역사, 문학, 법학, 인류학 저작들 속에 혼재되어 있다.<sup>31)</sup> 특히 1905년 이전에는 전제 군주와 보수적 근왕 세력이, 1905년 이후에는 통감부가 언론을 규제하는 검열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정상적 의미의 정치행위가 극도로 제한되는 공간에서, 정치에 대한 사유는 종종 간접적이고 은유적인 형태로 표현되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간 문학사나 교육학 전공자가 주로 다루었던 1895년에서 1910년 사이의 서양 정치사 번역서는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가 밀접하게 연동되는 근대적 특성이 단적으로 반영된 당대의 정치 원전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갑오개혁기와 대

30)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나남출판, 2002[1983]), p.25, pp.202-203; 에릭 홉스봄, 정도영·차명수 옮김, (혁명의 시대) (서울: 한길사, 1999[1962]), p.153.

31) 던컨 벨은 19세기 유럽 사상에서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 혹은 ‘정치이론(political theory)’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신학, 법학, 인류학, 문학, 역사 저작들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Duncan Bell ed., *Victorian Visions of Global Order: Empir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Nineteenth-Century Political Though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3. 구한말 조선과 대한제국에서 ‘국제정치적인 것’, ‘정치적인 것’을 찾아내려는 작업 또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띤다.

한제국기의 번역 정치사료를 한국 근대 국제정치학의 초기적 형태로 인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희소한 이 시기 한국 정치사상사 문헌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에도 일조한다.

대한제국기 정치 내지 정치사상의 근대화 과정에서 활동한 개혁 세력이 안고 있는 ‘친일’ 혹은 문명 추수의 문제 또한 이러한 시각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 근대화의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생적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비난하는 대신, 선진국의 제도와 사상이 후발국으로 이전될 때 발생하는 표준화와 전유, 혹은 그 조합의 한국적 양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20세기 초 대한제국의 ‘혁명’ 개념은 전통과 불화하는 방식으로 일지연정 과거와 연속성을 지니며, 오래된 질문에 대한 새로운 대답인 동시에 새로운 질문에 대한 오래된 대답이라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 이 연구는 1890년대-1900년대에 사용된 ‘혁명’ 개념을 유럽적이거나 북미적인 것의 수용 혹은 심지어 현대적인 의미로 전제하는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며, 당대의 지적·현실적 콘텍스트를 밝혀 철저히 역사적으로 그 의미를 재해석하려고 한다. 그럼으로써, 대한제국은 서구의 정치적 근대화 과정을 답습한 수동적 대리인이 아니라, 다양한 이질적 변종들을 내포한 세계적 현상으로서 ‘정치적 근대화’ 자체를 촉진시키는 데 일조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

## 4절. 개념사

개념사적 접근방법이란 라인하르트 코젤렉의 ‘개념사(Begriffsgeschichte)’ 이론과 켄틴 스키너의 정치언어 분석 방법론을 절충적으로 결합시킨 사료 독해법을 말한다.

과거에 사용된 정치 언어와 그 언어의 역사적 맥락에 주목한 코젤렉과 스키너의 작업은, 사상사 연구에 있어 ‘언어로의 선회(linguistic turn)’이라는 보다 큰 지적 흐름 속에 놓여 있다. 1981년 보즈마(William J. Bowsma)는 사상사 연구에 있어 중심이 지성사(intellectual history)에서 의미의 역사(history of meaning)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실’과 ‘이념’이라는 사상사 연구의 낡은 대당은 ‘경험’과 ‘의미’라는 새로운 범주에 의해 대체되고 있으며, 의미가 무엇보다도 언어를 통해 매개된다는 점에서 지성사가에게는 언어로의 관심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에 이르렀다.<sup>32)</sup> 언어 및 언어에 기반한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문제를 다루는 ‘언어로의 선회(linguistic turn)’는 이전 시기부터 다양한 경로로 진행되어 왔다. 철학적으로는 하버마스의 보편적 화용론, 훗설의 초월적 현상학, 비트겐슈타인과 오스틴의 일상언어 분석, 하이에거·리쾨르·가다머의 해석학 등이 그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포스트모던·포스트구조주의 이론가들 및 페미니스트 이론가, 일군의 구성주의자들도 후에 여기 가세하였다.<sup>33)</sup> 국가별 연구동향을 일별

---

32) William J. Bowsma, "Intellectual History in the 1980s: From History of Ideas to History of Meaning",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12 (1981), p.279, 283, 280, 290; John E. Toews, "Intellectual History after the Linguistic Turn: The Autonomy of Meaning and the Irreducibility of Experience",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92, No.4 (1987), pp.879-881에서 재인용.

33) Duncan S. A. Bell, "The Cambridge School and World Politics: Critical Theory, History and Conceptual Change"(www.theglobalsite.ac.uk: first



하자면, 독일에서는 개념사(Begriffsgeschichte)와 역사적 어의론(historical semantics)이, 프랑스에서는 아날 학파의 심성사, 담론 분석, 사전학(lexicometry), 영국에서는 캠브리지 학파로 통칭되는 포콕(J. G. A. Pocock)과 스키너 등의 정치언어 연구가, 보다 최근에는 미국 쪽에서 신(新)문화사 및 탈근대 문화 연구가 각각 진행되어 왔다.<sup>34)</sup>

1960년대,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젊은 역사학자들인 포콕, 던(John Dunn), 스키너는 정치사상사 방법론을 재편하는 일련의 논문을 발표한다. 1962년 포콕의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A Methodological Enquiry’, 1968년 존 던의 ‘The Identity of the History of Ideas’, 1969년 스키너의 ‘Meaning and Understanding in the History of Ideas’가 그것이다.<sup>35)</sup> 그들은 정치사상 저작을 비역사적이고 탈맥락화된(de-contextualised) 방식으로 해석하는 관행을 비판하였다. 존 던은 이러한 캠브리지 학파의 접근법을 “텍스트의 역사적 성격을 기본으로 삼고, 텍스트를 매우 복합적인 인간 행위의 산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요약한 바 있다.<sup>36)</sup> 이 가운데 특히 스키너의 논문은 캠브리지 학파의 방법론으로서 가장 결정적인

---

press, 2001) pp.1-2.

34) Melvin Richter, “Begriffsgeschichte Today: An Overview” in *Conceptual Change & Contingency, Finnish Yearbook of Political Thought*, Vol.3 (Jyväskylä: SoPhi, 1999), p.21.

35) J.G.A. Pocock,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A Methodological Enquiry”, in P. Laslett & W. G. Runciman ed., *Philosophy, Politics and Society* (Oxford: Blackwell, 1962), pp.183-202; John Dunn, “The Identity of the History of Ideas”, *Philosophy*, Vol.43 (1968), pp.85-104; Quentin Skinner, “Meaning and Understanding in the History of Ideas”, *History and Theory*, Vol.8(1969), pp.3-53. 스키너는 후에 최초의 입장을 여러 모로 수정하였으며, 그 최종적 형태는 “A Reply to my Critics” in James Tully ed., *Meaning and Context: Quentin Skinner and his Critics* (Oxford: Polity, 1988); 켄틴 스키너, “나의 비판자들에 대한 답변”, 탈리(1999a), pp.451-574에서 볼 수 있다.

36) Bell(2001), p.4.

영향을 미쳤으며 이 분야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정도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스키너는 정치 철학의 고전 저작들을 해석하는 양대 방법인 ‘텍스트주의(textualism)’과 ‘사회적 컨텍스트주의(social contextualism)’를 모두 비판하였다.<sup>37)</sup> 먼저, ‘텍스트주의’에 대해 스키너는 한 저작의 의미가 저작 자체의 연구만으로는 규명되지 않음을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한다. 예를 들어, 단어들이 풍자적이고 역설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주어진 텍스트에 연구를 집중하는 방식으로서는 비유적 전략이 야기하는 의미의 오독 위험을 해결할 수 없다. 또 단어들은 서로 다른 의도에서 모순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된 단어들의 형태를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무엇보다도 ‘본질적’ 의미를 상정하는 자체가 시대착오적 독해의 오류를 만들어 낸다. 여기에서 특정 단어가 쓰이는 다양한 상황들을 역사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그러므로 서구 정치의 전통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몇몇 저작들을 선별하여 정합적인 사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sup>38)</sup> 초점이 개개의 사상가에 모아지는 지성사적 전기(intellectual biography) 또한, 한 저술로부터 어떤 이론을 너무 쉽게 읽어내는 시대착오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sup>39)</sup>

스키너는 또한 사회적 컨텍스트를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텍스트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사회적 컨텍스트주의는 곧잘, 사회적 상황이 사상의 형성과 변화를 유발하고 사상은 다시 사회적 제도의

---

37) Bell(2001), p.5.

38) Skinner, “What is Intellectual History?”, *History of Ideas*, Vol.35, No.10 (1985), p.51.

39) 켄틴 스키너, “사상사에서 의미와 이해”, 『의미와 콘텍스트』(1999b), pp.67-68.

형성과 변화에 이바지한다는, 막연한 순환론으로 이어진다. 설사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영향 관계를 규명한다고 해도, 컨텍스트 연구 방법에는 여전히 메울 수 없는 공백이 있는데, 텍스트의 사회적 컨텍스트 연구가 텍스트를 ‘설명’해 줄 수는 있으나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sup>40)</sup> 따라서 여러 다양한 발언들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포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진정 역사적인 자세로 철학사를 서술하기 원한다면, 대상 텍스트를, 저자의 의도를 밝혀줄 수 있는 지적 컨텍스트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다.<sup>41)</sup> 이에 스키너는, 텍스트와 사회적 컨텍스트 사이에 언어적 컨텍스트를 위치시키고, 콜링우드의 ‘질문 및 대화’모형과 오스틴의 발화행위 이론,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 이론을 원용하여 저술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할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스키너에게 정치언어는 정치행위의 정당화 기제이다. 기득권자라고 해서 언어를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는 절차를 무시할 수 없고, 혁명적 언어도 기존의 사회규범과 언어관습에 어느 정도는 순응하는 형태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행위자는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해야 하는 문제에 맞닥뜨린다. 이것은 규범적 언어를 자신의 기획에 맞도록 재단하기만 하면 되는 기계적 문제가 아니다. 구사가 허용되는 규범적 언어의 한계 내에서 자신의 기획을 재단해야만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sup>42)</sup> 따라서 “언어는 자원인 동시에 제약이다.”<sup>43)</sup> 스키너는 정치적 저술의 저자는 ‘언어게임’

40) 켄틴 스키너(1999b), pp.126-135.

41) Quentin Skinner, *Visions of Politics Vol.1: Regarding metho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3.

42) Quentin Skinner,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Vol.1* (Cambridge: 1978), pp.7-8; Melvin Richter, *The History of Political and Social Concepts*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132에서 재인용.

43) Skinner(2002), p.7, 117.

의 참가자이며, 참가자들은 주어진 ‘룰’을 최대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용한다고 보았다.<sup>44)</sup> 언어에는 사회적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가치평가적 기능이 있으며, 이러한 가치평가적 언어는 기존의 사회적 언어적 규범의 제약 속에서, 그에 대해 태도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뒤집어 말하면, 언어는 사회적 관습으로서 제약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관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게임이 가능하고 규칙들 또한 다르게 해석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 이것은 시민의 정치참여와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공화주의 전통을 천착해온 스키너의 학문적 이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sup>45)</sup> 스키너는 “개념은 의미가 부착된 대상이 아니라, 하이데거 식으로 말하자면 무기이고 비트겐슈타인의 표현으로는 도구”<sup>46)</sup>라고 말한다. 특정한 개념과 그 개념이 사용된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할 뿐 아니라, 누가,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 문제의 개념을 구사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스키너가 강조한 ‘저자의 의도’는, 무언가를

44) 비트겐슈타인은 학문인생 후기에 언어활동과 게임의 유사점을 다음과 같이 들면서 언어게임 이론을 제창하였다. 1. 둘 다 규칙에 지배받는다. 2. 체스의 말이 그 소재와는 전혀 상관없이 룰에 입각한 참가자에 의해 움직여지듯이 말의 의미도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시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의 구체적인 사용에 의해 결정된다. 즉 말의 의미나 언어활동은 개별적인 언어사용의 문맥에 의존한다. 3. 체스의 참가자가 그 게임 전체의 일부로서만 의미를 지니듯이 우리의 언어게임도 언어활동 전체 혹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전체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4. 게임에서는 실제로 참가자와 현실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게임에 참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언어게임에서도 공통의 언어에서 실제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이 분명히 알 만한 표정이나 몸짓을 하지 않는 한 커뮤니케이션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사성을 통해 ‘규칙을 따른다’, ‘말의 의미와 그 사용’, ‘의미의 문맥 의존성’, ‘언어게임과 생활형식’, ‘사적(私的) 언어 비평’ 등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다양한 문제와 테제가 발생했다. 이상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 이론에 대한 부분은 기다 겐, 『현대사상지도』(서울: 산치럼, 2005), pp.198-200.

45) 스키너의 역사학적 관심은 중세 후반부터 마키아벨리에 이르는 이태리 르네상스 공화주의 저자들의 사상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1978)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러한 관심은 John Milton, James Harrington, Algernon Sidney 등 17세기 중반 영국 공화주의 사상가들을 다룬 저작 *Liberty Before Liberalism*(1998)으로 이어진다.

46) Skinner(1985), p.51.

써서 발표하는 저술행위를 일종의 수(手) 내지 대응조치로 음미해 줄 때 이해가 가능해진다.

레이몬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의 『키워드(Keywords)』<sup>47)</sup>에 대한 스키너의 비판도 바로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스키너에 따르면,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세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그것은 첫째, 단어 적용 기준, 둘째,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의 범위, 셋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표출되는 태도이다. 이처럼 개념에는 단어의 내용적 의미 뿐 아니라 그 단어가 어떤 때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에 관한 언어적 관습과 가치평가적 태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윌리엄즈는 위의 세 가지 측면 중 두 번째인 단어의 의미만을 문제삼고 적용 기준이나, 단어사용에 의해 표출되는 태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바뀌고 있는 것은 의미가 아니라 단지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적·지적 태도인 경우를 구별해내지 못했다. 또한 그에게는 하나의 단어의 의미가 바뀌면, 그 단어가 다른 모든 어휘들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언어체계에 대한 총체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윌리엄즈는 언어가 사회적 실재의 ‘거울’이라고 생각한다. 그에게 사회적 변화는 어휘 변화의 주된 원인이며, 어휘 변화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유는 사회세계의 영역과 언어의 영역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윌리엄즈는 사상 텍스트 자체가 인간의 발화행위에 기반하며, 가치평가적(evaluative) 언어의 중요한 쓰임새가 서술(describing)보다는 정당화(legitimizing)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sup>48)</sup>

---

47) Raymond Williams,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London: Fontana, 1976, 1983).

48) Quentin Skinner, "Language and political change" in Terence Ball eds., *Political Innovation and Conceptual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12-22.

스키너는 단어, 어휘, 개념, 언어의 해석을 통해 사회적 차원에서 이론, 의식, 가치, 태도의 변화에 대한 통찰이 가능해진다고 말한다. 언어를 바꾸는 것은 그 말의 의미 뿐 아니라, 일정한 사회현실에 대한 혹은 기존 언어가 기반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개변 의지의 표현이다. 따라서 개념사의 목표는 언어의 불화(disagreement)를 통해 이념적 분쟁을 조망하는 데 있다.<sup>49)</sup> 이처럼 스키너는 개념을 논할 때, 콘텍스트가 생략된 전통 철학적 스타일이 아닌,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수사적’인 개념 ‘사용’의 측면을 논한다.<sup>50)</sup> 저술의 역사적 의미는, 저술의 독자적 뜻 그 자체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정치적 의도를 포착했을 때 비로소 이해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 이론을 정치사상사 연구에 도입하게 된다. 비트겐슈타인은 말의 의미를 언어게임 속에서 발언자의 의도와 용법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키너는 또한 오스틴(J. L. Austin)과 설(John Searle)의 언어이론에서 발화 행위(speech act)라는 개념을, 그라이스(H. P. Grice)로부터는 ‘의미’에서부터 주체성(agency), 용례(usage), 의도(intentionality)라는 문제로 전환할 수 있는 영감을 제공받았다고 그 자신 술회하고 있다.<sup>51)</sup> 스키너는 마키아벨리, 토마스 무어, 홉스 등 고전적 정치이론가들의 저작에서 저자의 의도(author's intention)를 복원하는 해석론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스키너가 말하는 저자의 의도 복원은, 저자들의 내면에 공감한다는 식의 해석학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가 당대의 콘텍스트에 개입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즉, 포락이 ‘논쟁의 언어(languages of debate)’라고 부른 정치언어들 간의

---

49) Skinner(1995), p.8.

50) Kari Palonen, *Quentin Skinner: History, Politics, Rhetoric* (Cambridge: Polity Press, 2003), p.144.

51) Skinner(2002), pp.1-2.

상호관계를 통해 저자가 유념하고 있던 당대의 핵심적 의제를 추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sup>52)</sup>

독일의 개념사 작업은 1970년대 초부터 편찬되어 나온 일련의 개념어 사전들로 대변된다. 먼저 ‘개념사(Begriffsgeschichte)’를 이론화시킨 코젤렉이 공동 편집인으로 오토 브룬너(Otto Brunner), 베르너 콘체(Werner Conze)와 함께 1972년부터 1986년까지 출간한 『역사적 기본개념』 8권이 있다. 다음으로, 조아킴 리터(Joachim Ritter)가 편집하여 1971년부터 2001년까지 출간한 『철학의 역사사전』 13권이 있다. 보다 최근의 성과로는 롤프 라이하르트(Rolf Reichardt) 등이 편집, 198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프랑스 정치·사회 기본개념 편람 1680-1820』을 들 수 있다. 이들의 방법론은 역사적 어의론(historical semantics)을 추구하며 느슨한 의미의 개념사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단일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철학의 역사사전』의 경우 전통적인 관념사에 가까운 접근 방식을 사용했고, 『프랑스 정치·사회 기본개념 편람』의 경우 어휘통계학적인 특징을 보인다.<sup>53)</sup> 프리드리히 마이네케 식의 추상적인 이념사에 반대하고, 사회, 정치, 법적 생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언어 사용을 분석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역사적 기본개념』의 경우에도 장기 공동연구의 특성상 방법론적 엄격성이 지켜질 수 없었다. 그 결과, 개념과 의미의 관계에 대한 일관된 이론이 없고, 사건사와 개념사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으며, 개별 단어들을 성급히 추상적 개념 존재로 격상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코젤렉 자신은 개념으로 대변되는 “언어 행위의 사회사 및 심성사”를 지향하면서 개념사 사례연구가 이상적으로 수행되었을 때 개념사는 사료 텍스트

52) Skinner(2002), pp.118-120.

53) 루치안 휠서, “개념사의 개념과 「역사적 기본개념」”,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서울: 소학, 2009), p.24.

트와 정치사회적 실재 사이를 결합시키는 이음매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sup>54)</sup>

코젤렉에 따르면, ‘개념사(Begriffsgeschichte)’는 단어들의 용법을 통해 텍스트를 분석하는 사료비판의 특수화된 방법이다. 수많은 정치적·사회적 의미요소와 경험요소들이 하나의 단어로 유입될 때 단어는 기본 개념이 되는데, 역사적 텍스트를 이해하려면 이러한 기본 개념들에 대한 개념사적 작업이 요구된다. 사료비판의 단계에서는 그 말이 사용된 저술의 문맥, 저자와 독자의 상황, 정치적·사회적 상황, 저자 당대와 그 앞 세대의 언어용법을 밝혀야 한다. 해석의 단계에서는 단어사를 넘어서는 의미론적 지평, 즉, 어떤 단어가 사회 구조나 정치적 전선 형성에 대해 갖는 개념으로서의 위치값 측정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코젤렉은 ‘경험공간’, ‘기대지평’, ‘전통개념’, ‘미래지향적 첨단개념’, ‘기대개념’, ‘대응개념’, ‘의미론적 투쟁’, ‘투쟁적 개념’ 등의 용어를 구사하고 있다. ‘경험공간’이란 어떤 시점에서 언어를 통해 조망되는 동시대인들의 경험 내용을, ‘기대지평’은 기대의 내용을 가리킨다. ‘전통개념’은 이전부터 있었던 전래된 개념을 말하며, ‘첨단개념’은 새로운 개념을 의미한다. ‘첨단개념’은 신조어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오래된 단어의 전통개념을 변화시키는 형태로 등장하기도 한다. ‘대응개념’은 ‘의미론적 투쟁(semantic struggles)’ 과정에서 등장하는 서로 경쟁하는 개념들을 말한다. 정치적 갈등이 상징적인 차원에 반영되어 언어로 표출되는 ‘의미론적 투쟁’ 과정에서, 어떤 개념을 중심축으로 전선이 갈리고 정치적 입장과 행동이 견인될 때 그 개념은 ‘투쟁적 개념’이 된다. 이처럼, 개념사는 과거의 개념들이 어떻게 규정되었고 갈등 당사자들이 그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했는지 조사함으로써 당시의 사회적·정치

---

54) 루프 라이하르트, “역사적 의미론: 어휘통계학과 신문화사 사이”,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2009), pp.66-69.



적 갈등을 해명할 수 있다고 본다.<sup>55)</sup>

그렇다면, 개념사적 접근방법의 단위로서 ‘개념’이란 무엇인가? 먼저, ‘개념’과 기존 사상사의 ‘관념(idea)’ 혹은 ‘이념(ideology)’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유’나 ‘민주주의’ 개념을 관념사적으로 접근하는 기본 입장은 그 개념들의 문맥이 바뀌어도 개념 자체는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관념은 그 자신의 삶과 역사를 지닌다. 코젤렉의 개념사 이론에 있어 개념은 문장의 일부이다. 그러나 단어와 개념은 구별된다. 단어의 의미는 그것이 사용된 문맥에 의해서 정해지는 데 비해, 개념의 의미는 개념을 이루는 단어군의 용법들 전체에 의해서 규정된다. 그로 인해 개념은 실제 논증의 일부로 등장하지 않으면서도 배후에서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개념의 의미를 재구성하려면 수많은 용법들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해진다.<sup>56)</sup> 그렇다면, ‘개념’과 ‘담론(discourse)’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포카은 개념은 담론의 한 요소에 불과하며 따라서 개념사는 담론사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sup>57)</sup> 그에 비해 스킨너와 코젤렉은 개념이 담론을 대변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담론들 사이의 접점이자 논쟁의 지렛대라는 데 의견을 모은다.<sup>58)</sup> 푸코의 ‘담론’ 개념이 방법론적으로 매우 모호하고 난해한 데 비해, 분석단위로서 개념은 구체적인 언어용례로 우리를 인도한다. 어휘통계학적 담론 분석이 단어의 용법에 따른 의미들을 산술적으로 세는 데서 그치는 반면, 개념사는 개념이 정치적 언어와 사고에 미치는 추동력

---

55) 라인하르트 코젤렉, “개념사와 사회사”, (지나간 미래) (서울: 문학동네, 1998[1979]), pp.124-139.

56) 루치안 힐셔(2009), pp.23-26.

57) J. G. A. Pocock, "Concepts and Discourses: A Difference in Culture?" in Hartmut Lehmann and Melvin Richter eds., *The Meaning of Historical Terms and Concepts: New Studies on Begriffsgeschichte* (Washington: German Historical Institute, 1996), pp.47-58.

58) Palonen(2003) p.144.

을 포착한다. 결국 특정 개념의 역사적 사례연구가 시계열적으로 충분히 진행되었을 때에만 이것은 ‘개념사’로 승화되고,<sup>59)</sup> 다양한 개념사 작업의 축적은 사회사적 담론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서,<sup>60)</sup> ‘개념’과 ‘담론’은 상호구성적인 관계라고 하겠다.

스키너의 정치언어 분석과 코젤렉의 개념사는 다음 세 가지 공통점을 지닌다. 첫째, 언어사와 사회사를 이분법적으로 분리시키는 대신, 사회적 실재의 일부이자 사회사의 중요 구성 요소로서 언어를 다룬다. 둘째, 텍스트의 성격과 그 속에서 사용된 언어들을 의미상의 그물망, 개념군, 진술망 등 원전간의(intertextual) 역사적 관계 속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셋째, 언어는 단순한 의미 전달을 위한 수동적 매개체 이상이며, 저자의 의도가 개입되는 정치적 도구이다.<sup>61)</sup> 문학 비평과 철학에서 시작되어 역사학으로 변진 ‘언어로의 선회’는 이제 정치사상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치사상사의 ‘언어적 전환’을 촉구한다는 것은, ‘언어로의 선회’ 자체에 흥분하여 현학적이고 자폐적이거나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언어 연구로 정치사상사를 축소시키자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스키너와 코젤렉이 원전(text)의 ‘의미’와 ‘개념’의 역사를 물었을 때, 그들이 대결하고 있던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오늘날 주류가 된 정치언어의 관습을 상대화시키고 객관화시키는 작업인 동시에, 잊혀진 과거의 정치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다.

---

59) 라인하르트 코젤렉(1998), pp.130-131.

60) 롤프 라이하르트(2009), p.69.

61) 롤프 라이하르트(2009), pp.77-78; 켄틴 스키너(1999a), p.453; Peter Burke, Book Review, *History of European Ideas*, Vol. 23 (1997), p.55; Melvin Richter, “A German version of the 'linguistic turn': Reinhart Koselleck and the history of political and social concepts(*Begriffsgeschichte*)” in Dario Castiglione and Iain Hampsher-Monk eds.,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in National Contex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58.

코젤렉이 ‘말안장을 엮는 시기(Sattelzeit)’ 혹은 ‘문턱 시기(Schwellenzeit)’라고 명명한 근대 이행기에는 정치적·사회적 기본 개념들의 내용과 주장이 ‘민주화’되는 현상이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현대 민주주의처럼 인민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가 더 이상 지배층과 지식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대중의 계몽과 동원이라는 문제를 도외시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개념사 연구의 유효성을 독일 개념사 사전이 대상시기로 잡은 1750년부터 1850년으로 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국의 상이한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이미 충분한 반론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코젤렉이 제시한 ‘말안장 시기’나 ‘문턱 시기’의 구체적 시기는 코젤렉이 제시한 네 가지 작업가설을 수용한다는 조건 하에 나라나 지역마다 다르게 이해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코젤렉 또한 인터뷰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안장 시기’는 개념사 이론의 세일즈 전략의 일환으로 채택한 표현으로서, 중요한 것은 ‘안장’의 이미지가 아니라 근대이행기의 실질적 특징이다. 코젤렉이 제시한 근대이행기에 대한 네 가지 작업가설은 (i) 언어의 민주화 (ii) 언어의 정치화 (iii) 이념 분쟁의 심화 (iv) 개념이 담아내는 시간의 중층화로 요약된다.<sup>62)</sup> 본 연구의 대상시기인 대한제국기에는 이 네 가지 특징이 모두 보인다.

이행기에 정치적으로 동원된 개념들의 토착·외래의 혼종성과 전통적·근대적 중층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기는 물론 그 이전 시기 사료에 대한 강도 높은 장악력이 요구된다. 연구자의 역량의 한

62) Reinhart Koselleck, “Einleitung”,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Historisches Lexicon zur politisch-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 Band 1 A-D (Stuttgart: Klett-Cotta, 1992), pp.XVI-XIX; “Conceptual history, memory, and identity: an interview with Reinhart Koselleck”, *Contributions to the History of Concepts*, No.1, Vol.2 (2006) p.104, pp.120-121; 나인호, “언어혁명과 유럽사회의 근대화: 코젤렉 개념사의 테마”, *한국사학사학보* Vol. 6 (2002), pp.186-188.

계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 자료를 1895년에서 1910년 사이 대중 매체로 발행된 국학문혼용체와 한글 자료로 제한하였다. 국학문혼용체라는 원전의 형식과 대중매체라는 전달 방식은 정치적 언설이 겨냥하는 독자가 한문 교양을 갖춘 소수의 지식인에 머물지 않고 사회계층적으로 확장되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1895년에서 1910년 사이에 단행본으로 발간되어 이 시기 관립·사립 신식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된 외국 정치사 번역서,<sup>63)</sup> 황성신문,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해조신문, 공립신보, 서우, 대한자강회월보, 대한협회회보, 서북학회월보, 대한홍학보를 다루었다. 관찬 기록과 개인문집을 제외했다는 점에서, 대한제국기의 혁명개념의 전모를 밝히는 작업이라기보다는 대상 사료와 그에 관계된 인물들의 한계 내에서 ‘혁명’이 개념화되는 역사적 실상을 포착하는 데 만족하기로 한다.

본문에서는 대한제국기 혁명개념의 의미 층위를 크게 전통과 근대 둘로 나눈다. 대한제국기 혁명 개념의 전통적 층위에서는 동양 경전과 조선왕조실록의 혁명개념을 살펴본다. 대한제국기 혁명개념은 갑오개혁기, 광무개혁기, 애국계몽운동기로 나누어 시계열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대한제국기 서양 정치사 번역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기초가 놓인 갑오개혁기의 교육 제도 개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정치점 함의를 논한다. 다음으로, 이 시기 학부에서 편집, 간행한 『만국약사(萬國略史)』(1895-1896)의 프랑스혁명 언급 부분을 살펴보았다. 광무개혁기의 혁명개념은 『태서신사』(1897.5), 『중일약사합편(中日略史合編)』(1898.4), 『미국독립사(美國獨立史)』(1899.6), 『파란말년전사(波蘭末年戰史)』(1899), 『

63) 유탁일, “개화기교과용도서총목록”, 한국학논집, Vol.2 (1980), pp.16-17;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75), pp.170-171; 강윤희, (개화기의 교과용도서)(서울: 교육출판사, 1973).

법국혁신전사(法國革新戰史)』(1900.6), 『청국무술정변기(淸國戊戌政變記)』(1900.9)와 황성신문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애국계몽운동기의 혁명개념은 『만국사기(萬國史記)』(1905), 『법란서신사(法蘭西新史)』(1906.7), 『東西洋歷史』(1907.5), 『비율빈전사(比律賓戰史)』(1907.7), 『동서양사교과서(東洋史教科書)』(1908.8), 『중등만국사(中等萬國史)』, 『정선만국사(精選萬國史)』(1909.9), 『서양사교과서(西洋史教科書)』(1910.3)와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서우, 대한자강회월보, 대한협회회보, 서북학회월보, 대한홍학보의 혁명 관련 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구미 근세 혁명의 모델로서 미국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 아시아 근세 혁명의 모델로서 필리핀혁명 서사의 해석과 전용 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각 저술의 번역자와 발행처, 전재자(轉載者)를 천착함으로써 이러한 복합적 층위의 ‘혁명’ 개념이 실제 대한제국기의 정파간 차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루도록 하겠다.

1895년 대한제국에 ‘혁명’이라는 오래된 말이 새로운 뜻을 담은 채 동서양 근세 정치사 번역서를 통해 슬며시 들어왔다. 이들 외국사는 공사립 학교의 정규 과정으로 법제화되고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에 발췌 게재되면서 이 시기 정파와 세력을 초월하여 공유된 정치 언어의 새로운 문법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동서양 근대사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군권(君權)과 주권(主權)과 민권(民權)의 다양한 조합이 검토되면서 전제군주정, 입헌군주정, 민주공화정의 공과가 다투어졌다. 그 과정에서 국가(國家), 자유(自由), 독립(獨立) 등의 근대 정치의 핵심 산물에 대한 한국적 개념화가 진행된다. 본 연구자가 대한제국의 실상과 무관해 보이는 ‘혁명’이라는 개념에 주목한 이유는, ‘혁명’이라는 용어가 왕조 권력의 보이지 않는 검열로 인해 직접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혁명의 방지 혹은 창출이 사실상 이 시기 동

아시아 각국 정치의 치명적인 의제였기 때문이다. 대한제국기 혁명 개념은 조선 왕조가 드러낸 일련의 무능력과 정치적 위기에 대한 비판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이제 ‘혁명’의 문제는 보수파와 개혁파 모두의 관심사이자 온건파와 급진파를 가르는 전선이 되었고,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를 돌파할 전략적 이념으로 떠올랐다.

## 제 2장. 예비적 고찰

### 1절. 서양의 혁명 개념

역사적 의미론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혁명개념에 접근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49년 아더 해토의 선구적 논문이 있다. 그의 작업은 그리스 주요 정치 사상가들의 저작에서 오늘날 ‘혁명’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수색하는 단어론(onomasiology)에서 시작한다. 고대 그리스에는 오늘날 ‘혁명(revolution)’의 일반적 의미에 대응하는 낱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대신 가장 가까운 것으로 헤로도투스와 투키디데스의 저작에서 ‘봉기( uprising)’, ‘정치체제 변화(change of constitution)’에 상응하는 표현이 보인다. 플라톤 또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이상적인 철인정치(aristocracy)가 군인정치(timocracy)→과두정(oligarchy)→민주정(democracy)→참주정(tyranny)으로 타락해 가는 양상을 논하였다. 플라톤은 이러한 경향성 내지 법칙을 지적했을 뿐, 참주정이 다시 철인정치로 회귀한다고 주장하지 않은 반면, 폴리비우스는 역사를 운명의 수레바퀴에 비유하여 왕정(kingship)→참주정(tyranny)→귀족정(aristocracy)→과두정(oligarchy)→민주정(democracy)→우민정(mob-rule)→왕정(kingship)이 반복되는 정치체제 순환론을 내세우기에 이른다.<sup>64)</sup>

해토의 작업은 중세와 근대 유럽에서 ‘혁명(revolution)’이라는 단어의 통시적 의미변화를 조사하는 어의론(semasiology)으로 이어진다. 혁명의 어원인 라틴어 ‘Revolutio’가 문헌에 출현한 최초 시점은

---

64) Arthur Hatto, “Revolution: An Enquiry Into the Usefulness of an Historical Term”, *Mind*, New Series, Vol.58, No.232 (1949), pp. 498-499.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어거스틴, 단테, 초서 등이 이 단어를 ‘(천국으로의) 영혼의 이동’이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여기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갑작스럽고 놀라운 변화 등으로 발전하였다. 정치 용어로서 이 단어는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운명의 수레바퀴에 따른) 정치적 변화’라는 뜻으로 처음 사용례가 보인다.<sup>65)</sup> 영국에서는 1640-60년 잉글랜드 내전 당시 ‘혁명(revolution)’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폴리비우스 때처럼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1688년 이후 이 말은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전복(objective total overturning)’이라는 의미를 띠기 시작하고, 루소의 저작에서도 용례를 찾아 볼 수 있다. 혁명개념의 이러한 변화는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더욱 현저해지고, 이 시기 유럽 각국의 정치사 자체가 프랑스혁명과의 유추를 통해 재정의되기에 이른다. 그 한 예로 1826년 기조(Guizot)는 잉글랜드 내전에 대해 기존의 ‘대반란(The Great Rebellion)’ 대신 ‘청교도 혁명(The Puritan Revolution)’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sup>66)</sup>

프랑스혁명이 혁명개념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폴리비우스 이래 정치체제 변동의 원인으로 간주된 초월적인 법칙(divine machinery)에 인간이 개입하고 진력할 수 있다(man-made machinery)는 생각이다. 역사의 진보와 퇴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이며 정당과 사회 세력을 통해 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는 신념은 20세기에 들어오면 더욱 성행하게 된다. 해토는 혁명의 경험 이 혁명개념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혁명 개념이 실제 혁명의 구상과 실현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에서 양자가 상호 구성적 관계임을 지적한다. 그런 맥락에서 각국의 혁명개념은 역사적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유럽적 기준에서 전혀 ‘혁명적’이지 않다는

65) Hatto(1949), pp.509-510.

66) Hatto(1949), pp.504-506.



이유로 라틴 아메리카의 각종 ‘혁명’정당들을 비웃을 권리가 유럽인에게는 없다. 해토는 독일의 사회학자 한스 프라이어(Hans Freyer)를 인용하면서, 모든 사회학적 개념에는 역사적 변동 요소가 필수적인 부분임을 역설한다. 나아가, 사회학적 일반 개념을 만드는 작업은 “역사 세계의 다양한 사례(a multiplicity of instances in the world of history)”와 “문화와 세대와 지역의 독특한 형편(the unique circumstances of the culture, the generation, the locality)”을 더 반영하고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결론짓는다.<sup>67)</sup>

다음으로, 17세기 영국의 혁명 개념을 살펴본 스노우의 1962년 논문이 있다. 스노우 또한 ‘사람이나 사물이 주기적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혁명(revolution)’의 라틴어 어원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중세에 이 단어는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에서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도는 순환운동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지동설이 주장되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가리키는 말로 변화하였고, 17세기에 걸쳐 ‘혁명(revolution)’이라는 말은 천문학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영국에서 이 말은 초서나 셰익스피어 등 시인과 극작가들이 먼저 사용하였고, 정치 이론가나 주석학자들의 글에서는 상대적으로 늦게 보이기 시작한다. 홉스가 ‘혁명(revolution)’이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순환운동’이라는 뜻으로 기하학과 물리학 관련 저술에서 사용했고, 정치 관련 글에서는 다른 동시대 학자들처럼 ‘반란(revolt; rebellion)’, ‘전복(overturning)’ 등의 단어를 구사했다.<sup>68)</sup>

67) Hatto(1949), pp.512-516.

68) Vernon F. Snow, “The Concept of Revolution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The Historical Journal*, Vol.5, No.2 (1962), pp. 167-169.

17세기 중엽 이탈리아와 영국에서 각종 내란이 빈발하면서 ‘혁명(revolution)’은 보다 근대적인 함의를 띠게 된다. 1647년 이탈리아에서 이 단어는 왕정을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귀족들에게 약간의 권리 이양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반란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1649년 찰스 1세가 처형당한 뒤 나온 영국의 왕당파 문건에서는, ‘혁명(revolution)’은 잉글랜드 내전의 돌고 도는 주기적 정치 양상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1660년에도 ‘혁명(revolution)’은 정치적 순환 운동이 완결되어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뜻으로 쓰였다. 그러므로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어떤 주석학자들은 ‘복고(Restor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다른 주석학자들은 ‘혁명(revolution)’을 사용하였다.<sup>69)</sup>

로크가 『통치론(Two Treaties)』을 쓴 1689년 무렵이 되면, ‘혁명(revolution)’은 다양한 정치적 함의를 가지게 된다. 일단 공통적 의미는 ‘갑작스러운 변화’, ‘완결된 순환 운동’이었다. 정치사가 순환한다는 이러한 역사해석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폴리비우스, 마키아벨리에서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제외하면 ‘혁명(revolution)’의 의미는 쓰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했다. 어떤 때는 정부 형태의 변화를 의미했고, 어떤 때는 왕정 형태는 유지한 채 왕조만 바뀌는 것을, 어떤 때에는 왕정복고를 의미했다. 로크는 『통치론(Two Treaties)』에서 ‘혁명(revolution)’이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하였는데, 두 번 모두 그 의미는 정치 체제가 이전의 것으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다만, 로크는 여기에서 왕조나 의회가 자연법을 어기거나 사회 계약을 무시할 경우, 헌법적 권위는 사라지고, 정치 사회는 사회 계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았다. 이처럼 ‘복고(restoration)’로 인해 완결되는 정치 변동의 순

---

69) Snow(1962), pp.169-171.

환 주기를 로크는 ‘혁명(revolution)’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오늘날 프랑스혁명의 영향으로 일반화된 혁명개념과는 전혀 다르게, 로크에게 있어 ‘혁명(revolution)’은 보수적인 영국 인민이 정부를 재구성하기 위해 이전의 경험으로 회귀하는 회고적이고 반동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러므로 로크의 동시대인들에게 혁명은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이었지,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sup>70)</sup>

해토와 스노우의 경우, 개인 연구자가 사료 문건을 일일이 읽어야 했던 만큼, 비교적 잘 알려진 사상가들의 저작에서 혁명개념의 용례를 추출했다. 또, 본인들이 직접 다룬 자료에서 도출된 의미 이상으로 혁명개념을 확장시키기는 어려웠다. 그에 비해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장기적인 공동연구를 통해 역사적 의미론의 사례 연구들이 축적된 뒤 나온 코젤렉과 존 던의 논문은 그간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보다 일반적인 이론과 방법론을 개진하고 있다.

“근대 혁명개념의 사적 기준”이라는 논문의 서두에서 코젤렉은 일단 ‘혁명’이 서로 다른 수준의 개별 사건과 장기적인 변화와 역사적 구조라는 서로 다른 층위의 경험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임을 지적한다. 의미론적 연구로서 개념사의 과제는 이처럼 포괄적인 개념과 어떤 용어의 구체적 용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해토, 스노우와 마찬가지로 그는 우선 ‘혁명(revolution)’의 어원을 밝히고, ‘혁명(revolution)’이 정치적 문맥에서 사용되던 초기에는 제한된 수의 정해진 유형이 어떤 필연적 법칙 아래 돌고 도는 정치체제의 순환을 의미했음을 지적했다. 그리하여 17세기 영국혁명 때까지도, 정체론 논쟁의 중심은 지금이 혁명 순환 주기 중 어떤 단계인지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문제였다. 정치가 순환이자 반복으로 간주

---

70) Snow(1962), pp.172-174.

됨에 따라 사회적 혼란과 소요는 정치사에 늘 있게 마련인 말썽거리로 폄하되었다. 그리하여 16,17세기에는 작당, 항거, 소요, 폭동, 반란, 내전 등의 개념들이 단계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때 사용된 ‘내전’ 개념은 일정한 신분 이상의 사람들 간의 전쟁을 뜻했고, 내전에 의해서는 통치의 방식이나 형태가 변화될지언정 직접적으로 사회구조가 바뀌지는 않았다. 18세기 계몽주의 시기가 되어서야 사회적 해방이 혁명의 한 과정으로 이해되고, 역사가 혁명개념을 중심으로 해석되기 시작한다. 처음에 혁명은 ‘내전’에 대한 대응개념으로서 발달했다. 코젤렉은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의 경험으로부터 ‘혁명’이 유혈폭동을 동반하는 내전의 공포에서 벗어날 긍정적 대안으로 떠오름으로써 새로운 경험공간과 기대지평을 열게 된다고 보았다.<sup>71)</sup>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에는 ‘내전’ 또한 ‘혁명’의 범주로 수렴된다. 코젤렉에 따르면 혁명에 대한 기존의 경험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프랑스혁명 이후 혁명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보편법칙들이 생겨났다. 첫째, 혁명개념은 자체로 선형적 내용을 담고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하는 메타역사적 개념이 된다. 둘째, 혁명을 통해서 인간은 역사적 진로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경험 내용과 기대 지평이 생겼다. 셋째, 혁명에 대비하여 사회의 진로를 계획해야 한다는 생각이 당파와 진영을 막론하고 모든 정치 세력들에게 생겼다. 넷째, 프랑스혁명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하나의 전범이자 필연적 법칙이 되어 사람들의 정세판단의 근거로 자리 잡았다. 다섯째, 정치혁명에서 사회혁명으로 혁명의 초점이 이동한다. 이제 정치혁명의 목표는 모든 인간의 사회적 해방이자 사회구조의 변화 자체가 되었다. 여섯째, 모든 인간의 해방을 염원하는 사회혁명의 특성상, 혁명에 대한 근대적

---

71) 코젤렉(1998), pp.76-85.

인 표현들은 공간적으로 세계혁명을 지향하며, 시간적으로 혁명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영원할 것을 의도한다. 일곱째, 동작개념이 부가되어 ‘혁명화, 혁명화하다’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혁명가’라는 표현 또한 1789년 이후 빈번하게 쓰였다. 이것은 이전에는 없었지만 19세기에 주요 개념으로 부상하는, 특히 레닌에 의해 구상되었던 직업혁명가 유형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행동주의적 개념’이었다. 또 이것은 인간이 혁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새로운 관념을 보여준다. 고대부터 내려온 혁명의 초개인적 구조를 인정하는 한편, 혁명의 생산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처럼 역사철학과 혁명적 참여가 결합되면서, 혁명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동시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혁명의 정당성이 혁명개념에 부가된다. 이러한 혁명의 정당성은 주어진 시점의 미래구상에 따라 사람들을 동원하고 역사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당파개념’이다.<sup>72)</sup> 혁명이 보편적 개념이지만 정치적 입지에 따라 의미가 매우 다변하며, 근대의 경험이 언어로 수렴된 역사적 산물임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코젤렉은 해토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존 던 또한 근대 정치의 해석과 실천에 있어 혁명개념을 중심으로 올려놓은 사건이 1789년 프랑스혁명임을 지적한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왕정복고로 끝난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영국 입헌주의의 한계 내에서 식민 행정의 부당함을 항의한 1776년 미국혁명은 일으키지 못했던 것이었다.<sup>73)</sup> 프랑스혁명 덕분에 이전에는 없던 직업적 혁명가가 나타났고, 정치와 사회를 해방하고 민주화하는 문명화 기획이 폭력 투쟁과 결합될 수 있었다. 이같은 프랑스 혁명의 여

72) 코젤렉(1998), pp.86-98.

73) John Dunn, “Revolution” in Terence Ball eds., *Political Innovation and Conceptual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p.337-338.

과 속에서 유럽 각국의 정치세력들은 대략 세 가지 유형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 첫째, 이상주의적 대응이다. 이들은 사회적, 정치적 계몽의 기획을 폭력적인 권력 투쟁과 완전히 분리시키고, 교육과 온건한 사회운동에 투신하였다. 둘째, 19세기 초 영국 휘그당이 보여준 태도로, 정치투쟁을 헌정 질서 내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다. 셋째, 나폴레옹의 최종 패배 이후 유럽 대륙국가들은 계몽 자체를 아예 근절하려고 시도하게 된다.<sup>74)</sup>

프랑스에서 부르봉 왕조가 복고된 뒤, 유럽의 절대왕정 국가들은 국민 의회적인 기구를 만들거나 법적 평등을 확대시키는 등 얼마간의 개량을 시도했다. 그러나 1848년 유럽 전역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 왕조를 전복시키고 공화 정부들이 잠깐 혹은 항구적으로 수립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혁명’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19세기의 혁명은 자각적인 혁명가들에 의해 창출된 것이 아니었고, 프랑스혁명기 자코뱅 정부만큼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혁명 정부를 수립하지도 못했고, 거의 대부분 왕정으로 회귀하면서 끝났다. 게다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서유럽의 군주제 국가들은 반란 진압용 경찰력과 군대를 대폭 강화하게 된다. 그 결과, 직업적인 혁명가가 사회 전체를 문명화, 민주화시키기 위해 폭력적인 정치 파괴 공작을 추구하는 혁명 유형은 국가 형태와 경제 발전 단계가 보다 후진적이었던 러시아에서 오히려 나타났다.<sup>75)</sup>

해토, 스노우, 코젤렉이 모두 19세기까지의 유럽 혁명 개념을 다루고 있는 데 비해, 던은 20세기 러시아와 중국 공산혁명 경험을 포괄하는 혁명 이론의 가능성과 분석적 도구로서 혁명 개념의 의의를 논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마르크스 역사 해석에서, 혁명은 사회에

---

74) Dunn(1995), pp.340-341.

75) Dunn(1995), pp.341-342.

내재하는 구조적 모순이 심화된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몇몇 직업 혁명가들이 정치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양한 근대 혁명에 대한 단일하고 정합적인 설명 이론이 없고, 취약한 국가형태와 효율적인 혁명 기구 사이의 논리적, 개념적 관계도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혁명에 대한 과학적 예측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정권을 탈취하고 이후 국정을 운영할 무장 혁명당의 전략과 행동력이 언제나 문제가 된다. 게다가 20세기의 혁명 이론과 개념은 더 이상 19세기의 자유주의 또는 마르크스주의 사상가들처럼 프랑스혁명의 원인을 전적으로 대내적인 구체제의 문제로만 파악할 수 없다. 모든 근대국가의 진압 능력이 다양한 외국 세력들과의 밀접하고 복잡한 관계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반란자들의 혁명 능력이나 혁명 정부의 재건 능력 또한 외국의 물질적 원조나 수입된 사상, 이전에 학습된 전략적 노하우에 의한 부분이 크다. 프랑스혁명을 기점으로 한 혁명개념의 근대적 변화와, 20세기를 거치면서 중첩된 이념적, 국제적 변수는 혁명에 관한 사회과학 이론의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명확하고 단일하게 규정되지 않는 대신 혁명 개념의 역사적 깊이와 다양성을 통해 조명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sup>76)</sup>

---

76) Dunn(1995), pp.348-350.

## 2절. 중국의 혁명개념

### 1. 중국 전통적 혁명개념

서기 100년경 후한(後漢)의 허신(許慎)이 편찬한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獸皮治去毛曰革”, 즉 “털을 제거하여 가공한 짐승의 가죽”을 ‘革’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탈, 격변과 죽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命’은 생명, 운명, 천명 등의 뜻으로, 양자가 결합된 ‘혁명(革命)’은 유학의 중요한 정치적 담론인 ‘탕무혁명(湯武革命)’이다. 주역(周易)의 『역경(易經)』 「혁괘(革卦)」를 보면, “天地革而四時成, 湯武革命順乎天而應乎人, 革之時義大矣!(천지가革하니 四時가 成하고, 탕무가 혁명하니 天에 順하고, 人에 應하노라. 革의 時에는 義가 크니라!)”라고 되어 있다. 성탕(成湯)이 하(夏)를 멸하여 상(商)을 세우고, 무왕(武王)이 상(商)을 멸하고 주(周)를 세웠다는 역사적 전고이다. 혁명의 기본의미는 왕조의 변경으로서, 무력으로 전 왕조를 전복하고 구 황족에 대한 살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革’의 원래 뜻과도 부합되며 서구의 revolution 개념에는 없는 의미이다. 그러나 유학 고전 담론으로서 역경의 ‘혁명’은 이러한 표면적 단순성을 훨씬 뛰어넘어, 탕무혁명에 대한 유교적 정당화를 내포하는 매우 교묘하고 양가적인 수사이다. 혁명은 마치 사계절의 운행처럼 왕조순환의 역사 운동의 필연성을 의미하며, 탕무혁명도 정치적 행위의 일정한 요건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順乎天應乎人”은 탕무혁명이 천명의 수궁과 민중의 옹호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왕조순환의 혁명방식이 천명과 민심의 총애가 없으면 그 합법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그 어떤 무장반란도 천의민심(天意民心)을 매개로 현 정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따르면, 원고생(轅固生)과 황생(黃生)이 한(漢)나라 경제(景帝)앞에서 탕무혁명에 관해 논쟁하다가 사안이 한 고조 유방의 반란(造反)의 합법성 여부에까지 이르자, 경제가 논쟁을 중지시켰다. 이후로 탕무혁명은 이론적 금기가 되어 다들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되었다. 중국 역사에서 왕조가 바뀌는 시점에 제왕들은 보통 ‘承天受運(천도를 받들고 운을 하사받았다)’고 자처함으로써 혁명은 거의 강권(強權)의 전유물이 되다시피 했다. 명나라 주원장 또한 자신의 혁명이야말로 진정한 응천순민(應天順民)이라고 역설함으로써, 유학자들에게 토론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았다.

맹자(孟子)에는 제(齊)나라 선왕(宣王)과 맹자의 탕무혁명에 관한 대화가 나온다. 이 대화에는 혁명이란 단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지만, 탕무혁명에 관한 역경의 서술과 함께 유학 고전의 혁명 담론의 권위적인 문헌이 되었다. 선왕은 맹자에게 “臣弑其君可乎?(신하로서 임금을 시해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이 질문은 당시 군주의 혁명 담론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 제기된 것은 유학의 “君君臣臣(군주는 군주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맹자는 “賊仁者謂之賊, 賊義者謂之殘, 殘賊之人謂一夫, 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 (인을 해치는 사람을 적이라고 하고, 의를 해치는 사람을 잔이라고 하며, 잔적은 일개 필부라고 하는데 필부인 주(紂)를 처형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임금을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라고 대답한다. 맹자는 인과 의를 위배하면 군은 군이 아니라 필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君君臣臣이라는 유교적 대의명분이 혁명을 저해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맹자 이후의 유학자들의 주석에서 맹자의 이상주의적 색채

는 크게 약화되었다. 송나라 장재(張載)의 주장은 실재를 중시하는 공리적 색채가 농후하다. “此事間不容發。一日之間，天命未絕，則是君臣。當日命絕，則為獨夫。然命之絕否，何以知之？人情而已。諸侯不期而會者八百，武王安得而止之哉？(이 일은 무척이나 급박한데, 그 날에 천명이 끊어지지 않으면 군신이고, 당일에 천명이 끊어지면 폭군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천명이 끊어짐을 어떻게 알 것인가? 인정밖에 없다. 8백 제후가 맹진에서 기약하지 않고도 만났으니 무왕은 어찌 그것을 멈출 수 있겠는가?)” 이처럼 정치적 승패로 천명을 결정하고, 실패의 결과 폭군이 되는 논리는 인의를 행하지 않아서 폭군이 된다는 맹자의 주장과는 궤를 달리한다. 장재의 ‘인정’이 다소 막연하다면 조기(趙歧)에게서 천명을 판단하는 기준은 “征伐之道，當順民心。民心悅，則天意得矣 (征伐의 도는 민심을 따라야 한다. 민심이 기뻐하면 天意를 얻는 것이다).”라고 하여 ‘민심’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희(朱熹)도 “蓋四海歸之，則為天子；天下叛之，則為獨夫 (세상이 귀순하면 천자이고, 천하가 이반(離叛)하면 폭군)”이라고 했다. 그들은 맹자처럼 인, 의를 정치행위의 도덕적 기준으로 강조하지 않았다.

근대 중국에서 구미 혁명의 번역과정에 부활한 것은 역경에서 나타난 혁명 담론이었다. 유학 경전에서 일상적인 사회생활로 침투된 담론의 기본 요소, 즉, 사계절이 교체되는 자연질서, 폭력적 정치행위 형태, 천명과 인심에 의한 정치적 폭력에 대한 합법화는 구미 혁명 담론과 서로 배척하거나 융합하면서 복잡한 관계를 형성했다.<sup>77)</sup>

77) 이상의 논의는 陳建華, (革命的現代性：中國革命話語考論)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00), pp.5-7.

## 2. 중국 근대의 혁명개념

본 연구의 대상 시기 중국의 혁명 개념을 다룬 선행연구가 두 가지 있다. 레베카 칼이 원전(text) 분석과 원전간(intertextual) 분석 방법을 사용한 반면, 진관타오와 류칭핑의 연구는 어휘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좋은 대조가 된다.

먼저, 진관타오와 류칭핑의 연구를 보자. 이들의 작업은 ‘관념(idea)’을 사상체계의 기본 단위로 삼고, 각 관념의 키워드를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하여 통계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sup>78)</sup> 그 점에서 이들의 작업은 개념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평론하는 코젤렉과 스키너의 개념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적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의 미덕에 따라, 광범위한 사료에서 해당 어휘가 사용된 다양한 용례들을 수집, 분류함으로써 특정 개념이 출현하고 유행하고 소멸하는 통시적 변화를 조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혁명(革命)’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성(姓)을 바꾼, 천도(天道), 동란(動亂)과 반란(反亂), 왕조교체, 철저한 변화 등을 의미했다.<sup>79)</sup> 중국에서 이 말이 주로 ‘탕무혁명(湯武革命)’, ‘역성혁명(易姓革命)’이라는 형태로 사용됨으로써 왕조 교체의 천부적 정당성을 옹호하는 긍정적 표현이었던 반면, 이 말을 8세기에 받아들인 일본에서는 황실의 성이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진 역사적 특성상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고 한다. ‘혁명(革命)’이라는 말을 ‘revolution’의 번

---

78) 진관타오, 류칭핑 지음,〈관념사란 무엇인가 1〉(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2010a[2008]), pp.36-40.

79) 진관타오, 류칭핑 지음,〈관념사란 무엇인가 2〉(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2010b[2009]), p.456.

역어로 처음 사용한 것은 일본이다. 1890년 이전 중국에는 이미 revolution에 대하여 ‘조반(造反)’이라는 부정적인 번역어가 존재하였다. 진관타오와 류칭평은 지적하지 않았지만, 일본과 중국 모두 초기에는 revolution에 대하여 부정적인 울림을 가진 번역어를 채택했다는 사실이 주목을 요한다. 중국 전통의 혁명개념은 왕조 체제는 유지하되 황통이 바뀌는 것(‘역성’)+그러한 교체의 정통성(‘탕무’)을 의미했기 때문에 revolution을 ‘조반(造反)’이라고 번역하는 것과 ‘혁명(革命)’이라고 번역하는 것의 함의는 매우 달라진다. 중국의 경우 revolution의 번역어로서 ‘혁명(革命)’이 사용된 가장 이른 예는 1890년 왕타오가 일본의 번역본을 중역하면서 프랑스혁명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 경우이다. 중국에서 ‘혁명(革命)’이라는 단어의 핵심 의미가 시민폭동을 통한 입헌체제 수립으로 변동을 보이는 것은 대략 1898년 무술변법의 실패 직후부터이다.<sup>80)</sup> 1890년대는 중국의 혁명개념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데, 혁명개념을 변화시킨 계기는 지성사와 사회사 양쪽 모두에 발견된다. 한편으로는 일본어 번역본을 통해 프랑스혁명을 위시한 유럽 혁명, 즉 revolution의 역사적 사례가 유입됨으로써 혁명개념에서 전래의 ‘성을 바꿈’, 즉 왕조 교체의 의미가 희석되고 정체(政體) 변동 쪽으로 초점이 이동한다. 사회사적으로는 무술변법 실패와 의화단 봉기 등을 거치며 청 왕조의 개혁 가능성이 사라지고 보다 급진적인 해결책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1900년대에는 중국 내 사회 세력에 의한 전제적인 왕조체제 전복을 ‘혁명(革命)’으로 개념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음으로, 레베카 칼은 1895년에서 1910년을 중국 근대 민족주의의 핵심 의제들이 체계적이고 명백하게 개념화된 시기로 파악하고, 이 시기 유행한 망국사(亡國史) 관련 원전을 통해 이를 재구성하고 있

80) 진관타오, 류칭평(2010b/2009), pp.459-464.

다. 1898년 이전 중국 지식인의 국가 개혁 구상은 유교 개신주의적 제도 개혁에 머물러 있었다. 1897년 Kang Youwei(康有爲)의 「공자개제고(孔子改制考)」는 그 대표적인 예로서, 왕조 체제 내의 제도 개혁이 외세의 침략과 사회적 분열로부터 중국을 지켜낼 수 있으리라는 그의 신념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1898년 무술변법의 실패로 인해 중국 지식인들이 왕조 개혁에 회의를 품고 보다 급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혁명개념은 1899년부터 1903년 사이에 매우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구래로 천명의 전복 내지 왕조 교체를 의미했던 ‘혁명(革命)’이 국가와 인민의 새로운 관계를 상징하는 근대 ‘국민(nation)’ 창출에 있어 핵심 개념으로 떠오른 것이다. 1902년경에는 이미 세계 각지의 혁명 사례들이 민족주의 담론에 유입되어 중국 혁명의 교본 구실을 하고 있었다. 1903년에는 저우룽(鄒容)의 「혁명군(革命軍)」이 발행되었고, 장빙린(章炳麟)이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쑤바오’(蘇報)라는 잡지에 실었다가 추용과 함께 투옥되어 옥고를 치르는 필화사건이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중국 지식인 내부의 혁명과 개혁과의 전선이 수면으로 떠올랐고, 장빙린과 Kang Youwei 간에 청 왕실과 황제의 존폐를 놓고 공개적인 논쟁이 진행되었다.<sup>81)</sup>

중국의 혁명 개념화는 특히 1895년 반스페인 봉기로 시작, 1898년 미국과의 전쟁으로 이어진 필리핀혁명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색을 보인다. 1896년과 1897년 중국 신문에 보이는 필리핀 기사들에서 필리핀 사태는 ‘난(亂)’으로 표현되고 별다른 가치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다. 1899년 6월까지도 량치차오의 청의보(淸議報)에는 홍콩으로 피난온 스페인 선교사들의 필리핀 전황 기고가 게재되었고, 그 속에서 혁명의 주동세력인 아귀날도 당은 ‘난당(亂

---

81) Rebecca E. Karl, *Staging the World: Chinese Nationalism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Duke University Press, 2002), pp.85-86.

黨)’, 폭도(暴徒)’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1899년에서 1900년간의 많은 기사와 논설들은 애초에 필리핀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점령 지배로 돌아선 ‘미국의 배신’을 비난하는 논조가 두드러지고, 필리핀 사태에 대한 표현은 확실하게 ‘혁명(革命)’으로 변화한다.<sup>82)</sup> 1899년에서 1903년의 몇 년 사이에도 혁명개념과 혁명을 둘러싼 중국 내 논의는 시계열적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899년 8월에 나온 필리핀혁명 관련 논설에서는, 그 때까지는 필리핀독립전쟁의 전황이 필리핀에 유리하기도 했거니와, 사회의 대내적인 갈등의 봉합이나 혁명 세력을 동원하고 조직하는 문제는 도외시하고 자유와 연대의 사상만 있으면 혁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나이브한 낙천주의가 엿보인다. 그러나 1900년 의화단의 난이 안팎의 막대한 인명 및 재산 손실과 연합군의 북경점령으로 끝나면서, 1901년의 필리핀 논설에서는 혁명의 동원, 주체, 대상 등 실질적인 문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필리핀 독립전쟁 또한 독립군의 수장인 아귀날도 장군이 산간지역으로 후퇴한 가운데 미국이 승기를 잡고 인민의 고통이 막심하던 때였다. 이 때, 중국 의화단을 필리핀 혁명군과 트란스발의 독립군에 비유한 논설에서 필자는 필리핀 혁명군의 봉기를 ‘기의(起義)’라고 표현하고 있다. 딱히 정치적이지 않은 지방의 저항 운동을 가리켰던 전래 단어인 ‘기의(起義)’는 여기에서 명백하게 국민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로 재정의되며, 특히 ‘종족(種族)’과 함께 쓰임으로써 근대적인 ‘혁명(革命)’의 의미를 담는다. 논설의 필자는 여기에서 나아가 필리핀혁명의 유비(analogy)를 통해 중국 현실을 해석하면서 다음 두 가지의 논점을 개진했다. 첫째, 스페인 유학생 출신 필리핀 지식인들의 ‘민권(民權)’ 운동이 제국의 진압에 의해 손쉽게 해산되고 지식인들이 민중을 버리고 망명하는 모습을 통해, 엘리트들이 혁명에 대해 가지는

---

82) Karl(2002), pp.87-88.

양가성의 문제가 논의된다. 둘째, 오랫동안 필리핀을 ‘속국(屬國)’으로 삼은 스페인 제국을 빗대어, 명을 멸망시키고 한족을 지배해 온 청 왕조의 민족적 차이를 부각시키고 그 정권을 비판한다.<sup>83)</sup>

1902년에는 필리핀 민족주의자 마리아노 폰세(Mariano Ponce)가 1900년 스페인어로 써서 1901년 일본에서 출판한 『飛獵濱獨立戰史』가 중국에서 한역되어 나왔다. 이미 필리핀 독립혁명이 실패로 돌아가고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한 상황에서 필리핀은 이제 황인종과 아시아 약소민족 ‘연대’의 상징으로 부각된다. 1903년 무렵이 되면, 필리핀의 사례가 완전히 가시화되면서, 많은 중국 민족주의자들은 실패와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행동의 측면에서나 의미 생산의 측면에서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기 위한 유일한 가능성은 혁명에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레베카 칼은 아리프 딜릭의 용어를 빌어 이것을 ‘혁명의 이상화(utopianization of revolution)’라고 칭했다. 이처럼, 필리핀혁명의 독해는 이 시기 중국 지식인들이 청조를 식민 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중국의 민족적 독립을 반만(反滿) 배외(排外) 혁명(革命)으로 개념화하는 데 일조하였고, 이러한 혁명의 개념화는 청조를 전복하고 1911년 민국을 수립하기 위한 이념적 전제로 작용하였다.<sup>84)</sup>

---

83) Karl(2002), pp.94-98.

84) Karl(2002), pp.102-103, p.113; Arif Dirlik, *Anarchism in the Chinese Revolu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p.63.

### 3절. 조선왕조실록의 혁명개념

#### 1. 태조 이성계의 조선 개국

조선왕조실록에서 ‘혁명(革命)’은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고 개국한 사건을 지칭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러한 뜻으로는 태조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 18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용례가 계속 보인다.

“하성절사(賀聖節使)인 판삼사사(判三司事) 윤호(尹虎)가 금암역에서 졸하였다.....혁명할 초기에 협찬 추대한 공로가 있었는데, 명령을 받아 중국 서울에 조회하게 되매, 병으로 사양하지 아니하고 병을 참고서 가다가 길에서 죽었다 (當革命之初, 有協贊推戴之功。受命朝京, 不以病辭, 力疾以行, 卒於道).”<sup>85)</sup>

“예전에 태상왕께서 혁명하실 때에, 여러 신하가 공민왕대비 앞에 나아가 교서를 받들고 어보(御寶)를 받아서 태상왕에게 바쳐,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이 일을 알게 하였습니다. 혁명하는 때를 당하여 다른 나라의 어보를 전하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였는데.... (昔太上王革命之日 群臣進于恭愍王大妃之前 奉教書受寶 獻于太上王 使國人曉然知之. 當革命之時 傳他國之寶 尙且如此)<sup>86)</sup>

“우리 조정에서 혁명의 초기에 왕씨를 대우한 것이 옛날과 같지 못하였던 것은 바로 그때의 모신(謀臣)들의 소행이요, 태조의 뜻은 아니었다. (我朝革命之初 待王氏不古若者 乃其時謀臣所爲 非太祖意

85) 태조 2년(1393, 홍무 26년) 6월 24일. 이하 실록 출전은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86) 태종 6년 (1406, 영락 4) 8월 21일.



也)”<sup>87)</sup>

“옛날에 태조께서 혁명하실 처음에(昔太祖革命之初)”<sup>88)</sup>

“고려의 국운이 다하여 진주(眞主)가 혁명을 일으키자(及其麗運告訖, 眞主革命)”<sup>89)</sup>

“지금 혁명 때의 일[이성계가 회군하던 때의 일: 필자 주]을 제기하여 후세 사람들의 말썽을 야기시킬 필요는 없다(今革命時事, 不必提起, 以惹後人之說).”<sup>90)</sup>

## 2. 지적 경험공간으로서의 중국 고대사: 탕무혁명

위에서 지적했듯 ‘혁명(革命)’이라는 단어 자체가 『역경(易經)』에서 유래하였고, 따라서 이성계의 고려 왕조 멸망을 혁명으로 개념화할 때 그 역사적 전범 또한 하(夏)와 은(殷)을 멸망시키고 상(商)나라와 주(周)나라를 개창한 탕(湯)왕과 무(武)왕, 진(秦)을 멸망시킨 한(漢)나라 고조(高祖) 등 중국 고대사에서 발견되었다.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혁명하여 공신을 봉하는 날에 웅치도 봉하게 되어 여러 사람의 의심이 풀리고 한(漢)나라의 기틀이 안정되었으니, 내가 진실로 본받고자 한다. 폄직(貶職)된 고려 왕조의 신하들이 어찌 모두가 사면하지 못할 죄이겠는가(漢祖革命封功之日, 雍齒得封, 諸疑皆釋, 漢祚以定, 予實慕焉。 所貶前朝之臣, 豈皆不赦

---

87) 문종 1년 (1451, 경태 2) 11월 6일.

88) 성종 1년 (1470, 성화 6) 2월 22일.

89) 현종개수실록 4년 (1663, 강희 2) 4월 24일.

90) 숙종실록보궐정오 9년 (1683, 강희 22) 4월 10일.

之罪)?”<sup>91)</sup>

“옛날 무왕(武王)이 혁명할 때에 주(紂)의 아들 무경을 [제후로] 봉하였다가, 얼마 아니되어 무경이 배반하여 성왕(成王)이 죽였습니다. 그런 뒤에 천하에 걱정이 없어지고 왕실이 다시 평안하여졌습니다(昔武王革命, 封紂子武庚, 未幾而武庚叛, 成王誅之, 然後天下無虞, 王室再安).”<sup>92)</sup>

“왕씨(王氏)의 후손을 살려 두어서 각자가 생업에 편하게 하심인즉, 천하와 국가를 공평하게 생각하시는 하늘같고 땅 같으신 도량입니다. 즉 탕·무가 혁명하고도 기(杞)·송(宋)을 두어둔 의리이다(存王氏之後, 俾安生業, 則公天下國家天地之量, 卽湯武革命, 存杞、宋之義也).”<sup>93)</sup>

### 3. 구 왕조의 전복: 역성(易姓)

탕무혁명이나 태조 이성계의 개국혁명은 모두 이전 왕조를 타도하는 ‘역성(易姓)’의 폭력적인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이러한 폭력이 혁명으로 개념화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 이전 왕조의 ‘명(命)’을 ‘혁(革)’하기 위해서는 ‘천명(天命)’을 받는 일, 즉, ‘수명(受命)’이 필요한 것이다. 조선 시대 혁명개념에 내포된 이러한 왕조교체 과정의 폭력의 정당화 논리는, 종종 ‘혁명(革命)’이라는 단어 대신 쓰인 ‘역성수명(易姓受命)’이라는 표현에 잘 드러난다.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일렀다. ‘역대 제왕이 역성수명하여 전대의

---

91) 태조 1년(1392, 홍무 25년) 10월 11일.

92) 태조 4년(1395, 홍무 28년) 4월 26일.

93) 세종 1년(1419, 영락 17) 9월 4일.

자손을 베어 없앤 사실을 나는 사전(史典)에서 아직 보지 못하였다.(上謂群臣曰：歷代帝王，易姓受命，剪除前代之子孫，予於史典，未之見也)’”<sup>94)</sup>

“내가 일찍이 사책(史冊)을 상고하니, 역대의 제왕이 역성수명하여 혹은 그 후손을 봉(封)하여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거나, 혹은 작명(爵命)을 더 하여서 그 어진 이를 포장하고, 완전히 멸망시켜 후사를 남기지 않은 경우는 있지 아니하였다(予嘗考史編，歷代帝王，易姓受命...이하생략).”<sup>95)</sup>

“태조가 왕씨를 복멸하던 즈음을 당하여 한 사람에게도 형을 가하지 않고 천명에 응하여 혁명하고 (恭惟太祖，當王氏覆滅之際，不刑一人，而應天革命)”<sup>96)</sup>

“혁명한 뒤에도 오히려 전대의 후예가 살아 있을까봐 두려워하여 모조리 죽여서 유종(遺種)을 없애는 것은, 이것은 용렬한 군주가 하는 것이다(革命之後，猶恐苗裔之存，盡殲無遺，此庸君之所爲).”<sup>97)</sup>

#### 4. 왕조교체의 정통성: 응천순인(應天順人)

혁명이 이처럼 폭력적이지만 정당한 왕조교체를 뜻할 때, 그러한 정당성의 요건은 무엇인가?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역경』에서 제시된 탕무혁명 정당화의 논리를 수용하여,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폐지하고 조선 왕조를 수립한 것이 ‘하늘의 뜻에 응하고(應天)’ ‘민심에 따

94) 태종 13년 (1413, 영락 11) 11월 21일.

95) 태종 13년 (1413, 영락 11) 11월 26일

96) 태종 13년 (1413, 영락 11) 11월 29일.

97) 태종 13년 (1413, 영락 11) 12월 1일.

른(順人)’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전하께서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혁명을 일으켜 처음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서경(書經)』에 ‘황천상제께서 그 원자와 큰 나라인 은나라의 명(命)을 개체(改替)시켰으니, 왕의 천명(天命)을 받으심이 한없이 경사로우나, 또한 한없이 근심하시니, 아아! 어찌 하겠습니까! 어찌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하였습니다. (恭惟殿下, 應天革命, 初登寶位。書曰: ‘皇天上帝, 改厥元子, 茲大國殷之命。 惟王受命, 無疆惟休, 亦無疆惟恤。 嗚呼曷其? 奈何不敬!’)”<sup>98)</sup>

“우리 태조 강헌대왕께서는 지극히 어질고 신무하시므로, 하늘 뜻에 응하여, 혁명을 일으켜 비로소 집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창조하매, 저자와 전포도 변함이 없이 큰 기업이 정하였졌으니, 이것이 비록 탕임금과 무왕의 성덕이라 할지라도, 어찌 여기에서 더하겠는가? (惟我太祖康獻大王以至仁神武, 應天革命, 肇造家邦, 市肆不易, 而大業以定, 此雖湯、武之盛, 何以加哉)”<sup>99)</sup>

“우리 태조께서는 천도에 순응하사 혁명하시어 비로소 거룩한 터전을 만들어 한결같이 전조의 폐단을 씻어 없애고(恭惟我太祖應天革命, 肇造丕基, 一灑前朝之弊)”<sup>100)</sup>

“고려의 국운이 쇠하매 기강이 차차 쇠퇴해지자 토지 제도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우리 성조(聖朝)께서 하늘에 순응하여 혁명을 일으켜 토지 제도를 일체 바로잡아(麗運之衰, 紀綱陵夷, 田制先壞, 惟我聖朝應天革命, 一正田制)”<sup>101)</sup>

98) 태조 1년 (1392, 홍무 25) 7월 20일.

99) 세종 1년 (1419, 영락 17) 7월 17일.

100) 세종 6년 (1424, 영락 22) 3월 12일.

“전조(前朝)에 기강(紀綱)이 무너졌을 때 우리 태조(太祖)께서 동을 정벌하고 북을 정벌하여 민생의 목숨을 크게 구제하였으므로, 하늘이 명하고 백성들이 귀의하여 의리상 나라를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려의 신하들이 왕조를 부지시키려고 하였으나 구제하지 못하자 잇따라 목숨을 버린 자가 있는가 하면, 혁명(革命)이 이루어진 뒤에도 벼슬을 하지 않은 이가 있었으니 그때의 기절(氣節)이야말로 알만한 것이었습니다. (方前朝紀綱板蕩之後，我太祖東征北伐，大濟生民，天命人歸，理當主國。然麗氏之臣，欲扶持而不濟，繼之以死者有之，革命後亦有不仕者，一時氣節可見矣)”<sup>102)</sup>

‘응천혁명(應天革命)’, ‘응천순인 혁명(應天順人 革命)’ 등으로 표현된 이러한 논리에 조선 건국 과정을 사후적으로 미화하려는 이념적 측면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천명’이 특정한 왕실의 혈통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민심(民心)’으로 측정되는 정치적 성과에 따라 옮겨질 수 있는 것임을 조선 건국 초기 혁명개념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지극히 공평하고 사심이 없는 것은 하늘이고, 지극히 어리석어도 신지(神智)한 것은 백성이니, 천도(天道)는 왕씨에게 화를 주고 전하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곧 무도(無道)한 자에게 화를 주고 유도(有道)한 사람에게 복을 준 것이며, 민심은 왕씨를 미워하고 전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곧 무도한 자를 미워하고 유도한 사람을 사랑한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천명(天命)을 개혁하여 나라를 세웠으니, 진실로 마땅히 하늘의 명령을 듣고 사람의 마음을 따라야 될 것이온데(天道非禍王氏而福

101) 세종 18년 (1436.정통 1) 10월 5일.

102) 선조수정실록 2년 (1569, 융경 3) 윤 6월 1일.

殿下，乃禍無道而福有道也；民心非惡王氏而愛殿下，乃惡無道而愛有道也。 殿下應天順人，革命開國，誠宜聽於天而順於人也)103)

17세기 중반 정두경은 효종에게 지어 올린 ‘천명론(天命論)’이라는 글에서, 혁명의 양대 요건으로서 하늘과 사람을 들고, 천명을 영원하게 만들기 위한, 즉, 나라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군주의 덕목을 논하고 있다. ‘혁명(革命)’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일종의 혁명방지론의 형태로 혁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 글은, 혁명의 원인을 군주의 선악과 덕으로 환원시켜 설명한다는 점에서 맹자의 왕도정치론을 강하게 상기시킨다.

“나라의 창건은 반드시 천명이 있어서인데, 망하는 것도 역시 그러하니, 천명이 혁명할 시기가 아닌데도 혁명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혁명의 시기는 하늘에게 달려 있고 혁명을 하고 않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혁명을 하늘에게만 돌리고 사람에게는 돌리지 않을 경우 성공하지 못하고, 혁명을 사람에게만 돌리고 하늘에게는 돌리지 않을 경우 혁명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하는 법이니, 하늘과 사람이 참여되어야만 혁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國之始，必有天命，其終也亦然，未有命不革而革者。革在天，革不革在人，革歸天，不歸人不通，歸人不歸天不備，兩參幾矣).....천명을 영원토록 하는 방도로는 덕을 닦는 일뿐이요.....하늘의 도(道)란 특별히 친하게 하는 법이 없고 오직 선과 악에 따라 길흉을 명합니다....나라의 일에 있어서는 나라가 생긴 이래로 덕이 있는데도 혁명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永命之道，惟德而已...天道無親，命吉凶在善惡...至於國，自有國以來，未有德而革者).....하늘과 사람 사이의 감응이란 그림자나 메아리보다도 더 빨라서 덕이 있는 한 기어코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103) 태조 3년(1394, 홍무 27년) 2월 26일.

(天人感應，疾於影響，必不革有德)”<sup>104)</sup>

조선 시대 혁명개념은 이처럼 왕조 교체의 당위성과 필연성에 대한 함의가 매우 강하며, 혁명에 의해 새로 들어선 왕조의 유교적 정통성을 인정하는 이념적 어휘였다. 이와 관련하여, 1645년 청이 보낸 칙서에 1644년 입관과 명의 멸망을 스스로 ‘개혁(改革)’이라고 표현했던 데 비해, 1780년 우리 실록 기록에서는 ‘혁명(革命)’으로 명기하고 있음이 특기할 만하다. 1645년 당시 청은 “위급한 백성들이 이미 구하였으나 천하를 차지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왕공·제후와 문무의 여러 신하 및 군민(軍民)과 기로(耆老)들이 이구동성으로 두 번 세 번 간절히 짐에게 즉위할 것을 권하였다.”라고 하며 전형적인 ‘응천순인’의 레토릭을 사용한다. 또, “천명은 보전하기 어렵고 창업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인데, 더구나 개혁의 초기를 당하여 다시 변통의 기회를 만났으므로(緬惟峻命不易，創業尤艱，況當改革之初，更屬變通之會)”<sup>105)</sup>라고 말하며 사실상 혁명개념을 구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革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혹시 천명적인 조선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일정한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로부터 130여년이 지난 정조 대에 오면 명칭교체라는 동일한 사건을 조선왕조실록이 ‘혁명’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된다.

“산해관 밖에 있는 명나라 때에 쌓은 주현·위소·둔보의 성은 혁명할 때에 공파하여 무너지고 하나도 완전한 곳이 없는데(山海關之外，明朝所築州縣、衛所、屯堡之城，革命之際，攻破崩毀，一無全處)”<sup>106)</sup>

104) 효종 9년 (1658, 순치 15) 1월 15일.

105) 인조 23년 (1645, 순치 2) 2월 18일.

106) 정조 4년 (1780, 건륭 45) 4월 22일.

## 5. 혁명개념의 정치화: 중종반정과 인조반정

조선왕조실록에서 ‘혁명(革命)’이라는 말이 사용된 경우는 총 52건이다. 빈도수로 보면 태조실록 5건, 정종실록 1건, 태종실록 5건, 세종실록 6건, 문종실록 2건, 성종실록 2건, 중종실록 9건, 선조실록 2건, 선조수정실록 1건, 광해군일기 증초본과 정초본 각 2건, 인조실록 2건, 현종실록과 현종개수실록 각 1건, 숙종실록과 숙종보궐정오실록 각 2건, 영조실록 2건, 정조실록 4건, 고종실록 1건이다. 태조에서 세종대에 이르는 건국 초기에 이 말이 많이 사용된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유독 중종 대에 와서 혁명개념이 정치적 논의의 중심으로 재부상한 데에는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진성대군을 옹립한 중종반정이라는 정치적 맥락이 크게 작용하였다.

“불의에 사군(嗣君)[=연산군]이 계승하여서는.....큰 죄가 겹주(桀紂)보다도 더하니, 예로부터 나라를 망친 임금 중에 이와 같이 심한 자가 있지 않았습시다.....만일 왕위를 엿보는 자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일어난다면 괴로움을 싫어하고 평안하길 생각하는 백성이 반드시 소리가 호응하듯 그림자가 따르듯 할 것이니, 역성(易姓)의 화가 또한 걱정됩니다.....태공(太公)이 무왕을 도와 주(紂)를 치자, 앞의 무리가 창을 거꾸로 잡고 뒤를 공격하여 배반했으니, 이때를 당하여 는 무왕이 이성(異姓)으로서 혁명하였는데도 인심은 순한 것을 도와서 오히려 이와 같았는데, 지금 이 거사는 성종의 친아들을 추대하는 것이라, 하늘에 응하고 사람에 따르는 것이니, 누가 감히 이의를 가지겠습니까? (不意嗣君繼體，盡變先王之法，暴虐無道，惟日以滋....貫盈之罪，浮於桀・紂，自古亡國之君，未有如是之甚者.....太公相武王伐紂，前徒倒戈，攻于後以北，當是時，武王以異姓革命，人心助順，尙且如此)”<sup>107)</sup>



무왕의 혁명에 빚대어 연산군 폐위와 중종 옹립의 정당성을 역설한 중종 1년의 이 기록에서, 중종반정은 ‘역성(易姓)하지 않은 혁명’으로 개념화된다. 중종반정이 혁명으로 개념화됨에 따라, 태조의 개국 혁명은 중종반정의 정당화 근거이자 역사적 전범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역성(易姓)에 의한 왕조교체가 아닌 조선 왕조 내에서의 반정을 혁명으로 개념화시킴으로써 ‘천명(天命)’과 ‘응천순인(應天順人)’의 이념을 전유하려는 레토릭이 구사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중종 때에는 조선 개국혁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명회전(大明會典)』에 나와 있는 태조 이성계에 대한 ‘무릇 왕씨(王氏)의 사왕(四王)을 시해하였다.’라는 기록을 고쳐 달라는 종무변계에 대한 논의가 출현한다.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수록된 우리 태조의 피무(被誣)에 관한 일을 변정(辨正)하여 주달(奏達)하는 것의 편부(便否)를 궐정(闕庭)에서 회의하게 하였다.....선조(先祖)가 무고 당하는 것을 보고서 시급히 씻어 버리고자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전말을 개진하여 명나라 조정에 신달해야 합니다. ‘무릇 왕씨(王氏)의 사왕(四王)을 시해하였다.’ 하니 또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옛날부터 혁명을 할 때에는 혹 기휘(忌諱)한 말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但自古革命之際, 或有微辭) 지금 중국의 문적(文籍)으로서는 증빙하여 밝힐 수 없습니다.”<sup>108)</sup>

“이제 만약 다시 청하였다가 우사(優辭)로 답한다면 모르거니와, 만일 불미스런 말이 있게 된다면 이는 스스로 조종(祖宗)의 일을 폭로하는 것이니, 매우 불가합니다. 혁명(革命)할 때에 미진한 일이

107) 중종 1년 (1506, 정덕 1) 12월 1일.

108) 중종 13년 (1518, 정덕 13) 5월 7일.

있는데도 억지로 변명하여 주청하는 것은, 상국을 섬기는 도리에 있어 또한 불경이 됩니다. (今若更請, 而優辭以答則已, 如有不美之辭, 則是自暴白祖宗之事, 大不可也。 革命之時, 有所未盡, 而強辨奏請, 其於事上之道, 亦不敬矣)”<sup>109)</sup>

광해군 축출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응천순인의 혁명 이념 또한 상기될 필요가 있었다.

“4왕의 일 같은 것은, 공민왕(恭愍王)...우왕(禔王)...창왕(昌王)...왕요(王瑤)는.....크게 임금의 도리를 잃었으므로, 신명(神明)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조에게로 대중의 인정이 몰려 할 수 없이 위로 황제의 분부를 품(稟)하여 우리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 국조께서 처음부터 마음먹은 것이겠습니까? 대개 사세가 피할 수 없었던 탓입니다. 대저 민중을 구하려고 혁명(革命)하는 일은 천명(天命)이 바꿈하는 한 고비인 것으로써, 진실로 사지(私智)와 계책이 먹혀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탕무(湯武)의 심지를 지녔어도 끝내 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어찌 사세가 그렇게 되고 기수가 닥친 데다 사리 또한 따른 탓이 아니겠습니까? 또 인(仁)한 자는 복돋아주고 인하지 못한 자는 없애버리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이래서 황제(皇帝)와 왕자(王者)와 패자(霸者)의 교대가 서로 잇달게 되는 것이고, 이것에서 세상의 변천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國祖迫於群情, 不獲已上稟帝旨, 用寧東土。是豈國祖初心乎? 蓋其勢之不得免焉耳。夫救民革命之舉, 天地間一大機會, 實非智謀所可干也。雖以湯、武之志, 卒不得辭焉, 豈非勢順、數至, 而理亦隨之者耶? 且仁者培之, 不仁者覆之, 天之心也。於是乎皇·帝、王·霸, 禪代相尋, 而世變從可知已)”<sup>110)</sup>

109) 중종 14년 (1519, 정덕 14) 3월 24일.

110) 중종 24년 (1529, 가정 8) 6월 2일.

한편, 반정 이후의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혁명에 준하여 역사적 선례와 전거가 모색되었다. 특히 중종반정은 주도세력이 연산군의 기존 신료들이라 친위 쿠데타적 성격이 강했고, 반정 후 정국안정을 위해 기득권을 인정하고 숙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sup>111)</sup> 혁명 이후에도 구 왕조의 신료를 유임한 사례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양상을 보인다.

“송(宋)나라는 비록 역성혁명(易姓革命) 하였지만, 범질(范質)·왕부(王溥)를 그대로 정승을 삼았었습니다(宋雖易姓革命, 以范質王溥, 仍爲相).”<sup>112)</sup>

“혁명한 임금도 전조(前朝)의 옛신하를 쓰는 것이니(革命之主, 亦用前朝舊臣), 대간이 아뢰는 것은 신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sup>113)</sup>

인조반정의 경우에도 반정을 혁명에 빗대어 광해군 측근의 처리 문제를 논한 기록이 인조실록에 보인다. 여기에서는 반정 때 목숨을 끊은 광해군 때의 신료 박승종의 사면이 요청되고 있다.

“대저 혁명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마는,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습니다. 대기(大器)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경우라면, 당시의 임금에게 저번처럼 전에 견줄 바 없는 실덕(失德)이 있다 하더라도, 위로는 삼공(三公)으로부터 아래로 백집사(百執事)에 이르기까지 혹 죽어야 할 의리도 있고 혹 죽지 않아야 할 의리도 있는 것입니다. (夫革命, 何代無之, 而有大小焉。 若大器移於他人, 則雖使時君,

---

111) 윤정, “조선 중종 전반기 정국구도와 정책론”, 역사와 현실, Vol.25 (1997), pp.142-143; Edward W. Wagner, “정치사적 입장에서 본 이조(李朝) 사화(史禍)의 성격”, 역사학보, Vol. 85 (1980), pp.143-144.

112) 중종 4년 (1509,정덕 4) 윤 9월 24일.

113) 중종 14년 (1519,정덕 14) 12월 10일.

有如曩時之失德，前古無比者，上自三公，下至百執事，有或當死或不當死之義。百執事之死，是召忽之死，不當死而死者也)”<sup>114)</sup>

그런데, 17세기에 들어오면, 실록에서 발견되는 혁명 관련 논의에서, 박승종의 경우처럼 혁명에 반대하고 절개를 지킨 구 왕조의 신료들에 대한 긍정적 진술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인다.

“길재는 혁명할 즈음에 지키던 바를 바꾸지 아니하였으므로(吉再革命之際，不變所守)”<sup>115)</sup>

“고려의 악공 임천석은 고려 말에.....혁명한 소식을 듣고는 거문고를 버리고 바위 아래로 떨어져 죽었는데(聞革命之報，遂捨琴自投巖下，至今傳林千石臺)”<sup>116)</sup>

이것은 거듭되는 반정 속에서 명분 없이 권력에 야합하는 무리가 많아지고,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혁명개념이 전유되면서 부정적 의미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광해군 일기의 사관(史官)은, 선조 사후 10일 만에 선조의 장자이자 광해군의 형인 임해군에 대한 대각(臺閣)의 태도가 급변한 것을 놓고, “마치 혁명을 일으켜 바꾸어 놓는 것처럼(幾如革命變置)” 하였다고 비판한다.<sup>117)</sup> 특히, 인조 때에는 반정 자체의 정통성 문제를 놓고 일어난 역모사건이 17건에 이르렀다. 인조 1년 7월 27일에 있었던 첫 번째 역모의 주모자 유전(柳湍)은 인조가 ‘천명(天命)’의 구실을 스스로 내세웠을 뿐, 천명이 귀의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今此舉義之人,

---

114) 인조 2년 (1624, 천계 4) 7월 8일.

115) 숙종 33년 (1707, 강희 46) 7월 9일.

116) 정조 21년 (1797, 가경 2) 2월 13일.

117) 광해군 즉위년(1608, 만력 36) 2월 16일.

當先奉大妃入闕，迎立天命所歸之人，而今上自取之非也”)로 역모의 동기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역적을 토벌(討逆)’하는 것으로 규정한다.<sup>118)</sup>

이상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전통적 혁명개념을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조선 전기에는 태조 이성계의 조선 왕조 개창에 대한 역사적 기억이 혁명개념의 경험공간을 주로 차지했다. 이 시기 혁명개념은 폭력적 역성혁명에 국한되어 있었다. 둘째, 17, 18세기를 거치면서 반정의 경험이 혁명개념의 경험공간에 추가되었다. 그에 따라 혁명개념에서 이전 왕조를 전복시키는 ‘역성’의 요소가 타협되고, 왕조 내의 정권교체도 혁명으로 개념화한다. 셋째, 혁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서의 천명론 내지 응천순인의 논리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이념화된다. 이 과정에서 혁명의 정당한 주체를 결정할 기준으로서 천명의 해석에 대한 담론 투쟁이 전개되었다.

조선 후기에 투쟁개념으로 부상한 것은 혁명 자체가 아니라 혁명의 정당화 근거로서 ‘천명’이었다. 천명의 유무에 따라 어떤 세력은 자신의 정치 행위를 ‘혁명’으로 규정하고, 다른 세력은 동일한 현상을 ‘역모’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천명’을 해석할 이념적 근거는 유교 경전에 의해 주어졌다. 혁명과 반역 간의 개념투쟁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심화되고, 19세기와 20세기까지 이어진다.

---

118) 인조 1년 (1623. 천계 3) 7월 27일; 김용흠, “인조반정(仁祖反正)의 명분과 정권의 정통성 논쟁: 인성군 이공 처벌 논의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Vol.27 (2006), pp.171-173에서 재인용.

## 제 3장. 갑오개혁기의 혁명개념

### 1절. 혁명, 개혁, 계몽의 연속성과 단절

근대 혁명의 양대 모델은 부르주아 시민혁명의 원형으로서 1789년 프랑스대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시초인 1917년 러시아혁명이다. 이러한 모델에 따르면 기존 제도에 극적이고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나 사회질서를 송두리째 재편하지 않으면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혁명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 그러나 주도국의 역사에서 도출된 주도 세력, 중심이념, 계급전선 등 혁명의 패러다임은 1,2차대전 후 수립된 신생국가의 경험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론적 대응으로써 엘바키 허마씨는 시간(선진/후발)과 장소(중심/주변)에 따라 달라지는 혁명적 양상의 차이에 주목하는 ‘세계사적 관점(world-historical perspective)’을 제시하였다. 혁명은 대내적 정치단위의 분열 뿐 아니라 대외적 정치단위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혁명이 일어난 국가 안팎에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의 유산을 남기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혁명은 기존 권력을 위협하는 새로운 정치사상과 정당성의 원리를 보여주면서, 혁명이 일어난 국가의 경계를 넘어 혁명과 반혁명이라는 이중적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선진혁명(early revolutions)이 일어나자, 유럽의 후발국가들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방편으로 산업화나 민주화, 상비군 등 혁명의 산물인 각종 제도를 자국에 도입하였다. 라인하르트 뎅크스가 ‘선구사회(pioneer society)’와 ‘후발사회(follower society)’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을 이어받아 허마씨는 ‘참조사회(reference society)’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그 결과 ‘발전혁명(developmental revolutions)’이

라고 부를 법한 현상들이 프러시아와 일본에서 출현했다. 이것은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혁명으로 성취된 사회적 변화를 이들 국가에서는 강력한 국가기구의 주도로 창출한 것을 가리킨다. 러시아혁명조차도 이 점에서는 개발혁명의 범주에 속한다. 선진혁명의 경우, 부르주아 시민혁명은 자본주의가 성숙한 사회에서 일어난다는 사적유물론의 역사 논리에 부합되는 반면,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등의 발전혁명의 사례는 오히려 후발국의 이점을 살려 혁명적 변화를 구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생국가들의 혁명에 관한 비교연구의 이론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하여 신생국가는 중국, 쿠바, 알제리 등 혁명에 성공하여 장기적인 사회변화를 일궈낸 쪽과 그렇지 못한 나머지 나라들로 거칠게 양분된다. 후자에 속하는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독립운동과 남미의 쿠데타 정치는 혁명과는 무관한 것으로 취급되어 ‘근대화’ 이론의 패러다임에 따라 연구되어 왔다. 근대화 이론은 종종 반혁명적이고 점진적인 진화론(evolutionism)의 형태를 띠고 있다. 혁명이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후자의 국가들에도 혁명적 행위자들과 변혁에의 열망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러나 주변부 특유의 대내적인 저발전 상태와 대외적인 의존성으로 인해, 이들 신생국가들은 전폭적인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강력한 협력과 통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상징체계와 제도들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이기 쉽다. 따라서 신생국가들의 혁명은 선진 유럽국가들의 민주혁명과 후발국가들의 발전혁명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민족혁명(national revolutions)’이라고 명명할 만한 이 혁명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는 대략 세 가지이다. 첫째, ‘참조사회’ 모델에 자극받아 형성되는 정치 엘리트 및 그들의 조직의 성격이다. 둘째, 그 나라의 부존자원, 민족적 통합의 정도, 대중적 지지를 끌어

모을 상징자원 등 권력자원이다. 셋째, 그 나라의 크기, 지정학적 위치, 국제적 경쟁의 여부 등 외적 통제와 자율성의 정도이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혁명과 개량의 이분법 사이에서 중심부와 주변부 국가들 간의, 그리고 주변부국가들 사이의 비교분석이 가능해진다. 각국의 독립운동 또한 이러한 혁명의 비교연구를 통해 그 의미가 체계적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sup>119)</sup>

선진혁명으로서 영국과 프랑스, 미국에서 일어난 혁명은 모두 자유주의적 정치혁명과 민주적 자본주의로 귀결되었지만, 그 경로가 모두 다르다. 영국의 경우 대륙에 비해 왕권이 약했고, 영국 농촌에서는 자영농과 농촌 임금노동자 계층의 발달로 인해 지주와 농민들 사이에 직접적인 착취관계가 발달하지 않았다. 농민 반란의 우려가 적었기 때문에 지주계급이 중앙집권적 국가기구에 의존할 유인 또한 없었다. 그에 반해 절대왕권과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이 가장 발달한 프랑스에서는 지주계급이 농민들의 노동력 수탈에 의존하였고, 농민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왕과 귀족 간에 계급동맹이 이루어졌다. 한편, 프랑스 부르주아는 관직 매입을 통해 전통적인 귀족계급에 편입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740년 오스트리아 계승전쟁, 1756-1763년의 7년전쟁에 프랑스가 참가함으로써 무역과 상공업에 종사하는 부르주아의 이익이 국가의 대외정책과 충돌하였다. 결정적으로 프랑스의 미국독립전쟁 원조는 국가 재정과탄을 초래하여 귀족계층이 절대주의 국가에서 이반함으로써 부르주아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자유주의 정치혁명은 19세기 초 프랑스의 세력팽창을 경계한 영국이 러시아, 스페인, 프로시아 등 보수적인 왕정국가들과 맺은 대불동맹과 비엔나체제에 의해 도전받았다. 그 결과 나폴레옹

---

119) 이상의 논의는 Elbaki Hermassi, "Toward a comparative study of revolution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18, No.2 (1976), pp.211-235.



전쟁을 통해 전쟁과 민족주의가 결합된 총력전의 양상이 최초로 출현했다. 영국과 프랑스의 자유주의혁명은 미국의 독립혁명과 더불어 서양 근대 문명의 중요한 도덕적 자원으로 기능한다.<sup>120)</sup>

신용하는 프랑스의 경우 부르주아 계급이 대혁명을 통해 구체제의 해체와 신체제의 수립을 모두 담당한 반면, 한국근대사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구체제의 붕괴가 일어났고 이것을 개화파가 이어받아 갑오경장이라는 부르주아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신체제를 수립했다는 ‘농민혁명운동·부르주아 개혁 결합설’을 주장한 바 있다.<sup>121)</sup> 많은 논자들이 1894년을 한국 근대의 기점으로 삼는다. 다만 산업화와 민주화 이외에 반제투쟁 및 독립이라는 과제를 더 가진 한국적 근대의 특수성으로 인해 1894년의 의미는 복잡적이다. 예를 들어, 천관우는 “갑오경장에 의한 근대화와 아울러 동학란에 의한 봉건정부에의 최대 항쟁과 일청전쟁에 의한 외래자본주의 확립의 계기를 물어 갑오년으로써 우리 근대의 기점으로 하는 일 시안을 제기”하였다. 조기준은 한국 근대사의 전개과정에서 동학혁명이 그 이전의 각종 민란이나 저항운동과 달리 “명확한 반제의식과 민주사상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동학혁명은 이후의 갑오개혁, 1890년대 말부터 애국계몽기까지 이어진 언론 및 교육, 실업운동 등 혁신운동으로 이어져 마침내 3.1운동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sup>122)</sup>

이처럼 동학농민혁명과 갑오개혁과 애국계몽운동은, 그 역사적 유산을 놓고 볼 때, 주도세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주혁명으로서 연속

---

120) 이삼성(2009/2011), pp.111-140.

121) 신용하, “프랑스 혁명에 비추어 본 1894년 동학농민혁명운동”; 미셸 보벨, 민석홍 외 지음, 《프랑스혁명과 한국》 (서울: 일월서각, 1991), p.259.

122) 천관우, “갑오경장과 근대화”, 사상계, 1954년 12월호, p.39; 한국경제사학회, 『한국사시대구분론』 (서울: 을유문화사, 1970), pp.350-354.

성을 지닌다. 그간 한말 변혁운동은 아래로부터의 혁명과 위로부터의 개혁, 부르주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계몽운동이라는 식으로 그 주도세력의 차이로 인해 혁명과 개혁과 계몽 간의 단절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혁명적 언어를 소개하고 선동하는 계몽운동 자체를 보다 넓은 의미에서 혁명적 현상으로 파악할 때에만, 구한말의 변혁운동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의 민주화 운동 사이에 연속성 있는 근대사 서술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서 박명림은 1946년 이후의 모든 헌법초안에 등장하는 ‘인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이라는 근대 입헌민주주의 양대 원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1895년의 흥범 14조, 1889년 대한국국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거쳐 1948년 건국헌법으로 귀결되는 한국 사회의 거시적인 ‘헌법혁명’의 역사에서 찾고 있다.<sup>123)</sup> 서희경 또한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을 1898년 만민공동회의 헌의 6조와 1899년 대한국국제,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의 흐름에서 찾고 있다.<sup>124)</sup> 1910년대에 발표된 총 61개의 독립선언서를 분석한 김소진은, 1910년대 독립선언서의 민주공화정체를 지향성은 중국의 신해혁명이나 제 1차 세계대전, 월슨주의 등의 외적 요인보다도 갑오개혁 이후 독립협회를 거쳐 신민회에 이르는 동안 발전하여온 내재적인 이념의 변화라고 결론지었다.<sup>125)</sup>

대한제국기의 혁명개념사 연구는 자칫 자폐적이고 양상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과중한 개혁의 압력 속에서 정치혁명의 자원을 ‘참조사회’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근대 초기의 특수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유럽의 선진혁명과 같은 ‘정상적이고 완성된’

123) 박명림, “한국의 초기 헌정체제와 민주주의: ‘혼합정부’와 ‘사회적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1 (2003).

124) 서희경,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 (1898-1919)”,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5 (2006).

125) 김소진, (한국독립선언서연구)(서울: 국학자료원, 1999), pp.292-293.

시민혁명이 한국근대사에 없었던 것처럼, 프랑스나 러시아나 중국 혁명사상사와 같은 전폭적인 사회혁명의 대한제국기 혁명사상사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 혁명의 개념사가 필요하고 유용하다. 대한제국기 혁명개념사의 의의는 위에서 든 김소진, 서희경, 박명림의 연구처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 국가건설의 정치사상사 연구와 접합될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나아가, 서양정치사 번역서와 신문 기사를 분석한 혁명개념사를 통해,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선진혁명은 물론,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후발사회의 혁명 사례가 대한제국 변혁운동가들의 헌법과 정부형태에 대한 이념적인 지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매개된다. 박명림과 서희경이 제시한 건국헌법의 민주공화제 이념과 혼합제 정부형태의 사회적 합의 과정에 독립협회 시기의 『미국독립사』나 『법국혁신사』, 애국계몽기의 『비율빈전사』를 추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2절. 근대적 혁명개념의 출현

### 1. 프랑스혁명의 번역어 I: 『만국약사』의 ‘혁명’

개화 초기 외교 사절의 일원으로 청과 일본에 다녀온 관료 지식인들이 남긴 극소수의 기록을 제외한다면, 외국 정치 기사가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은 1880년대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 와서이다. 이 가운데 내용상 혁명으로 번역될 수 있는 정치변동을 다룬 기사는 1886년 9월 27일자 한성주보에서 처음 보인다. 기사는 불가리아 반란 뒤 왕의 거취에 대한 두 가지 설을 전하고 있다. 첫째 설은 “불가리아(波加厘亞國) 국왕은 이미 혁명으로 거세되어(國王已革去) 감옥에 수감되었고 현재는 새 왕을 세워 당분간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 설은 “알렉산더(亞厘山打) 왕은 부득이 퇴위하여 국외로 나갔고 다만 임시로 책임을 맡은 왕은 전적으로 러시아(俄國)의 보호에 의존하고 있다.”<sup>126)</sup>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혁명(革命)’이라는 단어 대신 ‘혁거(國王已革去)’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한성주보는 2년 반 동안 발행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관보의 형태로 중앙 및 지방의 각 관청 관리들이 국내외의 정치사를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회람의 범위가 계층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sup>127)</sup>

한성주보가 재정 곤란으로 1888년 폐간된 뒤, 외국의 정치 동향과 구미 근세사가 다시 집중적으로 유입된 때는 갑오개혁기이다. 19세기 전반까지 조선의 정치언어에서 정치권력의 정통성과 혁명의 정

126) 한성주보 1886년 9월 27일 「國王被黜」: 한국언론진흥재단 고신문DB: [www.mediagaon.or.kr](http://www.mediagaon.or.kr)

127) 한성순보와 주보의 발행에 대해서는 이광린,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 대한 일고찰”, (한국개화사연구) (서울: 일조각, 1999[1969]), pp.83-127.

당성을 판단할 해석적 권위의 원천은 유교 경전과 사서(史書)였다. 물론, 이러한 정치언어의 규범적 제약 내에서도 각 정치세력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념을 전용하고 원래의 의미를 희석시키거나 새로운 역사적 경험을 덧붙였다. 하지만 천명론과 왕도정치의 기본 문법 자체는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그런데 안으로는 그간 축적된 사회경제적 모순의 분출에 인해, 밖으로는 구미 열강의 제국주의적 역내 진출에 의해, 19세기 후반 조선의 정치언어는 그 어휘 목록과 역사적 지향점이 모두 달라진다. 이러한 변화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것이 동학농민봉기와 청일전쟁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갑오, 을미 연간의 국가개혁이다. 사회사적으로는 전제적 왕권 제한을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이 시도되었고, 사상적으로는 서양 근세 정치사가 관립학교의 필수 교과과목과 관리 임용시험과목으로 편입됨으로써, 정치에 관한 지식의 새로운 보고(寶庫)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시기 경사일체(經史一體)의 중세 사학에서 벗어난 근대적 형태로 기술된 청과 일본의 만국사(萬國史) 책들이 국한문혼용체 및 한글로 번역되기 시작, 관립학교 교과서로 법제화됨으로써 대한제국기 전반에 걸쳐 관립학교 뿐 아니라 사립학교들에서도 외국사가 필수 교과목으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 이들 외국사 번역서의 발췌본이 신문과 잡지에 반복적으로 전재(轉載)됨으로써, 한적(漢籍) 그대로 들여다가 소수의 식자층이 돌려보며 궁구하던 앞 시기와 달리, 서구 근대정치에 관한 지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수용되는데 일조한다.

갑오개혁기에 법제화된 외국사 교육은 그간 주로 근대적 역사 서술과 공교육 제도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졌다.<sup>128)</sup> 그러나 정치

128) 백옥경, “한말 세계사 저·역술서에 나타난 세계 인식”, 한국사상사학 Vol.35 (2010); 김영훈, “개화기 교과서 속의 세계와 역사 :만국지리(萬國地理)와 만국사(萬國史)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Vol.16, No.2 (2010); 김성학, “초기

적 영향력 면에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관리임용제도 개혁의 일환으로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군국기무처는 1894년 8월 3일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8월 12일 선거조례(選舉條例)와 전고국조례(銓考局條例), 8월 14일에 문관수임식을 제정하여 새로운 관리임용제도를 확립하였다. 선거조례는 보통시험과 특별시험 실시를 통해 신분이 아닌 능력본위로 관리를 선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다. 전고국조례에 명시된 보통시험 과목은 국문, 한문, 사자(寫字), 산술, 내국정략, 외국사정, 내정외사(內政外事)의 7개 과목이었고, 여기에 합격한 사람만 다음 단계인 특별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sup>129)</sup> 이와 더불어 1894년 8월 학무아문 고시와 1895년 5월에서 9월 사이 공포된 일련의 법령에 의해 한성사범학교, 외국어학교, 성균관, 소학교 등의 교과과정에 본국사와 외국사가 필수 교과목으로 도입되었다.<sup>130)</sup> 이러한 근대교과는 새롭게 제정된 관리 임용법의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었고, 이것은 과거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정치언어의 규범으로 통용되던 성리학적 정치철학의 제도적 기초를 와해시켜 나갔다.

그러나 개혁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일본에 의존함으로써 초래된 내정간섭, 기득권 축소에 대한 왕실과 보수 세력의 반발, 유교적 국가이념과 사회윤리를 거스르는 급진적 정책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를미사변과 아관파천을 계기로 갑오내각은 붕괴된다. 이후 건양 연간에는 ‘구본신참(舊本新參)’과 ‘경본예참(經本藝參)’의 원칙하에 갑오개혁기에 이루어진 급진적 교육 근대화 정책들이 수정되었다. 특

---

(1895-1910) 서구 교육학의 도입과 그 성격”, 교육사회학연구, Vol.5 No.1 (1995); 김흥수, (한국 근대역사교육 연구) (서울: 삼영사, 1990); “개화세력의 교육사상”, 국사관논총, Vol.83 (1999).

129) 고종실록, 고종 31년 (1894, 광서 20) 7월 3일, 7월 12일; (구한말근대법령자료집)1 (국회도서관, 1970), p.34; 윤건차, (한국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 (서울: 청사, 1987), p.104에서 재인용.

130) 양정현, 「근대 개혁기 역사교육의 전개와 역사교재의 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p.15-22.

히, 고종은 1899년 3월, ‘성균관 관제’를 개정하고 초현당(招賢堂)을 설치하여 지방 유생들에게 공맹지학을 장려하는 등 고등교육 정책에서 시무 관료 양성의 중추로 성균관의 지위를 회복시켰다.<sup>131)</sup> 애초에 전국에 300여교를 설립할 계획이었던 공립 소학교는 극히 일부만 세워졌고, 1897년경부터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요청되었던 여학교설치안이 1900년 1월 의정부회의에 부쳐졌으나 부결되었다. 1900년 11월에는 외국어학교장 조한백, 의(醫)학교장 지석영, 중학교장 이필균이 학부의 경비지원이 없어 학생들에게 학용품과 식비를 주지 못하니 학교 문을 닫을 지경이라며 사표를 제출하고 있다.<sup>132)</sup> 갑오개혁기에 입안된 관료양성제도 및 교육 근대화 구상이 건양-광무 연간에 실현되지 못하고, 그나마 양잠, 의학, 통역 등 실용 학문을 가르치는 기술학교에 지원이 집중된<sup>133)</sup> 배경에는 절대적인 국가재정의 부족과 더불어 정권안보에 대한 집권층의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94년 7월 근대적 교육 행정기관인 학무아문(學務衙門)이 신설되었고, 여기에 편집국을 설치하여 각국문 번역 및 교과서 편집을 관장하도록 했다. 1895년 3월 학무아문은 학부(學部)로 명칭과 법제가 개편되었고 편집국의 업무는 교과용 도서의 번역·편찬·검정, 도서의 구입·보존·관리, 도서의 인쇄로 더욱 확장되었다.<sup>134)</sup> 학부에서 처음으로 펴낸 외국사 교과서는 1896년의 『만국약사(萬國略史)』이다. 『만국약사』는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애초에 보다 넓은 계층을 겨냥하여 만들었음을 짐작케 한다. 당시 학부 편집국장이

131) 황성신문 1899년 2월 1일 ‘학부훈령’; 변승웅, 「근대사립학교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p.51; 양정현(2001), pp.47-49에서 재인용; 윤건차(1987), p.158.

132) 관보 제 1480호 1900년 1월 25일; 황성신문 1900년 1월 26일 ‘관청사항’; 황성신문 1900년 11월 5일 ‘교장청원’.

133) 윤건차(1987), pp.157-162.

134) 박결순, “한말 학부의 편찬사서와 그 역사인식”, 충북사학, Vol.5 (1992), p.73.

있던 이경직(李庚植)은 발문(跋文)에서 경세(經世)의 선비로 하여금 세계 만국의 긴요한 일들을 알게 하여 개명(開明)하고 흐름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 책을 낸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세계사 상술이 어려워 여기에 밝은 일본인 ‘龍峯野野村’가 서양사의 전말을 연역(演繹)하여 책을 지었다고 하고 있다.<sup>135)</sup>

『만국약사』에는 우리말로 된 책 가운데 최초로 ‘불란서 혁명(佛蘭西革命)’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해당 부분을 살펴보자.

“기원 1774년 루이16세 때에 국력이 피폐하고 국채가 파다하니라. 누세로 횡포가 심하여 평민을 침노하매 화란이 끊이지 않으며 또한 근세에 홍유의 저술이 세계에 전파하여 민지점진하니 즉 자주 자유하는 권리라 군주전제의 하에 굴함과 귀족이 억제함을 싫어하더라. 이때에 미국이 영국을 반대하여 독립함을 꾀하거늘 불란서가 미국을 도와 해외에서 싸우다가 영미 화의된 후에 귀국하니라. 인민이 더욱 민권의 설을 제창하여 사방에 봉기하매 그 화려한 경성이 줄지에 변하여 수라장이 되고 루이16세는 단두대상의 이슬과 같이 사라지며 권위를 자랑하던 귀족승려는 도살당하고 각 당이 서로 싸워 조야에 인육을 쌓으매 그 잔인함이 역대에 있었던 적이 없으니 불란서혁명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紀元 一千七百七十四년에 路易十六世에 國力이 疲弊하고 國債ㅣ 頗多하니라 累世로 暴橫이 甚하야 平民을 侵魯하되 禍亂이 不已하며 또 近世에 鴻儒의 著述이 世界에 傳播하야 人智漸進하니 卽 自主自由하느 權이라 君主專制의 下에 屈함과 貴族이 抑制함을 厭하더라 時에 米國이 英國을 反對하야 獨立함을 圖하거늘 佛人이 米國을 助하야 海外에 戰하다가 英米의 和議된 後에 歸國하니라 人民이 더욱 民權의 說을 唱하

135) 학부편집국, (만국약사), 1896;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만국사기)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p.1006.



야 四方에 蜂起호미 그 華麗호 京城이 忽地에 變호야 修羅巷이 되  
고 路易十六世는 斷頭臺上의 露와 긋치 消호며 權威를 誇호던 貴族  
僧侶는 屠殺호 바 | 되고 各黨이 相擊호야 朝野에 人肉을 積호미  
그 殘忍함이 歷代에 未有호바 | 니 佛蘭西革命이라 稱함이 卽是也 |  
라).”<sup>136)</sup>

저자는 불란서혁명의 원인으로, 루이16세 때의 국가재정 파탄과 불  
평등한 사회체제, 자유사상 전파로 인한 민지 계몽과 민권 사상의  
발흥, 프랑스의 미국독립전쟁 참전을 지목한다. 인민 봉기에 의해  
일어난 혁명은 수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전제군주를 처형하며,  
귀족과 승려를 도살하고, 각 당이 정부 안팎에서 살상하는 매우 잔  
인하고 무질서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어지는 대목에서는 프랑  
스혁명 뒤의 합중정치가 야기한 혼란과 혁명전쟁 초기 정부의 무능  
력이 묘사된다.

“이 때 우리가 정권을 장악하여 합중정치로 하나 이 당이 패하면 저  
당이 일어나고 내란이 계속 이어지니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와 영  
국의 군주들이 그 국민이 프랑스 국민을 흥내낼까 두려워하여 연합  
군을 일으켜 프랑스 왕가의 회복함을 도모하니 프랑스 사람들이 소  
동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더라. (時에 激徒 | 正權을 握호야 合  
衆政治로 호나 然이나 此黨이 敗호면 彼黨이 起호고 內亂이 常連호  
니 奧太利와 普魯西와 英吉利의 諸君主 | 그 國民이 佛國民을 效嚆  
홀가 恐호야 聯合軍을 起호야 佛國王家の 回復함을 謀호니 佛人이  
騷動호야 歸호 바를 不知호더라)”<sup>137)</sup>

혁명 뒤 프랑스는 내정이 매우 불안하다. 이 와중에 프랑스의 혁명

136) (만국약사); (만국사기)(1996), p.975.

137) (만국약사); (만국사기)(1996), p.975.

이념의 확산을 우려한 주변 왕조국가들은 프랑스 왕정복고를 위해 ‘연합군’을 결성한다. 이처럼, 이 시기 외국사 교과서들의 혁명서사에서 혁명의 경과를 해당 시기의 국제체제 및 국제체제의 변환과 밀접하게 연동된다. 국내 정치적 문제로 시작된 혁명이 국제적인 동맹과 전쟁을 촉발하고, 다시 대외적 압력에 의해 혁명이 굴절되거나 상승되면서 혁명의 산물인 대내 정치체제가 변질되는 동학을 가장 잘 보여준 역사적 실례가 바로 프랑스혁명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합중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나폴레옹에 대한 찬양이 매우 대조적이다.

“이때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천고의 무쌍한 영재로서 27세의 장수의 직임을 받고 기원 1796년에 이탈리아 출정에 종사하여 오스트리아 군대를 여러 번 무찌르고 가는 곳에 대적할 이 없자 다시 영국령 인도를 빼앗고자 하여 기원 1798년에 대군을 이끌고 카이로를 평정하니라. 이때에 열국이 다시 병력을 연합하여 경계에 침범하자 프랑스병이 여러 번 패배하고 국내에 합중정부의 두령이 될 사람을 얻지 못해 크게 소요하거늘, 나폴레옹이 기회를 틈타 급히 이집트로부터 귀국하여 마침내 병력으로 합중정부의 당을 압제하고 신정부를 열어 헌법을 정하고 스스로 대통령이 되어 전국의 정권을 장악하니 때는 1799년이라 (時에 拿破崙 보나바루도는 千古의 無雙한 英材로써 二十七歲에 將帥의 任을 受히고 紀元 一千七百九十六年에 伊太利의 出征에 從事하야 奧兵을 數破하고 所向에 敵히리 업스미 다시 英領印度를 奪교자 하야 紀元 一千七百九十八年에 大軍을 率하고 改羅를 平定하니라 時에 列國이 다시 兵을 聯合하야 境界에 侵犯하미 佛兵이 數敗하고 國內에 合衆政府의 頭領을 其人을 得치 못하야 크게 騷擾하거늘 拿破崙이 投機하야 急히 埃及으로부터 歸國하야 卒然이 兵力으로써 合衆政府의 黨을 壓制하고 新政府로 開

호야 憲法을 定호고 스스로 大統領이 되야 全國의 政權을 掌握호니  
時는 一千七百九十九年이라).”<sup>138)</sup>

체제가 채 안정되지 않은 합중정부는 국내의 분열과 외국의 침입에 취약하다. 대불동맹 연합군의 공격은 프랑스 혁명 세력을 국민군으로 전환시키고, 혁명을 방어하기 위한 대외전쟁을 승리로 이끈 나폴레옹은 군사력과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다. ‘당을 압제’하고 헌법을 개폐함으로써 ‘스스로’ 대통령이 된 나폴레옹의 군사독재 수립에 의해 혁명의 정치원리가 무너진 것에 대해 『만국약사』의 저자는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1804년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를 “인망이 점차 그에게 돌아갔기(人望이 漸歸)” 때 문이라고 옹호한다.

“그 후 여러 나라를 수차례 꺾고 이태리를 잠식하여 위무를 날로 떨치니 인망이 점차 나폴레옹에게 모여 1804년에 마침내 프랑스 황제의 자리에 오르니 이를 나폴레옹 제 1세라 한다 (其後로 列國을 數挫호고 伊太利를 蠶食호야 威武ㅣ 益揚호니 人望이 漸歸호야 一千八百四年에 못춤 佛國皇帝의 位에 卽호니 此를 拿破崙 第一세라 호다).”<sup>139)</sup>

이어지는 대목에서는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시아, 스웨덴의 대불동맹 결성과 나폴레옹의 프로시아, 이태리, 독일, 스페인 등에서의 승리가 서술된다. 이제 나폴레옹 전쟁은 종래의 방어적 성격에서 벗어나, “위력이 구주대반을 압복하매 종하여 구주를 혼일코저(威力이 歐洲大半을 壓服호미 從호야 歐洲를 混一코자)”<sup>140)</sup>하려는 것으

138) (만국약사); (만국사기)(1996), pp.975-976.

139) (만국약사); (만국사기)(1996), p.976.

140) (만국약사); (만국사기)(1996), p.976.

로 묘사된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영국에 대한 대륙봉쇄령을 발하고 (“貿易의 利를 防호야 國力을 衰耗코자 호야 大陸條例라 호는 法을 立”<sup>141)</sup>), 러시아가 이것을 어김으로써 나폴레옹은 1812년 러시아 원정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러시아,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독일 연합군에 프랑스가 패배함으로써 나폴레옹은 축출되고 1814년 루이 18세로의 왕정복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만국약사』는 나폴레옹의 1815년 백일천하와 세인트헬레나 섬으로의 유배와 죽음, 루이 18세의 최종적인 복위까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

『만국약사』에는 ‘혁명(革命)’이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되었다. 두 번째 ‘혁명(革命)’은 1852년 프랑스의 제 2제정 수립을 가리킨다. 오늘날 혁명이라고 부르는 1830년의 7월혁명이 ‘내란(內亂)’이라고 표현되었고 1848년의 2월혁명은 ‘봉기(蜂起)’라고 표현된 데 비해, 루이 나폴레옹의 황제즉위를 ‘혁명(革命)’으로 지칭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당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 왕 샤를 10세 때에 그 선왕을 흉내내어 위권으로써 인민을 압제하고 신문지를 엄금하며 대의사의 선발하는 법을 변혁하여 인민의 신망을 잃어버리매 내란이 일어나고 루이필립이 계승한 때에는 민권당이 사방에 봉기하여 왕가를 전복하고 합중공화정체로 전국의 대의사를 소집하여 헌장을 제정하고 나폴레옹 제 1세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을 추대하여 대통령을 삼으니 때는 1848년이라 초에 루이의 대통령 시에 공화정체를 사용하였으나 후로 인심을 몰래 살펴 인민의 권하는 바 제위에 오르니 즉 나폴레옹 제 3세요 때는 1852년이나 역사가는 이를 불관서 제 2혁명이라 칭하니라 (嗣王 지야레수十世에 其祖先을 效嚆호야 威權으로써 人民을 壓制호고 新聞

---

141) (만국약사); (만국사기)(1996), p.976.

紙를 嚴禁하며 代議士의 選拔하는 法을 變革하여 民望을 失히니 內亂이 起하고 路易후이릿쑤의 嗣흥이 及하여 民權黨이 四方에 蜂起하여 王家를 顛覆하고 合衆共和政體로 全國의 代議士를 集하여 憲章을 制定하고 拿破崙 第一世의 侄 路易拿破崙을 推하여 大統領을 삼으니 時는 一千八百四十八年이라 初에 路易의 大統領時에 共和政體를 用하였으나 後로 人心을 密探하여 人民의 勸點으로써 帝位에 登히니 卽 拿破崙의 第三世오 時는 一千八百五十二年이나 史家 | 此를 佛國 第二世의 革命이라 稱히니라).”<sup>142)</sup>

『만국약사』는 프랑스혁명 과정의 폭력성과 합중정치가 야기한 정국 불안정과 공화국에 대해 부정적이며, 나폴레옹 1세와 나폴레옹 3세가 이룬 대내적 통합과 대외적 강성함에 호의적이다. 이것은 노노무라가 프랑스 7월혁명과 2월혁명을 각각 ‘내란’과 ‘봉기’로 칭하고 제정 수립을 ‘혁명’으로 개념화하는 데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만국약사』의 저자가 구사하는 혁명개념은 이중적 층위를 가진다. 『만국약사』가 제시하고 있는 프랑스 역사의 선례에서, 두 번의 혁명은 민권을 억압하고 정치에 실패한 전제 왕조에 대한 전복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왕을 처형하고 기득권자를 살육한 프랑스혁명의 폭력적 과정과 합중정치는 부정적으로 서술되고, 강력한 황제 중심의 입헌정체가 혁명의 최종적 형태로서 옹호된다.

187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서 프랑스혁명에 대한 해석은 단순히 역사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메이지 입헌제 논쟁과 직결되는 정치 담론이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전제왕조 폐지 이후 바람직한 국가형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럽 각국의 정치체제와 유럽 근세사가 탐구되었다. 유럽혁명사, 특히 프랑스혁명은 정치체제 변혁의 요인과 과

142) (만국약사); (만국사기)(1996), p.977.

정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전범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876년 미네(F. Minet)의 『佛國革命史』를 필두로 1884년 티에르(Adolphe Thiers)의 『佛國革命全史』, 1885년 뢰슬러(Hermann Roesler)의 『佛國革命論』, 1888년 윌슨(Marcius Wilson)의 『佛國革命史論』 등 프랑스혁명에 관한 번역서들이 다수 출판되었다. 이 책들은 각기 다른 맥락에서 저술되었고, 프랑스혁명에 대해 상이한 시각을 보여준다. 나폴레옹 사후 프랑스에서 왕당 보수파의 역사해석에 대항하고 자유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1920년대에 나온 미네와 티에르의 책들은 역사를 진보시킨 프랑스혁명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일본정부의 독일인 고문이었던 뢰슬러의 책은 19세기 후반 대두된 토크빌이나 테느의 프랑스혁명 비판론을 반영하여 혁명과정의 혼란과 파괴 등 혁명의 부작용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교육사상가 윌슨은 전제정치는 개혁하되 인민에게 직접 권력을 맡기지 않는 영국식 온건혁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프랑스혁명에 대한 평가는 메이지일본 입헌 담론의 중요한 전선을 형성, 즉각적인 입헌을 요구한 급진적 자유민권론자들은 프랑스혁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프로이센식 계몽군주제를 선호한 국권론자들과 영국식 의회제도를 옹호하는 온건파 자유민권론자들은 프랑스혁명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sup>143)</sup>

『만국약사』의 혁명개념은 이처럼 노노무라 개인의 생각을 넘어 메이지 일본의 프랑스혁명에 대한 보수주의적 해석의 조류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 책의 저자 ‘龍峯野野村’에 대해서는 그가 1895년 학부의 고문관으로 온 노노무라 킨고로(野野村金五郎)와 동일인물이라는 사실<sup>144)</sup> 외에는 별로 밝혀져 있지 않다. 1880년대 초 일본에

143) 함동주, “메이지 초기 서양사수용과 프랑스혁명관의 사회문화사”, 동양사학연구, Vol.108 (2009), pp.209-211.

144) 백옥경(2010), p.179, 주 11) 참조. 1896년 2월자 친목회회보에 따르면 1895년

서 서양사가 소학교의 정규교과목으로 법제화된 이후 『만국사략』 등의 제목으로 서양사 교과서가 다수 출판되었고,<sup>145)</sup> 이미 1882년에 출판된 동명의 일본 서적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sup>146)</sup> 『만국약사』 자체도 노노무라의 창작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창작이든 아니든, 특정 책의 특정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하는 행위에는 취사선택의 기준이 작용한다. 이 시기 서양사 및 만국사 교과서는 압도적으로 정치사 중심이었고, 구미 근세 정치사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은 이념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았다. 1896년 국한문혼용체로 학부에서 발행된 노노무라의 『만국약사』 속 혁명개념에는 1889년 제국헌법을 공표하여 군주제 입헌국가로 거듭난 뒤 1895년 청일전쟁에 승리한 메이지 일본의 경험공간이 반영되어 있다.

노노무라 킨고로는 1894년 12월 일본 박문관(博文館)에서 나온 만국전사(萬國戰史) 전집 제 3권 『나폴레옹전사(拿破侖戰史)』의 저자이다.<sup>147)</sup> 『나폴레옹전사』는 1908년에 가서야 우리나라에 번역되지만, 『만국약사』를 쓸 즈음의 노노무라가 유럽 근세사에 상당히 해박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서두를 보자.

“하늘은 18세기의 인심이 시들어 쓰러지고 미진함을 조감하시고 고금에 절대 위대한 영웅을 내리사 벽력일성에 19세기의 장공일벽과 교월천리의 별세계를 출현하게 하였으니 오호라 하늘이 나폴레옹을 내리심이 어찌 우연이리오(天은 十八世紀의 人心이 萎靡不振함을

8월 현재 일본인 고문관·보좌관들은 37명으로 그 중 학부 소속은 5명이다. 노노무라 킨고로의 봉급은 600원으로 정부의 외국인고용인 중 가장 직급이 낮은 판임관(判任官)에 해당한다. 김성학(1995), p.109; (친목회회보) 제 1호 (1896.2), p.45; 차배근, (개화기일본유학생들의 언론출판활동연구(I) 1884~1898)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456.

145) 함동주(2009), p.214.

146) 津田甚三郎編, (万国略史) (東京: 靑雲書屋, 1882).

147) 청일전쟁 시기 박문관의 전쟁물 출판에 대해서는 함동주, “일본제국의 성립과 박문관의 출판활동”, 동양사학연구, Vol.113 (2010), p.251.

照鑑호시고 古今絶大絶偉호 英雄을 降호스 霹靂一聲에 十九世紀의 長空一碧과 皎月千里의 別世界를 現出케 호얏스니 嗚呼 | 라 天이 拿破崙을 降호심이 었지 偶然호이리오).”<sup>148)</sup>

혁명 시대의 혼란을 잠재울 절대군주 나폴레옹의 출현이 ‘하늘(天)’의 뜻이라는 이 대목은, 전통적 혁명개념에서 혁명의 정당성의 근거였던 천명론을 강하게 상기시킨다. 다만 이제 천명을 해석할 근거와 논리는 더 이상 유교 경전 속의 중국 상고사가 아니라 서유럽 근세의 국제정치사와 군사력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이념으로 바뀌었다. 『나폴레옹전사』의 화자는 나폴레옹의 출현을 하늘의 뜻, 즉,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것으로 만든 계기로 18세기 말의 프랑스혁명과 혁명전쟁을 지목하고 있다.

“권력평균의 네 글자로 구주천지를 관리함이 극히 미약하나 외관적으로 안정한 평화를 장식한 때에 아연히 그 중간에서 일대사변이 일어나니 (즉 「부르봉」 왕가의 전복이라) 프랑스 황제 루이 십육세가 혁명당에게 피해한 사실에 급격한 현상은 실로 구주천지를 진동하며 뒤흔들지라. 고로 열국군주는 이것이 자국에 지대한 관계가 있다 하며 그 군주에게 지극히 통렬한 영향이 미칠까 두려워하여 공화정체의 근기가 견고하지 못할 때에 진멸하고자 도모하며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의 제국은 동맹을 형성하고 프랑스 공화정부를 향하여 개전을 선언하니 저 구주천토를 진양할 일대 전쟁의 조짐이 여기에서 일어나니라 (權力平均의 四字로 歐洲天地를 管理함이 極히 微弱호는 外觀적으로 安靜호 平和를 裝飾호 時에 俄然히 其中間에서 一大事變이 起호니 (即 「푸르폰」 王家의

148) 野々村金五郎 著, 류문상(劉文相) 역, (拿破崙戰史 上) (義進社 발행, 보성사 인쇄, 1908);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9)(서울: 아세아문화사, 1978), p.175.



顛覆이라) 佛國皇帝 루이 十六世가 革命黨에게 被害호 事實에 急激한 現象은 實로 歐洲天地를 震撼호며 攪拌호지라 故로 列國君主는 此로써 自國에 至大호 關係가 有호다 호며 其君主에게 最痛激호 影響이 及할가 恐怖호야 共和政體의 根基가 堅固치 못호 時에 殄滅코자 計圖호며 奧太利, 普魯西, 和蘭, 西班牙, 英吉利의 諸國은 同盟을 形成호고 佛國共和政府를 向호야 開戰을 宣言호니 彼歐洲全土를 震蕩호 一大諍亂의 瑞이 於是乎起호니라).”<sup>149)</sup>

프랑스혁명 이후의 프랑스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이념 하에 제국을 지향한 혁명적 국가였고, 나폴레옹전쟁은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 체제가 유럽을 석권하여 하나의 제국을 만들려는 시도였다. 나폴레옹 전쟁은 세력균형의 원칙에 의해 유지되던 18세기까지 유럽의 국제체제를 질적으로 변환시켜, 물리적 세력 배분 뿐 아니라 안보질서 유지에 대한 이념적 합의가 동맹의 축이 되는 19세기 국제체제를 출현시켰다.<sup>150)</sup> 『나파툼전사』의 혁명서사와 『만국약사』의 혁명개념은, 프랑스혁명을 집단 안보적 위협으로 인지하고 개입한 왕조국가들의 연합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리가 타협되고 대내적 정치체제와 대외 정책에 있어 민족주의가 지배 원리로 등장한 19세기 초 유럽의 역사적 경험공간을 보여준다.

이 시기 만국사와 서양근세사 서술은 다분히 편향적인 국제정세 판단과 민족적 기획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이념성은 번역자나 전재(轉載)자에게도 원래의 저자 못지않게 존재한다. 그런데 외국사 번역서

149) 박문서관 편집부 역술, (拿破崙戰史 全) (박문서관 발행, 탑인사 인쇄, 1908):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9)(서울: 아세아문화사, 1978), pp.177-178.

150) 전재성, “동맹의 역사”, 하영선 편, (21세기 신동맹: 냉전에서 복합으로) (동아시아연구원, 2010), pp.43-44; Paul Schroeder, *Transformation of European Politics 1763-184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David Armstrong, *Revolution and World Order: The Revolutionary State in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를 읽을 때에는 두 가지 층위의 의미 해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유교 경전의 전통 사서(史書)가 더 이상 현실 판단이나 미래 행동의 경험적 준거를 제공해 주지 못하게 된 근대이행기에, 외국사 번역서는 직접적인 지식의 창고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1896년 『만국약사』를 읽는 사람은 프랑스혁명에 대해 모르던 사실들을 알게 된다. 둘째, 외국사 번역서들의 혁명·애국·망국서사들은 언제나 번역자가 처한 시공간에 대한 비유로서, 정치 현실을 비판하거나 개변할 의도를 전달한다.

그럴 때, 프랑스혁명 전야의 프랑스는 한국으로 읽혀질 수 있고, 나폴레옹 전쟁기의 프랑스는 일본으로 읽혀질 수 있다. 첫 번째 의미 영역이 번역의 횡수와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한 반면, 번역이 거듭될 수록 두 번째 의미를 읽어내는 작업은 더 복잡해진다.

『만국약사』의 이중적 혁명개념은 일련의 내전을 거쳐 막부를 타도하고 황제를 정점으로 한 입헌군주제를 수립한 일본의 경험에 부합한다. 나폴레옹 전쟁의 서사는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청일전쟁을 벌이고 조선에서 갑오개혁을 단행한 것에 들어맞는다. 노노무라는 프랑스대혁명이 상징하는 과도기적 혼란의 18세기 프랑스가 아니라, 나폴레옹이라는 강력한 지도자의 통솔 하에 지역 패권에 도전하는 19세기 프랑스의 역사에서 20세기 일본의 미래를 읽었을 법하다. 그런 의미에서 『만국약사』의 혁명개념은 19세기 초 유럽 국제체제에 대한 현상 인식 뿐 아니라 19세기 말 동아시아 국제체제의 현상 변동에 대한 기대지평을 드러낸다.

개항 이래 마련된 외국인 고문관 제도는 그것이 시기에 따라 어떤 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기여했든,<sup>151)</sup> 국가 기구 근대화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

을 선진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후발국의 구조적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노노무라 킨고로처럼 직접 학부에서 고문관으로 일한 경우가 아니라도, 대한제국기 내내 번역된 서양정치사 문건들이 대부분 일본인에 의해 혹은 중국인에 의해 저술 혹은 번역된 것을 중역한 것이다. 이 시기 국내에서 서양정치사 책을 발행하는 데에는 저술·번역과 출판·인쇄 양쪽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 활자와 인쇄기 및 활판 인쇄 기술자가 확보되어야 했다. 둘째, 구미 근세사에 익숙하여 청이나 일본의 책을 읽고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당시 만국사에는 매우 생소한 이름과 개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한문 소양만으로 가능한 작업이 절대 아니었다. 1880년대에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를 발행할 때에도, 인쇄기의 구매와 인쇄 기술, 외국신문 번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인의 손을 빌려야 했다.<sup>152)</sup>

그렇다면, 국한문혼용체 『만국약사』의 프랑스혁명 서사와 혁명개념이 내포한 두 번째 의미 영역은 무엇인가? 첫째, 프랑스대혁명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전제군주 고종과 보수세력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다. 전제군주정은 인민들의 혁명봉기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폭력 혁명을 예방하기 위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개혁세력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체제를 변혁시키는 방법으로 아래로부터의 폭력 혁명과 군주정 폐지는 좋은 생각이 아니다. 사회 질서와 국가 안위를 위해서는 갑오개혁 같은 위로부터의 개혁과, 전제군주정을 입

151) 이 시기 고문관정책의 도입 경위와 시기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는 김현숙, “한말 조선 정부의 고문관정책(1882~1904)”, 역사와 현실, Vol.33 (1999).

152) 박영효는 1882년 수신사로 도일했다가 당시 지지신보(時事新報)를 창간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추천을 받아 후쿠자와의 제자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와 일본인 기술자들을 데리고 귀국하였다. 이노우에 가쿠고로는 갑신정변 직후 일본에 돌아갔다가 다시 조선에 와서 박문국에 채용, 한성순보와 한성주보 발행에 있어 번역 사무를 맡아 보았다. 이광린(1999), p.85, 103, pp.105-106, pp.109-110.

헌군주정 내지 계몽군주정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 2. 프랑스혁명의 번역어 II: 『만국약사』의 ‘민란’

『만국약사』의 혁명개념에는 프랑스 혁명사에 투영된 일본의 근대 국제정치의 경험 공간이 담겨있다. 『만국약사』가 국한문혼용체로 옮겨짐으로써, ‘프랑스혁명’이라는 고유명사가 한국어로 유입되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이라는 말과, 그 말이 지칭하는 역사적 사건의 원인과 추이와 결과를 설명한 혁명서사가, ‘혁명’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경험공간을 침식하고 자극하며 일정한 기대지평을 열지 않는 한, ‘프랑스혁명’이라는 말은 한국어에서 개념사의 대상이 되는 정치언어가 아니다. 그렇다면, 1896년 한국의 혁명개념의 경험공간은 무엇인가? 프랑스혁명에서 시작된 근대적 혁명개념의 핵심요소가 개혁에 대한 체제내적 압력과 체제외적 압력의 변증법과 부작용이라면, 조선에 이것을 깨우쳐준 경험은 1894년의 갑오전쟁이다.

“갑오전쟁을 한번 보라. 동학이 처음 일어나자 논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국내의 작은 난이라 외국이 중요하게 여길 만하지 않다고 하더니, 어찌 우리에게 내달아 피를 흘리고자 청일이 서로 싸워 청은 일패도지하고 일본 또한 이득된 바가 없으며 이밖에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등 큰 나라들의 철함과 수뢰가 안개와 구름처럼 바다 위에 모여 노려보며 주의하니 살기는 하늘을 찌르고 격문은 지구에 두루 보내져 모두 피를 흘리려고 엿보며 먼저 나서 사람을 베고 죽이려 할 따름이었다. 만약 불행히 사태가 더욱 나빠지면 만국에 장차 대란이 일어날 것이니, 우리나라의 천하와의 관계가 어찌 크지 않은가 (試觀 甲午戰爭 訖라 東學之初起也에 論者ㅣ 擧曰 此是國內小亂이라 無足爲外國重輕이라 訖더니 豈

料釁起于我而清日이 相關호야 清則一敗塗地호고 日亦無所利焉호며  
 此外에 英俄德法奧意諸大國이 鐵艦水雷가 霧聚雲集于海上호야 莫不  
 瞠目刻心에 殺氣는 達于宵漢호고 羽檄은 遍于地球하야 皆欲伺釁先  
 發호며 制人死命而已라 若不幸而事至滋蔑이런들 舉萬國而將大亂也  
 리니/ 然則我邦之關係于天下가 豈不大哉아).”<sup>153)</sup>

1894년 동학농민봉기와 청일전쟁, 이어진 갑오개혁의 경험은 체제 개혁을 원하는 사회세력에게도 체제보수를 원하는 집권세력에게도 국제정치와 국제체제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임을 각성시켰다. 그리하여 학부에서 지방 소학교의 학생들에게 훈령을 통해 “프랑스는 왜 크게 어지러우며, 나폴레옹 1세는 어떠한 영웅인지, 영국은 어떻게 해서 흥성하여 세계 일등국이 되며 정치가 좋고 나뭇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어떠한지, 인도는 무슨 까닭에 영국의 속국이 되어 지금까지 자주하지 못하는지, 보불전쟁에서 프러시아는 어찌서 이기고 프랑스는 어찌서 졌는지, 오스트리아 황제 페르디난트는 왜 양위하였으며 지금 그 나라의 형세는 어떠한지, 이탈리아 역사에서 왕비가 그 인민을 포학하다가 각국에게 모욕을 당했으니 그 정형과 시비가 어떠한지, 러시아가 정치와 영토 확장함과 속지 국민에게 어떻게 대하여 어떻게 관여하는지, 미국은 세계 중에 교화와 정형이 어떠한지, 신정(新政)이 흥한 뒤의 세상이 이전과 비교하여 어떤지” 묻고, “우리 대한은 어떤 정치를 써야 세계일등국이 되며, 구습을 고치지 않으면 어떤 지경에 장차 이르게 될지” 알기 위해서, “태서신사(泰西新史)를 먼저 읽고 조목조목 대조”하여 “책에 있는 실례를 들어” “명백히 저론”<sup>154)</sup>하라고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153) 황성신문 1898년 11월 4일 「學部에서 平安南道 公立小學校에 訓令호 草本을 左에 記호노라」: 황성신문 1898년 11월 4일 「學部訓令續」.

154) 이상 인용은 황성신문 1898년 11월 4일 「學部訓令續」.

갑오내각이 붕괴한 뒤 학부 발행 외국사 교과서에서 ‘혁명(革命)’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은 주목을 요한다. 1896년 『만국약사』 이후 1900년까지 학부 편집국에서는 4종의 외국사 교과서가 나오는데<sup>155)</sup> 1897년 5월에 발행된 『태서신사(泰西新史)』와 1898년 4월에 나온 『아국약사(俄國略史)』와 『중일약사(中日略史)』 모두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중일약사』와 『청국무술정변기』(1900.9)에는 그 내용상 혁명개념이 등장할 여지가 없지만, 영국인 맥켄지(Donald Alexander Mackenzie)의 『十九周大事記(Nineteenth Century: A History)』를 영국인 선교사 티모시 리처드(Timothy Richard; 중국이름 李提摩太)가 첨삭하여 1895년 상해 광학회에서 『泰西近百年來大事記』라는 제목으로 간행한 책을 중역한<sup>156)</sup> 『태서신사』에서도 ‘혁명(革命)’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18세기에서 19세기 중반까지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서술하고 있는 『아국약사』의 경우, 프랑스대혁명과 7월혁명에 대해 모두 ‘민란(民亂)’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때에 법국에 민란이 일어나 그 왕 루이 16세를 죽이느니라 러시아 여제 카트리나가 듣고 자기의 신하가 본받을까 두려워하여 위법을 더욱 엄하게 하고(時에 法國에 民亂이 起호야 其王 路易十六을 殺호느니라 俄后 喀特林이 듣고 自己의 臣下 | 効尤할가 恐호야 威法을 더욱 嚴케호고)...”<sup>157)</sup>

“1830년에....법국의 민란이 일어나 왕을 쫓아냄을 듣고(一千八百三

155) 황성신문 1899년 1월 14일자 논설에 따르면 이외에 (만국역사(萬國歷史))라는 책이 있는데,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156) 김병철(1975), pp.187-189.

157) 감배적 저, 학부편집국 현재 초역, (아국략사(俄國略史), 1898;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한국개화기문헌총서II: 역사.전기소설 2)(서울: 아세아문화사, 1978), p.455.

十年에.....法國의 民亂이 起호야 王을 逐함을 聞호고....)”<sup>158)</sup>

7월혁명을 ‘혁명’으로 명명하지 않은 것은 『아국약사』와 『만국약사』가 공통되다. 그러나 이미 2년 전 같은 학부에서 나온 『만국약사』에서 ‘프랑스혁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혁명’ 대신 ‘민란’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번역으로 생각된다. 전통적 혁명개념이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에 주로 사용되었고, 천명을 받은 혁명의 주체가 왕과 귀족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전통적 정치언어에서 1789년에 일어난 사건이 ‘혁명’일 수는 없다. ‘민란’을 혁명’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새롭고 근대적인 형태의 혁명으로서 ‘프랑스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수용해야 한다. 또, 일단 이것을 혁명으로 개념화하게 되면, 그 혁명의 정치적 원인으로 왕조체제에 대한 비판과 그 정치적 결과인 입헌정체 수립에 대한 서술이 따라야 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되듯이, 『아국약사』에서 초점이 맞추어지는 부분은 각각의 ‘민란’이 왕에게 끼치는 악영향이다. 그 영향 또한 왕조 전복이라는 체제 변동의 차원이 아니라 왕 개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로 서술되고 있다. ‘민란’을 ‘혁명’으로 개념화하는 순간, 인민의 무력 봉기에 의한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 혹은 입헌공화제로의 정치 체제 변혁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형식적으로나마 대한제국이 입헌군주국이 되는 기점을 1899년 8월의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반포라고 본다면,<sup>159)</sup> 『아국약사』가 나온 1898년 4월 현재 한국의 정치체제는 전제군주정이다.

이처럼 혁명개념은 서로 다른 역사해석과 정치적 전망의 교차점이자 전선으로 작동한다. 혁명이라는 어휘의 채택 여부와 더불어 혁명

158)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2), p.461.

159) ‘대한국국제’의 헌법성 여부, 고종의 계몽군주 또는 개명군주 여부, 대한제국의 절대왕정 여부에 대한 논쟁은 교수신문(2008) 참조.

을 서술하는 서사의 방식과 논조에서도 저자의 정치적 진영을 가늠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만국약사』보다 2년 뒤에 나온 1898년의 『아국약사』에서 ‘혁명’이라는 말이 삭제되고 ‘민란’으로 대체된 것은, 인민에 의한 정치 체제변혁에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저자 혹은 번역자의 보수적 이념을 나타낸다. 그런 의미에서 『만국약사』가 입헌군주제로의 정치체제 변화를 권유하는 온건 진보적 개혁의 교과서라면, 『아국약사』는 전제왕조의 정치체제 유지를 위한 보수적 개량의 교과서로서, 러시아의 절대왕정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여기에서 프랑스 제국의 입헌군주 나폴레옹과 대응하여 부각되는 정치지도자의 모델은 러시아의 개명 전제군주 피터대제이다.

“피터가....여러 나라를 유람하여 지식을 넓히고 여러 기술을 학습하고 회국하여 작난한 자 이십인을 취하여 직접 베고 술잔을 들어 기쁘게 마시매 영명한 용맹스러움과 포학함을 함께 지니고 토지를 확장하고 병력을 강장케 하여 러시아의 중흥영주가 되며....천도한 후에 황제의 지위와 연호를 바꾸고 신법을 정하여 백성을 교육하고 (彼得이.....諸國에 遊覽호야 智識을 廣開호고 兼호야 諸藝를 學習호고 回國호야 作亂호는 자 二十人을 取호야 親이 手刃호고 舉酒歡飲호며 英勇과 暴虐함이 相埒호고 土地를 廣闊호고 兵力을 强壯케 호야 俄國의 中興英主ㅣ 되며.....遷都호는 後에 俄皇의 位號를 正호고 新法을 定호야 百姓을 敎育하고)”<sup>160)</sup>

“아국이 흥성함은 실로 대 피터의 공이라.....대저 피터가 즉위 이래로 여섯 개 성의 영토를 더하고 항구 두 개를 증가시키며 상단을 널리 모아 이익의 수입원을 확장하고 무수한 대포 돈대를 건축하고 육군 이십만을 훈련하고 병선 삼백 척을 제조하며 해무부와 해무학

160)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2), pp.433-434.



당을 설립하고 (俄國이 興盛함은 實노 大彼得의 力이라....大抵 彼得이 卽位 以來로 六省地를 益하고 二海口를 增하며 商旅를 廣招하여 利源을 擴張하고 無數의 礮臺를 建築하고 陸兵 二十萬을 訓練하고 兵船 三百隻을 製造하며 海務部와 海務學堂을 設立하고)”<sup>161)</sup>

갑오개혁은 1894년 조선의 내란이 왕조정부간 동맹군인 청군에 의해 진압되고, 이를 빌미로 출병한 일본 군대의 위력에 의지하여 조선의 개혁세력이 전제군주정을 유사 입헌정체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던 기간이다. 『만국약사』의 혁명개념과 나폴레옹전쟁 서사는 역내에서 가장 먼저 입헌군주제로 변모한 일본의 조선 진출 의도가 19세기 아시아 지역질서의 패권적 현상 변경에 있었음을 드러낸다. 갑오개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본인 고문관이 쓴 『만국약사』를 통해 ‘프랑스혁명’이라는 말이 들어왔지만, 학부를 통해 발행된 관찬(官撰) 외국사 교과서들은 1900년까지 전통적인 혁명개념을 고수하며, 정치체제 변경을 목적으로 한 인민 폭동을 ‘민란’이라고 개념화하였다. 이처럼, 이 시기 혁명개념은 서로 다른 역사해석과 정치적 전망의 교차점이자 전선으로 작용하였다. 혁명이라는 어휘의 채택 여부와 혁명을 서술하는 서사의 방식과 논조에서 저자의 정치적 진영을 가늠하게 되는 것이다.

### 3. 프랑스혁명의 번역어 III: 서유견문의 침묵

『만국약사』의 발문(拔文)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1896년 시점에도 유럽의 최근세사에 대해 책을 쓸 수 있는 한국인은 없었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1895년에 『서유견문』을 낸 유길준이다. 『서유견문』은 유길준이 서(序)에서 스스로 밝힌 대로, 1881년 신사유람단 어

161)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2), p.435.

윤중의 수행원으로 도일, 1년 반 동안 게이오의숙에서 유학할 때부터 집필 구상을 시작했고, 1883년 주미 전권대사 민영익(閔泳翊)을 수행하여 도미(渡美), 미국에서 유학하고 유럽을 통해 돌아온 1885년까지 모은 서양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쓴 책이다. 유길준은 귀국 도중 일본에 들러 김옥균을 만난 일로 인해 1885년 12월 인천항에 도착한 즉시 체포되어 7년간 연금생활을 하게 되는데, 유학 중 모은 자료는 대부분 산실되었지만,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잃어버린 부분은 보충해서 1889년 봄에 『서유견문』을 탈고하였다. 유길준은 서유견문을 국한문혼용체로 서술한 배후에, 문자를 깨치지 못한 일반인이라도 알기 쉽게 써서 “이미 외국인과의 교류가 허용된 마당에, 나라 사람이 상하·귀천·여자·어린이를 막론하고 외국의 정형을 모르면 안 된다(外人의 交를 既許함애 國中인이 上下貴賤婦人孺子를 毋論하고 彼の 情形을 不知함이 不可).”라는 분명한 문제의식이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sup>162)</sup>

1889년에 탈고된 『서유견문』은 갑오개혁기인 1895년에야 출간될 수 있었다. 1894년 10월 의화군이 보병사로 일본에 갈 때 수행한 유길준은 『서유견문』의 출판을 후쿠자와 유키치와 협의하였다. 후쿠자와는 이것을 교순사(交詢社) 산하 출판사로 넘겼고, 교순사에서 편집을 끝낸 뒤 한글 활자를 갖고 있던 수영사(秀英社)라는 인쇄소로 보냄으로써 『서유견문』 인쇄본이 탄생했다. 게이오의숙에서 유학 중이던 유길준은 1882년 당시 교순사의 회원이었던 기록이 남아 있다.<sup>163)</sup> ‘지식을 교환(交換)하고 세무(世務)를 묻는다(諮詢)’는 취지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 교순사는 1880년 후쿠자와 유키치가 창립한 게이오의숙 출신자 모임으로서, 자체적인 출판 시설을 갖추고 『교순잡지

162) 유길준전서편찬위원회 편, (유길준전서 1:서유견문(전)) (서울: 일조각), 1971), pp.3-8.

163) 이광린, (유길준: 닫힌 사회에 던진 충격) (서울:동아일보사, 1992), p.82.

(交詢雜誌)』 등을 발행하고 있었다.<sup>164)</sup> 『서유견문』이 완성된 지 5년 만에야 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연유는, 일단 국내에 출판 가능한 인쇄 시설이나 그것을 기반으로 한 신문·잡지 등 대중매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제한된 개화 지식인이나 시무 관료들끼리 필사본을 회람하기에도 갑신정변 이후 경색된 정국 분위기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유길준의 『서유견문』은 갑오개혁 이전에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독자적으로 논한 유일한 사찬(私撰) 서적이다. 이것은 일본과 미국에서 공부한 한국 최초의 관비 유학생이며, 일본어와 영어에 능통한 당시로서는 드문 외국어 능력의 소유자로서 정부의 대외교섭사무에 지속적으로 기용되어 외국을 다닐 수 있었던 유길준이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서유견문』의 편제는 이후 정부와 민간에서 출판되는 서양정치사 책들과는 사뭇 다르다. 1896년 『만국약사』를 비롯하여 이 시기에 출현한 근대 역사서의 특징은 전 세계를 지역별로 나누고 그 지역 내 국가의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서술한 데 있다. 그에 비해 『서유견문』은 총 20편 중 1, 2편은 ‘지구’와 ‘세계’라는 새로운 공간 개념에 대한 제시, 3에서 18편은 구미 근대의 정치·경제·사회 제도에 관한 일반 이론, 19, 20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의 주요 도시에 대한 견문록 형식으로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서유견문』에는 ‘혁명(革命)’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다. 미국독립혁명에 대한 서술은 19편에서 필라델피아의 독립대회당을 설명하면서 등장하는데, “아메리카의 충의지사가 봉기하여(阿美利加的忠義志士가 蜂起하여).....합중국의 제도를 창건하고 영국 거절하는 격문

164) 위키피디어 ‘交詢社’ 항목

<http://ja.wikipedia.org/wiki/%E4%BA%A4%E8%A9%A2%E7%A4%BE>; 『交詢社百年史』(東京: 交詢社、1983).

을 기초하여(合衆國의 制度를 創建하고 英吉利 拒絶하는 檄文을 起草하여).....혈전으로 독립(血戰으로 獨立)”라고 하여, ‘충의지사의 봉기’로 표현된다.<sup>165)</sup> 20편 프랑스 편에서도 대혁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나폴레옹 1세(一世拿破崙皇帝)의 치적과 제국 프랑스의 강성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sup>166)</sup>

유길준은 정부의 종류를 “군주의 천단(擅斷)하는 정체”, “군주의 명령하는 정체=압제정체”, “귀족의 주장하는 정체”, “군민의 공치(共治)하는 정체=입헌정체”, “국민(國人)의 공화(共和)하는 정체=합중정체(合衆政體)”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조선은 “국중의 법률과 정령을 군주 일인의 독단함을 유하되 신하의 공론을 종(從)하는 군주의 명령하는 정체”, 즉, 압제정체에 해당한다. 그나마 “귀족 아니면 정부의 관리되기 불허하는 나라는 그 정체가 군주의 명령하는 정체라도 군주와 귀족의 합한 정체라고 보아야 한다.”는 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1895년 갑오개혁 이전의 조선은 ‘군주와 귀족이 합하여 명령하고 주장하는 정체’에 해당한다. 아시아에는 군주명령 정체가 많고(조선, 중국, 일본), 구라파에는 군민공치가 많고(영국,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아메리카에는 국민공화가 많은데(합중국, 프랑스), 그 중 유길준이 가장 최선의 것으로 판단한 정치 체제는 군민공치, 즉, 입헌정체이다. 구미 제국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 비해 백배로 부강한 이유는 인민의 자질이 달라서가 아니라 정부의 제도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sup>167)</sup> 따라서 유길준이 넌지시 주장하는 바는, 조선도 입헌군주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길준의 합중정체에 대한 설명은 입헌정체에 대한 설명보다 소략

165) (유길준전서 1), p.519.

166) (유길준전서 1), p.546.

167) (유길준전서 1), pp.163-168.

하고, 국민공화는 세습 군주를 대신하여 대통령이 있을 뿐 국민공치와 대동소이하다고 단순화된다.<sup>168)</sup> 공화정에 대한 유길준의 상대적인 무관심은 급진적 정치 변혁보다는 점진적 개량이 옳다고 믿는 그의 신념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에 따르면, 정치체제의 차이는 “시세가 변화하고 인심이 달라지는 데 따라서 자연적으로 습관이 생긴 것이지, 사람의 지혜에 따라 하루아침에 어떠한 정치 체제로 시작한 것은 아니다.”<sup>169)</sup> 그는 정치체제가 인민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각 정치사회의 역사적 조건에 맞는 정체가 가능한 것이지, 갑작스레 어떤 정체를 도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같은 편의 다른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한 나라의 정치 체제란 오랜 세월에 걸쳐 국민들의 습관이 된 것이다. 습관을 갑자기 바꾸기 어려운 것은 언어를 바꾸기 어려운 것과 같다. 급격한 소견으로 헛된 이치를 숭상하고, 실정에 어두우면서도 개혁하자고만 주장하는 자들은....임금과 나라에 도움을 주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해를 끼치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sup>170)</sup>

유길준의 『서유견문』에는 혁명의 결과로 이루어진 정치체제에 대한 정태적 기술이 있을 뿐, 체제변동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동태적 서술이 전무하고, 혁명이라는 단어나 개념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서유견문』에서 유길준은 합중공화보다 국민공치의 입헌군주정을 선호한다. 이것은 갑신정변의 경험을 통해 유길준이 가지게 된 급진적 정치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제왕권을 인식한 자기 검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유길준이 『서유견문』에서 ‘혁명(革命)’이라는 단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

168) (유길준전서 1), p.171.

169) 유길준 지음, 허경진 옮김, (서유견문) (서울: 한양출판, 1995), p.146; (유길준전서 1), p.168.

170) (서유견문)(1995), p.149; (유길준전서 1), p.171.

다음 장에서 서술하는 바, 1896년 일본으로 망명한 유길준이 쓴 『정치학』에서 이 문제는 더 명확해진다.

## 제 4장. 광무개혁기(1897-1904)의 혁명개념

### 1절. 독립협회의 정체 구상과 혁명개념

#### 1. 미국독립혁명과 ‘합중입국’

『만국약사』 이후 외국사 단행본에서 ‘혁명’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한 때는 1899년 중반이다. 서적 출판이 학부에 국한되어 있었던 갑오개혁기 및 광무 초기와 달리, 1899년을 기점으로 외국사, 특히 서양사 출판의 중심은 민간으로 이동했다. 1899년에는 『중동전기(中東戰記)』(1899.3, 황성신문사), 『미국독립사(美國獨立史)』(1899.6, 황성신문사), 『파란말년전사(波蘭末年戰史)』(1899.11, 탐인사)가 발행되었고, 1900년에는 『법국혁신전사(法國革新戰史)』(1900.6, 황성신문사)가 발행되었다. 이것은 같은 기간에 학부 편집국에서 발행된 『아국약사(俄國略史)』(1898.4), 『중일약사(中日略史)』(1898.4), 『청국무술정변기(淸國戊戌政變記)』(학부편집국, 1900.9)가 모두 동양사 서적인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1884년 최초의 민간 출판사였던 광인사(廣印社) 이후 1898년 황성신문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민간 출판의 기록이 없다.<sup>171)</sup> 황성신문사의 경우, 1898년 8월에 한글 활자와 인쇄시설을 구입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서<sup>172)</sup>, 이 활자와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국한문 혼용체 황성신

171) 광인사에서는 (충효경집주합벽(忠孝經集註合璧))(1884), 안종수(安宗洙)의 (농정신편(農政新編))(1885), 정병하(鄭秉夏)의 (농정촬요(農政撮要))(1886), 강위(姜瑋)의 (고환당집(古歡堂集))(1886), (日本內閣列傳))(1886) 등이 출판되었다. 광인사는 최초의 국한문혼용체 단행본인 (농정촬요)을 발간하였는데, 광인사가 보유한 한글 활자는 부산항 일본 상법회의소 위원이 광인사에서 한글 활자의 값을 정기적으로 징수하였다는 기록이 (통서일기)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에서 구입한 것이었다. 이준환, 이두영, 양문길, 양평 지음, (우리출판 100년)(서울: 현암사, 2001), p.33; 이광린(1999), pp.104-106; (통서일기) 고종 22년 3월 9일조.

172) 최기영, “초기 신문사 연구의 새로운 자료: 「황성신문사규칙」, 「황성신문사총회회

문과 외국사 단행본을 발간했음을 알 수 있다.<sup>173)</sup>

1899년 6월 황성신문사에서 번역, 간행된 『미국독립사』는 1895년 일본에서 출판된 시부에 다모즈(澁江保)의 『米國獨立戰史』(東京: 博文館, 1895)를<sup>174)</sup> 시오가와 이치타로(鹽川一太郎)가 번역한 것이다. 일본판 『米國獨立戰史』는 청일전쟁기 박문관에서 나온 만국전사(萬國戰史) 시리즈 제 15편이다. 앞에서 다룬 노노무라 킨고로의 『拿破崙戰史』가 같은 시리즈의 3편이고, 1899년 번역된 『파란말년전사』의 원저 『波瀾衰亡戰史』, 1900년 번역된 『법국혁신헌전사』의 원저 『佛國革命戰史』가 각각 만국전사 14편, 18편이다. 대한제국기에 나온 서양정치사 단행본이 상당수 일본 박문관 출판물의 번역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시오가와 이치타로는 1895년 1월 16일 의정부도헌 유길준과 맺은 보좌관 고용계약서가 기록으로 남아 있고,<sup>175)</sup> 1896년에는 동경 주재 주일 조선공사관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일했음을 당시 『친목회회보』를 통해 알 수 있다.<sup>176)</sup> 1897년에는 내부보좌원에서 해고되었으나<sup>177)</sup> 1900년에 주한 일본공사관의 통역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sup>178)</sup> 1908년 실록에도 이름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sup>179)</sup> 『미국독립사』를 번역하던 때에도 한국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독립사』의 서문을 쓴 현은(玄隱)은 1897년에서 1898

---

록」해제”, 한국근현대사연구, Vol.3 (1995), p.395.

173) 이전 시기 한성순보 및 주보와 광인사의 활자 구입처가 일본이었고, 1895년 유길준이 국한문혼용체로 쓴 (서유견문) 발행을 의뢰하러 후쿠자와 유키치를 찾아갔을 때 일본 인쇄소가 한글 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황성신문사 또한 활자와 인쇄시설을 일본에서 들여오지 않았을까 한다.

174) 김병철(1975), p.194.

175) 「議政府補佐官雇傭契約書」

[http://www.nl.go.kr/korcis/search/detail\\_code.php?control\\_no=OUB20052164](http://www.nl.go.kr/korcis/search/detail_code.php?control_no=OUB20052164)

79

176) (친목회회보) 제 1호 (1896.2), p.46: 차배근(2000), p.457.

177) 고종실록 (1897, 광무 1) 9월 14일.

178) 황성신문 1900년 2월 19일, 「日官轉陞」.

179) 순종실록 (1908, 융희 2) 5월 11일.



년 사이 내부 판적국장으로 재직하였고<sup>180)</sup> 독립협회 회원이었다.<sup>181)</sup> 이후 애국계몽기에는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 기호흥학회에서 남궁억(南宮憶), 장지연(張志淵) 등 황성신문 계열 인사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주로 한국 역사와 지지(地誌)에 대한 글을 발표하였다.<sup>182)</sup> 『미국독립사』의 발문을 쓴 이일상(李一相) 또한 독립협회 회원으로, 1898년 8월 현재 독립협회 회계를 맡고 있다.<sup>183)</sup>

『미국독립사』의 서두는 ‘개혁(改革)’과 ‘혁신(革新)’, ‘혁명(革命)’의 단어들로 시작된다.

“서력 1600년 이후로부터 구주종교의 개혁이 이곳 구주 정치개혁과 같이 한꺼번에 함께 일어나.....이 뜻이 한번 옮겨가 영국이 혁명하고 다시 옮겨가 미국이 독립하였스니....[식민 초기 미국인들이] 정치상에도 자유평등의 주의를 견집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매 준비귀천의 나눔이 원래 없다 하더라 (西曆 一千六百年 以後로부터 歐洲宗教의 改革이 이곳 歐洲 政治改革과 갓치 一時並起호야.....此議가 一轉호야 英國이 革命호고 再轉호야 美國이 獨立호였스니....政治上에도 自由平等의 主義를 堅執호야 曰 上帝가 人을 生호미 尊卑貴賤의 分이 元無호다 호더라)”<sup>184)</sup>

여기에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영국의 청교도혁명을 ‘혁명’으로 언표한 사례가 보인다. 『미국독립사』의 저자는 미국 독립전쟁을 영국 청교도혁명의 연장선 상에서 파악, 그 근본이념으로 ‘자유평등주의’를

180) 독립신문 1897년 12월 30일 「관보」; 매일신문 1898년 7월 25일 「관보」.

181) 독립신문 1898년 4월 7일, 「독립협회 회원 중에 독립문 역비 부족조 보조금」.

182) 대한자강회월보 제1호, 1906년 7월 31일, 「本會會報」; 대한협회회보 제1호, 1908년 4월 25일, 「祝辭」; 기호흥학회월보 제1호, 1908년 8월 25일, 「本會記事」.

183) 독립신문 1898년 8월 17일 「경연차비」; 1898년 8월 30일 「협회 임원」.

184) 시오가와 이치타로(鹽川一太郎) 저역(著譯), (美國獨立史) (황성신문사, 1899);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3)(서울: 아세아문화사, 1978), p.417.

제시한다. 그리고 다음 대목에서, 이념을 위한 폭력 사용이 정당하다는 ‘의전(義戰)’ 개념이 등장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각의 대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전쟁이 따라붙은 ‘혁명전(革命戰)’이나 ‘독립전(獨立戰)’ 같은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다.

“대저 전쟁이 고래로부터 적지 않으나 매양 인의를 가탁하여 사욕을 채우는 자가 많되 이제 영국혁명전과 미국독립전은 진실로 세계만고에 처음으로 있는 의로운 전쟁이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두 전쟁이 순전히 우국애민하는 데에서 일어났고 그 사이에 한 점의 사심도 없기 때문이라 (大抵 戰爭이 古來로부터 不少호나 米양 仁義를 假호야 私慾을 濟호는 者ㅣ 多호되 今에 英國革命戰과 美國 獨立戰은 진실로 世界萬古에 初有호 義戰이니 此는 無他라 此二戰은 純然히 憂國愛民호는디서 起호고 其間에 一點私心이 無호 緣故ㅣ 러라).”<sup>185)</sup>

영국 청교도혁명전쟁과 미국독립전쟁은 이익이 아니라 이념이 전쟁의 주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세계만고(世界萬古)에 초유(初有)한” 전쟁이다. 그것은 또한 ‘우국애민(憂國愛民)’, 즉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적 대의 이외에는 ‘일점사심’도 없기 때문에 ‘의로운 전쟁’이다. 앞서기 『만국약사』의 혁명개념에서 드러난 정치변혁 과정의 폭력에 대한 반감은 이제 이념적 정당성에 자리를 내준다. 저자는 영국혁명의 주역인 청교도들이 1620년 미국으로 건너와서 “어떤 사람이든지 임금이 되는 것을 불허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임금이 있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何人이든지 君長이 됨을 不許호 쏜더러 쏘 他人의 君長이 有호도 不喜)” “고래에 미증유한 정체(古來에 未曾有호 政體)”, 즉, ‘평민정치(平民政治)’를 창시했다고 평가한다.<sup>186)</sup> 혁명

185)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3), p.419.

186) 이상 인용은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3), p.434.

이 역사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관념을 명백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독립사』는 1764년 영국의회의 식민지에 대한 증권인지세 부과 결정을 “혁명의 근인(革命의 近因)”<sup>187)</sup>이라고 표현한 대목에서, 미국독립전쟁을 ‘혁명’으로 개념화한다. 여기에서 독립전쟁의 ‘원인(遠因)’은 영국정치의 압제와 종교의 부자유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으로 온 청교도들에 대하여 영국 여왕이 부당하게 내정에 간섭하고 민권을 억압한 것이다. 독립전쟁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1755년부터 1763년까지 진행된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영국이 식민지 미국에 과중한 전비(戰費)를 물렸을 뿐 아니라, 영국의 재정부담을 해결할 방편으로 증권인지세를 통과시킨 것에 있다.<sup>188)</sup> 『미국독립사』에는 1776년 미국이 발표한 ‘독립격문(獨立檄文)’, 즉, 독립선언서의 전문이 실려 있다. 그 일부를 보자.

“인류는 모두 동등이라 하늘은 일시동인하시어 생명과 자유의 권리를 만민에게 각각 부여하셨으니 이 권리는 자기가 포기할 수 없고 타인도 빼앗지 못하나니 이럼으로 정부와 인민이 일체단결하여 국가를 이것으로 세우는데 만일 정부가 천리와 인심을 따르지 않고 포악한 정사를 펼치면 곧 그 국을 폐하고 신정부를 창설하나니 이것은 고금의 통의오.....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이르러 부득불 정치를 자립하여 생명을 보전할지라 그런즉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히 영국의 법령을 폐기하고 군신의 분과 속지의 우호를 단절하고 다른 독립국과 같이 선전, 강화, 동맹,통상의 모든 건을 다 자주하여 우리 식민의 권리를 보유하리니 우리 인민과 천하인인지사는 이 마음을 공히 헤아릴지어다 (人類는 均히 同等이라 上天은 一視同仁하시니 生命과 自由의 權利를 萬民의게 各各畀興하시니 此權利는 自己가 棄

187)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3), p.452.

188)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3), pp.448-452.

홀비아니오 他人도 쏘흔 奪치 못흐느니 이럼으로 政府와 人民이 一體團結흐야 國家를 以成흐다가 萬一 政府가 天理와 人心을 不順흐고 暴虐흐 政事가 有흐면 其國을 廢흐고 新政府를 創設흐느니 此는 古今의 通義오.....我等이 如此境遇에 止흐야 不得不 政治를 自立흐야 生命을 保全홀지라 然則 我等이 自今으로 永히 英國의 法令을 廢棄흐고 至於君臣의 分과 屬地의 誼를 斷絶흐고 他獨立國과 又 宣戰媾和同盟通商 諸件을 다 自主흐야 我植民의 權利를 保有흐리니 嗟我衆民과 天下仁人志士는 此心을 共諒할지어다).”

일국 내의 혁명의 정치원리가 식민지와 본국의 관계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독립을 정당화하는 이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천리와 인심”, 즉, 전통적 혁명개념 상의 ‘천명’을 잃어버린 본국의 군주에 대해 속지의 식민은 “국을 폐하고 신정부를 창설”하기 위해 “정치를 자립”할 것을 선언할 권리가 있다. 정치적 자유와 평등이라는 청교도혁명의 이념은 미국독립혁명에서 국제적 수준에 투사되어 민족적 자주와 독립의 이념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그러한 이념적 정당성은 전쟁을 수단으로 삼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1896년 『만국약사』의 혁명개념이 입헌군주정으로 귀착된 데 비해, 『미국독립사』의 혁명개념은 ‘평민정치’, 혹은 ‘합중정치’, 즉 민주정으로 수렴된다.<sup>189)</sup>

『미국독립사』의 주제는 이일상이 발문에 썼듯 “합중입국(合衆立國)”<sup>190)</sup> 네 글자로 요약된다. 『만국약사』에서 프랑스혁명 뒤의 합중정

189) (미국독립사)에서 ‘합중’이 오늘날의 ‘민주’에 해당하며 ‘공화’와는 구별되어 사용됨을 지적하고 넘어가야겠다. (미국독립사)는 헌법 제정 이후 미국의 양대정당으로 ‘맹약당(盟約黨)’과 ‘주권당(州權黨)’을 소개한 뒤, 중앙정부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맹약당이 훗날 ‘공화당(共和黨)’이 되고, 중앙정부의 권력을 제한하자는 입장인 주권당은 ‘합중당(合衆黨)’이 되었다고 기술한다.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 전기소설 3), pp.530-531.

190) “右獨立史即美洲自由黨七年力戰合衆立國之事也.”: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 전기소설 3), p.539.

부는 국내 정치통합에 실패하고 주변 국가들의 왕조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된다. 혁명 이후 야기되는 다양한 반혁명 세력의 분쇄와 사회 안정 문제는 혁명 정권의 생존 및 혁명의 토착화 과정을 쉽지 않게 만들고, 그것은 독립 초기 미국에서 ‘입국’이라는 개념을 통해 다루어진다. 그런데 1899년 당시 『미국독립사』의 독립서사로 재현된 미국혁명은 혁명 이후의 국가 건설 문제에 있어 『만국약사』의 프랑스와는 다른 경로를 보여준다. 군주국들의 세력균형 원칙으로 작동되던 18세기 유럽의 국제체제는 보편적 자유 이념의 기초 위에 출현한 프랑스의 공화정 생존에 적대적인 구조적 변수로 작용, 프랑스혁명은 나폴레옹전쟁을 거치면서 팽창적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적 독재정권으로 변질된다. 그에 비해, 미국혁명은 삼권분립을 제도화함으로써 독재 권력의 출현을 방지하고, 유럽의 동맹에 관여하지 않는 고립주의를 선택하였다.

“此時에 英法兩國이 干戈를 動ᄃ거늘 美人은 思ᄃ되 獨立戰에 法國 救援을 被ᄃ었다 ᄃ야 法國을 應援코자 ᄃ는지라 華盛頓이 곳 써ᄃ되 米國은 歐洲何國이던지 攻守同盟을 結約지 아니ᄃ다 하고 國外 中立을 주지ᄃ거늘”<sup>191)</sup>

『미국독립사』의 마지막 부분은 1783년 파리강화조약 뒤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헌법회의와 그 결과 채택된 미합중국헌법(“千古不易ᄃ는 大典”)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는 데 할애된다.

“첫째, 국가전체에 관한 법률은 양의원(兩議院)의 의결을 거친다. 둘째, 양의원의 하나를 원로원(元老院)이라 칭하고 다른 하나를 중의원(衆議院)이라 칭한다.

191)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3), pp.529-530.

셋째, 양의원을 합중국 국회라 칭한다.  
넷째, 국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다섯째, 원로원 의원은 각주 입법원에서 선거한다.  
여섯째, 중의원 의원은 각주 인민이 선거한다.  
일곱째, 법률은 합중국 고등재판소 판사가 그 책무를 맡는다.  
여덟째, 행정의 책무는 대통령이 맡는다.  
아홉째, 대통령은 매 4년에 한 번 선거한다.  
열째, 대통령은 불인가권(不認可權)을 보유한다.  
열한째, 대통령이 양원 의결에 대하여 불인가권을 행사한 때 양원 의원 삼분의 이 이상이 재의(再議)하여 불가하다고 하면 대통령의 불인가권은 소용이 없다.  
열두째, 대통령은 해륙양군의 대원수가 된다.  
열세째, 대통령은 문무관(文武官)을 임명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권리를 보유하되 원로원의 승인을 필수로 한다.  
열넷째, 대통령과 및 부통령은 동시에 선거하고 대통령이 만일 임기 내에 서거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을 대임한다.  
열다섯째, 각 주는 주의 사안을 자주(自主)하여 지휘를 받지 않는다.  
열여섯째, 국가 전체에 관한 사무는 대정부(大政府)가 관장한다.”<sup>192)</sup>

1899년 6월에 발행된 『미국독립사』에 실린 미합중국헌법의 내용과 1899년 8월에 반포된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를 비교해 보자. 일단 그 형식적 유사성이 눈에 띄고, 그로 인해 내용의 차이가 더욱 도드라진다. 미합중국헌법은 선거에 의한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국회, 법원, 행정부 간에 삼권분립이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과 국회가

192)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3), pp.526-528.

상호 견제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다. 또, 대통령의 관리 임용에는 원로원의 승인이 요구된다. 그에 비해 대한국국제에서 대한제국은 전제정치이며, 황제가 무한 불가침의 군권을 향유하여 입법 · 사법 · 행정 · 선전(宣戰) · 강화 · 계엄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자의 형식적 유사성과 내용상의 극명한 대조는, 정부가 합중정치와 입헌을 주장하는 개혁 세력에 대한 대응으로써 대한국국제를 입안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 “大韓國國制

第一條 大韓國은 世界萬國의 公認되온바 自主獨立호은 帝國이니라

第二條 大韓帝國의 政治는 由前則五百年傳來호시고 由後則亘萬世不變호오실 專制政治이니라

第三條 大韓國大皇帝게옵셔는 無限호은 君權을 享有호옵시느니 公法에 謂호바 自立政體이니라

第四條 大韓國臣民이 大皇帝의 享有호옵시는 君權을 侵損호을 行爲가 有호면 其已行未行을 勿論호고 臣民의 道理를 失호는 者로 認호지니라

第五條 大韓國大皇帝게옵셔는 國內 陸海軍을 統率호옵셔 編制를 定호옵시고 戒嚴解嚴을 命호옵시느니라

第六條 大韓國大皇帝게옵셔는 法律을 制定호옵셔 其頒布와 執行을 命호옵시고 萬國의 公共호는 法律을 效倣호샤 國內 法律도 改定호옵시고 大赦特赦減刑復權을 命호옵시느니 公法에 謂호바 自定律例이니라

第七條 大韓國大皇帝게옵셔는 行政各府部の 官制와 文武官의 俸給을 制定或改正호옵시고 行政上必要호는 各項勅令을 發호옵시느니 公法에 謂호바 自行治理이니라

第八條 大韓國大皇帝게옵서논 文武官의 黜陟任免을 行흐옵시고 爵位 勳章及其他 榮典을 授與或遞奪흐옵시느니 公法에 謂흐마 自選臣工이니라

第九條 大韓國大皇帝게옵서논 各有約國에 使臣을 派送駐紮케 흐옵시고 宣戰講和及諸般約條를 締結흐옵시느니 公法에 謂흐마 自遣使臣이니라”<sup>193)</sup>

## 2. 프랑스 ‘혁명난’: ‘민주’<sup>194)</sup>의 이상과 현실

1900년 6월 황성신문사에서 발행된 『법국혁신전사(法國革新戰史)』는 1896년 일본에서 출판된 시부에 다모츠(澁江保)의 『佛國革命戰史』(東京: 博文館, 1896)를<sup>195)</sup> 번역한 것이다.<sup>196)</sup> 이 책에는 18세기 프랑스의 전반적인 형세부터 시작하여 1795년 총재정부의 수립까지 프랑스혁명과 제 1공화국의 정치사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책은 프랑스혁명의 역사적 성과를 긍정하는 저자의 입장을 드러내는 첫 문장으로 시작된다.

“간혹 사람들이 프랑스의 혁명을 꾸짖어 말하기를 용두사미라 하며 또 일시의 환영이라 하나 그 혁명의 본래 주의가 봉건의 인습을 소제하며 문벌의 적폐를 타파하고 평등주의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 직접으로는 그 주의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도 간접으로는 거의 그 전부를 이루는 공을 세웠으니 그 성취가 또한 위대하다 칭할지로다 (人或 法國의 革命을 罵호야 曰 龍頭蛇尾라 호며 又

193) 고종실록 (1899, 광무 3) 8월 17일; 황성신문 1899년 8월 23일, 「宮廷錄事」.

194) (법국혁신전사)에 ‘민주(民主)’라는 말은, 루소의 ‘민주설(民主說)’, 1789년 입법의회 개설시 ‘민주정치(民主政治)’라는 용어로 2회 출현한다. 澁江保(시부에 다모츠) 저, 역자 미상, (法國革新戰史) (황성신문사, 1900.6);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4)(서울: 아세아문화사, 1978), p.38, p.90.

195) 김병철(1975), p.194.

196) 김병철(1975), p.198.



一時 幻影이라 ㅎ나 然ㅎ나 其革命의 本主義가 封建의 餘習을 掃除  
 ㅎ며 門閥의 積弊를 打破ㅎ고 平等主義로 新面社會를 建設ㅎ기에  
 在ㅎ야 直接으로는 其主義를 全成치 못ㅎ야도 間接으로는 殆其全成  
 ㅎ는 攻을 得ㅎ앗시니 其成績이 亦偉大ㅎ다 稱홀지로다).”<sup>197)</sup>

『법국혁신전사』에는 프랑스혁명의 사상적 조류를 형성한 18세기 철학자로서 몽테스키외(文太士規曰), 볼테르(越太爺), 디드로(杜智老), 루소(婁昭) 등의 논의가 소개되어 있다. 먼저, “정체를 논변하여 입법, 행정, 사법, 삼권의 분립을 주장(政體를 論辨ㅎ야 立法行政司法三大權의 分立을 主張)”한 몽테스키외의 “만법정리(萬法精理)”, 즉, 『법의 정신』은 “혁명에 으뜸가는 공(革命의 首功)”을 세운 책으로 평가된다.<sup>198)</sup> 이어 볼테르와 “학술유전파(學術類典派)”<sup>199)</sup>, 즉, 백과전서파를 간략히 살핀 뒤 루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등장한다.

저자의 기술에 따르면, 루소의 사상은 18세기 여타 계몽 사상가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몽테스키외가 학술연구에 급급함과 반면, 루소는 이전 일을 궁구하고 해석하는 데 힘쓰지 않는다. 볼테르처럼 지식과 기술(技術)을 전파하고 보급하려 꾀하지도 않는다. 디드로처럼 사회에 이익을 증가시키려고 도모하지도 않는다. 루소는 “학문, 지식, 교육이 인생을 쇠퇴시키는 기구라고 하고, 사회교제가 자연에 위배된다고 하며, 정치기관을 압제 악폐라고 하며 성난 눈으로 세상을 쏘아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허망한 사회의 조직을 모두 와해하여 문명이라 칭호하는 추하고 추루(醜陋)한 빈고(貧苦)와 교오(驕傲)한 부유(富裕)의 세계를 일세(一洗)할지어다 질서라 오칭(誤稱)하는 압제를 구제(驅除)하며 지식이라 망평(妄評)하는 오류를 배척

197)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4)(1978), p.13.

198) 이상 인용은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4), p.34.

199)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4), p.35.

할지어다 사회의 불평을 평등케 하여 학문을 폐기하며 그 계약을 파괴하며 그 기반(羈絆)을 탈각할지어다.”<sup>200)</sup> 『법국혁신헌사』는 이어 1762년 루소 『민약론(民約論)』의 “人이 生히면서 自由가 有히거늘 然호되 到處에 束縛을 受한다.”라는 유명한 서문을 인용한다. 루소는 이 책에서 이전의 정치철학과 달리 “역사류의 수단”을 일체 취하지 않고, “이상적 사회론(理想邊社會論)”을 산출하여 실제로 시행하고자 함으로써 마침내 “민주설(民主說)”을 만들어 “법국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평가된다.<sup>201)</sup>

『법국혁신헌사』는 1789년의 파리폭동이 일어난 원인으로 첫째, 하층민의 빈곤, 둘째, 정치 개혁과 헌법 제정에 대한 희망이 팽배했던 사회 상황을 들고 있다. 저자는 ‘폭동(暴動)’이나 ‘폭도(暴徒)’ 같은 어휘 선택을 통해 프랑스혁명 초기의 살상과 혼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폭동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인정하는 입장 또한 ‘혁명난(革命亂)’이라는 표현이나, 파리폭동 때의 ‘폭도’들이 ‘혁명당의 선봉’이 되었다는 기술에서 엿보인다.<sup>202)</sup>

『법국혁신헌사』의 프랑스혁명 해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1791년, 1793년, 1795년의 헌법에 대한 평가이다. 먼저, 혁명 직후 헌법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헌법제정의회’에 대해 저자는 매우 비판적이다. 헌법제정의회에서 의원의 태반은 “주권은 인민에 재(在)한다는 이상을 실제에 행하고자 하여” “천부인권론을 정면으로 담출(擔出)”하였고, “사실과 경험을 불구하고 환상(幻想)하는 이론과 모순”되는 것은 모두 고려하지 않았고, 당시의 “사정과 수요며 전래하는 관례와 습속” 또한 무시하였다. 당시 “헌법은 막연한 공상에 기하여

200)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4), pp.37-38.

201) 이상 인용은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4), pp.38-39.

202)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4), pp.53-55.

제정하고 주권은 인민의 손에 두는 것이 옳다고 하여 복잡한 정부를 경험 없는 인민다수에 위임”한 결과, 헌법은 실효를 발하지 못하기에 이르렀다. 혁명 후 프랑스의 최우선 과제는 “견강(堅剛)한 정부를 속건(速建)”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의원의 대다수는 주권이 모두 인민에게서 발출한다 하는 일설을 고집함으로써 국왕 주재(主宰)하는 명의(名義) 하에 건립한 행정부는 인민의 이해에 반대하는 것이라 말하고, 또 행정관리는 모두 인민의 자유에 유해한 자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구래의 독재정치와 왕실압제와 혼동하여 행정권을 자유원리에 반대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꺼려했기 때문이다.<sup>203)</sup>

오스트리아 및 프러시아와 결탁한 망명 왕당파와 싸워 이긴 1792년 혁명전쟁이 끝난 뒤 721인의 대의사(代議士)로 결성된 “맹약의회(盟約議會)”는 국왕을 영구히 폐하기로 선언하고, 작위를 폐하며, 인민은 모두 ‘공민(公民)’이라 부르기로 하면서 혁명기원과 프랑스 제 1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루이 16세는 의회법정에 소환되어 사형을 언도받았다.<sup>204)</sup> 『법국혁신헌사』의 저자에 따르면, 국민의회가 제정하고 루이 16세가 윤택한 1791년 헌법은 “입군대의(立君代議) 헌법”이다. 그에 비해, 맹약의회에 의해 제정된 1793년 헌법은 “인민 주권과 공화정치의 분리함이 불가”하다는 헌법, 즉 민주공화 헌법이다. 그러나 밖으로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과 전쟁이 계속되고 안으로 불만세력들이 외국의 원조를 받으며 끊임없이 정부전복을 기도한 제 1공화국의 정국 불안은 공안위원이 독재권을 장악한 ‘공포의 치세(治世)’로 이어졌다.<sup>205)</sup> 『법국혁신헌사』의 저자는 프랑스 제 1공화정의 공포정치 시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혹평하였다. “인민이 자유를 구하여도 의회는 폭력으로써 폭력을 바꾸어 율파의 압

203)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4), pp.63-65

204)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4), pp.100-102.

205)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4), pp.108-111.

제자가 갑파의 압제자를 대신할 뿐이다. 가령 작위의 제도를 폐한다고 하나 의장되는 자는 명패 없는 독재군주며公安위원과 맹약의원 같은 자는 인민으로 두려워 떨게 함이 구정치시대의 귀족보다 심하다.”<sup>206)</sup> 그리하여 공포정치에 대한 ‘반동(反動)’으로 테르미도르 쿠데타가 일어나고 자코뱅과 로베스피에르가 모두 처형된 뒤, 민선의회(民選議會)는 1793년 헌법을 폐지하고, 원로원과 중의원을 두되 5인의 감독관에게 행정권을 위임하는 “군민공치(君民共治)의 헌법과 유사”한 1795년의 헌법을 제정하였다.<sup>207)</sup>

『법국혁신전사』에서, 프랑스혁명의 인민주권의 이념은 인민에 의한 직접통치가 아니라 “군민공치와 유사”한 헌법, 즉, 총재에 대한 통치권의 위임과 대의제로 귀결된다. 프랑스에서 대혁명 초기의 사상적 계기가 루소였다면 혁명의 정착과 제도화 단계에서는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과 ‘균형’ 이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실제로 민선의회의 헌법 제정을 위해 설치된 11인 위원회에서 1791년과 1793년 헌법은 권력의 균형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고 비판되었고, 미국 헌법을 모델로 한 혼합정체 모델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온건공화파와 입헌군주주의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주장한 혼합정체는, 양원제를 통해 입법부에 민주주의와 귀족주의 요소를 모두 반영하고, 행정부에는 군주제적 요소를 남겨둔 것이었다.<sup>208)</sup>

1898년 4월, 독립협회는 의회개설 운동을 시작하였다. 토론회 개최, 독립신문 사설 게재, 정부 내 개혁파 관리들의 고종에의 상소 등을 통해 정부를 압박해 들어간 독립협회는 10월 24일 ‘중추원개편안’을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것이 상당 부분 반영된 ‘중추원관제(官制)’가

206)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4), p.120.

207)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4), pp.118-120.

208) 홍태영, (국민국가의 정치학) (서울: 후마니타스, 2008), pp.88-89.

11월 4일 반포되었다. 이 중추원관제는 중추원 구성을 상원 및 하원과 유사한 형태로 이원화하고, 입법권 및 행정에 대한 심사의결권 등 의회의 제반 기능을 중추원이 가지도록 함으로써 사실상의 의회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중추원관제는 반포 직후 독립협회 간부 17명이 구속되고 독립협회를 혁파하라는 칙령이 공포되면서 실행되지 못하고, 인민협회에 대한 부분과 임기제도가 폐지된 형태의 개정 중추원관제가 11월 12일 다시 공포되었다. 12월 16일 윤치호를 부의장으로 재개원한 중추원은 정부에 공천할 인재를 투표로 선발하면서 갑신정변 핵심인물인 박영효와 서재필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고종은 12월 25일 만민공동회를 무력으로 해산시켰고, 박영효 천거에 표를 던진 중추원 의관들을 색출하여 처단하는 과정에서 독립협회는 사실상 궤멸되었다.<sup>209)</sup>

1898년 4월 14일자 윤치호일기에서 미국인 고문관 르젠드르(Le Gendre)<sup>210)</sup>는 한국에 강력한 정부가 들어서지 않으면 프랑스혁명과 같은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제주의와 대의제의 중간 형태를 띤 자문기구를 제안하였다.<sup>211)</sup> 윤치호 자신도 5월 2일 일기에서 한국에서 대의제 민선의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212)</sup> 1898년 4월 30일 독립신문 논설

209) 신용하(1981), pp.204-214, 487-515.

210) 르젠드르에 대해서는 김현숙, “한말 고문관 르젠드르(李善得)에 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Vol. 8 (1998), pp.37-68.

211) "The present condition of Corea is very much like that of Japan 30 years ago. The country will no longer stand the old absolutism, but it is unfit for a thoroughly representative government. We must find a medium between the two. I therefore suggest what I did to Japan 30 years ago; viz., a Consultation Board which shall be composed of the most enlightened elements in the country....If you don't get a strong government now you will soon have a popular revolution here which may vie with the French revolution in its bloody excesses. When that happens, the first to suffer will be the popular agitators with the best sort of motives." 윤치호일기 1898년 4월 14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에서는 국가기구의 삼권분립이 제안되고 있다. 의정과 행정을 분리시켜, 의정원이 법률과 정책을 입안하면 국왕의 재가를 거쳐 내각이 실행하도록 만들자는 것이었다.<sup>213)</sup> 1898년 7월 윤치호는 현 정부를 탄핵하며 새롭게 인재를 등용할 것을 고종에게 상소하였다. 이 상소에서 그는 “요즘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비록 전제정치(專制政治)라 하더라도 상하 의원(議院)을 둠으로써 국시(國是)를 자문하며 언로(言路)를 널리 열어 놓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유럽 절대왕정의 양원제를 예로 들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의원 개설에 있음을 주장하였다.<sup>214)</sup> 1898년 10월 독립협회는 중추원 관제 개편에 독립협회 회원을 총대위원(總代委員)으로 선정하여 참여시키고, 중추원 의관의 반수는 정부에서 천거하고 나머지 반은 독립협회에서 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sup>215)</sup>

독립협회의 청원이 반영된 11월 4일 중추원관제 1조에 따르면, 중추원은 법률과 칙령의 제정·개정·폐지, 의정부가 올린 의안(議案) 일체에 대한 조사·의정(議定) 권한을 가진다. 3조에 따르면, 중추원 의

212) “If I ever thought (which I have never done) it possible to have a representative popular assembly in Corea, I give it up now. A people who have so little public spirit or so little sense as to see their neighbors robbed every night without lifting a finger to help them—can such a people be entrusted with the weighty matters of the country?” 윤치호일기 1898년 4월 14일, 5월 2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13) “일국 스무를 행정관이 의정관의 직무를 하며 의정관이 행정관의 직무를 하라고 하여서는 의정도 아니 되고 행정도 아니 되려이라 그런 고로 대한도 초초 일명 규모를 정부에 세워 이 혼잡하고 규칙 업는 일을 업세랴면 불가불 의정원이 꼭로 잇서 국중에 그중 학문 잇고 지혜 잇고 조흔 생각 잇는 사람들을 뽑아 그 사람들을 행정하는 권리는 주지 말고 의론하야 작명하는 권리만 주어 조흔 생각과 조흔 의론을 놀마다 공평하게 토론하야 리히 손익을 공변되게 토론하야 작명하야 대항대 폐하씩 이 여러 사람의 토론하야 작명하 뜻을 품하야 지가를 무른 후에논 그 일을 니각으로 넘겨 니각서 그 작명하 의사를 가지고 규칙디로 시험문 출 것 고티면 두가지 일이 전슈히 되고 니각 안에 분잡하 일이 업슬터이라.” 독립신문 1898년 4월 30일 「론설」.

214) 이상 인용은 국역승정원일기 (1898, 광무 2), 5월 21일: 한국고전종합DB.

215) 황성신문 1898년 10월 17일, 「雜報」.

장은 황제가 임명하고, 부의장은 중추원 공찬을 받아 황제가 임명하며, 중추원 반수는 정부에서 추대하고, 다른 반수는 인민협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독립협회의 중추원개편안에서는 50명의 중추원 의원 중 반수를 선출할 단체를 독립협회로 제한한 반면, 정부의 중추원관계는 이것을 ‘인민협회’로 개정한 뒤, 부칙에서 당분간 이를 독립협회가 대행하도록 했다. 4조에 따르면, 의장, 부의장, 의관의 임기는 12개월로 제한되어 있었다. 11조에 따르면, 중추원은 의결권만 가지고 상주(上奏)나 발령(發令)을 직접 실행할 수 없도록 해서 중추원의 권한을 의정부나 내각과 분립시켰다. 12조에 따르면, 의정부와 중추원의 의견이 불합치할 때에는 합동협의를 거쳐야 하고 단독으로 의안을 실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의정부는 중추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3조에 따르면, 의정부는 의안에 대해 중추원은 의정부의 의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4조에 따르면, 국무대신과 각부 협관은 중추원의 의관이 될 수 있으나 자신의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된다.<sup>216)</sup>

이제 『법국혁신사』에 게재된 1795년 프랑스헌법의 내용을 보자.

“첫째, 의회는 이원(二元)으로 성립한다.

둘째, 원로원은 250인의 의원으로 성립하고 중의원은 500인의 의원으로 성립한다.

셋째, 행정권은 5인의 감독관에 위임한다.

넷째, 중의원(衆議院)은 법안 제출하는 권한이 있고, 원로원은 이것을 가부 결정하는 권한이 있고, 감독관은 이것을 시행하는 권한이 있다.

다섯째, 중의원은 그 요구하는 인원수의 10배(의원이 500명이므로

---

216) 신용하(1981), pp.209-211.

5000명)를 지명하고, 원로원은 그 지명한 가운데 최적임한 자를 선발한다.

여섯째, 감독관은 매년 1명이 신규 교대하여 매 5년에 전원이 교대한다.

일곱째, 5명의 감독관 중 1명이 돌아가며 관장의 직을 수행하여 국새를 보관하며 날인을 관장한다.”<sup>217)</sup>

5명의 총재가 행정권을, 원로원과 500인회에서 입법권을 갖는 정치체제를 규정한 1795년 헌법은 독립협회의 중추원개편안과 놀랄 만큼 유사하다. 독립협회의 구상에서는 독립협회가 중의원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독립협회 해산 직후 황성신문사에서 연달아 출판된 『미국독립사』와 『법국혁신헌사』는 정부에 의해 좌절된 독립협회의 개혁 구상안을 계몽하고 선동하기 위한 정치 팸플릿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의 교훈으로 도출된 정치체제를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조선에 구현하려 했던 독립협회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독립협회의 개혁운동이 보수정권의 무력 탄압으로 좌절되고 1년 6개월 뒤 나온 『법국혁신헌사』에서 프랑스의 혁명 세력은 루이 16세를 처형하였다. 이전 시기의 정치언어에서 ‘혁명’이라는 말이 금기시되고 체제변동의 지향점이 입헌군주제였던 반면, 1899년을 기점으로 대한제국의 서양사 단행본과 황성신문 지면에서는 ‘혁명’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 이것은 1898년 말 독립협회 해체를 계기로 한국의 개혁 세력이 왕조를 통한 체제 전환의 희망을 버리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건양과 광무 초기 대한제국의 개혁 세력은 우리 정치사회에 적합한

---

217)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4), pp.119-120.



“군주, 귀족, 평민간의 권력균형”을 구현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모색하고 있었다. 독립협회와 박영효로 대표되는 급진적 개혁론자들은 1787년 미국 헌법과 1795년 프랑스 헌법으로부터 군주, 양반, 계몽된 평민의 일부가 권력을 분점하는 혼합정을 구상하였다. 그에 비해 유길준 등의 온건 개혁론자들은 근대 이행기에 국가 근대화에 드는 비용을 확보하고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의 통일성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프러시아의 계몽전제군주정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왕실과 권문세도로 이루어진 기득권 보수 세력은 개량 수준을 넘어서는 제도 차원의 개혁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었다. 오히려 개혁 세력의 대중 운동과 민권 신장에 위협을 느끼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개혁의 요구를 억압하였다.

『법국혁신전사』에서 루이 16세가 의회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았을 때, 왕의 죄목은 “인민의 주권에 대하여 반역을 도모한 일”, “국가의 자유를 대적하여 당을 결성한 일”이었다.<sup>218)</sup> 이제 충성의 대상은 더 이상 왕이나 왕실이 아니라 인민의 주권과 국가의 자유이다. 그러므로 왕도 “국가의 죄인”<sup>219)</sup>으로서 처단될 수 있고, 처단되어야 한다. 유길준이 『정치학』에서 지적한 근세국가의 대원칙은, “법률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다는 것과 신민의 권력은 법률상 동등하다.”<sup>220)</sup>는 것이다. 왕은 이제 법률 아래 있다. 프랑스혁명과 프랑스혁명으로 인해 촉발된 유럽 국가들의 정치개혁은 국가가 국왕이나 왕실로부터 분리되어 추상화되고, 왕은 헌법이 제정한 한 국가기관으로서만 기능한다는 정치사상의 전환을 가져왔다. 그에 따라 반역과 충성의 대상과 기준이 달라졌다. 왕과 칙령이 지녔던 절대성은 이제 국가와 헌법, 인민주권과 자유라는 이념의 묶이 되었다.

218)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4), p.102.

219)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4), p.49.

220) 유길준 지음, 한석태 역주, 『정치학』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p.74.

『법국혁신전사』의 마지막에서, 저자는 프랑스 ‘혁명난’의 교훈을 “각국의 간섭을 배척하고 일국의 주권을 유지하여 그 정체는 군주독재든지 공화자유든지, 또 그 국내에 하등의 소란 쟁힐(爭詰)이 있든지 결연히 그 독립체제를 유지”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국민이 용장강의(勇壯剛毅)할 뿐 아니라 국가의 관념이 심하여 정녕 그 목숨은 내던질지언정 국명(國命)은 타인의 상해를 불수(不受)”하기 때문이다.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군대는, 애국심으로 정신이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하여 “프랑스혁명의 정신이 국내에 전염될까 두려워한”<sup>221)</sup>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전쟁에서 프랑스 혁명폭도는 “혁명가(革命歌)를 난창하면서”<sup>222)</sup> 왕당파와 외국군대를 무찌르게 된다.

그러나 혁명 정권과 혁명의 이념 자체가 기득권을 침해할 현상변경의 변수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주변 왕정국가들의 연합군은 프랑스의 왕정복구를 위해 프랑스 내 반혁명세력과 결탁하여 전쟁을 일으킨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강한 군사력과 통일성 있는 정부가 필요해진 프랑스에서는 혁명 초기의 인민주권의 원리가 타협되고 공화정에서 민주 독재로, 민주 독재에서 나폴레옹 1세의 절대 군주정으로 퇴행하게 된다. 이것이 혁명정권의 생존에 국제 변수가 작용한 결과라면, 민중혁명으로 수립된 프랑스 또한 나폴레옹전쟁을 통해 유럽 여러 나라와 유럽의 국제체제를 변화시켰다. 나폴레옹 1세가 과연 『법국혁신전사』의 저자가 상찬한 대로 “구주전폭(歐洲全幅)의 혁명”<sup>223)</sup>을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폴레옹전쟁은 프랑스의 점령 지배를 받았던 지역에 프랑스 혁명 헌법을 전파하였다.

221)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4), p.90.

222)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4), p.98.

223) (한국개화기문학총서II: 역사.전기소설 4), p.121.

## 2절. 망명 개혁세력의 혁명론과 반혁명론

### 1. 박영효의 혁명 공작과 「인권론」

건양에서 광무 연간으로 가면서 황제 측근 집권세력이 더욱 보수화 되는 가운데,<sup>224)</sup> 1898년부터 1902년 사이에 다수의 모반 사건이 발생한다. 이 중에 어떤 것은 개혁 세력을 궤멸하기 위한 조작이었고, 어떤 것은 실제로 고종을 제거하려는 시도였다. 이들 모반 사건의 배후와 주모자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박영효이다. 갑신정변 이래 해외로 망명한 급진개혁 인사들은 고종과 왕실에게는 정권안보 불안의 핵심 요인이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이들을 ‘극역대대(極逆大慝)’한 ‘흉모(凶謀)’를 기도한 ‘난적(亂賊)’으로 규정하고<sup>225)</sup> 자객을 보내 암살을 기도하거나, 귀국을 회유하여 처형, 구금, 유배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박영효 또한 망명 기간 내내 왕실과 척족이 보낸 자객의 암살 위협에 시달렸고, 김옥균은 결국 1894년 3월 28일 상해에서 홍종우에 의해 암살되었다.<sup>226)</sup> 김옥균이 죽은 뒤, 대한제국기 가장 급진적인 체제변혁 세력의 중심에

224) 송병기, “광무개혁 연구: 그 성격을 중심으로”, 사학지, Vol.10 (1976), pp.85-86.

225) 고종 및 신료들은 김옥균, 박영효 등 갑신정변 주동자를 난역(亂逆), 난적(亂賊), 갑신오적(甲申五賊), 극역대대자(極逆大慝者), 흉역(凶逆), 적당(賊黨), 흉당(凶黨), 역적(逆賊)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종실록 1884년 10월 21일 8번째 기사; 1884년 10월 21일 9번째 기사; 1885년 12월 21일 2번째 기사; 1887년 4월 28일 4번째 기사; 1894년 4월 27일 1번째 기사.

226) 1894년 3월 28일 김옥균 암살과 박영효 암살 미수 사건을 위시한 갑신정변 주모자에 대한 일련의 암살 기도에 대해서는 김경창, “갑신정변주모자의 망명 10년의 행적: 김옥균·박영효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Vol. 11, 1985. 김경창은 조선 정부가 집요할 정도로 갑신정변 망명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 이유를 세 가지로 파악하였다. 첫째, 대역죄인을 처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국왕과 조정의 위신을 손상시킨다. 둘째, 망명한 개화당 인사들이 일본의 동정 세력과 결탁하여 조선의 치안을 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민태호, 민영목, 조영하, 민영익 등 갑신정변 당시 피살되거나 부상당한 척신들의 원한이 깊었다.

는 박영효가 있었다.

1884년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으로 망명했던 박영효는<sup>227)</sup> 갑오개혁 때 조선 정계에 재등장한다.<sup>228)</sup> 박영효가 2차 갑오정권의 내부 대신으로 재직한 기간은 1894년 12월 17일부터 1895년 7월 6일까지이다.<sup>229)</sup> 오랜 망명생활로 국내에 정치적 기반이 희박했던 박영효는<sup>230)</sup> 1894년 9월 일본이 청일전쟁의 승기를 잡고, 10월 15일

---

227) 이 시기 박영효에 관해서는 김현철, “제 1차 일본 망명시기 박영효의 활동과 갑신정변 가담 개화파”,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 21, No. 2 (2000a).

228)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단 점령, 청일전쟁이 개시된 직후인 1894년 7월 28일 일본 외무대신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는 박영효, 유혁로, 이규완, 정난교 등 갑신정변 관련 망명자들의 귀국 및 사면 알선 작업에 착수했고, 그에 따라 박영효는 8월 10일 귀국하였다. 1894년 9월 8일, 「大關内謠言ニ付米露兩公使談話竝ニ朴泳孝任官ニ關シ報告ノ件」, 機密送第一八〇號, 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 (1951), 27-1-446; 1894년 10월 29일, 「大院君トノ談話報告ノ件」, (日本外交文書), 27-2-473; 1894년 11월 1일, 「徐光範等ノ赦免登用ヲ朝鮮國政府ヘ照會方依頼ノ件」, (日本外交文書), 27-1-367; 석파학술연구원 편, (흥선대원군사료취편) 2 (서울: 현음사, 2005), p.115, 145, 195, 197; 유영익, (갑오경장연구) (서울: 일조각, 1990), p.9, 48;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경장: 청일전쟁기(1894~1895) 조선인 지도자들의 사상과 행동) (서울: 일조각, 1998), p.49; 김현철(2000a), p.50.

229) 갑오개혁의 시기 구분은 크게 네 단계로 나뉘는 점에서 공통되고 논자에 따라 더 세분된다. 박종근은 제 1차 김홍집 정권 (1894.8~), 제 2차 김홍집 정권 (1894.12~), 제 3차 김홍집 정권 (1895.8~), 제 4차 김홍집 정권 (1895. 10~)으로 파악하였다. 유영익은 제 2차 및 3차 김홍집 정권 시기를 각각 다시 둘로 나누어 모두 6단계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1기는 김홍집·이준용 내각 (1897.7.27~12.17), 2기는 김홍집·박영효 내각 (1894.12.17~1895.5.21), 3기는 박정양·박영효 내각 (1895.5.31~7.6), 4기는 박정양·유길준 내각 (1895.7.6~8.23), 5기는 김홍집·박정양 내각 (1895.8.24~10.8), 6기는 김홍집 내각 (1895. 10~)이다. 왕현종의 경우 1, 2, 3기 구분은 유영익과 동일하지만 4기와 5기를 묶어 고종 친정 강화기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 개혁기 (1894.7.23~12.16),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시기 (1894.12.17~1895.5.30), 박정양·박영효 연립내각시기 (1895.5.31~7.6), 고종 친정 강화기(1895.7.7~10.7), 을미사변후 개혁기(1895. 10.8~1896.2.11)로 대별된다. 박종근 저, 박영재 역, (청일전쟁과 조선) (서울: 일조각, 1989), p.xii; 유영익(1990), p.180, 표 1; 왕현종,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서울: 역사비평사, 2003), pp.24~25, 6장.

230) 미국공사관 서기관 알렌(Horace Newton Allen, 安連)은 1894년 10월 현재 조선의 세력구도를 국왕, 왕비, 대원군, 박영효의 4자로 파악하고, 세력 배경이 없는 박영효파는 한쪽으로 쏠리게 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1894년 10월 28일, 井上馨 朝鮮駐在公使→陸奥宗光 外務大臣, 「齊藤修一郎ト米國公使館書記官「アルレン」トノ談話報告ノ件」, (日本外交文書), 27-2-468; (흥선대원군사료취편) 2, p. 173.

조선주재 일본공사가 오오토리 케이스케(大鳥圭介)에서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로 교체, 대원군이 강제로 정계에서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입각하게 된다.<sup>231)</sup> 박영효는 개혁의 급진성으로 인해 왕실, 대원군, 김홍집의 반대에 부딪혔고,<sup>232)</sup> 조선에 불리한 일본 차관 도입과 내정간섭을 거부함으로써 일본과도 멀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영효는 7월 7일 왕비를 살해하고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꾀하고 있다는 혐의로 수배되어 일본으로 재차 망명하게 된다. 박영효의 모반 여부에 대해서는 정교, 스기무라 후카시, 황현, 신석호의 기록이 엇갈리지만,<sup>233)</sup> 이 때 박영효가 군부를 장악하고 궁성 호위를 자기 수중의 훈련대로 교체하려고 시도한 정황은 분명하다.<sup>234)</sup> 갑신정변의 목적이 고종을 폐하고 황태자를 옹립하여 개혁을 단행하는 데 있었다는 박영효 자신의 회고,<sup>235)</sup> 1895년 내무대신 재직 당시 명성황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화군을 특파대사로 일본에 보

231) 박종근(1989), pp.137-158; 유영익(1990), pp.28-50; 유영익(1998), pp.60-64.

232) 1894년 9월 8일, 오오토리 케이스케(大鳥圭介) 조선주재 일본공사가 무츠 외무 대신에게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 때 박영효의 개혁 구상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현재의 내각원 경질하고 대거 지방의 명사(名士)를 천거해서 내각을 조성. 둘째, 왕비 폐위. 셋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경우 대원군 퇴진. 넷째, 형벌을 엄하게 하여 정부 권위 세울 것. 다섯째, 신관제(新官制)를 폐지하고 예전의 관제를 회복시킬 것. 같은 보고서에서 오오토리는 박영효가 일본공사관 서기관 스기무라 후카시(衫村濤)를 찾아와 말한 바에 따르면, 1894년 9월 3일과 4일에 걸쳐 고종이 박영효에게 이재순(李載純)을 밀파하였고, 박영효의 개혁안에 대해 과격하니 잠시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비답하였다고 전했다. 1894년 9월 8일, 「大關内謠言ニ付米露兩公使談話竝ニ朴泳孝任官ニ關シ報告ノ件」, (日本外交文書), 27-1-446; (흥선대원군사료취편) 2, p.146.

233) 정교, 『대한계년사』2 (서울: 소명출판, 2004), pp.95-98; 국역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권: 六. 朴泳孝不軌事件: (3) 1895년 6,7월 중 朝鮮王宮 호위병 交替事件으로 宮中과 内閣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고 끝내 사건이 일변하여 朴泳孝가 그職에서 罷職당하고 체포령이 내려질 때까지의 日記, 1895년 7월 12일; 황현, 『매천야록』 (서울: 교문사, 1996), pp.347-348; 신석호, 『韓末政界와 朴泳孝』, (朝光), 5-11 (1939), p.237. 정교와 스기무라 후카시는 모반 사실이 없다고 본 데 반해, 황현과 신석호는 모반 사실이 있다고 기록했다.

234) 이광린, 『개화기의 인물』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3), pp.144-154; 『한국사강좌5: 근대편』 (서울, 일조각), pp.352-353.

235) 釋尾春菴, (朝鮮併合史), (京城: 朝鮮及滿州社, 1926), p.85; 전봉덕, “박영효와 그의 상소 연구서설”, 동양학, Vol.8 (1978), p.178에서 재인용.

낼 것을 강력히 추진했으며<sup>236)</sup>, 망명 이후 일본에 체류하던 의화군과 꾸준히 교류했고,<sup>237)</sup> 1898년 3월 2일 사토(Ernest Satow) 주일 영국공사 방문 대담 중 고종을 퇴위시키고 황태자를 옹립, 의화군과 유능한 인물들로 구성된 내각을 기반으로 하여 통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사실<sup>238)</sup> 등으로 미루어 보아, 1895년 6월 박영효의 왕실 호위병 교체 시도는 실제로 정변을 일으키기 위한 수순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개혁정권을 수립하려는 박영효의 시도는 일본 망명 이후 러일전쟁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1898년 7월에는 박영효의 귀국설이 나도는 가운데, 독립협회 회장 안경수를 중심으로 무술모계, 즉 황태자옹립 사건이 있었고, 1898년 12월에는 독립협회 소속 중추원 의원들이 박영효를 관직에 추대했다가 파란이 일어난다. 1899년 6월에는 독립협회 회장을 지낸 고영근을 중심으로 박영효의 집에서 폭약을 제조하여 임병길, 최정덕 등이 조병식, 신기선 등 대신 집에 폭탄을 투척한 사건이 있었다.<sup>239)</sup> 독립협회 해산 이후, 1900년에는 박영효가 주동한 일련의 활빈당 사건이 있었다.

236) 1895년 6월 22일 [井上公使 歸國 후의 情勢 및 朴泳孝와 王妃의 알력에 관한 보고]2,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7권.

[http://db.history.go.kr/url.jsp?ID=jh\\_007r\\_002\\_010\\_0930](http://db.history.go.kr/url.jsp?ID=jh_007r_002_010_0930)

[http://db.history.go.kr/url.jsp?ID=jh\\_007r\\_002\\_010\\_0930\\_0030](http://db.history.go.kr/url.jsp?ID=jh_007r_002_010_0930_0030)

237) 박영효는 철종의 부마가 된 지 세 달만에 옹주가 죽어서 왕실의 관습에 따라 고종이 궁녀를 하사하여 부인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부인 또한 박영효가 1895년 일본 오기 전에 죽었다. 최종적으로 박영효는 1녀 2남을 슬하에 두었는데, 차남 일서의 장녀(박영효의 손녀) 박찬주와 이강의 아들 이우가 이후 결혼을 하게 된다. 이 결혼은, 일본이 일본 왕실과 이우를 결혼시키려 하자 급하게 진행되었는데, 일본 시절의 교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아닐까 추측해 본다.

238) 김현철, “제 2차 일본 망명시기 박영효의 행적과 정변시도”, 현대사연구(구 근현대사강좌), Vol.11 (2000b), p.201, 206.

239) 윤병희, “갑오개혁 이후 박영효의 행적과 활동”, 유병용 외 지음, (한국의 인물과 사상: 박영효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pp.194-221; 김현철(2000b), pp.190-222.

박찬승은 1900년의 활빈당을 1886년부터 1906년까지 ‘활빈당’이라는 기치를 내건 다른 모든 세력들과의 연속성 속에서 파악한 바 있다.<sup>240)</sup> 그러나 박영효의 활빈당은 최종 목적이 구체제 청산과 신정부 수립에 있었다는 점에서<sup>241)</sup> 의병과 다르고, 부농이나 지주에 대한 약탈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 확보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화적(火賊)과도 다르다. 이들은 일단 외양에서 모두 단발에 양복차림으로 피스톨, 무라타 소총(村田銃), 군용 도검(刀劍)을 휴대하고 있었다. 또, 각 부락의 소상인, 농가 또는 행상인의 물건은 약탈하지 않고, 그 지방의 가장 부자를 찾아가 “국가를 위해 축재한 것을 우리 당에 내놓아야 한다.”고 겁박하였다.<sup>242)</sup> 이들의 목적은 “각 지방의 부자들을 납치하여 돈을 약탈한 뒤 그 돈을 선박과 병기 등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충당”하고, “부산, 경성 등에 산재해 있는 불평당(不平黨)과 연락을 통해 한국 8도에서 일시에 봉기”하려는 것이었다.<sup>243)</sup>

체포된 엄주봉 일파의 취조기록에 따르면, 활빈당의 목적은 울산, 밀양, 양산의 부호들에게 돈 50만 원을 모금하는 것이었다. 박영효는 그 돈으로 일본의 군함과 무기를 구입하여 10월에 서울을 공격

240) 박찬승, “활빈당의 활동과 그 성격”, 한국학보, Vol.10, No.2 (1984), p.115.

241) “갑신년에 일본의 힘을 빌리려다가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 혁명을 해보리라 하고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등지 인사들과 연락을 취해서 일제히 난을 일으켜 가지고 최후로 경성을 함락하고 신정부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소. 그리고 경자년에 거사를 할 양으로 동지 오인(五人)을 본국에다 보내었더니 이 군들이 약조대로 난리는 아니 일으키고 부산으로 동래로 혁명연설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다 붙들려 죽었지요” 이광수, “박영효씨를 만난 이야기-갑신정변 회고담”, (東光), 1931년 3월호; (이광수전집), 제 17권, 서울:삼중당, 1962, pp. 402-403; 김현철(2000b), p.212에서 재인용.

242) 국역 駐韓日本公使館記錄 Vol.15: 二.各館來信一·二: (27) 活貧黨의 一種 梁山集合의 件 1900년 8월 31일; (28) 活貧黨에 관한 續報: [別紙] 活貧黨 探偵 報告書, 1900년 8월 31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43) 국역 駐韓日本公使館記錄, Vol.14: 一三. 各領事館機密來信 一·二: (49)活貧黨에 관한 詳報 및 亡命者와의 關係, 1900년 9월 5일; (51)活貧黨에 관한 新事實發見의 件, 1900년 9월 12일.

하여 의화군을 황제로 옹립하려 하였다. 이후 개화를 단행, 의화군이 황제가 되는 것이 한국이 안정되는 길이라고 일본을 설득한 뒤에 일본에 등을 돌리겠다는 것이 박영효의 구상이었다. “우리들은 결코 초적(草賊)이 아니라 참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지사(志士)”이며, “국가 존립에 관한 운동을 한 것”이라면서,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계획과 기도한 바를 도도히 진술하는 활빈당의 태도로 인해, 이들을 취조한 대대장은 배후에 막강한 후원자가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품고 신정부가 수립될 경우를 대비해 이들을 우대하기까지 하였다.<sup>244)</sup>

박영효 활빈당 운동 배후의 근대적 혁명 이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문건은 박영효가 부산의 하나다(花田孫兵衛)에게 수십 장의 필사본을 보낸 ‘인권론(人權論)’이다.<sup>245)</sup> 다소 길지만 전문이 소개된 적이 없어서 여기에 실는다.

“現今世界列強이 文化가 暢明함에 人權으로써 重케 여기지 않는 者  
 | 無히니 人權이란 者는 人이 된 權利라 上으로 帝王公侯와 卿相  
 大夫로부터 下로 農工商士와 吏胥奴隸에 至토록 다 生호 初에 天에  
 稟受호 者|니 生命과 財産이 是로 由호야 保호며 邦國의 強弱이  
 是로 由호야 分호는지라 찰호리 人이 生호미 無호지언정 生호면 반  
 드시 有호 者|니 故로 비록 匹夫匹婦의 愚호으로도 또호 能히 스  
 스로 保호야 利用호고 비록 皇王卿相의 貴호로 敢히 侵侮호야 掠奪

244) 국역 駐韓日本公使館記錄 Vol.15: 八. 機密馬山領事館來信 一·二: (56)活貧黨就縛者의 진술에 관한 件: [別紙 乙] 活貧黨 訊問調書, 1900년 9월 21일; [別紙 丙] 活貧黨의 情況視察 報告, 1900년 9월 19일.

245) 국역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권: 一三. 各領事館機密來信 一·二: (52)韓國 亡命者 調査報告 件: 朴泳孝가 花田孫兵衛 에게 보낸 活貧黨 關聯書, 1900년 8월 31일. 「人權論」 자체는 아시아歴史資料センターDB [<http://www.jacar.go.jp>]: 日本外務省記錄: 「朴泳孝及趙義淵等ニ於テ韓國改革計畫關係雜纂」; 김용구 편, (한일외교미간국비사료총서 8)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5), pp.247-250.



치 못하느니 其保하고 保치못함과 奪하고 奪치 아니하는 사이에 民生의 苦樂이 係하며 國家의 興亡이 關함이라 今에 歐米의 民은 此를 保한 者요 韓淸의 民은 此 保치 못한 者이며 古에 桀紂의 亡함은 此를 奪한 者요 湯武의 興함은 此 奪치 아니한 者이니 其重이 如此하며 其証이 如彼하도다

添惟컨디 우리 國朝가 中葉 以來로 門閥을 崇尚하는 弊가 滋甚하야 卿士의 後裔는 世世로 卿士가 되고 庶民의 後裔는 世世로 庶民이 되야 至於交際와 婚姻과 科第와 任宦에 此 防範이 天限을 設함갓하 며 其貴賤이 人獸를 隔함갓하야 士와 民의 等級이 茲에 判하니 此 等級이 有한 故로 壓制가 生하고 壓制가 甚함에 人權이 減하고 人權이 減함에 陵虐이 起하야 官吏는 不法을 恣行하고 士族은 鄉曲에 武斷하야 民이 命을 堪치 못함으로 甲午의 內亂을 馴致하야 八域이 騷然함에 거의 宗社가 危亡하엿는지라 이에 政을 新케 하는 ●에 釀禍하든 原因을 探究하야 革除할 方略을 必行할식 몬져 門閥을 破하고 登庸하디 材를 隨하며 壓制를 禁止하야 卭 人權을 復함에 이 數百年 束縛摧折하엿든 民이 거의 文明世 自由●遙之樂을 見할너니

不幸히 政局이 遷變하고 冥頑이 權을 秉하야 亂亡하든 前轍을 再蹈하니 民이 人權을 保有한 者이며 거의 其類가 無한지라 이의 其權이 無하면 人이 엇지 人을 作하리오 비록 英雄豪傑의 志가 有하야도 能히 伸치 못하며 비록 道德學問의 尊이 有하야도 能히 行치 못하며 비록 經世濟民의 才가 有하야도 能히 用치 못하며 비록 金融資財의 富가 有하야도 能히 保치 못하야 車에 服하든 駑馬이며 鞭策을 受함갓하며 園에 入한 豕豕가 人에게 宰烹을 任함갓하야 人의 無理함을 遇하디 敢히 怒치 못하며 비록 己가 無罪하나 敢히 鳴치 못하야 手足이 措할 바가 無하며 軀幹이 容할 바가 無하야 拘倮하고 蜿

蟪蛄가 거의 蠢類와 同하야 大抵 公公은 天의 賦한 바 正理와 堂堂  
은 大丈夫의 身分으로써 聲을 吞하고 氣를 忍하야 一生을 鎖受하나  
진실노 苦하고 또 哀하도다

今에 盜賊이 有하야 金帛을 奪은 則 人이 다 腕을 振하며 ●가 裂  
하야 讐敵으로써 視하야 곳 窮迫하야 討還하기를 思하디 오죽 人權  
을 被奪은 則 도로혀 恬然히 無耻하며 晏然히 無警하야 그 ●●●을  
任하며 그 驅迫●●을 甘하야 忍痛含冤 叫憤激起하는 뜻시 萬死一  
生之計에 發하야 卽 激烈한 舉를 行하야 能히 回復함을 圖하는 者  
| 全無하니 이 엇지 人權의 重함이 도로혀 金帛의 輕함만 不如타  
함이리오 오죽 이 民이 生을 受한 後로부터 壓制가 有함만 知하고  
自由가 有함을 不知하며 世閥이 有함만 聞하고 人權이 有함을 不聞  
하야 비록 衝天絶人之勇과 通古達今之智를 有한 者라도 俗尙에 犯  
하야 如何치 못하고 다만 痛心疾首하며 血沸膽裂하야 天地를 俯仰  
하고 飲恨長●하는 者| 可히 數로써 計치 못하니 噫라 天理를 抑  
하며 人道를 違하야 民으로 하야곰 生世之樂이 無게 하는 者는 壓  
制가 是며 私慾을 肆하고 公議를 避하야 國家의 改進之福을 沮하는  
者는 門閥이 是라

且夫邦國이 만드시 人民을 依하야 成하는 것신則 邦國의 權利가 卽  
은 人民을 由하야 生하는 者|라 故로 人權이 重한 者는 國權이 卽  
은 重하고 輕한 者는 國이 卽은 輕하며 無한 者는 國이 卽은 無하  
니 國에 權이 無하면 國이 其國이 아니라 人의 奪理함을 被하디 敢  
히 卽치 못하며 人이 侮辱을 受하디 能히 禦치 못하야 못참니 利源  
을 强占하며 土地를 分割함에 至하디 ?를 하고 命에 奔함이 唯恐不  
反하니 然則 人民의 生命을 壓制하는 者는 人이 만드시 國의 命을  
制하고 人民의 權利를 剝奪하는 者는 人이 만드시 國의 權을 奪하

느니 다만 爾에게 出ᄃᆡ 者 | 爾에게 反ᄃᆡ야 스스로 亡ᄃᆡ 썬이라 韓  
 淸에 ●照ᄃᆡ則 可ᄃᆡ 審明ᄃᆡ리로다 今에 眞實노 撥亂致治之才가 有  
 ᄃᆡ야 能ᄃᆡ 絶世●立之功을 建ᄃᆡ야 萬姓을 爲ᄃᆡ야 弊害를 除ᄃᆡ고 一  
 國을 振ᄃᆡ야 權利를 復코져ᄃᆡ진디 만드시 人權을 復ᄃᆡ으로 從ᄃᆡ야  
 始ᄃᆡ리니 江山을 ●溫ᄃᆡ고 舊慣을 一洗치 아니면 可ᄃᆡ ●●치 못ᄃᆡ  
 진저”

박영효는 여기에서 인권(人權)이 사람인 이상 누구나 날 때부터 있  
 는 천부적인 것이며(“天에 稟受ᄃᆡ 者”), 생명과 재산을 지킬 권리  
 (“權利”)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신분이나 교육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은 인권을 보유하고 향유한다.(“비록 匹夫匹婦의 愚ᄃᆡ으로  
 도 쏘ᄃᆡ 能ᄃᆡ 스스로 保ᄃᆡ야 利用ᄃᆡ고”) 그런데도 구미의 백성은 인  
 권을 보유하고 한국과 청의 백성은 인권을 보유하지 못한 까닭은  
 (“歐米의 民은 此를 保ᄃᆡ 者요 韓淸의 民은 不保치 못ᄃᆡ 者”),  
 쥔문 세도의 압제가 극심해서 자유와 인권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이다.(“이 民이 生을 受ᄃᆡ 後로부터 壓制가 有ᄃᆡ  
 만 知ᄃᆡ고 自由가 有ᄃᆡ을 不知ᄃᆡ며 世閥이 有ᄃᆡ만 聞ᄃᆡ고 人權이  
 有ᄃᆡ을 不聞ᄃᆡ야”) 압제가 인권을 말살하고, 관리와 귀족의 불법적  
 수탈이 심해진 결과, 견디지 못한 백성이 일으킨 것이 1894년의  
 “내란”이다.(“壓制가 生ᄃᆡ고 壓制가 甚ᄃᆡ에 人權이 滅ᄃᆡ고 人權이 滅  
 ᄃᆡ에 陵虐이 起ᄃᆡ야 官吏는 不法을 恣行ᄃᆡ고 士族은 鄉曲에 武斷ᄃᆡ  
 야 民이 命을 堪치 못ᄃᆡ으로 甲午의 內亂을 馴致ᄃᆡ야 八域이 騷然  
 ᄃᆡ에 거의 宗社가 危亡ᄃᆡ었느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혁신(“政을 新케 ᄃᆡ는”), 즉 갑오개혁을 시도했지만, 정국이 변화하  
 여 수구 완고당이 재집권함으로써 인권은 박탈되고 내란과 망국의  
 위기에 다시 빠지게 되었다.(“不幸히 政局이 遷變ᄃᆡ고 冥頑이 權을  
 秉ᄃᆡ야 亂亡ᄃᆡ든 前轍을 再蹈ᄃᆡ니 民이 人權을 保有ᄃᆡ 者 | 거의 其

類가 無호지라”) 인권이 없는 사람은 돼지(豕豕)나 버러지(蠹類)나 진배없이 학대와 능욕을 받아 일생이 괴롭고 슬프다. 그런데도, 들고 일어나 인권을 회복하기를 도모하는 자가 없음을 박영효는 한탄하면서(“激烈호 舉를 行호야 能히 回復호를 圖호는 者ㅣ 全無호니) 「인권론」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각성하고 자기 인권을 회복하는 일에 뛰어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영효는 이미 1차 일본 망명기간에 작성한 건백서, 즉 개혁상소에서 이와 비슷한 논지를 편 바 있다. 1888년의 이 문건에서 그는 나라가 제왕의 사유물이 아니라 인민의 나라이며 제왕은 다스리는 직분일 뿐이라는 것(“邦國은 非帝王之邦國이요 乃人民之邦國이며 而帝王은 治邦國之職也라”),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保民護國”) 정부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정부는 정부라고 할 수 없다는 것, 탕무의 역성혁명 또한 민을 기준으로(“愛民”, “虐民”) 정당성을 지닌다는 것, 정부에 복종을 해야 마땅한 경우(“服從於政府之義”)와 복종하지 않아야 마땅한 경우(“不可服從之義”)가 존재하며, 타국에는 복종하지 않아야 함(“不可服從他國之義”)을 인민이 알아야 한다는 것, 무한한 전제 군권은 민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나라를 약하게 만든다는 것(“君權之無限이면...可以固君之專權이나 然이나 民愚而弱하면 則國亦隨而弱”), 따라서 군권을 감소하고 인민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欲期一國之富強....不若少減君權하야 使民得當分之自由”)고 주장했다.

박영효는 민본(“民維邦本”)과 탕무혁명이라는 전통적 혁명 레토릭을 구사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 전달하는 내용은 인민의 자유와 권리 및 저항권이라는 근대 혁명의 이념이다. 전봉덕이 지적했듯, 박영효가 유교 경전을 원용한 것은 지배세력에게 익숙한 언어로 근대사상

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246)</sup> 12년이 지난 뒤 작성한 「인권론」에서 박영효는 여전히 ‘혁명’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탕무와 결주라는 전통적 혁명 레토릭을 통해(“古에 桀紂의 亡국은 그此를 奪은 者요 湯武의 興국은 그 奪치 아니한 者”) 프랑스혁명 인권선언의 정신을 역설하고 있다. 「인권론」의 논지는 상당 부분 1888년 개혁상소와 일치하는데, 분량이 짧은 팜플렛이니만큼 논조가 더욱 명확하고 강렬하다. 박영효는 인민이 국보다 선재하며, (“邦國이 반드시 人民을 依야 成하는 것 신則 邦國의 權利가 또한 人民을 由야 生하는 者라”), 인민은 자신의 권리를 박탈하는 정부를 전복시킬 정당성과 필연성이 있으므로, (“人民의 權利를 剝奪하는 者는 人이 반드시 國의 權을 奪하느니라”) 국권을 신장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먼저 인권이 회복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한다. (“一國을 振야 權利를 復코져할진디 반드시 人權을 復함으로 從야 始하리니”)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1888년 개혁상소의 설득 대상이 군주 고종이었던 데 비해, 1900년 인권론에서 박영효가 겨냥한 청중이자 동원하려는 대상은 일반 인민이다.<sup>247)</sup> 정치변동의 주체 및 방법에 대한 박영효의

246) 전봉덕은 박영효 건백서의 5개 판본을 비교하면서, 표제에 “交詢社岡本氏稿本”라고 적혀 있는 부산 동아대학교 소장본을 소개하고 있다. 교순사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주축이 되어 창립한 정치운동 단체이고, 유길준의 『서유견문』 또한 교순사를 통해 출판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안타깝게도 이 판본은 지금 분실되었고, 정중환이 1965년 쓴 해제 논문만이 남아있다고 한다. 정중환은 건백서 표지의 ‘岡本’를 1894년 이노우에 공사가 고문으로 데려온 오카모토 류노스케(岡本柳之助)로 추정하였는데,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교순사에는 게이오의 속 출판국 출신의 동명직원 오카모토 테큐(岡本貞然)가 있었다. 박영효의 개혁안이 1888년 작성되었지만 고종에게 상주되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채 1894년 갑오개혁 때 일본외무성에서 수집한 형태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요청되는 지점이다. 전봉덕(1978), pp.187-188, 195-196; 정중환, “박영효 상소문”, 아세아학보, Vol.1 (1965); 住田孝太郎, “近代日本の中の交詢社”.

[<http://www.keio-up.co.jp/kup/webonly/ko/koujyunsya/p14.html>]

247) 국역 駐韓日本公使館記録 14권: 一三. 各領事館機密來信 一·二: (52)韓國 亡命者 調査報告 件: 朴泳孝가 花田孫兵衛 에게 보낸 活貧黨 關聯書, 1900년 8월 31일. 박영효는 편지에서 “人權論은 누구에게든 주어서 보게 하고”라고 분명히

결정적 인식 전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오키 코이치(青木功一)는 박영효의 1888년 상소문에 끼친 후쿠자와 유키치의 영향을 지적하였다.<sup>248)</sup> 김현철 또한 박영효가 1866년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西洋事情)』 초편에 게재된 미국독립선언서 번역문, 1881년 우에키 에모리(植木枝盛)의 「日本國國憲法案」 등을 통해 인민의 저항권과 시민혁명 사상을 수용했으리라 추정하였다.<sup>249)</sup> ‘혁명’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시공간이 낳은 역사적 발명품이지만, 인쇄 자본주의 발달은 후발지역의 정치공동체에서 이것을 ‘표절’하여 새로운 변종을 주조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자본주의적 민주 혁명의 시초인 프랑스 혁명 자체는 조직되고 계획된 것이 아니었지만, 볼셰비키 혁명은 프랑스 혁명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나름의 조립적인 이론화와 실천적 실험을 통해 ‘계획된’ 혁명이었다. 산업자본주의의 기반이 존재하지 않았던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혁명이 주조된 덕분이었고, 볼셰비키 혁명은 다시 중국의 마오쩌둥에 의해 후발사회 혁명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이처럼 혁명은 “조립되고 이전될 수 있다.”<sup>250)</sup> 박영효에게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 이념을 제공한 것이 일본의 출판물이었다면,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실패를 경험한 박영효에게 한국적 혁명 창출의 가장 현실적인 모형으로 다가온 것은 중국이었다.

---

밝히고 있다. 이 사실은 김용구,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서울: 나남출판, 1997), p.268에도 지적되어 있다.

248) 青木功一, 『福澤諭吉のアジア』 (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1); “朝鮮開化思想と福澤諭吉の著作”, 朝鮮學報, Vol. 52 (1969); “朴泳孝の民本主義・新民論・民族革命論”(1)(2), 朝鮮學報, Vol.80,82 (1976・1977).

249) 김현철, 박영효의 『1888년 상소문』에 나타난 민권론의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Vol.33, No.4 (1999), p.18.

250)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나남출판, 2002[1983]), p.25, pp.202-203; 에릭 홉스봄, 정도영·차명수 옮김, (혁명의 시대) (서울: 한길사, 1999[1962]), p.153.

1900년 박영효 활빈당 거사의 양상은 해외 화교에게 자금을 모집하고, 중국 본토의 각종 회당을 포섭하여 혁명세력을 부식하는 한편 내란 기지를 영위하며, 일본에서 신식무기를 조달하고, 홍콩, 대만, 필리핀 등 인접 지역의 원조를 모색한 1900년대 전반기 쑨원의 혁명공작과 일치한다. 실제로 박영효는 1899년 무렵부터 필리핀 민족주의자 마리아노 폰세(Mariano Ponce) 및 중국 혁명가 쑨원(孫文)을 만나 교류하며 지속적인 친분을 쌓았다.<sup>251)</sup> 마리아노 폰세와 한인 망명자들 간의 관계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연구에 상당 부분 밝혀져 있다. 폰세는 당시 홍콩과 요코하마를 오가며 아귀날도(Emilio Aguinaldo)의 필리핀 혁명 정부를 위해 자금과 무기를 수집하고 있던 인물이었다.<sup>252)</sup> 폰세는 1899년 3월 일본에서 쑨원(孫文)과 만났고, 1899년 7월 쑨원은 자신의 인맥을 통해 필리핀 혁명군이 사용할 무기 구입과 반출을 주선하였다.<sup>253)</sup> 두 사람이 만난 지 불과 4개월 뒤에 일이 이처럼 진척되었다는 점, 필리핀 독립운동이 폐색이 짙어짐에 따라 폰세가 일본에서 구입하려던 무기를 중국혁명에 전용하도록 제공했다는 점에서 폰세와 쑨원의 긴밀한 교류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혁명세력의 국제적 공조로 해석되어야 한다.

필리핀에 초점을 맞춘 베네딕트 앤더슨의 연구는 쑨원과 박영효의 관계는 따로 다루고 있지 않다. 배경한의 연구에서는 쑨원과 박영

251) Mariano Ponce, *Sun Yat-Sen: the Founder of the Republic of China* (Manila: Filipino-Chinese Cultural Foundation, Inc., 1965), pp.40-42.

252) Benedict Anderson, *Under Three Flags: Anarchism and the Anti-colonial Imagination* (London, New York: Verso, 2005), pp.201-203.

253) 쑨원의 중국인 친구와 이들의 대외에 뜻을 같이한 일본인 한 명이 합자하여 빌려준 배에 6백만 개의 탄창, 1만 정의 무라타 권총, 대포 1신, 10개의 야전포, 7개의 쌍안경을 선적하고, 일본군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승선한 일본 군장교들과 무기 기술자들을 싣고 나가사키에서 출항한 이 배는 7월 19일 중국 근해에서 태풍을 만나 침몰하였다. Anderson (2005), pp.220-221; Silvino V. Epistola, *Hong Kong Junta*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1996), pp. 123-124; Mariano Ponce, *Cartas Sobre La Revolución 1897-1900* (Manila: Bureau of Printing, 1932), pp.364-381.

효, ‘안근수’(‘안경수’의 오기), 유길준이 1890년대 말 교류했다는 사실만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sup>254)</sup> 폰세가 박영효, 안경수, 유길준과 안면을 튼 최초의 시점은, 그가 1899년 2월 12일 안경수에게 보낸 영어 편지로 보아,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sup>255)</sup> 쑨원과 폰세가 만난 것이 1899년 3월이고, 폰세는 1899년 4월 23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태국, 필리핀 유학생들로 이루어진 ‘동양청년회 (Association of Oriental Youth)’에 초대되어 연설하고 ‘한국 왕의 둘째 아들<sup>256)</sup> 이우 왕자’를 소개받았다.<sup>257)</sup> 쑨원 또한 깊숙이 관여

254) 배경한, (쑨원과 한국: 중화주의와 사대주의의 교차) (파주: 한울, 2007), p.30, 266, 주 1.

255) 이 편지에서 폰세는 2월 11일 전보로 받은 대미(對美) 필리핀 독립전쟁 전황을 알리고, 박영효와 유길준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다. 2월 12일 폰세는 동일한 내용의 영어 편지를 스기무라 후카시에게 보내면서, 일본 외무대신이었던 아오키 슈조(青木周藏)에게 이 소식을 전해 줄 것과, 미국의 민간인 살상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기 위해 일본정부의 조력을 얻을 방법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폰세가 안경수를 수신자로 보낸 영어 편지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Ponce (1932), pp.274-275.

Mr. KYENG SU AHN, Esq.

Dear Sir: I have the honour of sending you this following translation of a telegram I received last night:

"Hongkong, 11 Feb. 6-10 p.m. The Americans, by treacherous surprise, attack with cannons defenseless towns. In the streets of Manila they capture and shoot down men, women, and children. All business is at standstill. The country is ready to fight till the last drop of blood."

We protest against this unheard of savagery.

Please inform H. H. the Prince Pak of this grave case.

I copy herein our ancient alphabet that H. H. Prince Pak has kindly wished to know:

a e i o u ba ka da ga ha la ma na pa sa ta ya

I beg you offer my most profound respect to H. H. the Prince Pak and my best compliments to Mr.

Yu-Kie Chan.

Wishing you good health,

I remain, Dear Sir

Faithfully your's

M. Ponce

256) 이 강은 1891년 의화군에 봉해졌고 1900년 의친왕에 봉해졌는데, 따님 이해경씨가 1994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보낸 탄원서에 따르면 의친왕은 고종황제의 5남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폰세는 이 강(李綱)을 고종의 둘째 아들이라고 하고 있으며, 윤치호 또한 ‘둘째 왕자(2nd prince)’라고 그의 일기에 적고 있다. 이와 관



하고 있던 이회는 일본 정치인들의 후원을 받았으며, 이즈음에는 주로 한국과 필리핀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었다고 한다. 박영효는 폰세의 집에서 쑨원과 처음 만났는데, 같은 시기 폰세와 쑨원의 관계가 필리핀 독립혁명과 중국 공화혁명을 위한 국제적 세력 공조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쑨원과 박영효의 밀접한 교류 또한 그 의미를 재고해 보게 된다.

박영효가 정부 전복 계획을 가지고 무기 구입 자금을 모으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1900년 8월과 9월은 쑨원이 해주봉기를 일으켰던 시점이다. 1899년 쑨원은 장강유역 반체제세력인 가로회(哥老會)와 광둥지방의 반정부대 삼합회(三合會), 반청혁명의 정치세력인 흥중회(興中會)의 삼파를 연합하여 흥한회(興漢會)를 창설했다. 흥한회는 혁명결사들을 손문이 정치적으로 통합했다는 의미 뿐 아니라 혁명에 필수적인 군사기관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혁명투쟁에 필요한 군사력과 무기를 확보한 쑨원은 1900년 중국 남방의 해주(惠州)에서 봉기를 일으켰다. 당시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내각 총리대신은 쑨원의 반청혁명에 동정적이었고, 지리적으로 해주에 근접한 대만 주둔 일본군을 출동시켜 해주봉기에 협조하기로 되어 있었다. 의화단사변이 일어나자 열국의 관심이 북방에 집중되는 틈을 이용하여 일본의 군부와 대만총독부에서는 1900년 8월 24일 이문(履門)의 일본인 사찰인 혼간지(本願寺)에 방화사건이 일어난 것을 빌미로 육군 1개 여단을 함정이 호위하여 이문항에 진입시켰다. 그러

---

런, '대한제국 의친왕송모회'(<http://cafe.daum.net/daehan815>)의 이학주 간사에게 문의한 결과 다음의 답변을 얻었다. 고종 황제는 9남 4녀를 두었고, 의친왕은 적서를 통틀어 여섯째 아들인데 바로 위의 대군이 생몰년이 부정확한 채 일찍 죽어서 보통 다섯째 아들이라고 하며, 살아남은 왕자들 가운데 명성황후 소생의 순종 황제에 이어 귀인장씨 소생의 의친왕이 둘째가 되므로 둘째 아들이 된다. 이해경, (나의 아버지 의친왕) (도서출판 진, 1997), p.38; 윤치호일기 4권 1895년 10월 8일자 [<http://db.history.go.kr>].

257) Ponce(1932), pp.333-336.

나 당시 추밀원의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각의의 결정을 번복시킴으로써, 8월 28일 육군대신은 주 이문 일본영사와 대만 총독에게 작전 중지를 명령하였다. 이 사건은 9월 26일 야마가타 내각이 붕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새로 들어선 이토 히로부미 내각은 쑨원에 대한 무기 수송과 대만총독부의 쑨원의 반청혁명과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중지시켰다. 쑨원은 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해주봉기는 실패로 끝났다.<sup>258)</sup> 1900년 박영효의 활빈당 운동은 혁명을 위한 정치적·군사적 조직으로서 쑨원의 회당(會黨)을 본뜬 것이며, 박영효는 의화단사건과 러일의 군사적 대립을 계기로 쑨원의 해주봉기에 발맞추어 한국에서도 내란과 폭동을 연출하여 한국 정부를 전복하려고 계획했다는 가설이 가능해진다.

박영효 활빈당과 청국 ‘회당(會黨)’의 유사성은 박영효 활빈당이 모두 진압된 9월 하순 평안도 지역에 나타난 ‘의화단’적 활빈당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부각된다. 1900년 6월 황성신문 기사에 따르면, 중국 의화단은 대도회(大刀會) 가운데 과격파가 연장회(連莊會) 및 소도회(小刀會)의 말단 세력을 합쳐서 주동한 것이다. 이들 연장회와 대도회는 근거가 매우 견고해서 회원이 십만에 이르지만, 가로회(哥老會)나 대도회의 목적이 ‘정부혁명(政府革命)’에 관계하는 데 비해, 의화단은 정부에 대한 불평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완고한 배외의 념으로 소요’하는 것이다. 세간에는 서태후 등 수구세력이 이들을 지원한다는 말도 돌고 있었다.<sup>259)</sup>

1900년 9월 평안도 활빈당의 기치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 동지들은 음력 9월 경성(京城)에 진입하여 지금의 한국 황제를 폐하고 충

258) 정세현, (근대 중국 민족운동사 연구: 손문의 반청혁명과 회당) (서울: 일지사, 1977), pp.104-125.

259) 황성신문 1900년 6월 13일, 「義和團性質」.

청도 아무개를 세워 선정을 베풀고, 야소교 선교사와 기타 외국인을 일소하여 국외로 추방하며, 한국에 부정을 없애고 깨끗이 할 것이다.” 일본공사관의 첩보에 따르면, 이들의 배후에는 충청도 출신의 동학당 두목 유인석(柳仁碩)이 있었는데, 그는 청나라 회인현(懷仁縣)에 거주하면서 이전부터 의화단과 기맥을 상통해온 요주의 인물이다. 이들은 피스톨과 엽총을 휴대하고 있었고, 정부 전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박영효의 활빈당과 비슷하지만, 박영효의 활빈당이 일본 망명자와 경성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이들은 동학도 중심으로 배외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였다.<sup>260)</sup> 비슷한 시기에 전라도 지역에도 이러한 활빈당 수백 명이 출현하였다. ‘동학당의 잔당’으로 묘사된 이들은, 관청에 청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부청배화(扶淸排和)’ 또는 ‘대한서의(大韓誓義)’라고 쓴 깃발을 들고 공자묘로 가서 참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261)</sup>

1900년 전후 황성신문 기사들은 혁명 세력의 국제적 연합과 공조가 유라시아, 발칸반도, 남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세기 후반 만국 우편 연맹의 발족, 대양 횡단 해저 케이블과 전신의 발명, 증기선, 기차 등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해 가속화된 인적·물적·지적 교류는 약소국 민족주의자와 아나키스트들 간의 ‘초지구적 공조(transglobal coordination)’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출현시켰다. 필리핀 민족주의자들의 경우, 유학, 여행, 망명, 전신, 신문, 잡지, 사진, 책, 서신 교환 등을 통해 마드리드, 파리, 런던, 홍콩, 도쿄 등 대도시들로부터 끊임없이 세계정세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수혈받는 동시에 그 곳의 지인들과 의견을 교

260) 국역 駐韓日本公使館記錄 Vol.15: 二. 各館來信 一·二: (14)淸國事變에 關聯한 平壤 및 北境北方情況 第5回 報告: [別紙] 北境情況, 1900년 9월 22일.

261) 국역 駐韓日本公使館記錄 Vol.15: 二. 各館來信 一·二: (22) 全羅北道 活貧黨의 狀況 視察 調査 復命書 進達 件: [別紙] 復命書, 1900년 10월 28일.

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금과 무기 모집, 민족주의 선전 활동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조립된 이론과 학습된 경험은 필리핀 민족주의 운동의 대내외적 전략과 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1895년 쿠바 사태의 추이를 유심히 관찰한 뒤 1896년 반 스페인 혁명봉기를 일으켰으며, 필리핀 제 1공화국의 헌법은 1895년 쿠바의 헌법을 본뜬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중국 민족주의자들은 혁명과 반식민주의, 반제국주의를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쿠바와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추이를 열심히 따라잡았다.<sup>262)</sup>

박영효는 1899년 이래 쑨원과 밀접한 교류를 통해 중국과 한국의 혁명운동을 공조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 박영효와 쑨원은 자력으로 청과 조선의 전제왕조를 전복시킬 만한 물질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었다. 1900년 8월 박영효는 일본 참모본부로부터 한국에 내란을 일으켜 일본군 파병의 구실을 만들면 정권장악을 돕겠다는 언질을 받았다.<sup>263)</sup> 이미 1896년 2차 일본 망명 직후 박영효는 이준용, 조희연 등 다른 망명정객들과 정치개혁을 위해 강국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간섭을 초래하지만, 일본 정부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를 토로한 바 있다.<sup>264)</sup> 마리아노 폰세는 박영효를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濤)의 집에서 처음 만났다.<sup>265)</sup> 폰세가 쑨원을 만난 것도 이누카이 쥬요시(犬養毅)의 집에서였다는 점<sup>266)</sup>에서, 이 시기 아시아 망명정객 및 유학생들에 대한 일본 정계 및 군부, 재야의 후원과 그 목적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소수의 대륙낭

262) Anderson (2005), p.2, pp.203-204.

263) 윤병희(2004), pp.216-217: 「各領事館機密來信」, 1900년 9월 2일 別紙乙,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1, pp.165-166.

264) 국역 駐韓日本公使館記錄 Vol. 10: 一. 本省來機密公信: (34) [朝鮮國亡命者動靜報告 件]: 義和宮·朴泳孝 來訪者 探聞條 報告, 1896년 7월 7일.

265) Ponce (1965), p.41.

266) Ponce (1965), p.3.

인들을 제외하면 쑨원을 지원한 일본인들의 궁극적 관심사는 중국의 혁명 자체가 아니라, 중국에서 일본의 지분을 늘리고 이권을 확보하는 일이었다.<sup>267)</sup> 그 결과, 쑨원과 중국 혁명당이 일본의 무기 제공에 의존하는 한, 혁명봉기의 성패 또한 일본 정부의 입장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중국 남방에서 내란 조직을 일으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무기를 공급받지 못해 궤멸된 1900년 해주봉기의 실패는 이를 여실히 증명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박영효는 쑨원으로부터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대일의존의 위험성을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박영효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박영효는 외세를 빌리지 않고 조선 내 동지들을 규합하여 정변을 실행할 것을 구상하였다. 이를 위해 박영효는 조선정부 인사들에게 한국의 개혁을 촉구하고 거사에 협조할 것을 부탁하는 한편, 자기 수하의 망명자들을 한국에 보내 현지 동조자들과 함께 지방의 부자들을 몰래 습격하여 자금을 모집하려고 시도하였다.<sup>268)</sup> 국내에서 자금과 인력을 모집하고 외국에서 총기를 매입하려는 박영효의 시도는 모두 중도에 발각되어 실패하지만, 간헐적으로 계속되었다. 1901년이 되면 경상도 지역에서 “다수의 적도(賊徒)가 무리를 지어서 도창(刀槍), 총기를 휴대하고 일본의 군용 전선을 절단하고 일본인 수비병을 공격하는” 과감하고 폭력적인 사건들이 일어난다.<sup>269)</sup>

267) 쑨원의 1900년 혁명봉기에 있어 미야자키 도라조, 즉, 미야자키 도텐(宮崎寅藏: 宮崎滔天)과 우치다 료헤이(內田良平), 히라야마 슈(平山周) 등 현양사(玄洋社) 계열의 대륙낭인들의 활동과 일본 정부 및 대만 총독부의 관여에 대해서는 Marius B. Jensen, *The Japanese and Sun Yat-sen*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1954]), pp.82-104. 우치다 료헤이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한상일, (아시아 연대와 일본제국주의: 대륙낭인과 대륙팽창)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2), pp.254-256.

268) 김현철(2000b), pp.212-213.

269) 국역 駐韓日本公使館記錄 Vol.16: 六. 本省機密來信: (19)慶尙道에서의 賊徒橫行의 件, 1901년 6월 13일.

고종은 그 배후로 박영효를 지목했다. 고종의 첩보에 따르면, 1900년의 거사가 실패한 이후에도 박영효는 꾸준히 부하들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평안도에 밀파하여 토호들에게서 금전을 징발하고 있었다. 1900년에는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러일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러일전쟁에 편승하여 일본의 군사력을 빌리려 했으나, 1901년에는 한국인 스스로 봉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일본인과 외국인들을 살상하면서 소란을 일으키는 중이라는 것이었다.<sup>270)</sup>

박영효는 1901년, 1902년, 1903년에 걸쳐 꾸준히 영남, 호남, 충청도 지역에서 군자금을 모집하고 러시아에서 무기를 매입하려고 계속 시도하였다. 1901년 5월에는 조일신숙을 설립, 한인 유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등 행동대원을 양성하였다.<sup>271)</sup> 쑨원 또한 1902년 7월 퇴역한 일본인 육군장교들을 교관으로 초빙하여 소규모의 혁명군사학교를 세웠다.<sup>272)</sup> 박영효의 혁명 공작에 쑨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하였는지는 밝혀진 바 없으나 쑨원과 박영효의 교류는 계속되어서, 1902년 쑨원이 홍콩으로 가는 길에 고베에 들렀을 때에도 박영효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sup>273)</sup>

## 2. 유길준과 반혁명의 『정치학』

박영효가 이 시기 혁명론의 중심이었다면, 혁명에 반대하지만 개혁을 주장하는 개량론의 중심에는 유길준이 있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망명하여 1907년 귀국하기까지 일본에서 함께 했지만, 분명한

270) 국역 駐韓日本公使館記録 Vol.17: 二. 乙未亡命者 一· 二: (7)朴泳孝의 행위에 대한 意見 具申에 관한 건, 1901년 7월 X일.

271) 윤병희(2004), pp.220-230.

272) 호리가와 테츠오(堀川哲男) 저, 왕재열 편역, (손문과 중국혁명) (서울: 역민사, 1985), pp.59-60.

273) 陳德仁.安井三吉, (孫文と神戸) (神戸: 神戸新聞総合出版センター, 2002), p.60.

정치적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274)</sup> 유길준은 갑신정변을 계기로 김옥균 등의 급진 개화노선을 버리고 민영익의 온건 개화노선을 선택했다. 그는 민영익의 심복이었던 안경수의 추천에 따라 일본통 외교실무자로서 1894년 6월 23일 갑오내각의 외아문 주사로 발탁되었다.<sup>275)</sup> 황현에 따르면, 1895년 박영효의 모반 사실을 고변한 것은 유길준이다. 정교 또한 이 사건이 유길준이 박영효를 쓰러뜨리기 위해 궁중과 협력한 결과라고 서술하였다. 유길준이 박영효 체포령이 내리기 직전 입궐했으며, 김홍집, 박정양, 심상훈 등과 함께 박영효의 실각에 앞장섰다는 스기무라의 기록 또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sup>276)</sup>

독립협회 및 박영효의 체제개혁 구상과 유길준의 정치적 노선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유길준의 미간행 원고 『정치학(政治學)』이다. 『정치학』은 1편의 일부만 1907년 만세보에 게재되었고,<sup>277)</sup> 이하에서 논의되는 2편은 출판된 적이 없다. 『정치학』은 1894년 일본에서 나온 칼 라트겐(Karl Rathgen)의 『政治學』을 세 권 가운데 1권 국가편만 번역한 것이다.<sup>278)</sup> 유길준의 ‘정치학’이 정확히 언제 기술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유길준이 프랑스혁명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 ‘혁명난’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1900년 『법국혁신헌전사』가 번역되

274) 이러한 사실은 “余가 故國에 在하여는 寧히 氏의 反對가 될 것이나 同히 日本에 亡命客이 됨에 互相往來하며 互相慰藉호는디”라는 귀국 직후 유길준의 술회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양보, 1권 1호, 1907년 9월 11일; 이광린, 『개화기의 인물』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3), p.162에서 재인용.

275) 유영익(1990), p.97, pp.118-119.

276) 황현(1996), pp.347-348; 정교(2004), p.96; 국역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권: 六. 朴泳孝不軌事件.

277) 만세보 1907년 3월 7일; 윤병희, (유길준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1998), p.76.

278) Karl Rathgen 著; 李家隆介, 山崎哲藏 譯, (政治學) (東京: 明法堂, 明治27[1894]). 유길준의 (정치학)과 라트겐에 대해서는 김용구(1997), p.247; 김학준, (한말의 서양정치학 수용연구: 유길준, 안국선, 이승만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p.62-63; 김효전,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국권회복과 민권수호)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0), p.592; 정용화, (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한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pp.53-55.

면서 보이기 시작했다. 또, 『정치학』은 유길준 자신의 『서유견문』은 물론, 『미국독립사』나 『법국혁신헌사』보다 학문적으로 훨씬 심화된 논의를 펼치고 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유길준이 『정치학』을 번역한 것은 그가 일본에 망명한 1896년 이후가 아닐까 한다.

『서유견문』에서 고대에서 근세까지의 정체를 천단정체, 압제정체, 귀족정체, 공치정체, 공화정체로 나누었다면, 『정치학』에서는 근세국가의 형태를 세분하여 근세천제(擅制)군주제, 입헌군주제, 대의공화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정치학』은 근세천제군주제의 예로 프러시아 프리드리히 2세의 절대왕정을 든 뒤, 프랑스나 스페인의 천제군주제에 대해서는 ‘근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근세천제군주제는 고대천제군주제와 달리 국가와 군주의 구별, 군주의 법률 구속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근세천제군주제가 혁명과 소란의 시대에는 매우 비판되었지만, 내적으로 통일을 유지하고 외적으로 주권을 지켜야 하는 근세 이행의 과도기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국가 근세화 과정에는 상비관(常備官), 즉, 관료제와 상비군을 설치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고, 봉건적 특권을 폐지하는 과정은 프랑스의 ‘혁명난(革命亂)’처럼 매우 폭력적인 것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근세천제군주제처럼 재정사무가 중앙국고의 관할하에 있으면 매우 유리하다. 또, 근세천제군주제의 군주는 일반사무는 모두 중앙정부의 처리에 위임한다. 근세천제군주제는 주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되 ‘군의(君意)’로 정권의 통일을 꾀하는, 고대천제군주제에서 입헌대의제로 옮겨가는 중간단계의 정체이다.<sup>279)</sup>

이어서 영국적 입헌군주제인 ‘의원제’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그런데 여기에서 청교도혁명에 대한 『정치학』 저자의 평가에 주목할 필요

---

279) (정치학)(1998), pp.74-78.



가 있다.

“1619년의 대혁명(大革命)시기에 크롬웰이 우뚝 일어나 군주정체를 전복하고 공화정체를 창립하여 무단정치(武斷政治)로 일시적 평정을 구차히 흠치게 되었다. 크롬웰의 무리가 일조에 그 뜻을 펼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인민이 스튜어트왕조의 전제정치에 염증을 내어 자유정치를 희망한 데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안목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무단정치로써 전제정치를 대신하니 이야말로 폭력으로써 폭력을 바꾸는 꼴과 같았다. 그러므로 어찌 오래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폭력 때문에 공화정체는 세운 지 겨우 10여년 만에 무너지고 홀연 왕정복고와 동시에 군주정체의 설립을 다시 보게 된다.”<sup>280)</sup>

『정치학』의 저자는 1619년의 청교도혁명이 미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인해 전제정치를 무단정치로 바꿀 뿐 역사를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그 결과 민심은 크롬웰에 다시 반발하여 제임스 2세가 군주로 재등극한 왕정복고가 일어난다. 제임스 2세는 왕가의 특권 강화에 힘쓰다가 의회와 충돌을 빚게 되고 1688년 혁명이 일어난다.<sup>281)</sup>

이어서 프랑스의 입헌군주제가 논의된다. 저자는 대혁명 때 입헌의회가 의정한 1791년 프랑스헌법에 대해서 ‘민주정체’에 가까웠으며, “루소의 민약론과 미합중국의 헌법 법리를 병용”해 만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국혁신전사』의 혁명서사에서도 재현되었듯, 혁명 이후 프랑스의 정국은 내적 통일을 창출하지 못하고 표류한다.

---

280) (정치학)(1998), p.81; 유길준전서편찬위원회 편, (유길준전서 IV 정치경제편) (서울: 일조각, 1971), p.571.

281) (정치학)(1998), pp.81-82.

그리하여 나폴레옹 1세가 등장, “국민은 황제권이 비롯하는 연원이라고 먼저 인정하고 프랑스인민은 계급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영예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였다. 저자는 나폴레옹 1세 시기를 프랑스가 입헌군주국으로 가는 과도기의 근세천제군주제 시기로 파악하는 듯하다. 1814년 루이 18세의 헌법은 전제주의와 공화주의를 결합하여 왕실과 국민 사이를 조화하는 데 그 정신이 있었다. “프랑스의 대혁명이 귀족사회를 일소해 버려 국민으로 하여금 거의 민주적 이론에 기울도록” 한 상황에서, “당시 사회의 세력 중심이 중등이하의 인민에게 있었음에도 정권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약한 귀족으로 하여금 입법권의 기초로 삼았던” 이 헌법은 1830년 혁명을 초래, 의회권한을 확장시키는 헌법 제정으로 이어졌으나, 1848년 다시 혁명이 일어나 공화정체가 재건되고 대통령을 두었다. 그러나 또다시 국민의회 내 당파의 분열과 정국 불안정으로 나폴레옹 3세가 인민의 지지를 받으며 군주정을 복구한다. 이 군주정은 보불전쟁 때 파리 혁명으로 다시 공화제로 바뀌었다.<sup>282)</sup>

프랑스대혁명 이래 프랑스의 정체변동과 헌정사를 기술하는 저자의 태도는 호의적이지 않다. 무엇보다도 혁명 이후 설립된 민주 의회가 통일성 있는 권력을 창출하지 못함으로써 인민의 뜻에 의해 전제군주정으로 회귀하는 양상이 반복되는 것을 비판한다. 프랑스 혁명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정치학』의 원저자 라트젠이 독일 출신이라는 점에 다분히 기인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길준이 이러한 『정치학』을 번역함으로써 라트젠의 의견에 동의를 표시했다는 점이다. 『정치학』의 저자는 이탈리아의 입헌군주제를 설명하면서 나폴레옹전쟁이 유럽 전역에 야기한 개혁과 민족주의 운동의 두 가지 흐

---

282) (정치학)(1998), pp.96-99.

를 지적한다. “나폴레옹의 유린을 입은 이래로 프랑스왕실 및 오스트리아왕실의 압제를 견디지 못하여 병(兵)을 일으켜 항쟁한 적이 무수하였으나.....나폴리에서는 헌법을 폐지하고자 함으로써 왕실이 인민의 축출을 당해 결국 망했으나, 사르디니아에서는 프랑스 헌법을 모방하여 1840년에 헌법을 발포.....이탈리아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었다....임마누엘왕의 어진 덕과 카부르 재상의 재략.....가르발디...1870년의 보불전쟁 때에는 프랑스인을 로마에서 완전 축출하였다.”<sup>283)</sup> 이탈리아는 프랑스 헌법을 모방하여 입헌군주제로 개혁함으로써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프랑스 세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프랑스혁명의 이념과 프랑스는 구별되어 생각된다. 프랑스혁명의 이념에 대한 적극적 혹은 예방적 수용이 정체개혁을 추동한 사례로 프러시아의 입헌군주제도 거론된다. “1830년의 프랑스혁명의 여파가 게르만 제국을 동요시켜 신헌법을 계속 발포케 함으로 입헌대의제를 설립하고 왕권의 전횡을 예방했던 것이다.”<sup>284)</sup>

입헌군주제 항목을 마무리하며 저자는 입헌군주제라고 해도 영국의 입헌군주제와 유럽대륙의 입헌군주제는 상이함을 지적한다. 영국에서는 군주권력과 하등사회가 매우 약하고 귀족류의 상등 및 중등사회가 국가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데 비해, 유럽대륙에서는 군주와 평민의 권력이 각각 강해서 서로 알력하는 상태에 있다. 이 부분에서 유길준은 “군주와 귀족 간에 권력의 균형”, “장래 입헌군주제를 구현하기에 이르려면 군주, 귀족, 평민간의 권력균형” 부분에 스스로 강조의 방점을 첨가하였다.<sup>285)</sup>

---

283) (정치학)(1998), p.102.

284) (정치학)(1998), p.107.

285) (정치학)(1998), p.110-111.

유길준이 라트겐의 『정치학』을 번역한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생각된다. 첫째, 군주권력이 약한 영국보다 군주권력이 강한 대륙국가들의 탈봉건 체제변동 과정이 대한제국의 현실에 더 적절했다. 둘째, 프랑스혁명이 유럽에 미친 영향과 나폴레옹전쟁의 침략성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메이지유신 이후 청일전쟁에 나선 일본이 아시아에 미칠 영향과 대한제국의 대응방법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 결과 유길준은 조선에 적합한 권력균형의 모델을 근세천제군주제, 즉 프리시아식 계몽절대군주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가설은 그가 『보로사국 후레두익대왕 칠년전사(普魯士國厚禮斗益大王七年戰史)』를 번역했다는 데서도 강화된다. 박문관 만국전사 20편으로 1896년 일본에서 출간된 시부에 다모츠의 『七年戰史: フレデリック大王』을 번역한 이 글은 1907년 유길준의 귀국 이후 1908년에야 한국에서 발행될 수 있었다.<sup>286)</sup>

유길준은 또한 봉건 제국 러시아와 근세 제국 일본 양자의 팽창주의에 대응할 역사적 교훈을 폴란드와 이탈리아의 근세사에서 탐색하였다. 18세기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폴란드 분할을 다룬 『파란국 쇠망사(波蘭國衰亡史)』는 아관파천기 러시아의 세력팽창에 대한 경계심이 동기가 되어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박문관 만국전사 10편으로 1895년 일본에서 출간된 시부에 다모츠의 『波蘭衰亡戰史』를 원작으로 한 이 글은, 어용선(魚瑢善) 번역 『파란말년전사』로 1899년 대한제국에 소개되었다.<sup>287)</sup> 그러나 유길준의 수기원고가 남아 있고,<sup>288)</sup> 이때 유길준이 일본에 망명 중이라 실명으로 책을 낼 수 없

286) 澁江保, (七年戰史: フレデリック大王) (博文館, 明 29.5); 유길준 역술, (普魯士國 厚禮斗益大王七年戰史) (廣學書館, 1908.5).

287) 澁江保, (波蘭衰亡戰史) (博文館, 明 28.7); 澁江保(시부에 다모츠) 저, 어용선(魚瑢善) 역, (파란말년전사(波蘭末年戰史)) (搭印社, 1899.11).

288) 유길준전서편찬위원회 편, (유길준전서 III 역사편) (서울: 일조각, 1971), pp.307-477.

었다는 점, 어용선이 일본유학 당시 유길준 측근이었음을 고려하면<sup>289)</sup> 유길준이 망명 시절 번역하여 어용선에게 건넨 것으로 봐야 한다. 또, 유길준의 수기원고가 남아있는 또 다른 서양정치사서는 『이태리독립전사(伊太利獨立戰史)』<sup>290)</sup>이다. 청일전쟁 당시 일본이 나폴레옹전쟁기의 프랑스와 자국을 동일시했다면, 프랑스 침략기에 오히려 국가를 개혁, 통일하고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이태리의 사례에서 유길준은 한국의 미래를 읽으려고 했다.

유길준은 갑오내각의 외아문 주사로서 1894년 10월 의화군이 보병사 정사로 일본에 갈 때 고문관, 사관 초빙, 국채 모집의 세 가지 안건을 맡아 수행하였다. 동경에서 이루어진 외무대신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와의 만남에서 그는 대원군을 위해 변명하는 한편,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 신원이 안 된 국사범을 귀국시켜 기용하도록 일본이 강제하는 것에 반대하였다.<sup>291)</sup> 또, 1896년 7월 초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결성하자, 갑신정변 직후 도미한 서재필을 워싱턴까지 찾아가 귀국을 권고한 당사자인 박영효가 독립협회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데 반해, 유길준은 보부상으로 결성되었던 황국협회를 지지했다.<sup>292)</sup> 유길준은 1896년 아관파천으로 친러정권이 세워지면서 체포령이 내려지자 일본으로 망명하였고, 1907년 8월 16일에야 돌아오게 된다.<sup>293)</sup> 유길준이 박영효, 서재필 등 갑신정변 주역들의 환국에 반대했다는 사실이나 1895년 7월 박영효가 재차 일본으로 망명하게 배후에 유길준의 고변(告變)이 있었다는 기록,<sup>294)</sup> 일본

289) (大韓季年史卷之五) 高宗皇帝 光武三年 己亥: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90) (유길준전서 III 역사편), pp.581-640.

291) 유영익(1990), pp.118-119.

292) 유길준전서편찬위원회 편, (유길준전서 V 시문편) (서울: 일조각, 1971), pp.364-377; 이광린, (유길준: 닫힌 사회에 던진 충격) (서울:동아일보사, 1992), pp.107-108, pp.132-133.

293) 윤병희, “제 2차 일본망명시절 박영효의 쿠데타음모사건”, (이기백선생 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 (하)) (서울: 일조각, 1994), p. 1679.

망명 시절 한국 망명자들 사이에 이준용과, 박영효과, 유길준과가 있다는 일본측 기록<sup>295)</sup>으로 보아도 알 수 있듯, 유길준은 박영효와 정치적 노선이 달랐다. 유길준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 이면에는 대한 제국의 역사적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정치 체제가 ‘근세천제군주제’라는 그의 신념이 존재한다. 그는 체제변혁이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헌법의 제한을 받는 왕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봉건에서 중세로 이행하는 과도기에는 헌법에 근거한 강한 국가가 필요하다는 유길준의 입장은 1900년 그의 체제개혁 구상에서도 드러난다. 같은 시기 일본에 망명 중이던 박영효가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계승 서열을 뛰어넘어 개혁 지향성이 강한 의친왕을 옹립하려 했던 데 비해, 역시 망명자로서 동일하게 ‘역적’ 소리를 듣고 있던<sup>296)</sup> 유길준의 경우 왕위세습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개혁은 고종황제와 황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97)</sup> 1900년 유길준은 일명 ‘혁명혈약서(革命血約書)’ 사건에 연루된다. 이것은 갑오개혁기 관비유학생으로 일본에 유학한 사관생도들이 고종황제와 황태자를 폐위하고 의친왕을 옹립하려다가 발각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고종실록에서 유일하게 ‘혁명’이라는 말이 출현한다.<sup>298)</sup> 1895년 내부대신 박영효 주선으로 일본에 유학, 1899년 11월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6개월간의 견습을 마친 11기 조선인 사관생도 21명에 대해, 한국정부는 1900년 9월 27일 일본

294) 국역 매천야록, Vol. 2, 고종 32년 을미(1895), 24. 박영효 음모발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95)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896년 7월 7일자 병발비 제 160호; 윤병희, “제 2차 일본망명시절 박영효의 쿠데타음모사건”, (이기백선생 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 (하)) (서울: 일조각, 1994b), p.1682에서 재인용.

296) 대표적인 예로, 고종실록 (1896, 건양 1), 2월 25일자의 최익현 상소를 보라.

297) 윤병희(1998), pp.234-235.

298) 고종실록 (1904, 광무 8), 3월 11일.

유학을 명했다가 12월 3일 다시 회국을 명했다. 아관파천 후 이들은 친일본자로 경계받으며, 방치되어 생계가 곤란한 처지였다. 1900년 10월 당국에 탄원하기 위해 위해 노백린, 윤치성, 김성은이 귀국하고 이어서 어담, 김규복 등 6명이 귀국하였다. 이에 일본에 남은 15명(조택현, 장호익, 김홍진, 권호선, 강용구, 방영주, 장인근, 이기옥, 권승록, 김희선, 김형섭, 김교선, 김봉석, 김홍남, 김관현)은 혁명일심회를 조직,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혁명혈약서(革命血約書)를 작성하였다. 첫째, 대황제 폐하를 폐위한다는 것이고, 둘째, 황태자 전하를 폐위한다는 것이고, 셋째, 의친왕을 그 자리에 대신 올려 앉힌다는 것이고, 넷째, 국사범(國事犯)들로 정부를 조직한다는 것이고, 다섯째, 이 일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서슬 퍼런 칼날을 안긴다는 것이다.<sup>299)</sup> 고종을 폐하고 의친왕을 옹립하려는 혁명혈약서 내용은 박영효가 추진하였던 쿠데타 목적과 거의 일치하지만, 이들이 박영효와 접촉하였는지 여부는 밝혀진 바 없다.

이들은 대신 유길준을 찾아갔는데, 유길준은 국내에서 돈과 군인을 모아 황제 폐하가 동가(動駕)하는 때를 틈타 시위(侍衛)를 막고 창덕궁이나 경복궁에 맞아 이어(移御)한 후에 정부를 조직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혈약서를 수정하였다. 수정된 내용은 첫째, 황상(皇上)을 받들어 정부를 조직한다는 것이고, 둘째, 시종 일관하게 협력해서 도울 것, 셋째, 비록 부자 형제간이라도 절대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다.<sup>300)</sup> 1901년 8월에서 1902년 2월에 유길준의 국내 거점이자 자금책이었던 서상집(徐相濽)과 왕래한 서신으로 추정되는 글에서, 유길준은 한국을 둘러싼 러일간 각축이 러일전쟁으로 발전하면 한국은 망한다고 예견하였다. 한국 보전의 길은 일본과 러시아 두 나라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전쟁에 이르지 않게

299) 고종실록 1904년 3월 11일자(양력) 3번째 기사 중 장호익의 공초내용.

300) 고종실록 1904년 3월 11일자(양력) 3번째 기사 중 조택현의 공초내용.

하는 것이며, 일러간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만주지역이 전장이 되도록 유도하되 이 때 한국은 일본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 유길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유길준은 1901년 받은 편지에서, 쿠데타를 성사 시키려면 일본의 협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 “日政府 모르게 獨行한다”는 답신을 보냈다. 혁명혈약서에 서명한 유학사관 15명은 1901년 모두 귀국하였으나, 이 음모사건은 1902년 음력 2월 10일경 탐지되고 1902년 5월 고발, 국내 거주 관련자들이 체포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학사관 15명 가운데 9명(장호익, 조택현, 김형섭, 김희선, 김교선, 방영주, 김홍진, 김영소, 권호선)과 관련자 3명(김석구, 유성준, 김봉석)이 한성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권호선은 옥중에서 병사(病死)하였고, 장호익, 조택현, 김홍진이 『대명률(大明律)』 「적도편(賊盜編)」의 반역을 음모한 자와 공모한 자는 주모자와 추종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율문(律文)에 따라 러일전쟁 개전 직후인 1904년 3월 참형(斬刑)을 선고받았다.<sup>301)</sup>

---

301) 윤병희, “일본망명시절 유길준의 쿠데타음모사건”, 『한국근현대사연구』 제 3집 (1995), pp. 35-52.



### 3절. 혁명개념의 부상

#### 1. 폐쇄시대의 도래

1895년부터 1910년까지 출간된 외국 정치사 단행본 목록 [표 1]을 보면, 1901년부터 1903년 사이의 공백이 눈에 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1899년 8월 대한국국제를 반포하고, 같은 해 12월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강제 해산된 이후, 국외 망명자들을 제외하고는 고종의 황제권에 도전할 국내정치세력이 없었던<sup>302)</sup> 기간과 일치한다. 1908년의 한 신문 지면에서는 독립협회 해산 이후의 이 시기를 일컬어 “정부의 권능으로써 유신당과의 개혁주의를 일체 압제로 위협하여 개혁에 관계되는 언론은 일정 화망에 걸리”던 ‘언권엄축(言權厭縮)’의 ‘폐쇄(閉鎖)시대’였다고 말한다.

“황성신문지는 우리 대한 전국 인민의 대표(代表)하는 신문이라. 그 신문의 창립됨은 거금(距今) 十一年 전에 최초로 우리 국내에서 애국당(愛國黨) 독립파(獨立派)에 유명한 신사 채씨가 발기하여 주식회사(株式會社)와 같이 고금(股金)을 모집하여.....기간 十一年 풍상에 그 역사를 말할진대 비참한 정상도 많이 당하고 분울한 지경도 많이 겪었으나 일일이 매거할 수 없고 다만 시대의 풍조를 따라 조금 변화된 사실을 말하면 제一, 제二, 제三시대으로써 나눌지니

제일시대는 즉 폐쇄(閉鎖)시대라. 그 시대는 어느 때인고 하면 독립협회 해산 이후 시대니 그때는 정부의 권능으로써 유신당과의 개혁주의를 일체 압제로 위협하여 개혁에 관계되는 언론은 일정 화망에

---

302) 도면회, “정치사적 측면에서 본 대한제국의 역사적 성격”, 역사와 현실, Vol.19 (1996), pp.28-29.

걸리어 기●가 자심한 고로 활발한 언론을 조금 염축하는 태도가 있었으나 오히려 오늘 같은 속박은 당치 아니하였고

제二是 즉 과도(過渡)시대니 아·일(러시아·일본) 개전할 전기 몇 해는 개혁의 시기가 차차 오는 고로 정부에서도 풍조를 따라 유신의 사상이 조금 맹등한지라. 그때는 내탕의 금액도 하사하시고 공해의 가옥도 허차하사 언론의 자유를 방임(放任)하였더니

제三시대는 즉 오늘 같은 흑판(黑版)의 시대라. 아일전쟁(러일전쟁)이 점차 결국되매 소위 五조약(을사조약)이란 것이 돌출하는지라. 시일야방성대곡한 소리에 능박한 진면목이 발로됨을 통한이 여겨 일층 강제력으로써 맹장(盲杖)을 내려 언론의 자유를 통금하니 지금은 가히 눈 없고 말 못하는 맹아(盲啞)시대라고도 할지라.”<sup>303)</sup>

이제까지 확인된 바로 ‘혁명’이라는 단어가 신문지면에 처음으로 출현한 것은 1898년 10월 24일 황성신문이다.<sup>304)</sup> 해당 기사는 체제 변혁세력에 대한 국가의 대응 방법을 상, 중, 하 세 가지로 평가하고 있다. 양계초(梁啓超)와 더불어 강유위(康有爲)파의 ‘수재’로 분류되던<sup>305)</sup> 맥맹화(麥孟華)의 ‘회당안치론(會黨安置論)’을 옮겨 놓은 이 글에 따르면, 쑨원(孫文)이 이끄는 청국의 회당은 기존에 내란을 일으키던 무리와 다르다. 이들은 “근세 그리스의 자립과 이탈리아가 통일한 예와 미국의 합중대의를 원용하여 천하에 선포(近世希臘의 自立과 伊太利의 統一의 例와 北米合衆의 大義를 引援하야 天下에 宣布)”하는 “개진의 설을 주창하는 자(開進之說을 唱하는 者)”, “구미정치를 강구한 자(歐米政治를 講究하는 者)”라는 점에서 “구미 여러

303) 해조신문 1908년 5월 6일, 「황성신문지의 흑판논설」.

304) 황성신문 1898년 10월 24일, 「淸國志士麥孟華氏」.

305) 황성신문 1900년 8월 8일, 「淸國朝野人物(前號續)」.

나라의 혁명당, 변정당과 근세 일본의 존양당(歐米列國 革命黨 變政黨과 近世日本の 尊攘黨)”에 유사한 근대적인 정치변동세력이다. 이 회당을 다루는 국가의 대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상책은 “군민이 덕을 일치시킴으로써 반란하려는 마음을 나라를 보전하려는 마음으로 만들고 당에 반대하는 무리를 변화시켜 유신의 원훈이 되도록(君民이 一德호야 反亂之心을 變케호야 保國之心을 作케호며 反黨之衆을 化케호야 維新호 元勳이 되게)” 한 일본 메이지 천황 유형이다. 중책은 “국가의 습속과 정치를 일신해서 과거와 학교와 관제와 상무와 해군과 육군 등 좋은 법규를 구미에서 취해서(國俗과 政治를 一變호야 凡科擧와 學校와 官制와 商務와 海軍과 陸軍等嘉法懿規를 歐米에서 取호야)” 문물을 개화하지만 의원법, 신문조례, 정당 회합 등 정치적 자유는 일체 제한하는 러시아 피터대제 유형이다. 맥맹화의 통찰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정치의 목적은 “국세(國勢)를 강대하게 하는 데에만 있고 민심(民心)의 이반을 통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책이다. 하책은 회당을 병력으로 압제해서 화를 초래함으로써 다른 강국의 간섭을 받는 터키 유형이다. 맥맹화는 이어서 각각의 방법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한다. 상책을 따르면 “國이 安호고 勢强호며”, 즉, 국가가 안정되고 사회세력도 강해진다. 중책을 따르면 “其國이 强호나 其勢危”, 즉 국가는 강하지만 사회세력이 안정되지 않는다. 하책을 따르면 “其國이 弱호고 其勢危”, 즉 국가도 약해지고 사회도 혼란하다.

황성신문의 이 기사에서 ‘혁명’이라는 말은 청나라 지식인의 입을 빌어 청나라 회당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다. 그러나 급진적 정치변혁을 원하는 사회세력을 순치시키는 방법은 입헌군주제가 최선, 계몽군주제가 차선, 전제군주제가 최악이고, 특히 마지막 방법은

외국의 간섭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 기사의 내용에서 1898년 10월 현재 대한제국의 정치상황을 연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만민공동체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독립협회를 해산시킨 고종은 이 가운데 가장 ‘하책’을 선택한 셈이다.

1898년 12월 만민공동회가 강제 해산된 뒤 개혁 세력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더욱 강화되었다. 1898년 12월 개편된 중추원의 의관이 되었다가 박영효를 천거하는 데 거수했다는 이유로 면관된 이승만은, 강성형의 심문 과정에서 잡혀 들어갔다가 무혐의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옥에 갇혀 있다가 탈옥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100대의 태형과 종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sup>306)</sup> 이 때 법무대신서리와 평리원 재판장이 독립협회해산에 앞장선 조병식과 홍종우였던 것으로 보아, 이 시기의 모반사건들이 독립협회 회원을 처벌하기 위한 빌미로 십분 활용되었음을 짐작하게 된다. 1900년 2월에는 박희택이 일본에 있는 박영효와 인편으로 연락하려 했다는 죄로 《대전회통(大典會通)》 금제조(禁制條)의 「나라의 사정을 누설한 자」의 법조문에 의해 유배 3년형에 처해졌다. 또, 강성형은 박영효와 모의하여 궁궐에 침입, 정부를 전복하려고 기도했다는 죄로 《대전회통》 추단조(推斷條)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 임금을 배반하여 정리상 매우 유해한 것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자는 사형에서 한 등급을 감한다.」는 율을 적용하여 종신 유배에 처해졌다.<sup>307)</sup>

이 시기 외국 근세 정치변동에 관한 지식을 가지게 된 유학생들은 체제비판 및 변혁세력으로서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이미 1880년대

---

306) 독립신문 1898년 12월 1일, 「중추원 의관」; 1899년 1월 5일, 「정부주본」; 1899년 1월 13일, 「재판소문」; 1월 25일, 「법부회답」; 1899년 2월 1일 「감옥유탈」; 1899년 2월 2일, 「엄핵 조율」, 「감옥서 사단」; 1899년 8월 2일, 「선고서」; 고종실록 (1899, 광무 3) 7월 27일.

307) 고종실록 (1900, 광무 4) 2월 9일.

김옥균과 박영효에 의해 주도된 유학생 파견 사업으로 일본에 갔던 유학생 출신 중 상당수가 갑신정변에 참가한 전례가 있었다. 정변 직후 김옥균과 박영효가 일본으로 망명하자 조선 정부는 재일 유학생들을 귀국 조치했으며, 그 중 일부는 돌아와서 처형되었다.<sup>308)</sup> 이후 10년간 중단되었던 유학생 파견 사업은 갑오개혁기에 재개되었으나, 1896년 2월 아관파천 뒤 조선 정부는 일본 유학생 파견을 일체 중단하였다. 이후 정부는 갑오개혁기에 파견된 관비 일본 유학생들에게 대거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잔류 유학생들에 대해 학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압박했다. 1898년 독립협회의 활동으로 여론이 비등하게 되자, 국내 각급 학교 졸업생들과 함께 유학생 출신자를 정부에서 수용하자는 제안이 의정부 회의에서 재가받고 관리임용규칙으로 공포되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 그러던 중, 1902년 4월 일본 망명 중인 유길준과 귀국한 유학 사관생도들의 모반 혐의가 탐지되면서 1903년 2월 모든 관비 일본 유학생들에게 일제 귀국 명령이 내려졌다.<sup>309)</sup>

## 2. 혁명세계의 가시화와 혁명의 개념화

1900년까지의 혁명개념이 서양사 번역서 단행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면, ‘폐쇄시대’, 즉, 1899년에서 1904년 사이에는 신문지면, 특히 황성신문을 중심으로 세계 각처의 혁명 소식이 전해졌다. 1898년에는 민간 최초의 한국인 발행 일간지인 제국신문, 매일신문, 황성신문이 창간되었다. 다른 신문들이 모두 순한글인데 비해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한 황성신문은 특히 양반과 유생 등 지식인 독자들을

308) 김기주, “개항기 조선정부의 대일유학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Vol.29 (2004), pp.134-135; 이광린, “개화초기 한국인의 일본유학”, (한국개화사의 제문제) (서울: 일조각, 1986a), pp.57-62.

309) 김기주, “아관파천 후(1896~1903) 한국정부의 유학정책”, 역사학연구 Vol. 34 (2008), pp.111-112

겨냥해 만들어졌다. “국한문을 혼용하여 시정(時政)을 공격하고 인물을 평가하는 등 아무 기탄없이 지적하므로 사방에서 앞을 다투어 구독하였다.”라는 매천 황현의 평처럼 황성신문은 광범위한 식자층에서 구독되었고, 독립신문, 제국신문, 매일신문이 모두 1900년에 폐간된 반면, 1910년까지 계속 발행됨으로써 대한제국기 여론의 향방에 큰 영향을 끼쳤다.<sup>310)</sup> 대한제국기 혁명 기사는 황성신문 지면에 집중되어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 까닭은, 황성신문이 독립협회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운영진과 참여자 대다수가 독립협회의 중심인물들이었고,<sup>311)</sup> 영국의 로이터통신과 계약을 맺어 전보를 받아보는 등 외국과 직접 연결된 다양한 정보원을 가지고 있었으며,<sup>312)</sup> 정치 문제에 관심이 많은 남자 지식인들이 주로 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시기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변화는 세계 곳곳에서 혁명이 임박했거나 혁명이 일어났다는 기사들의 대거 출현이다. 스페인에서 ‘민란(民亂)’이 ‘폭기(暴起)’하여 혁명이 임박하였다<sup>313)</sup>,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결국 ‘혁명폭동(革命暴動)’이 일어났다<sup>314)</sup>, 서인도 군도의 아이티 섬에 혁명당이 봉기했다가 포박되었다<sup>315)</sup>, 아프가니스탄에서 왕의 죽음을 계기로 혁명이 일어났다<sup>316)</sup> 등 대한제국에서는 그 지명조차 생소할 나라들의 혁명 소식이 지면을 통해 전해졌다. 혁명은 먼 곳의 이야기만은 아니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혁명 조짐도 연

310) (매천야록)(1996) 광무 2년 2월조, p.423; 이광린, “황성신문 연구”, 동방학지, Vol.53 (1986b), pp.10-12에서 재인용.

311) 신용하(1981[1976]), p.44, 주) 117.

312) 차경애, “한국인의 의화단운동 인식 및 이를 통해서 본 세계인식”, 동양사학연구, Vol. 84 (2003), p.62.

313) 황성신문 1901년 2월 26일, 「西班牙의 騷擾」.

314) 황성신문 1901년 10월 14일, 「西班牙紛擾」.

315) 황성신문 1901년 10월 12일, 「하이지 共和國의 反亂」.

316) 황성신문 1901년 11월 1일, 「阿富汗의 內亂」.

일 전해졌다. 1900년 중국에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자, ‘완고한 배외의 념’으로 소요(騷擾)하는 의화단과 ‘정부혁명’을 목표로 하는 ‘회당’은 다르다는 사실,<sup>317)</sup> 쑨원이 이끄는 혁명당 흥중회(興中會)가 “제국을 폐하고 중국을 순연한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거병(擧兵)을 밀모하다가 발각된 일<sup>318)</sup>이 보도되었다. 1905년 혁명으로 가는 도중에 있던 러시아의 혁명 관련 기사도 매우 빈번하다. 1901년 1월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된<sup>319)</sup>러시아 혁명 주도세력의 범위는 1902년 6월에는 노동자, 육군병사, 여학교 생도들로 과급되어 황족과 귀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무비혁명(武備革命) 기풍에 감염한” “프랑스혁명을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진화한다.<sup>320)</sup> ‘불온 행동’은 노동자, 농민, 군 내부로까지 확산되어, 육군사관이 혁명소설을 열독하고 부하들과 정치를 담화하는 등 군대 소란을 선동하다 발각되어 시베리아로 방출되었다는 기사도 출현하기에 이른다.<sup>321)</sup>

각국 정부의 혁명세력 탄압 또한 내내 주요기사로 다루어졌다. 1899년 2월 28일자 독립신문은 “청국정부에서 자객을 보내어 일본에 있는 혁명당 괴수 강유위씨를 죽이려고 하고, 프랑스 정부에서도 술나를 죽이려고 하고, 영국정부에서는 마해드를 죽이려고 하고 미국 정부에서는 스페인과 약조하여 아귀날도를 죽이려고 한다.”<sup>322)</sup>는 기사를 실었다. 1899년 7월 3일자 황성신문 기사는 광둥에서 혁명운동을 기도한 이래로 만주정부가 쑨원(孫逸仙)을 매우 혐오하여, 쑨원이 런던에 갔을 때 중국공사관으로 유인, 구금해서 살해하려고 기도했으나 영국정부의 항의로 영국정부에 양도해야만 했음을 적고

317) 황성신문 1900년 6월 13일자, 「義和團性質」.

318) 황성신문 1900년 7월 25일, 「清國의 秘密結社」.

319) 황성신문 1901년 4월 8일, 「俄國의 革命運動」.

320) 황성신문 1902년 6월 2일, 「俄國革命密使의 捕縛」.

321) 황성신문 1903년 10월 7일, 「俄國內의 紛亂」.

322) 독립신문 1899년 2월 28일, 「자객소문」.

있다. ‘혁명운동(革命運動)’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한 이 기사에는 쑨원이 일본에 온 이래 1897년에만 17명의 자객을 만주정부가 보냈고, 중국인 5명을 이번에 또 일본에 보낸다는 소식이 덧붙여져 있다.<sup>323)</sup> 1900년 3월 20일자 독립신문에는 서태후가 리홍장에게 “강유위, 양계초 기타 혁명당 유력자”<sup>324)</sup>의 조상 무덤을 파헤치라고 명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러시아 정부 또한 학생들에 대한 퇴학, 시베리아 유형, 총살, 경찰과 군대 출동, 대량 살상과 체포 등 혁명세력에 대해 “압제방침으로 일관”하고, 혁명 관련 현황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를 극심하게 통제한다.<sup>325)</sup>

대한제국이 ‘폐쇄시대’를 통과하고 있던 시기에 중국에서도 개혁당이 설 자리는 전혀 없었다. 무술개혁이 실패로 끝나고 개혁세력이 처형과 망명으로 궤멸된 뒤, 서태후가 정권을 잡은 청 정부는 더욱 보수화되고 경색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1890년대 말부터 혁명당이 계속 봉기를 시도했지만 모두 진압되었고, 정부에서는 ‘완고당(頑固黨)’이 득세하여 채용시험 성적을 무시한 채 신학문에 관계없는 자만 채용되었다.<sup>326)</sup> 청국 정부는 청국 유학생에게 ‘혁명의 조후(兆候)’라 하여 단발과 양장을 금지시키기까지 했다.<sup>327)</sup> 서태후는 개혁당을 복멸시키기 위해 군사를 양성하는 한편 러시아에 조력을 의뢰했고,<sup>328)</sup> 이에 따라, 서태후가 살아있을 때는 위력으로 화란을 억제하고 방지할 수 있지만, 일단 서태후가 죽으면 친왕들의 정쟁으로

323) 황성신문 1899년 07월 03일, 「淸國刺客復渡」.

324) 독립신문 1900년 3월 20, 「지나개혁자의 굴모」.

325) 황성신문 1901년 4월 8일, 「俄國의 革命運動」; 1901년 5월 18일, 「革命歌와 自由萬歲」; 1902년 3월 18일, 「俄國大學生の 騷動」; 1902년 4월 18일, 「俄國大學生の 騷擾」; 1902년 5월 20일, 「俄國革命黨의 氣焰」; 1902년 6월 6일, 「俄國革命密使의 捕縛」; 1903년 10월 7일, 「俄國內의 紛亂」.

326) 황성신문 1903년 8월 10일, 「頑固黨의 得勢」.

327) 황성신문 1902년 6월 16일, 「淸國留學生의 斷髮禁止」.

328) 황성신문 1900년 3월 26일, 「淸國形勢危急」.



정부가 분열되고 위험한 사상, 즉 혁명사상이 만연함으로써 러시아가 청국을 점령하리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sup>329)</sup>

혁명운동에 대한 정부의 진압이 강경해진 만큼, 혁명세력도 보다 파괴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조직하는 모습을 보인다. 1901년 4월 8일자 기사에는 대학생이 대신의 사저에 방문하여 권총으로 저격한 사건이 보도되었고, 1902년 4월 24일과 5월 20일에는 러시아 내부대신에게 혁명세력으로부터 암살 위협 편지가 배달되고 암살이 실행된 기사가 실렸다.<sup>330)</sup> 더불어 혁명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동맹파업’과 ‘동맹정공(停工)’, ‘동맹파공(罷工)’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다. 이것은 이 시기 혁명개념에 근대국가의 자본주의적 속성에 대한 인식과 비판이라는 새로운 의미 층위가 추가되었음을 시사한다. 1901년 6월 19일, 이탈리아에서 고용주와의 임금문제로 광부들의 동맹파공이 통 진정되지 않고 각지에 만연될 조짐이 보인다는 기사가 보이고,<sup>331)</sup> 1902년 6월 2일자 신문은 러시아 실업계의 동맹파업 소식을 전하고 있다.<sup>332)</sup> 1903년 8월 10일 기사는 코카서스 지방에서 노동자의 ‘동맹정공’과 철도 파괴, 공장 방화. 군대 피살을 보도하였다.<sup>333)</sup> 10월 20일에는 러시아에서 군대와 노동자가 항쟁을 일으켜 지방장관과 대관 십수명을 암살하고 관청을 파괴했으며, 8월의 동맹정공자 숫자가 80만에 달한다는 기사가 보인다. 고용주가 군대의 후원을 등에 업고 정공자들을 심하게 학대하기 때문에 소란이 진정되더라도 다시 ‘대란’이 야기될 듯싶다는 관측이 덧붙여 있다.<sup>334)</sup> 이와 관련하여, ‘사회당’과 ‘사회주의’라는 말이

---

329) 황성신문 1903년 9월 22일, 「亞細亞亡國論」.

330) 황성신문 1902년 4월 24일, 「俄國內의 不穩」.

331) 황성신문 1901년 6월 19일, 「伊太利의 不穩」.

332) 황성신문 1902년 6월 2일, 「俄國革命의 兆」.

333) 황성신문 1903년 8월 10일, 「俄國의 革命暴動」.

334) 황성신문 1903년 10월 20일, 「俄國內의 騷亂」.

1901년 등장한다.<sup>335)</sup> ‘anarchist’의 번역어로 보이는 ‘무권당(武權黨)’이라는 표현은 1899년 처음 사용되었고, ‘무정부’, ‘무정부당원’이라는 말이 1902년부터 보이기 시작한다.<sup>336)</sup>

정권의 정당성이 떨어지고 사회가 분열되어 있을수록 국가 재원은 줄어들고 경찰과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안보 비용은 증가한다. 이 시기 전제왕정 국가들이 무분별한 외채 도입, 화폐 발행, 식민지 수탈 등의 무리한 재정정책으로 혁명을 유발한 사례들이 기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1900년 2월 포르투갈 정부는 문란한 정치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 능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관리비용도 급여하기 어려워지자 공채(公債)를 발행, 영국과 독일에 차관 담보로 해관세를 제공하고 포르투갈령 식민지를 할양하기로 하는 밀약을 체결하였다. 기사는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정부 전복과 혁명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서 포르투갈이 협상 발표를 지연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sup>337)</sup> 1902년에는 페르시아 정부가 “러시아에서 외채를 모집함으로 인해 발흥한 혁명운동”이 전국적으로 만연하여 정부가 매우 위중한 형편이라는 기사가 보인다. 기사에서는 페르시아의 고위관료가 페르시아 북방의 토양을 러시아에 할양한 데 이어 남방의 토지도 매매하려 한다는 풍문이 혁명운동의 한 원인이었다고 지적된다.<sup>338)</sup> 1903년에는 러시아가 거액의 국채로 경찰력과 해군력을 증강했는데, 러시아가 아직 전제정치를 유지하고 ‘대혁명의 참극’을 맞지 않은 것은 프랑스의 자금 원조 덕분이지만, 이제 더는 차관도 못하고 증세도 못해서 곤란해질 것이라는 기사가 보인다.<sup>339)</sup>

335) 황성신문, 1901년 5월 18일, 「革命歌와 自由萬歲」; 황성신문 1901년 6월 19일, 「伊太利의 不穩」.

336) 황성신문 1902년 5월 9일, 「伯林無政府黨員의 活動」; 1903년 5월 4일, 「巴婁幹事件」.

337) 황성신문 1900년 2월 28일 「英德葡協商」

338) 황성신문 1901년 11월 1일, 「波斯의 革命運動」.

339) 황성신문 1903년 9월 18일, 「俄國의 財政」.

이와 관련하여, 1903년 4월 23일자 논설이 주의를 요한다. 명백히 동년 3월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발표한 ‘태환금권조례(兌換金券條例)’<sup>340)</sup>를 비판할 의도로 작성된 이 글에서, 논자는 불환지폐(不換紙幣; soft money) 발행의 폐해를 논하기 위해 대혁명 직후의 프랑스를 예로 들고 있다. 1789년 프랑스혁명 때에 정부재정이 매우 곤란해지자 국회위원들이 지폐 발행 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후 정부의 무분별한 지폐 발행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경화(硬貨; 태환화폐; hard money)가 소진되고 지폐는 가치가 폭락하였다. 정부가 심히 곤란해서 만약 경화를 저장하고 유통하지 않는 자는 ‘자유의 공적(自由之公賊)’이라고 엄령을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 때 도산하고 망한 프랑스 인민이 비일비재했다.

내란의 위협은 국가의 대외정책을 제약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국제정세는 혁명의 시기와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위에서 프랑스의 차관으로 러시아가 혁명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국가들의 동맹 관계는 혁명에 영향을 미치고, 혁명전쟁은 혁명에 찬성하는 국가들과 반대하는 국가들 간에 새로운 전선을 생성함으로써, 기존의 동맹관계를 변화시킨다. 19세기 나폴레옹전쟁 이래 국가들 간에 반혁명 연합군이 결성되었다면,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20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혁명운동의 양상은 혁명세력의 국제적 공조와 연대이다.

1901년 9월에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혁명당이 양국의 동지를 규합하여 동시에 봉기하여 베네수엘라국 상비병과 전쟁의 기미가 있으며, 콜롬비아 정부도 혁명당 박멸에 진력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인다.<sup>341)</sup> 1903년 8월에는 러시아 영사가 살해된 발칸반도의 반란

340) 황성신문 1903년 3월 27일, 「兌換金券條例」; 이승렬, “광무정권의 화폐·금융 정책과 대한천일은행의 영업”, 한국사연구, Vol.123 (2003) pp.95-137.

소식과 혁명세력의 연혁이 게재되어 있다. 1895년 7월, 80명의 마케도니아 장정으로 이루어진 ‘복구군(復仇軍)’은 마케도니아 경계를 넘어 터키에 진입해 수비병을 격퇴, 전선(電線)을 절단하고 불가리아죄수를 석방하며 제1차 ‘전쟁’에 성공했다. 그 후 ‘군대’를 정돈하여 ‘혁명군’의 본부를 차리고 1899년에 다시 거병하여 한 지역을 접수, 혁명 거점을 마련하였다. 마케도니아인, 불가리아인, 알바니아인으로 이루어진 혁명군의 ‘개전계획(開戰計劃)’은 첫째, 각 지방에 연속 ‘소전(小戰)’을 일으켜 마케도니아와 불가리아 양 국민의 연합을 도모하는 것, 둘째, 이와 같이 발칸의 분요를 점차 만연하게 하여 구주열강의 주의를 여기에 모이게 하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각 지방의 혁명군 세력이 의외로 공고하여 터키 대군도 용이하게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sup>342)</sup>

1903년 4월의 기사는, 마케도니아 혁명당 운동으로 인해 1897년 그리스 터키 전쟁 후 발칸반도에서 유지되어 오던 러시아-오스트리아-터키 협조체제가 변화하는 모습을 서술한다. 불가리아의 수도에 사는 마케도니아인들을 중심으로 혁명 봉기의 움직임이 보이자, 혁명을 원하지 않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는 연합하여 터키의 마케도니아 개혁을 권고하고, 영국과 프랑스 또한 이를 승인한다. 그러나 터키는 불가리아정부의 마케도니아 혁명당 비호를 분하게 여겨 군비를 갖추고, 불가리아 또한 응전할 태세를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와 오스트리아도 전쟁을 준비하게 된다. 또한, ‘마케도니아위원’이라는 혁명조직은 이들이 제시한 개혁안에 불평을 품어서 러시아의 위력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혁명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같은 기사에서 마케도니아에 이웃한 알바니아에도 ‘폭거’가 있어 터키병을 습격하

341) 황성신문 1901년 9월 17일, 「南美의 戰機」; 1901년 9월 20일, 「南美兩共和國 衝突의 主因」.

342) 황성신문 1903년 8월 22일, 「巴婁幹의 叛亂」.

고, 개혁안을 제시한 러시아 영사가 저격당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처럼 혁명이 발칸반도 전역으로 전염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러시아는 비엔나정부에 ‘급행’하여 오스트리아 정부와 대책을 의논중이라, 금후 형세가 어떻게 변할지 매우 주목을 요한다는 말로 기사는 끝난다.<sup>343)</sup> 바로 다음 달에, 마케도니아 반란 세력이 더욱 강해져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양국에서 제출한 개혁안은 이미 효력이 전혀 없다는 발칸반도 혁명 속보가 이어진다. 특히 이 기사는 영국 정부가 마케도니아 사태에 개입하기로 결정했음을 전하고 있다.<sup>344)</sup>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분점한 유럽 열강은 자국의 식민지 이권이 걸린 지역 국가들의 혁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혁명세력을 조속히 진압하도록 해당 국가의 정부에 압력을 넣거나, 혁명폭동에 의한 인명 및 재산 손실을 구실로 불평등조약에 의거하여 자국 병력을 출동시켜 더 많은 이권을 얻어냄으로써 혁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와 반대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혁명세력을 부식하여 향후 해당 국가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거나, 혁명 원조를 구실로 군사력을 출동시켜 식민지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 1899년 3월 18일 기사는, 문호개방주의가 ‘이기적이고 교묘한 말(利己上誇言)’에 불과하고, 영국이 중국의 혁명당과 ‘무권당(武權黨)’을 선동하여 중국에서 자국의 이익을 꺾고 있다는 러시아 신문의 비판을 싣고 있다.<sup>345)</sup> 이후 러시아는 중국에서 의화단사건이 발발하자 ‘단비(團匪)’가 만주와 요동까지 미쳐서 만주철도의 부설을 위협하지 않도록 청국 정부에 병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정치상, 경제상 이익선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인다.<sup>346)</sup> 영

343) 황성신문 1903년 4월 24일, 「東歐의 風雲」.

344) 황성신문 1903년 5월 4일, 「巴婁幹事件」.

345) 황성신문 1899년 3월 18일, 「俄國新聞의 英國對淸策論」.

국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혁명세력과 왕실군 간에 무력충돌이 일어나자 영국령으로 싸움이 번지지 않도록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경고하고 있다.<sup>347)</sup> 한편, 베네수엘라의 혁명전쟁이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이자 이로 인해 상업적 손실을 입게 된 나라들이 “혁명군 정벌”을 위해 해군함을 증파하는 등 무력시위를 하며 군대출동을 ‘협박’한다는 기사도 눈에 띈다.<sup>348)</sup> 1903년 6월 16일 기사는 미국과 콜롬비아국이 체결한 파나마운하조약이 미국에서는 상의원의 가결로 통과되었으나 콜롬비아 의회에서는 파행을 거듭한 끝에 부결됨으로써, 콜롬비아 대통령이 사직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미국에 운하 감독권 영구 이양 불가, 보상금액 부족, 미국의 돈으로 현 정부가 공고해지는 것 반대 등 반대파와 혁명파가 내세운 운하조약 반대이유는 한 지역의 이권을 둘러싼 해당 국가의 정부, 혁명파, 외국 정부의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잘 보여준다.<sup>349)</sup>

러일전쟁을 즈음하여 러시아 정부와 혁명당의 동향에 대한 기사들은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 모두에게 있어서 국제 변수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러시아가 내일 개전하면 모레에는 전국에 혁명이 야기”<sup>350)</sup>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도는 가운데, 1903년 후반에 러시아 정부는 국내 병력을 감소시킬 경우 혁명당에 의한 내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러일관계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인다.<sup>351)</sup> 반대로 혁명당은 전쟁을 정부 전복과 혁명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러일전쟁 발발 두 달 후에 러시아 대학생 400명은 “러시아 혁명당이 전투준

346) 황성신문 1900년 7월 4일, 「俄國對淸政策」.

347) 황성신문 1901년 11월 1일, 「阿富汗의 內亂」.

348) 황성신문 1903년 8월 17일, 「南美的 革命戰爭」.

349) 황성신문 1903년 6월 16일, 「運河條約과 古倫比亞」.

350) 황성신문 1903년 10월 20일, 「俄國內의 騷亂」.

351) 황성신문 1903년 06월 18일, 「俄國內亂의 兆」; 1903년 10월 07일 「俄國內의 紛亂」; 1903년 9월 1일, 「俄國官界의 事局觀察」; 1903년 12월 12일, 「俄國內政의 近情」; 1904년 1월 9일, 「俄國軍隊의 革命運動」.

비를 행하여 러일전투를 변화시켜 러시아 국민과 러시아 정부의 전투를 일으키기를 기대한다. 러시아의 제정(帝政)을 절멸하자.”는 취지의 의정서를 작성했다.<sup>352)</sup> 러일전쟁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자 본국에서는 정치상 분요(紛擾)가 극심해지고, 혁명당은 러시아 정부를 완전히 전복시키기 위해 러시아의 군사력과 재정이 고갈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sup>353)</sup> 이것은 러시아정부의 병력동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정부는 혁명운동 발발의 우려가 있는 모스크바와 폴란드 등 공업지방에서는 병력을 동원하지 않기로 결정한다.<sup>354)</sup>

이 시기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당은, ‘국제사회주의’라는 용어가 시사하듯,<sup>355)</sup> 국제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1904년 4월 29일 기사를 보면, 러시아 ‘불평당’ 중에 원래 급진파와 점진파가 있는데, 급진파는 러일 전쟁을 기회삼아 정부를 전복하여 정치의 개선을 단행하자고 하는 반면, 점진파는 전쟁의 원인이 러시아 정부의 ‘정치적 불량’으로 야기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정부를 전복하여 내치의 개선을 도모해서는 안 되고 전쟁이 끝난 뒤에 단행하자고 한다고 되어 있다.<sup>356)</sup> 1904년 러시아 사회당원이 다수 거주하는 프랑스 파리에서 ‘사회평민파’와 ‘사회혁명파’가 제 3국의 러일전쟁 참전에 반대하는 항의 대회를 열었다. 60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사회평민파 대표자는 러시아 정부가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를 개시하고 군비감축설을 제창하면서 일면으로 만주침략을 실행하여 개전의 단서를 제공한 것이 덕의를 몰각한 행위라고 비난한다. 일본은 ‘방국을 유지’한다는 전쟁의 명분이 있지만, 러시아는 ‘전제정치를 계속’하는 것이 전쟁의 진짜 목적이란면서, 이들은 러시아 정부가

352) 황성신문 1904년 4월 25일, 「俄國의 革命黨」.

353) 황성신문 1904년 7월 2일, 「俄國敗報와 革命黨」.

354) 황성신문 1904년 8월 9일, 「動兵과 社會黨」.

355) 황성신문 1904년 3월 31일, 「革命黨暴發의 希望」.

356) 황성신문 1904년 4월 29일, 「俄國의 革命黨」.

‘세계의 안녕평화’를 깨뜨렸다는 탄핵안을 결의하였다.<sup>357)</sup>

러일전쟁은 러시아 본국의 사회주의 혁명 뿐 아니라 러시아령 폴란드와 핀란드 등지에서 독립혁명의 적기로 인식되었다. 이 때 러시아 혁명당은 이들 식민지의 혁명당들과 연대하여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들 식민지에서 ‘비밀순검’ 등 경찰력을 강화하고 피지배민을 전쟁에 동원하려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혁명가를 외치며 폴란드 독립을 외치고 경찰 감시를 비난한다.<sup>358)</sup> 1904년 4월에는 러시아 혁명당이 폴란드를 독립시키고 러시아 군함을 파괴하려고 모의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고,<sup>359)</sup> 8월에는 폴란드 수도에서 “혁명할 조후(兆候)가 명백”하므로 폴란드 관찰사가 러시아 황제에게 계엄령 포고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sup>360)</sup> 비슷한 시기에 핀란드에서는 러시아총독이 피살되고, 스웨덴 혁명당원 일대대가 총독부를 포위하고 관리 18명을 살육, 경찰서를 파괴하는 ‘반란’이 일어났다. <sup>361)</sup> 1월 25일 기사에서는 러시아 혁명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사회혁명당, 폴란드 사회당, 리다웬 사회당, 폴란드 사회민주당(社會民政黨), 게울키 사회혁명당, 아메나야 사회혁명당, 폴란드 국민당, 핀란드 극렬반향당(芬蘭劇烈反抗黨), 러시아 민정입헌당(俄國民政立憲黨)이 “일, 전제정부를 전복하고 핀란드 헌법을 압제하는 모든 정령(諸政令)을 철폐할 것, 이, 전제정부를 폐하고 총선거권을 허여할 민정(民政)정부로 대체할 것, 삼, 이 민족에 대한 강제법령을 철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언서를 발표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sup>362)</sup>

---

357) 황성신문 1904년 5월 11일, 「日俄戰爭과 俄國社會黨」.

358) 황성신문 1904년 4월 9일, 「俄領波蘭의 紛擾」.

359) 황성신문 1904년 4월 28일, 「陰謀顯露」.

360) 황성신문 1904년 8월 12일, 「俄國의 不穩」.

361) 황성신문 1904년 8월 25일, 「芬蘭의 叛亂」.

362) 황성신문 1905년 1월 25일, 「俄國의 八大革命黨」.



한편, 1903년부터 일군의 기사는 형식적인 헌법이 아닌 진짜 헌법의 실행에 대한 인민의 욕구가 혁명을 추동하는 원인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 한 예로, 온두라스 대통령이 선거 때가 되었는데도 사직하려 하지 않자 혁명군이 봉기, 수령 보니라 장군을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내전이 발발한 1903년 중앙아메리카의 혁명 기사는 헌법이 지켜지지 않는 명목상의 ‘공화국’의 파행을 보여준다.<sup>363)</sup> 세르비아에서는 혁명란이 일어나 국왕과 황후가 자살하고 수상, 육군 대신과 국왕의 형제자매와 기타 친척 수명이 피살당했다. 혁명당이 선언서를 반포하여 구헌법을 실시할 것을 고시하고 이전 국왕이 해산시켰던 국민의회가 다시 소집되었는데 민심은 조금도 격동하는 모습 없이 신임대신을 모두 환영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자살한 국왕이 지난 4월경에 칙령을 발하여 1901년 4월 19일에 윤택한 헌법을 폐지하고 원로위원을 경질하며 대의원의원을 해산시킨 후에 다시 칙령을 발하여 신헌법을 반포했기 때문이다.<sup>364)</sup> 1904년 모스크바에서는 학생들이 ‘혁명적 시위운동(革命的示威運動)’을 벌여 경찰 및 군대와 충돌하고 체포되는 가운데, 600여명의 노동자들이 연설회를 열고 “헌법이 필요하다”고 결의했으며, “러시아의 정체(政體)로는 인민의 안전을 보증하기 불능하다” 주장이 러시아 신문기자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제기되었다.<sup>365)</sup> 그리고 마침내 1905년 1월 22일 ‘피의 일요일’ 사건으로 러시아혁명이 발발한다.<sup>366)</sup>

이 시기 혁명 세력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폭동’, ‘봉기’, ‘소요’, ‘내란’, ‘분란’, ‘반란’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지만<sup>367)</sup> 핵심적으로 가

363) 황성신문 1903년 3월 12일, 「中美의 開戰」.

364) 황성신문 1903년 6월 23일, 「塞爾比亞國의 革命」.

365) 황성신문 1904년 12월 23일, 「俄學生衝突」; 1904년 12월 24일, 「俄國의 革命運動」; 1905년 1월 17일, 「聯名報告」.

366) ‘피의 일요일’에 대한 기사는 황성신문 1905년 1월 26일, 「俄京의 革命運動」.

장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혁명운동’이다.<sup>368)</sup> ‘혁명운동’이라는 말의 출현은, 이제 혁명이 귀족이나 왕족에 의해 궁중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위정치가 아니라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사회운동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혁명세력에 대해서는 ‘단비(團匪)’<sup>369)</sup>, ‘반도(叛徒)’<sup>370)</sup> 등 부정적인 표현과 ‘혁명당(革命黨)’이라는 중립적 표현이 혼용된다. 혁명지도자에 대해 초기의 ‘역범(逆犯)’<sup>371)</sup>이나 ‘수괴(首魁)’<sup>372)</sup>에서 ‘수령(首領)’<sup>373)</sup>, ‘영수(領首)’<sup>374)</sup>로의 인식 변화가 눈에 띈다. 1903년 이후에는 ‘혁명군(革命軍)’, ‘혁명전쟁(革命戰爭)’ 등의 표현이 부쩍 늘어남으로써, 혁명 집단이 자체적인 전쟁능력과 전술을 갖춘 무장세력으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sup>375)</sup> 이것은 18세기와 19세기에 혁명과 전쟁을 통해 커진 국가의 진압 능력에 대항하여, 혁명세력 역시 더욱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폭력수단을 취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인민과 국가와 자유의 적에 대한 처단으로서 행해지는 황제나 정부 요인들에 대한 암살을 통해, 전제 왕조가 반역자들에게 자객을 보내던 앞 시기의 정치적 논리가 역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자유만세”,<sup>376)</sup> “전제정치 파괴”,<sup>377)</sup> “황제주의 타

367) 황성신문 1901년 11월 1일, 「阿富汗의 內亂」; 1903년 8월 22일, 「巴婁幹의 叛亂」; 1903년 8월 17일, 「南美的 革命戰爭」.

368) 황성신문 1899년 7월 3일, 「淸國刺客復渡」; 1901년 4월 8일, 「俄國의 革命運動」; 1901년 5월 16일, 「俄京의 革命運動」; 1901년 6월 19일, 「伊太利의 不穩」; 1901년 11월 1일, 「波斯의 革命運動」; 1902년 1월 7일, 「光武五年度の 萬國觀瀾을 概記하건디」; 1903년 4월 24일, 「東歐의 風雲」; 1903년 8월 17일, 「南美的 革命戰爭」; 1904년 1월 9일, 「俄國軍隊의 革命運動」; 1904년 8월 9일, 「動兵과 社會黨」; 1904년 10월 26일, 「俄國의 革命運動」; 1904년 12월 24일, 「俄國의 革命運動」.

369) 황성신문 1900년 7월 4일, 「俄國對淸政策」.

370) 황성신문 1903년 5월 4일, 「巴婁幹事件」; 1903년 8월 22일 「巴婁幹의 叛亂」.

371) 황성신문 1900년 7월 25일, 「淸國의 秘密結社」.

372) 황성신문 1901년 4월 8일, 「俄國의 革命運動」.

373) 황성신문 1901년 9월 20일, 「南美兩共和國衝突의 主因」; 1903년 3월 12일, 「中美의 開戰」.

374) 황성신문 1904년 7월 2일, 「俄國敗報와 革命黨」.

375) 황성신문 1900년 7월 4일, 「俄國對淸政策」; 1903년 1월 17일, 「美國恩卹金」; 1903년 3월 12일, 「中美의 開戰」; 1903년 5월 4일, 「巴婁幹事件」; 1903년 8월 17일, 「南美的 革命戰爭」; 1903년 8월 22일, 「巴婁幹의 叛亂」.

파”<sup>378)</sup>를 위한 혁명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은 혁명운동이 비밀결사에서 벗어나 공공연한 ‘선언서’를 채택하고 발표하도록 추동했다.<sup>379)</sup>

---

376) 황성신문 1901년 5월 16일, 「俄京의 革命運動」.

377) 황성신문 1902년 4월 18일, 「俄國大學生의 騷擾」.

378) 황성신문 1904년 3월 31일, 「革命黨暴發의 希望」.

379) 황성신문 1904년 3월 11일, 「俄國革命黨의 煽動」; 1904년 4월 1일, 「俄國學生의 捕縛」.

## 제 5장. 애국계몽기(1905-1910)의 혁명개념

1907년 6월 24일 황성신문에는 「박영효씨」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 게재되었다.

“來ᄃ얏도다 來ᄃ얏도다 朴泳孝氏가 來ᄃ얏도다 朴泳孝氏가 來ᄃ얏스니 今日 我國民의 氏의 對ᄃᆞᆫ 感情과 氏에 向ᄃᆞᆫ 希望이 果然何如ᄃᆞᆫ고...十年以前을 回思ᄃᆞᆫ라 氏가 異域亡命客으로 入來ᄃᆞᆫ야 新政府를 組織ᄃᆞᆫ고 我國獨立에 獻身ᄃᆞᆫ 際에 或舌로 其身을 誅ᄃᆞᆫ며 或槍으로 其胷을 指ᄃᆞᆫ려던 朴泳孝氏오...二十年以前을 更思ᄃᆞᆫ라 氏가 同志를 糾合ᄃᆞᆫ야 政府改革에 着手ᄃᆞᆫ 初에 或筆로 其迹을 討ᄃᆞᆫ며 或劒으로 其頸에 加ᄃᆞᆫ려던 朴泳孝氏라...依希測望ᄃᆞᆫ되 氏ㅣ 來ᄃᆞᆫ는 第一日에 政治를 改良ᄃᆞᆫ고 第二日에 國權을 挽回ᄃᆞᆫ다 ᄃᆞᆫ면 此는 夢中에 譚語者라...今日에는 雖千朴氏ᄃᆞᆫ달 何用이며 萬朴氏ᄃᆞᆫ달 何用가 已矣어다 今日이여 ᄃᆞᆫ느니 嗟夫라 今日이 雖晚矣나 無論何國ᄃᆞᆫ고 但 一番革命家の 一棒一喝로 遂能突然獨立은 古今來所未聞所未見ᄃᆞᆫ 事이라 必也千百曲折을 經過ᄃᆞᆫ며 許多艱難을 喫嘗ᄃᆞᆫ 後에야 其希望ᄃᆞᆫ던 目的地에 到達ᄃᆞᆫ느니”<sup>380)</sup>

이 글은 혁명가 한 명의 노력으로 돌연 정치 개량이나 국권 회복, 독립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박영효라고 하더라도 헛된 기대를 걸지 말라는 사회진화론적 주장을 펴고 있다. 애국계몽기 혁명개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루소가 부각되면서 인민의 일반의지와 천부적 자연권, 혁명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혁명의 선취요건으로 민지(民智)를 강조, 실력양성론으로 귀결된다. 둘째, “혁명유신(革命雜新)”이라는 일본발 어휘가 출현하면서 혁명의 급진

---

380) 황성신문 1907년 6월 24일, 「朴泳孝氏」.

성이 부인되고 한국적 상황에서 혁명의 불가능성이 강조된다. 의병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신문지법에 의한 통감부의 언론 검열 속에서 ‘혁명’을 직접적으로 찬성하고 선동하는 언설을 지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세 종류의 글에 주목하게 된다. 첫째, ‘독립혁명’의 세계적 열기와 성패를 논한 일련의 외국 단신들이다. 둘째, 러시아 및 중국의 혁명 동향과 직결되는 1909년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둘러싼 논설이다. 셋째, 비율빈전사에 전문이 기재되어 있는 민주공화 헌법이다.

## 1절. 반혁명의 레토릭과 혁명개념의 보수화

### 1. 반혁명의 레토릭 I: 혁명과 계몽

애국계몽기 혁명 어휘는 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즉각적인 민권 향상이 아니라 민지계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사용된다.

1905년 4월 29일자 황성신문에는, 정부 정치의 방향이 “그 국민의 지에 재하야 여론의 승리를 득하는 것이 정치계의 원동력(其國民意志에 在하야 輿論의 勝利를 得하는 것이 卽政治界의 原動力)”이며, 정부책임자가 권력을 남용하고 압박과 강경의 수단으로 인민의 자유권한을 무리하게 압박할 경우, 자칫 “국가혁명”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政府責任者가 徒然히 自己의 權力을 濫用하야 國民의 輿情을 蔑視하고 但以壓迫의 手段과 強勁의 號令으로 其人民의 自由權限을 無理壓迫하는 時에는 其社會의 人心이 自然政治界의 反動力을 受하야 或 政府를 彈劾聲討하거나 或 總員辭職을 勸勉하거나 甚하면 現時政局을 打破하야 國家革命의 氣運을 惹起하는 不幸을 招하는 事

實”)는 논설이 등장한다.<sup>381)</sup>

이어서 1905년 8월에는 1900년 출간된 『법국혁신전사』를 전재한 「법국혁신사」가 황성신문에 연재된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혁명(法國革命)은 정치 혁신에 있어 “세계의 미증유(未曾有)한 일대사변”으로서, “압제(壓制)의 학풍(虐風)이 각국에 매우 심한 까닭에 개혁의 참혹(慘酷)이 또한 각국에 매우 심하였으니 이것은 정당(政黨)이 인민(人民)에게 상당(相當)한 보복(報復)을 받은 것”이다. 18세기 중엽 이전에 프랑스의 정당과 인민은 서로 격절하여 오직 “계급(階級)의 등분(等分)으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동포상애(同胞相愛)하는 도덕이 전멸”하였고, 평민은 “천부자유(天賦自由)의 권리”를 알지 못했다.<sup>382)</sup> 그러던 것이, 루소가 그 취지가 “민주설(民主說)”에 가까운 민약론을 인포(印布)하여 자유의 기풍과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그러나 결론은, “人類天賦의 自由權限과 獨立思想의 國家觀念을 先爲敎授訓導하야 其上下人民의 腐爛한 頭腦를 洗滌하는 것이 實로 我韓今日の 改革藥石이라 謂하노니”라고 하여, 민지계몽이다.<sup>383)</sup>

1906년 임병항의 대한자강회 연설에 따르면, 프랑스의 혁명과 영국의 발달(法國의 革命과 英國의 發達)은 프랑스와 영국의 인민이 관리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은 것이다. 그러므로 발달개명한 인민 위에 나쁜 정부가 없고, 혼약미개(昏弱未開)한 인민 위에 좋은 정부가 없다. 그런데 우리 인민은 정부와 관리를 교정하는 이러한 사업은 고사하고, “자기의 천부권리(自己의 天賦權利)”까지 빼앗김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지 않은지 연사는 묻고 있다.<sup>384)</sup>

381) 황성신문 1905년 4월 29일 「國務大臣의 責任(續)」.

382) 황성신문 1905년 8월 24일, 「讀法國革新史」.

383) 황성신문 1905년 8월 26일, 「讀法國革新史(續)」.

384) 황성신문 1906년 12월 18일, 林炳恒, 「大韓自強會演說 官吏의 事業과 人民의 事業 (續)」.

1908년 대한협회통상총회 연설에서 김명준은, “民權者는 人權을 指稱함인디 官權에 對하야 民權이라 云함....人民에게 言論權、居住權、所有權、生活權、營業權、自由權의 諸權이 有함디 此는 上天이 賦與하사 何人이던지 此를 能히 壓制하며 此를 能히 侵害치못할거시라. 上天이 平等을 主하사 民權을 重히하신 것. 그러므로 一國家의 運命도 民權에 所重이 如此하도다.”이라고 하여, 박영효의 「인권론」을 연상시키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그는 “법국에 혁명이 차를 기인하야 민권을 회복”하였다고 하여, 루소 「민약론」의 사상적 영향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는 우리 국민에게 인권이 없는 이유는 도둑으로부터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국민이 잃어버린 민권을 되찾아야만 개인도 살고, 일가도 살고, 일국도 보존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무장투쟁이나 폭력혁명이 아니라, “腦頭に 腐敗한 思想을 新鮮한 思想으로 換充하야 民權을 覓得”하는 것이다.<sup>385)</sup>

독립혁명의 실행방법을 민지계몽과 대중교육에서 찾는 주장은 1909년 신한국보에서도 보인다. “어찌 하여야 우리의 독립을 만회하며 우리의 자유를 광복하겠느뇨. 반드시 가로되 합중교육이 필요한 급무라 하리니....지혜 있는 자도 합중을 제창하며 어리석은 자도 교육을 위주하는 것은 인권의 자유와 국가의 정신을 귀중히 여김이니 만일 그 단체가 품은 중지를 행치 못하거나 주장한 목적이 없으면 이는 노예사회에 지나지 못할 것이요 교육의 이해도 또한 이러한 고로 법국(프랑스)의 혁명군과 파란(폴란드)의 혁명당이 그 소회는 일반이나 일신 일패가 저 같이 부동하며 미국의 독립당과 안남(베트남)의 독립군이 그 목적은 일반이나 일득 일실이 이같이 다름이

385) 황성신문 1908년 4월 18일, 金明潛, 「民權의 如何」.

로다.”<sup>386)</sup>

## 2. 반혁명의 레토릭 II: 유신혁명과 사회진화론

1905년 이후, 그 전에는 사용되지 않던 “유신혁명(維新革命)”이라는 표현이 발견된다. 1906년 11월 황성신문 기사에서는 메이지 유신이 “유신혁명(維新革命)”으로 표현되고 있다. (“天下志士가 因利乘便에 聲明尊王攘夷之義호야 一舉而成維新革命호니라”)<sup>387)</sup> 1907년 5월 황성신문 논설 「멸국신법론(滅國新法論)」<sup>388)</sup>에서는 먼로주의를 버리고 제국적 침략정책으로 돌아선 미국을 신뢰했다가 식민지가 된 필리핀을 예로 들며, 외국의 조력으로 “유신혁명”의 공을 이루는 것이 불가함을 역설한다.<sup>389)</sup> 1907년 8월의 기사에서도 “유신혁명”이라는 어휘가 사용되고 있다.<sup>390)</sup>

1907년 7월 9일 황성신문 논설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계와 학술계에 “혁명유신(革命維新)”의 사상이 싹튼 지 오래지만 인심과 풍속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능력이 없는 사상(無能力之思想)”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개진되고 있다. 이어지는 7월 10일 논설에서는 마찬가지로 논지로 프랑스가 군주의 학정에 발분해서 마침내 민권혁명을 일으키고, 미국이 조세와 가혹한 정치에 통탄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사상 뿐 아니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若法國이 發憤於君主虐政에 竟有民權之革命호고 美國이 痛恨於租稅苛政에 遂有獨立之戰爭호야 有其思想이라 必有其能力호

---

386) 신한국보 1909년 3월 16일, 「內地社會와 海外國體의 對한 感念」.

387) 황성신문 1906년 11월 28일, 「日本維新三十年史」.

388) 「멸국신법론」은 1906년 현재가 번역하여 발행한 량치차오의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의 부록으로 수록된 것으로 보아, 량치차오의 저작으로 추정된다.

389) 황성신문 1907년 5월 3일, 「滅國新法論(續)」.

390) 황성신문 1907년 8월 14일, 「愛說」.



니”) 논자는 한국 사회에 “국권회복”이나 “민지계발”의 사상은 말 뿐이지 그 실상이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는 이처럼 무능력한 사상의 역사적 사례로, 조정과 재야가 입을 모아 백년을 주장했지만 압록강을 단 한 발자국도 건너가지 못한 북벌론(北伐之說)을 든다. 마지막으로, 다분히 단재를 겨냥하고 있는 듯한데, “마음과, 뇌수와, 귀와, 눈과, 필설과 무엇으로 허망하게 애국, 애국 외친다고 가난한 나라를 부유하게 할 수 있으며, 약한 나라를 강하게 할 수 있는가. (心, 腦, 耳, 眼, 筆舌 等物로 虛擴妄叫 曰 愛國愛國하면 貧國을 可富며 弱國을 可强歟아)”라고 말하면서, 능력의 양성을 주장하고 있다.<sup>391)</sup>

메이지 일본에서 영어 revolution의 번역어 ‘革命’은 정권의 격렬한 교체만이 아니라 사회만물의 자연 ‘도태’ 및 인위적 ‘변혁’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메이지 일본에서는 존왕, 토막, 폐번치현을 가리켜 모두 혁명사업이라고 말했고, 후지타 도코(藤田東湖)、요시다 쇼인(吉田松陰)、사이고 다카모리(西郷南洲) 등을 모두 혁명인물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일본적 용례들은, 폭력적 수단으로 왕조를 교체한다는 전통적 의미가 아닌 사회진화론과 융합된 새로운 혁명개념을 출현시킨다. 메이지 일본의 혁명개념은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를 통해 량치차오에게 수용되었다. 소호가 추진했던 민권운동에서 혁명이란 개념은 상당히 광범위했으며, 정부 정책 및 봉건제도를 비판하기는 했지만 현 정부에 대한 폭력 전복의 요소는 없었다. 소호 본인은 영국식 혁명의 고취자이며, 의회정치를 주장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이지 유신은 영국식 혁명을 모범으로 삼은 ‘유신혁명’이었다. 현재 이 두 단어는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메이지 당시에는 별로 구분이 되지 않았다.<sup>392)</sup>

391) 황성신문 1907년 7월 10일, 「思想과 能力(續)」.

392) 陳建華, 〈革命的現代性: 中國革命話語考論〉(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리샤오통에 따르면, 1902년 「석혁(釋革)」이라는 글에서 량치차오는 전통적 ‘혁명’ 어휘와 구별하기 위해 ‘revolution’을 ‘변혁(變革)’으로 번역할 것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혁명과 같은 revolution은 국민과 사회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문제로서, 일개 군주나 왕조교체에 불과한 역성혁명과는 철저히 구별되는 개념이었다. 량치차오는 청말 혁명과의 지향이 여전히 ‘왕조혁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1903년 무렵부터 혁명파에 반대하여 진정한 ‘변혁’의 제조조건이 성숙할 때까지 ‘개명전제’를 주장해 나갔다.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1907년 그는 제도 내 투쟁의 방법을 선택, ‘국회속개(續開)’를 주장한다.<sup>393)</sup> 후술하겠지만, 쑨원 등 혁명파는 명목상의 국회 설치에 반대하고 청조 타도를 주장한다.

“혁명유신”이나 “유신혁명”이라는 결합어를 통해 혁명개념 속에 유신의 의미가 융합되면서, 혁명의 급진성과 폭력성은 거세되고 순치된다. 대신 사회진화론적 역사 인식 속에서 점진적 개량과 실력양성론이 주장된다. 애국계몽기에 혁명 어휘가 보수 담론에서 구사되는 경향은, 구미의 혁명개념과 전통적 혁명 내지 반란개념을 대비시키고, 애국계몽기 의병투쟁을 후자로 귀속시키면서 비판하는 일련의 논의 속에서도 발견된다.

1907년 8월 황성신문 논설은, 구미의 독립혁명과 단순한 폭동(暴動)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혁명이념으로 무장한 주도세력이 없는 의병 봉기나 민란의 근본적 한계를 비판하고 있다. “마찌니도 하나의 폭동(暴動)이고, 워싱턴도 하나의 폭동이며, 프랑스 혁명도 하나의 폭동이며, 러시아 허무당도 하나의 폭동이다. 저 폭동으로 독립이

pp.9-10; 花立三郎, (徳富蘇峰と大江義塾) (東京: ぺりかん社, 1982), p.87.

393) 리샤오통(李曉東), “중국 근대지식인에게 있어서의 전통과 혁명”, 정치사상연구, Vol.16, No.1 (2010), p.218, pp.238-240.

생기며, 혁명이 생기며 정부를 뒤흔들어 입헌을 청구하니, 지금의 의병의 폭동이 이들과 멀지 않다고 하지만, 매우 어리석은 말이다. (曰 瑪志尼도 一暴動也며 華盛頓도 一暴動也며 法之革命도 一暴動也며 俄之虛無黨도 一暴動也라 彼以暴動으로 有獨立者호며 有革命者호며 有震驚政府에 請求立憲者호니 今此暴動이 何遽不若彼리오 호느니 是果愚之甚也로다)” 논자에 따르면, 종래 우리 민간의 폭동은 민요(民擾), 난역(亂逆), 근왕(勤王) 셋 중 하나에 속한다. 탐관오리의 학정을 견디지 못해 일으키는 것이 민요이다. 간웅(奸雄)의 무리가 일어나 권세를 장악하려 하는 것이 난역이다. 적신(賊臣)이 조정에 있어 황실이 위급할 때 사민(士民)이 무기를 잡고 사직을 보위하는 것이 근왕이다. 태서의 폭동을 미루어 말하자면, 인민의 공분(“人民之公憤”)이 일어난 것으로서, 세 가지 유형 가운데에는 민요(民擾)와 그나마 유사하다. 그러나 태서의 폭동과 달리, 민요를 일으키는 무리들의 목적은 눈앞의 학정을 누그러뜨리는 데 있어서, 국가가 무엇이며 민권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不知國家之爲何物호며 不知民權之爲何事호고”) 윗사람이 방침을 조금 바꾸면 희희낙락 집으로 돌아가니 노예일 뿐이고 우마나 다름없다. 지금 대한제국의 폭동은 종래의 세 가지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sup>394)</sup> 결국 민요가 혁명 폭동으로 전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민권에 대한 사상, 자유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정신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1907년 9월 황성신문 논설에서는 ‘의병(義兵)’의 개념을 구미 근대의 혁명당 및 독립당과 비교해서 따지면서 대한제국의 의병이 명분 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승산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의(義)는 천하무적(天下無敵)이고, 병(兵)은 흉기(凶器)다. 옛날 프랑스혁명당과 아메리카와 이태리의 독립당이 의로운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일

394) 황성신문 1907년 8월 31일, 「又一告暴動者」.

으켜서 혹은 독립하고 혹은 혁명하고 불세의 공으로 국가를 건설했다. 그러나 이들 독립당이냐 혁명당이냐 피차의 형세를 계산하지도 않고, 세계의 공론(公言)을 고려하지도 않고, 덕(德)이나 힘을 헤아리지도 않고 돌연히 폭동하여 내가 의롭다, 내가 의롭다 하였는가?” 지방장관, 일진회원, 일본인 행상과 노동자들을 살상하여 “국제문제(國際間問題)”를 야기하는 것이 과연 의인가? 의병이라고 하지만 의롭지 않으니, 분을 가라앉히고 해산해서 실력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 논자의 요지이다.<sup>395)</sup>

1908년 2월의 황성신문 논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고로 혁명지사(革命之士)와 흥국지도(興國之徒)가 먼저 교육에 힘쓰며 재기(材器)를 배양한 후에 역량이 발동하고, 적을 알고 싸워야 불세의 위업(不世偉業)을 이룰 수 있거늘, 지금 이 의병은 비록 남의 기반(羈絆)에서 벗어나며 우리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나 맹목적으로 모험에 나서 시의 적절하지 못하다.”<sup>396)</sup>

---

395) 황성신문 1907년 9월 17일 「請質義兵者」.

396) 황성신문 1908년 2월 14일, 「忠南曉諭」.

## 2절. 혁명과 독립투쟁

한국적 상황에서 혁명을 직접적으로 찬성하고 선동하는 논설을 지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과는 대조적으로, ‘독립혁명’의 세계적 열기와 성패를 논한 외국 기사,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혁명 동향에 관한 상보는 이 시기 더욱 늘어난다. 그리고, 1909년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사건을 기점으로 ‘한국혁명군’과 ‘조선인혁명당’에 대한 기사들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 1. 러시아와 중국의 혁명 동향

1900년부터 신문지면에 출현한 러시아 혁명의 동향은 1905년 이후에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 페테르스부르크, 모스크바 등 러시아 전역의 노동자 동맹정공(同盟停工), 동맹파업, 학생들의 등교거부, 폭동과 화재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sup>397)</sup> 러시아 정부는 “革命黨員이 何如히 脅迫호던지 決코 軟弱호 政策은 行치아니함을 公佈”하고, 신문을 몰수하여 언론을 통제하는 한편, 코사크(哥薩克)병과 군대를 동원, 강경 진압에 나섰다.<sup>398)</sup> 제정 러시아 정부의 강경진압은 혁명운동의 과격화를 야기, “政府에서 鎮壓政策을 繼續호면 我等도 暗殺을 續行호고 今後數百의 敵을 殺호깃다”, “大官暗殺호 目的의 強暴手段을 繼續實行”하겠다는 혁명당의 선언으로 이어졌다. 이들 혁명당원들은 기차를 습격하고, 관리를 살상하고, 공금을 약탈했다.<sup>399)</sup> 혁명

397) 황성신문 1905년 1월 27일, 「俄都革命運動」; 1905년 2월 23일, 「俄國近況」; 1905년 3월 8일, 「俄國近況」.

398) 황성신문 1905년 2월 16일, 「俄京總督의 強硬手段」; 1906년 7월 7일, 「新聞沒收와 革命的集會」; 1906년 8월 1일, 「革命黨鎮壓의 命令」; 1906년 9월 11일, 「俄國政府의 決心」.

399) 황성신문 1906년 8월 4일, 「革命黨員의 掠奪」; 1906년 8월 13일, 「俄國政府와 革命黨」; 1906년 9월 3일, 「革命黨의 宣言」; 1906년 9월 10일, 「革命黨宣言의 起草」; 1906년 9월 18일, 「俄國革命黨의 議決」; 1906년 11월 8일, 「俄國革命黨

당원 체포 소식이 계속되는 가운데,<sup>400)</sup> 혁명당원들의 협박과 보복으로 인해 형사 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고, 재판서류가 피탈당했다. 혁명당원들은 부당한 국가의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검사장, 경찰관, 헌병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였다.<sup>401)</sup> 그 결과, 1905년 2월부터 1910년 4월까지 혁명당에게 살상된 러시아 관리가 1421명, 1905년 2월부터 1910년 5월까지 혁명당운동 관련 죽거나 다친 정부측 군인 및 관리와 혁명자의 수를 합하면 러일전쟁 전사자보다 훨씬 많았다.<sup>402)</sup> 1907년 5월의 기사에 따르면, 현 황제재위 2년 동안 러시아 혁명운동의 희생자 수는 사망자 총수가 26000명, 부상자 총수가 31000명, 사형 1650명, 금고 9412명이었다.<sup>403)</sup>

특히 1905년 1월, 혁명운동 동맹자 1만 5천명이 비폭력적으로 “皇帝의 請願書を 奉呈”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혈진압으로 끝난 ‘피의 일요일’ 이후,<sup>404)</sup> 러시아황제는 암살의 궁극적 대상으로 공포되었다.<sup>405)</sup> 스위스의 러시아혁명당 본부에서는 “俄帝를 弑殺치아니 하면 革命黨의 大事가 不成이라”는 격문. 러시아황제의 목에 현상금 20만 루블을 걸었다. 공중에서 폭발약을 투하하여 페테루호후 궁전을 파괴할 목적으로 경기구(輕氣球)가 개발되기도 했다.<sup>406)</sup> 1907년

---

의 掠奪額」; 1907년 1월 16일, 「俄都의 暗殺詳報」; 1907년 6월 8일, 「經營費掠奪의 計畫」; 1907년 11월 29일, 「俄國首相暗殺의 陰謀」.

400) 황성신문 1906년 7월 31일, 「革命黨의 捕縛」; 1906년 9월 21일, 「革命黨의 搜探」; 황성신문 1906년 9월 26일, 革命黨의 捕縛; 1907년 11월 29일, 「革命黨 百餘名의 捕縛」.

401) 황성신문 1906년 7월 10일, 「俄國國事犯裁判의 困難」; 1906년 8월 14일, 「裁判書類의 被奪」.

402) 황성신문 1906년 10월 29일, 「俄國官吏의 被殺傷數爰」; 1906년 12월 12일, 「俄國革命軍人과 死傷軍人」.

403) 황성신문 1907년 5월 21일, 「俄國革命黨의 犧牲」.

404) 황성신문 1905년 1월 25일, 「俄國의 八大革命黨」.

405) 황성신문 1905년 2월 22일, 「俄帝暗殺의 陰謀」; 1905년 3월 27일, 「俄國의 革命運動」. 1907년 1월 9일, 「俄都의 陰謀」.

406) 황성신문 1906년 11월 19일, 「俄帝弑殺의 懸賞」; 황성신문 1906년 12월 12일, 「俄帝와 革命黨」.

에는 미국의 무정부당 및 재미 러시아 망명자들과 연계된 “혁명주의(革命主義)의 군인”에 의한 황제 암살계획사건이 일어난다.<sup>407)</sup> 그러나 혁명운동은 러시아 군대에 이미 만연하여,<sup>408)</sup> 황실 수비하는 근위연대에도 혁명당이 다수 포진해 있다.<sup>409)</sup> 이제 “俄帝의 身體를 保護”하는 것이 제정 러시아 국체 수호의 최급무가 되고, 신변의 위협으로 인해 황제는 감금 상태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 기사에서 “혁명당”은 “무정부당”과 동반하여 출현하고(“革命黨及無政府黨”, “無政府黨及革命黨”), “급진주의자”, “급진당”이라는 표현 또한 보인다.<sup>410)</sup>

이 시기 러시아의 혁명 동향 기사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국회개설이다. 1905년 2월, 혁명이 일신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하고 개혁의 불가피성을 깨달은 러시아 귀족들은 “俄國專制政治에 大不幸”이 될 국회개설 건의서를 의결한다.<sup>411)</sup> 그리하여 1907년 3월 5일 러시아 국회개회식의 풍경이 보도되고 있는데, 좌우의 분열된 모습은 국회개설이 고식책에 불과하며, 러시아혁명의 열기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을 예견하게 한다. “右黨이 國歌를 唱호고 皇帝의 萬歲를 唱호얏고 入夜호야는 學生 數千名이 赤旗를 揭호고 市中을 進行호면서 革命歌를 唱호얏더라”<sup>412)</sup> 그 당연한 결과로써 개설 직후부터 의회 해산 위기와 혁명당 의원들의 체포 기사가 이어지고 있다.<sup>413)</sup> 1908년 주러시아 프랑스대사는 “러시아 정치경제상태가 프

407) 황성신문 1907년 5월 29일, 「俄帝暗殺의 陰謀」.

408) 황성신문 1906년 9월 17일, 「軍人의 革命團體」; 1906년 8월 20일, 「革命軍人의 捕縛」; 1907년 11월 3일, 「艦隊暴動과 原因」; 1907년 11월 7일, 「海參威暴動 詳報」.

409) 황성신문 1906년 6월 30일, 「俄國陸軍의 革命運動」.

410) 황성신문 1906년 8월 13일, 「俄國近衛隊及宮廷의 狀況」; 1906년 9월 3일, 「無政府黨의 跳梁」.

411) 황성신문 1905년 2월 20일, 「貴族運動」.

412) 황성신문 1907년 3월 13일, 「議會開會式」.

413) 황성신문 1907년 3월 29일, 「俄國革命黨의 計畫」; 1907년 5월 25일, 「革命的

랑스혁명(法國革命) 전의 내정과 유사”하며, “혁명과 보수의 양파(革命保守의 兩派)”를 관찰한 즉, 러시아에서 조만간 반드시 혁명이 성공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sup>414)</sup>

황성신문이 제정 러시아의 축적된 모순으로 인한 국가위기와 혁명동향을 상세히 보도한 이유는 1906년 8월 17일 논설에서 드러난다. 논설에 따르면, 지금 러시아의 상황은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고 노동농민이 지방장관을 암살하려 계획하고 폭도가 수비대를 습격하여 음모단의 포획, 폭발약, 관리 살해, 귀족 도주, 황제 몽진, 계엄령 발포 등 소란이 끊이지 않는다. 군주와 정부가 갖은 권력 수단을 동원해도 혁명당의 도화선(“命黨之引火線”)을 막을 수 없는 정황이다. 그 이유는 러시아 정치가 전제(專制)라 일반인민은 “자유평등지설(自由平等之說)”은 감히 말하지도 못하고, 오랜 관리의 압제에 폴란드, 핀란드, 유테의 백성(民)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러시아 한 나라의 일만이 아니다. 압제 아래 있는 인민이 자립사상이 없으면 함께 망하는 것이고, 인민에게 자립의 사상이 있는데 이것을 힘으로 압제하려고 하면 반드시 동력이 발출하게 되는 것이다.(“人민이 有此自立之思想而但欲以壓力으로 制之則必有動力之現出”)<sup>415)</sup>

황성신문의 청국 혁명동향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 시기 혁명봉기가 전통적인 “궁민(窮民)의 소요(騷擾)”와는 차별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주도세력은 “혁명당” 내지 “회비(會

---

陰謀와 議會」; 1907년 6월 22일, 「俄國議會의 危機」.

414) 황성신문 1908년 4월 5일, 「俄國內政과 法公使」 “러시아 정치경제상태가 프랑스혁명(法國革命) 전의 내정과 유사해서, 궁정과 관리와 승려는 기아에 허덕이는 수천만 농민의 고혈을 빨아 사치가 극도에 달하고, 궁정과 여러 대신의 세비(歲費)가 러시아국 예산 중 국민교육비의 배나 되고 농민은 중세(重稅)를 부담하고 자유를 빼앗겼으며 그 생명까지도 위험하여 러시아에서 프랑스에 외채를 모집하면 러시아 국민이 반드시 반항할 것.”

415) 황성신문 1906년 8월 17일, 「論說: 俄國의 內亂」.



匪)”이다. 이들은 “온화한 변법자강의 주의(變法自彊의 主義)”로 설립된 보국회(保國會), “만청조정(滿清朝廷)을 전복할 목적으로 설립”된 흥중회(興中會), 런던, 미국, 하와이, 싱가포르, 남양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흥중회와 기맥을 상통하는 중관회(中官會), 이 밖에 중국 각 지방의 혁명적 비밀결사 단체들로 이루어져 있다.<sup>416)</sup> 청국 혁명은 “혁명당”이 주축이 되어 난당(亂黨), 도비(刀匪), 호비(湖匪), 기민(饑民), 마적, 소금잠매자, 군인들을 혁명운동에 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sup>417)</sup>

둘째, 1907년 가로회, 삼합회, 흥중회가 연합봉기한 남청(南淸)의 혁명폭동(革命暴動) 사례에서 보듯, 이들은 “혁명적 사상”을 가지고 있고, “其主義는 團匪와 如히 排外目的으로 出함이 아니오 專히 北京政府를 顛覆하랴 함”이다. 남청 혁명군이 영문으로 청국 재류 외국인에게 포고한 6대 강령은, 이들의 혁명이 지향하는 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 정부전복(現在政府를 顛覆할 事), 2. 공화정체 실시(共和政體를 設施할 事), 3. 세계평화(世界의 眞正한 平和를 維新할 事), 4. 토지국유화(土地의 國有主義를 實行할 事) 5. 청일양국의 국민적 연합(日淸兩國의 國民의 聯合을 圖할 事) 6. 세계열강의 혁명 승인(世界列國의 對하야 淸國革命新事業贊成함을 請求할 事)<sup>418)</sup>. 이들의 혁명은 왕조를 교체하는 역성혁명이 아니라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정체를 변경하는 서구 근대적 혁명이다.

416) 황성신문 1906년 12월 19일, 「淸國의 各團體」.

417) 황성신문 1907년 3월 8일, 「革命黨員의 嚴探」; 1907년 6월 21일, 「端方의 上京稟請」; 1907년 8월 13일, 「馬賊討伐準備」; 1907년 8월 20일, 「革命黨의 戒嚴」; 1907년 8월 21일, 「革命黨의 大陰謀」; 1908년 1월 28일, 「淸國軍隊의 革命黨」; 1908년 3월 19일, 「軍隊와 革命黨」; 1908년 5월 16일, 「征討軍의 謀叛」; 1908년 5월 29일, 「官軍投降說」.

418) 황성신문 1907년 5월 11일, 「南淸暴徒의 後聞」; 1907년 7월 1일, 「革命軍의 宣言」.

셋째, 이들은 “국민(國民)”이라 자칭하며, 신식무기를 갖추고, 인민의 재물을 탈취하거나 외교(外交)를 반대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sup>419)</sup> 이들은 1900년의 의화단과 달리, “배외멸양(排外滅洋)”을 주장하지 않으며 외국 세력을 이용하거나 통제하면서 혁명을 성취하려 한다. 예를 들어, 1908년 봉기한 운남성 혁명군의 경우, 중화국민군(中華民國軍)이라 자칭하면서 인민에게 선포한 격문에서는 “本軍政府는 義를 因호야 暴를 討호고 民을 爲호야 命을 請호노니”라는 전통 혁명적 레토릭을 사용한 반면, 대외 각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매우 근대적인 혁명선언서를 발표하였다. “中華民國軍政府는 世界各邦에 宣言호노니 本軍政府는 今에 國民軍을 起호야 現在淸政府를 顛覆호고 社會의 民主國家를 成立호며 友邦各國에 對호야는 交誼를 愈益敦睦케호기 爲호야 國民軍政府의 對外行動을 宣布호노니 各友邦을 鑑察호라.”<sup>420)</sup>

이 시기 혁명의 근대 지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구미 각국의 사상과 서적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던 일본유학생들이 혁명당에 다수 가담하였다. 일본 학교가 “혁명주의(革命主義)의 양성소”라는 기사, 1만 6천명 일본의 청국유학생이 한꺼번에 귀국하면 “革命的氣燄이 熾盛호虞가 有호 所以”로 청국 정부가 명절 때도 귀국을 막는다는 기사, 한인(漢人) 출신 일본유학생들이 쑨원의 혁명당원이 되어 중국 내지의 폭동에 관여했다는 기사, 유학생 출신 혁명당원이 안휘순무(安徽巡撫)를 암살한 사건, 주일 청공사가 유학생 단속에 고심한다는 기사들이 다수 보인다.<sup>421)</sup> 청국정부에서는 일본 요코하

419) 황성신문 1907년 1월 8일, 「萍鄉의 革命黨」.

420) 황성신문 1908년 5월 12일, 「淸國革命黨의 猖獗」.

421) 황성신문 1907년 1월 16일, 「淸國留學生의 歸國禁止」; 1907년 1월 29일, 「淸國政府와 漢人留學生」; 1907년 2월 2일, 「日本留學生團束命令」; 1907년 6월 14일, 「淸國留學生과 監督」; 1907년 7월 24일, 「駐日淸公使更迭의 事情」; 1907년 7월 9일, 「淸國의 排日」; 1907년 7월 29일, 「暗殺事件과 鉄良」; 1907년 8월 8일, 「鎮壓手段의 準備」.

마, 고베, 나가사키 등 개항지와 동경에 다수의 비밀탐정을 보내어 혁명당원을 정탐했으며, 청국유학생이 귀국 시 혁명당원으로 극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sup>422)</sup> 일본에 간 유학생들이 기예학은 배우지 않고 정치학만 연구하여 본국에 돌아오는 자는 혁명파가 되는 바람에 청국정부에서 일본으로 유학생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기사도 보인다.<sup>423)</sup>

1907년 7월, 혁명당이 안휘순무를 암살한 이후로, 청조는 혁명의 미봉책으로 입헌을 고려한다. 경친왕이 황제에게 혁명당을 없애려면 헌법을 제정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청 정부 내에 “혁명배만(革命排滿)의 풍조”는 무력압제로만 방지할 것이 아니라 정치의 개량과 입헌의 실행이 방책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게 된 것이다.<sup>424)</sup> 혁명당 발흥이라는 내부의 문제 뿐 아니라, 청국 정부가 1907년 한일신협약에 의해, “대한국운의 비참함을 보고” “헌법정치를 실시하라 나라인수를 도리키고져” 한다는 기사 또한 보인다.<sup>425)</sup> 집권세력에게 있어 ‘입헌’은 만주왕조를 유지한 채 신정(新政)을 펼치는 입헌군주제를 의미했다. 그러나 혁명파에게 입헌은 입헌공화이어야만 했다. 따라서 청국 정부의 입헌 논의는 혁명당에게는 기만적으로 보였고, 수구당에게는 위험해 보였다. 1907년 10월의 기사를 보면, 서태후는 어전회의에서, 시국구제를 위해 입헌을 선포했으나 “匪黨民衆이 異說을 唱하여 特히 國體에 障害가 有”하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군기대신(軍機大臣) 장지동, 원세개는 “革命的 風潮는 立憲을 誤解함에 因함이니 各督撫로 하여금 中國의 立憲은 君主立憲됨을 曉諭케 하고 尙且立憲君主國의 政體를 參

422) 황성신문 1908년 4월 7일, 「革命黨과 淸國」.

423) 해조신문 1908년 5월 5일, 「留學不派理由」.

424) 황성신문 1907년 7월 19일, 「大官의 恐慌」; 1907년 8월 8일, 「革命防止策」.

425) 황성신문 1907년 8월 14일, 「袁總督意見의 採用」;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21일, 「청국정부는대한국운의비참함을보고혁명당의」.

考研究케 하면 革命黨의 誘惑을 免히리이다”라고 대답했다.<sup>426)</sup> 공화정 수립을 기치로 내건 쑨원들로서는 “원세개와 장지동이 권세를 잡아 전제정치를 헌법정치로 변하려하는거시 혁명당의 기세를 썩그러히는 수단”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sup>427)</sup> 입헌의 문제는 청국 정부 내에서도 대립을 야기, 원세개가 “헌정급설주의(憲政急設主義)”, “입헌제도실행(立憲制度施行)”, “정당수립필요(政黨樹立必要)”를 말함으로 인해 북경 대신들이 우려한다는 기사를 전하고 있다.<sup>428)</sup>

“쑨원의 측근인 황흥(黃興), 장병린(章炳麟) 등이 유학생 가운데 혁명사상을 고동케 한” 잡지 민보(民報)<sup>429)</sup>가 1905년 11월 창간된 이후, 캉유웨이, 량치차오 등 변법개혁과 기관지 신민총보(新民叢報)와 민보 지면에서는 혁명과 개혁과 간에 입헌군주나 입헌공화냐를 놓고 격렬한 논전이 벌어졌다. 민보는 첫째, 종족혁명, 즉, 만주왕조 타도와 정치혁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비해 신민총보는 종족주의를 버리고 만한동화론과 국민주의를 취했다. 둘째, 량치차오는 쑨원과 달리, 중국국민에게 공화제는 시기상조이므로 개명전제(開明專制)의 군주입헌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신민총보는 혁명은 질서를 파괴하고 배외적인 폭동을 야기, 열강의 간섭을 초래하여 중국의 분할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보는 질서 있는 혁명이 가능하며, 열강 간 세력균형의 문제와 거대한 중국민족의 힘을 무시한 중국 분할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sup>430)</sup> 입헌의 여부 뿐 아니라 시기와 형태를 놓고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무리가 갈렸다. 1907년 10월 일본의 청국유학생 당파와 현황에 관한 기사를 보면, 입헌(立憲)을 반대하는 정문사(政聞社)는

426) 황성신문 1907년 10월 6일, 「革命運動과 西太后」.

427)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19일, 「청국혁명당」.

428) 황성신문 1907년 10월 31일, 「清廷의 近狀」.

429) 황성신문 1907년 6월 14일, 「清國留學生과 監督」.

430) 호리가와 테츠오(1985), pp.73-75.

2,3백 명이고, 연구헌정(研究憲政)을 주장하는 헌정강습회(憲政講習會)는 7,8백 명, 예비입헌(預備立憲)을 주장하는 정속조사회(政俗調査會)는 4,5백 명, 실행혁명(實行革命)을 주장하는 쑨원의 중국동맹회(中國同盟會)가 4천여 명으로 가장 많다.<sup>431)</sup> 그러나 쑨원의 중국동맹회 회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1907년에는 이미 혁명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혁명(革命)의 풍조”<sup>432)</sup>, “혁명주의(革命主義)”<sup>433)</sup> 등의 어휘는 이러한 정황을 반영한다. 또, 이 때 혁명은 민보의 주장대로 곧 배만과 청조전복을 의미했기 때문에 “배만혁명(排外滅洋排滿革命)”<sup>434)</sup>, 혁명배만(革命排滿)<sup>435)</sup>이란 표현이 출현하고, “西太后는 革命이라는 文字까지 嫌忌”<sup>436)</sup>했던 것이다.

민보와 신민총보 간의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 열강에 의한 내정간섭과 중국분할의 우려라는 문제는 이 시기 혁명과와 개혁과, 수구와 모두에게 구조적 변수로 작용했다. 이 시기 청국 혁명당과 청국 정부는 혁명과 반혁명이라는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외국 세력과 교섭하고 있다. 각 열강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선택에 따라 외국 세력은 혁명에 불리하게도 작용하고 유리하게도 작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황성신문 기사들에 따르면, 이 시기 중국에 있어 프랑스는 청국에서의 이권 취득을 조건으로 프랑스령 베트남에서 청국 혁명당을 체포하고 토벌하는 등 반혁명세력으로 작용하였다.<sup>437)</sup>

431) 황성신문 1907년 10월 27일, 「淸國留學生의 黨派」.

432) 황성신문 1906년 9월 15일, 「江督覆迭의 理由」.

433) 황성신문 1906년 12월 20일, 「革命黨의 氣脉相通」.

434) 황성신문 1906년 6월 4일, 「北京의 戒嚴」.

435) 황성신문 1908년 1월 18일, 「革命思想의 抑壓」.

436) 황성신문 1907년 2월 23일, 「革命黨과 淸廷」.

437) 황성신문 1907년 8월 23일, 「革命黨의 捕縛」; 1908년 6월 2일, 「淸國의 借兵 交渉」; 1908년 6월 5일, 「革命預防策」; 1908년 6월 21일, 「法領의 支那人放逐」; 1908년 6월 27일, 「法國의 鑛山採掘權要求」; 1908년 7월 7일, 「法軍과 革命黨의 衝突」; 1908년 7월 22일, 「法領의 增兵」.

그에 비해, 일본은 혁명군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1908년 3월, 일본 윤선이 요코하마에서 발항, 혁명당 쑨원에게 공급할 총 90상자와 탄약 5만개 싣고 가다가 청국 해관에 포획된 사건,<sup>438)</sup> 일본 선함이 광서성 혁명당에게 보내는 무기를 밀수하다가 포획된 사건<sup>439)</sup>, 혁명당이 일본 도쿄에서 만주에 무기탄약을 수송하려 한다는 소식<sup>440)</sup> 등이 그 예이다.

청국 혁명당 기관지 민보도 일본에서 발행되었지만, 러시아 기관지 “우오리아”와 혁명당 격문 또한 나가사키에서 발행되었다는 기사<sup>441)</sup>도 보인다. 그 계기와 목적이 무엇이었던, 이 시기 조선,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약소국 뿐 아니라 청, 러시아와 같은 제정 대국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정부, 상인, 지사들이 다수 혁명방조세력으로 가담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이 시기 쑨원의 혁명과는 개혁파에 비해 ‘친일’적인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1908년 5월 일본의 청국혁명당은 청국의 일본동화배척(日本動貨斥排)에 반대하며, 이것은“保皇黨(梁啓超一派)의 陰謀”라고 비난했다.<sup>442)</sup>

## 2. 한국혁명군과 조선혁명당의 출현

1909년 11월 3일자 신한민보에는 안중근에 의한 이등박문 피살소식에 격동되어 300명의 ‘한인혁명군’이 경부철도의 한 정거장을 공격, 일인을 축출하고 관사에 불을 질렀다는 기사가 실렸다. 또, 한국

438) 황성신문 1908년 3월 6일, 「日輪軍物被押追報」; 해조신문 1908년 3월 19일, 「日使勸告其政府」; 1908년 3월 22일, 「廣東人の 格闘」; 1908년 3월 25일, 「진환(辰丸)사건의 결말」.

439) 해조신문 1908년 4월 2일, 「又獲軍物」.

440) 황성신문 1908년 6월 3일, 「武器輸入의 團束」.

441) 황성신문 1906년 8월 4일, 「俄國虛無黨員의 活動」; 1907년 12월 15일, 「海蔘威의 船員捕縛」.

442) 황성신문 1908년 5월 22일, 「革命黨大會」.

에서는 이등박문을 죽인 이를 ‘애국의사’라 칭하며, 안중근 심판이나 처형으로 ‘한국혁명군’을 겁박하려 할 경 장차 전국이 크게 소동될 염려가 있다고 보도했다.<sup>443)</sup> 드디어 ‘한인혁명군’이라는 말이 출현하였다.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자체가 위에서 살펴본 시대적 혁명 조류, 정치적 자유를 위해 폭력 혁명이 정당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읽혀야 한다.

1909년 11월 9일자 신한국보에서는, “이등(伊藤博文)의 피살은 죄악의 보복이니 이는 공리상에 자재한 일이라 가히 원망치 못할 것”이며, “대개 독립과 자유는 평화적 수단으로 취할 일이 아니요, 그 생명을 희생할지언정 나의 구적을 살패하여 암담한 풍운을 소탕한 후에 가히 별유 천지에 이를지니 이는 구미 열방에서 百년이래로 철혈정락을 베풀던 공례가 아니뇨?”라고 반문, 그 구체적 사례로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 스위스독립을 들고 있다. “一千七百七十六년에 미국 식민이 영국의 속박을 받을 때 금일 한인이 일본의 능학을 통분하는 것과 같이 十三주 애국자들이 의기(義旗)를 번드치며 영국을 거절하여 끓는 피를 대서양 도도한 물결에 흘리며 八년을 싸우다가 마침내 자유를 회복하여 신대륙에 공화국을 건설하였나니”, “一千八百八十九년에 법국(프랑스) 인민은 포악한 군주와 잔인한 관리의 악형 남세를 인하여 기한이 곤박하다가 대혁명을 일으켜 압제정치를 번복하였고 그 후 이태리와 하란(네덜란드)홍아리(헝가리)도 이와 같이 독립을 찾으려고 생존을 경정함이 천지를 진동하였으며, 一千八百十四년에 서사국(스위스)은 판도와 인구가 극히 편소한 나라이로되 유럽 척로의 보검이 한번에 사륙을 베여 일이만을 대항하고 모범적 정부를 건설하여 공리를 천하에 밝혔으며 오늘날 세계열강이 자유를 제창한 후로 그 인민이 공화국제와 헌법

443) 신한민보 1909년 11월 3일, 「韓人擊殺日兵」.

정부를 조직하여 팽창한 풍조가 이미 동아(동아시아)에 진탕하였나니 건국한 지四千년 내에 국수를 보전하던 한국이 어찌 민권발달의 희망이 없으리오, 그런 고로 발발한 정신이 금일 한국에 수입하였도다.” 기사는 “우리 한인은 이등박문(伊藤博文)이 피살한 통신에 대하여 일호반점이라도 가련히 여길수 없다. 그 나라의 원수를 갚으며 그 나라의 치욕을 씻으라면 결단코 한 사람의 힘으로는 등해 목적을 이루지 못하나니 우리가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서는 우리의 생명을 ●●●●● 하노라.”는 선언으로 끝맺고 있다.<sup>444)</sup>

1910년 1월 26일자 신한민보에는 “도선혁명당”들이 이등박문 암살에 크게 고무되어 태서혁명당을 모본하여 또 다른 일본대관들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 이들의 혁명 프로그램은 “태서혁명당을 모본”으로 한 것이며, “국가의 독립과 국민의 자유를 위하여 분투할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한일합방론 이후 더욱 발출하게 된 것이다.<sup>445)</sup>

---

444) 신한국보 1909년 11월 9일, 「討日奴書」.

445) 신한민보 1910년 1월 26일, 「日本大官의 大恐慌」.



### 3절. 『비율빈전사』와 민주공화헌법

#### 1. 한 권의 책

1907년 7월 22일, 서울 보성관에서 『비율빈전사(比律賓戰史)』라는 책이 발행되었다. 헤이그 밀사 사건의 여파로 고종이 강제 양위한 직후이며,<sup>446)</sup> 경찰·사법·관리임면권이 통감에게 이양된 한일신협약이 체결되고 언론검열을 본격화한 신문지법이 반포되기 직전이다.<sup>447)</sup> 필리핀이 스페인과 미국에 대항하여 벌인 독립투쟁과 공화국 수립을 논한 『비율빈전사』에는 ‘혁명(革命)’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한다. 무엇보다도, 필리핀 제 1공화국 헌법의 전문이 장장 27페이지에 걸쳐 게재되어 있다. 본문 도합 129쪽의 『비율빈전사』에는 ‘혁명(革命)’이라는 단어가 총 66번 사용된다. 최초의 용례는 ‘혁명전쟁(革命戰爭)’<sup>448)</sup>이며, 이후 ‘혁명(革命)’ 단독으로 사용된 이외에 ‘혁명군기(革命軍旗)’, ‘혁명군(革命軍)’, ‘혁명당(革命黨)’, ‘혁명행동(革命行動)’, ‘혁명정부(革命政府)’, ‘혁명전도(革命前途)’, ‘혁명위업(革命偉業)’, ‘무장적혁명(武裝的革命)’, ‘불란서혁명선언(佛蘭西革命宣言)’, ‘대혁명자화성돈(大革命者華盛頓)’, ‘혁명전기(革命戰旗)’, ‘혁명사(革命史)’, ‘비율빈제1혁명(比律賓第一革命)’, ‘비율빈제2혁명(比律賓第二革命)’, ‘혁명기성동맹(革命期成同盟)’, ‘혁명사업(革命事

446) 고종실록 1907년 7월 19일. 1907년 6월에 개최된 제 2차 헤이그 평화회의를 둘러싼 한반도 국제정치에 관해서는 최덕규,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와 러시아의 대한정책”, 한국사학보, Vol. 30 (2008).

447) 순종실록 1907년 7월 24일; 1908년 4월 20일. 신문지법은 국내에서 내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에 대해 신문 창간의 허가제와 사전검열을 규정하였다. 이어서 1908년, 법률 제8호 「신문지법 개정에 관한 안건(新聞紙法改正件)」에 의해 국외에서 한인 교포들이 발행하는 신문과 국내에서 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으로 단속 대상이 확대되었다.

448) “革命戰爭이 一世界에 常有 兇ニ 戰亂은 凶事-라....” 안국선 역. (비율빈전사(比律賓戰史))(경성: 보성관, 1907) (한국개화기 문학총서: 역사·전기소설 5)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8), p.275.

業), ‘혁명단체(革命團體)’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혁명정부(革命政府)’는 다시 ‘대통령(大統領)’이라는 단어와 함께 빈출하며<sup>449)</sup>, ‘혁명군(革命軍)의 교전권(交戰權)’<sup>450)</sup> 승인 문제가 언급되었다.

『비율빈전사』가 발행된 1907년 현재 대한제국은 ‘보호국’이라는 미명 하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고, ‘혁명’을 시도할 겨를도 없이 1910년 일본에 병탄됨으로써 조선 왕조는 멸망했다. 그렇다면, 한국어판 『비율빈전사』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비율빈전사』가 왜 1907년이라는 특정 시점에 한국어로 번역되었으며, 『비율빈전사』에서 거론되는 ‘혁명(革命)’, ‘공화(共和)’, ‘헌법(憲法)’이라는 말이 준식민지 상태의 대한제국에서 가지는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비율빈전사』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로는 오랫동안 최원식의 것이 유일했다. 그는 『비율빈전사』의 원본이 1901년 일본에서 발간되었으며, 1902년 중국어 번역본이 출판되었음을 밝히고, 필리핀 원작자 마리아노 폰세(Mariano Ponce)와 한국어 번역자 안국선의 생애와 이력을 각각 기술하는 방식으로 안국선과 폰세가 일본에서 서로 교류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비율빈전사』의 번역과 출간은 “일본 땅을 매개로 이루어진 아시아 지식인들의 연대의 한 기념물”로서, “제국주의의 본질을 폭로한 이 책의 번역을 통해서 한국인이 필리핀 독립전쟁에 연대를 표시한 것은 곧 일제를 비롯한 모든 제국주의 세력에 저항하는 국권 회복운동의 한 표현이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sup>451)</sup> 최원식의 논문은 선구적 작업으로서 귀중한 의의를

---

449) (한국개화기 문학총서: 역사·전기소설 5), p.301, 302, 303, 304.

450) (한국개화기 문학총서: 역사·전기소설 5), p.303.

451) 최원식, “아시아의 연대: (비율빈전사)에 대하여”,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서울: 소명출판, 2002), pp.189-210, p.205.

가지지만, 『비율빈전사』을 둘러싼 주요 인물들의 교류가 실증되지 않았고, 한국어판 『비율빈전사』의 복잡하고 첨예한 정치성을 천착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비율빈전사』의 중국 한역본 『飛獵濱獨立戰史』는 동경유학생 역술(東京留學生 譯述), 교열자 동경유학생(校閱者 東京留學生譯述), 발행자 상해상무인서관(發行者 上海商務印書館)으로 1902년 11월에 초판이 나왔고, 그 속표지에 비럼빈 봉시 저(飛獵濱 棒時 著), 중국 동시상심인 역(中國同是傷心人 譯)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김병철은 이 중국본과 안국선 번역 한국본의 목차가 동일함을 밝히고 있다.<sup>452)</sup> 1901년 박문관에서 나온 일본어본과 한국 번역본 또한 목차가 일치한다. 노연숙은 안국선의 『비율빈전사』와 일본어 판본 『南洋之風雲: 比律賓獨立問題之真相』을 비교 연구하였다.<sup>453)</sup>

원본과 번역본의 전과 사슬을 추적하는 문헌학적 작업, 원본과 번역본의 텍스트를 비교하는 비교문학사적 작업에는 일정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번역물과 번역 행위가 지닌 고도의 정치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치학적인 독해능력과 담론분석적인 연구 설계가 필수적이다. 더구나, 구미 근대 문물의 전과 사슬의 가장 말단에 위치했으며 동아시아 전통 천하질서 내 청의 영향력과 제국 일본의 근대적 식민지배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자율성이 극히 제한된 대한 제국 시기에 번역된 글이나 책의 내용은 얼핏 중국과 일본의 번역물을 그대로 답습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 이 때, 번역물의 사회적·언어적 콘텍스트에 대한 이해 없이 텍스트에 매몰될 경우, 번역자가 처한 시공간의 맥락에서 번역을 통해 의도한 정치적·사회적 효과는

452) 김병철(1975), pp.240-242.

453) 노연숙, “안국선의 (比律賓戰史)와 번역 저본 (南洋之風雲) 비교 연구”,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Vol.29 (2009), pp.43-71.

호도되고, 친일적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한 독자적 통찰이 결여된 문명 추수 행위로 치부되기 쉽다.

『비율빈전사』의 원작자 마리아노 폰세와 그의 스페인어 논설 “*Cuestiones Filipinas: una exposition (sic) histórico-crítica de hechos relativos á la guerra de la independencia* (필리핀 문제: 독립전쟁 관련사의 비판적·역사적 설명)”가 일본어로 번역되어 단행본으로 출간된 경위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작업에서 다루어졌다. 마리아노 폰세가 1899년 4월 5일 요코하마에서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페인어 알파벳으로 Keiroka Nippo라고 쓴, 폰세의 글이 처음 실린 일본 신문에 대해, 베네딕트 앤더슨은 Kaika Nippo(開花/開化日報)로 추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서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일본어 단행본에 대하여 베네딕트 앤더슨은 1901년 와세다대학교의 전신인 도쿄전문학교(東京專門學校)에서 출판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판본은 확인된 바 없다. 필자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확인한 일본어 판본 『南洋之風雲: 比律賓獨立問題之真相』은 마리아노 폰세 저(マリアーノ・ポンセ著), 미야모토 헤이쿠로, 후지타 스에타카 역(宮本平九郎, 藤田季莊 訳)으로 도쿄 하쿠분칸(東京: 博文館)에서 1901년 2월에 발행되었다.<sup>454)</sup> 도쿄와 요코하마 지역에 거주하던 중국인 망명 인사 및 유학생들 가운데 다수가 폰세를 알고 있었으며, 그의 책이 널리 읽혀졌다고 한다.<sup>455)</sup> 폰세 자신도 이 책이 중국인들에게 수천 부씩 팔려 나갔다고 회고하였다.<sup>456)</sup> 이 책의 중국어 번역본은 1902년에 출판되었지만, 이미 1901년부터 부분적으로 소개되었고, 량치차오는 1903년 자신이 발행하던 신민총보에 호세

---

454) Ponce(1932), p.317, 320; Ponce(1965), p.10; Anderson(2005), pp. 213-215; Resil B. Mojares, "Early "Asianism" in the Philippines", *IDEYA: Journal of the Humanities*, Vol. 11, No. 1 (2009), p.5.

455) Karl(2002), p.102, p.247.

456) Ponce(1965), p.10.

리잘의 전기를 실었다.<sup>457)</sup>

안국선은 1895년 도일, 1899년 7월 와세다 대학의 전신(前身)인 도쿄전문학교(東京專門學校)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졸업, 1900년 10월 귀국하였다.<sup>458)</sup> 일본에서 안국선이 직접 마리아노 폰세를 만났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안국선의 재종백부(再從伯父)이자 훗날 양부가 되는<sup>459)</sup> 안경수와 박영효, 유길준과 마리아노 폰세 사이에는 망명지 일본에서 직접적 교류가 있었음을 4장에서 살펴보았다. 안국선은 안경수나 박영효를 통해 『비율빈전사』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크다. 책의 저자 폰세는 안경수의 죽음을, 1892년 스페인 당국에 의해 처형된 필리핀 혁명의 선구자 호세 리잘(José Rizal)에 비유하여 ‘동일한 애국적 이상(the same patriotic ideals)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고 추모하였다.<sup>460)</sup> 안경수는 역적으로 죽었고, 박영효와 유길준은 귀국 이후 친일 협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고종 대신 의친왕을 옹립하려 했던 박영효는 1907년 귀국 이후 일제의 고종 폐위를 저지하려 시도하였다.

## 2. 유학생의 귀국

『비율빈전사』의 번역자 안국선의 원래 이름은 ‘안명선(安明善)’이며 ‘안국선(安國善)’으로 바꾼 것은 1907년 4월이다.<sup>461)</sup> 안명선은

---

457) Karl(2002), p.232-233.

458) 최기영, (한국근대계몽사상연구) (서울: 일조각, 2003), p.143은 안국선이 1899년에 귀국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안국선은 1900년에 귀국했다. 要視察韓國人舉動 2: 四. 要視察外國人ノ舉動關係雜纂 韓國人ノ部 (四): (345) [安昌善·安明善·安敬善·安翼洙의 大阪 滞在 報告], 1900년 6월 26일. [[http://db.history.go.kr/url.jsp?ID=hk\\_002\\_0040\\_3450](http://db.history.go.kr/url.jsp?ID=hk_002_0040_3450)] 도쿄전문학교를 졸업한 1899년 7월 15일부터 귀국하기까지 약 1년간 일본에서 안국선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밝혀진 바 없다.

459) 최기영(2003), p.78.

460) Ponce(1965), p. 42.

1895년 일본으로 유학,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의 전신(前身) 도쿄 전문학교(東京專門學校)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뒤 1900년 7월 졸업, 1900년 10월 귀국하였다. 안명선이 1895년에 안경수의 주선으로 일본에 건너간 것은 기존 연구에 밝혀져 있다.<sup>462)</sup> 그러나 1895년 4월 내부대신 박영효의 훈령으로 선발되어 1895년 5월 1일 1차로 게이오의숙(慶應義塾)에 입사한 1백 13명, 6월 13일에 2차로 입사한 30명의 관비유학생 가운데 안명선은 없었다. 이 때 1차 관비유학생으로 도일한 유길준 문중의 유치형(兪致衡)이 1895년 4월부터 10월까지 기록한 일기에 따르면, 안명선은 1895년 8월 24일에 혼자 게이오의숙에 들어왔다.<sup>463)</sup> 안명선이 일본에 건너간 정확한 시기와 경위는 그간 밝혀진 바 없는데,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명선은 일본 니치렌종(日蓮宗) 승려인 사노 젠레이(佐野前勵)가 조선에 왔다가 귀국할 때 데려간 네 명의 유학생 중 한 명이었다.

한국근대불교사에서 사노 젠레이는 승려의 도성출입금지<sup>464)</sup>를 폐지

461) 황성신문 1907년 4월 10일.

462) 윤명구, 「안국선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73), p.13 주 25; 최기영, “안국선의 생애와 계몽사상(상)”, 한국학보, Vol.17, No.2 (1991), p.127; (한국 근대 계몽사상 연구) (서울: 일조각, 2003), pp.142-143.

463) “유치형일기”, 서울대학교, (법학), Vol. 24, No.4 (1983), p.165; 김효전, “안국선의 와세다(早稻田) 시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 47 (2010), pp. 405-406. 갑신정변 실패 이후 10년 동안 중단되었던 일본 유학이 재개된 경위와 1895년 4월에 파견된 1차 관비 유학생의 숫자에 관해서는 차배근(2000), pp.64-69.

464)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승려의 도성출입금지 관련 기사에 따르면, 세종 12년(1430) 9월에는 승려에게 인신첩자(印信帖字)라는 출입증을 발급하여 공적인 일이 있을 때만 도성의 출입을 허락하였고, 연산군 9년(1503) 정월에 승도의 도성출입을 처음으로 완전 금지하였다. 이후 임진란이 일어나자 의승군이 왜적을 몰아낸 공적으로 배불책이 주춤하여 승려들의 입성이 가능하여졌으나, 인조 원년(1623) 5월에 이류(異類)들을 도성안에 출입시킬 수 없다하여 또 한 차례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후 영조 25년(1749) 2월, 정조 2년(1778)과 7년, 순조 15년(1815) 정월에 반복해서 승려의 입성금지령이 있었다. 한편 고종 2년(1865) 3월에는 승려들을 경복궁 창건에 동원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도성출입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박영기, “僧侶의 도성출입”, 법보신문

[http://www.buddhasite.net/dharmadhatu/bang.php?table=study\\_budhistory&q](http://www.buddhasite.net/dharmadhatu/bang.php?table=study_budhistory&q)

시킨 인물로 유명하다.<sup>465)</sup> 1918년 이능화는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에서 사노 젠레이가 1895년 내각 총리대신 김굉집(金宏集)에게 상서하여 해금을 청하였다고 기록했다.<sup>466)</sup> 1895년 4월 23일자 고종실록에는 총리대신 김홍집과 내무대신 박영효가 승도의 입성 해금을 주청했고 고종이 윤허했다는 기사, 같은 날짜 일성록에는 내각(內閣)에서 승도의 입성 금지를 풀어달라고 주청했으며 고종이 윤허하여 이를 명했다는 기사가 보인다.<sup>467)</sup> 한편 당시 외부대신이었던 김윤식은 『속음청사(續陰晴史)』에 양력 4월 23일 사노 젠레이와 시부야 분에이(澁谷文英)<sup>468)</sup>가 찾아와 “입학생을 선발하는 일(選入學生事)”을 의논하였고, 5월 5일, 북일영(北一營)에서 승려의 입성지금(入城之禁) 폐지를 축하하는 찬불회를 대대적으로 연 뒤 5월 11일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김윤식 소속의 생도 3인 조병규, 서정악, 이하영을 데리고 갔다고 적고 있다.<sup>469)</sup> 사노 젠레이는 한국 포교를 위해 1895년 3월 3일 부산에 도착, 3월 7일 인천에서 배를

[uery=view&l=19&p=11&go=159](#)

세종실록, 1430년 9월 1일(음력) 5번째 기사; 연산군일기 1503년 1월 18일(음력) 3번째 기사; 인조실록 1623년 5월 7일(음력) 1번째 기사.

465) 韓哲曦, (日本の朝鮮支配と宗教政策) (東京: 未來社, 1988); 한석희 지음, 김승태 옮김, (일제의 종교침략사) (서울: 기독교문사, 1990), pp.56-59; 정광호, “일제의 종교정책과 식민지불교”, 불교사학회 편, (근대한국불교사론) (서울: 민족사, 1988), pp.75-76; 김경집, (한국근대불교사) (서울: 경서원, 1998);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서울: 경인문화사, 2003).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전거는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이능화(李能和)의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 김윤식(金允植)의 (續陰晴史), 다카하시 토루(高橋亨)의 (이조불교(李朝佛教))인데 이 중에 가장 자세한 것은 다카하시 토루의 책이다.

466)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京城: 新文館, 大正7[1918]); 이능화 편, 조선불교통사역주편찬위원회, (역주 조선불교통사 2)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p.559.

467) 고종실록 1895년 3월 29일(음력) 2번째 기사; 일성록 1895년 3월 29일(음력) 3번째 기사.

468) 일본인명 독음은 [<http://porta.ndl.go.jp/Result/R000000008/I000069812>] 한국 기존 연구에는 모두 ‘시부다니’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469) 속음청사 권칠, 고종 32년 을미 3월 29일 [[http://db.history.go.kr/url.jsp?ID=sa\\_011\\_0070\\_0030\\_0030](http://db.history.go.kr/url.jsp?ID=sa_011_0070_0030_0030)].

속음청사 권칠, 고종 32년 을미 4월 11일, 17일 [[http://db.history.go.kr/url.jsp?ID=sa\\_011\\_0070\\_0030\\_0040](http://db.history.go.kr/url.jsp?ID=sa_011_0070_0030_0040)].

타고 경성에 입성하였다. 그는 포교사업을 돕기 위해 조선 상류자제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일본 니치렌종 학교에 유학시키기로 했고, 외부대신 김윤식에게 그 선발방법을 의뢰하였다.<sup>470)</sup> 속음청사 음력 3월 29일(양력 4월 23일)자에서 “입학생을 선발하는 일(選入學生事)”란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sup>471)</sup>

1차 관비유학생들이 인천을 출발한 것이 음력 3월 27일(양력 4월 21일)이므로 불과 그 이틀 뒤이다.<sup>472)</sup> 김윤식의 기록에는 조병주(趙秉柱), 서정악(徐廷岳), 이하영(李厦榮) 3인만 나오고 안명선의 이름이 없다. 그런데 1895년 6월 19일 (양력 8월 10일) 학부대신 이완용이 외부대신 김윤식에게 보낸 조회문에 따르면, 사노 켄레이는 회국(回國)시에 학원(學員) 4인을 데리고 갔고, 이 가운데 조병주, 서정악, 이하영은 게이오의숙으로 옮겼는데 안명선만 아직 여인숙에 남아 무리와 떨어져 혼자 공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주일공사에게 알려 게이오의숙으로 옮겨 취학시켜야 할 형편이었다. 김윤식은 바로 그 다음날인 6월 20일 (양력 8월 11일) 안명선을 게이오의숙으로 옮기도록 조치했음을 알리고 있다.<sup>473)</sup> 이것은 안명선이 1895년 8월 24일에 혼자 게이오의숙에 들어왔다는 유치형의 기록과도 들어맞는다. 그러므로 안명선은 사노 켄레이와 함께 1895년 5월 11일 경성을 출발, 인천과 부산을 거쳐 배로 도일하였고,<sup>474)</sup> 사노 켄레이는 이들을 일본 시즈오카 현 신주쿠(靜岡縣新塾)로 데려갔다는데,<sup>475)</sup> 미노부(身廷), 교토(京都), 시즈오카(靜岡)에 니치렌

470) 高橋亨, (李朝佛教) (東京: 國書刊行會, 昭和48[1973]), p.901.

471) 속음청사 권철, 고종 32년 을미 3월 29일.

472) “유치형일기”(1983), p.152.

473) 각사등록근대편, 1895년 6월 19일 조회(照會) 제8호  
[http://db.history.go.kr/url.jsp?ID=mk\\_078\\_001\\_000\\_0160](http://db.history.go.kr/url.jsp?ID=mk_078_001_000_0160); 각사등록근대편,  
 1895년 6월 20일 조복(照覆) 제7호  
[http://db.history.go.kr/url.jsp?ID=mk\\_078\\_001\\_000\\_0170](http://db.history.go.kr/url.jsp?ID=mk_078_001_000_0170).

474) 속음청사 권철, 고종 32년 을미 4월 17일 ; 高橋亨(1973), p.901.



종 대찰(大刹)이 있었다고 하므로,<sup>476)</sup> 이들은 일본에 건너가 애초의 선발 의도대로 니치렌종 절에 맡겨진 것 같다. 그러나 이들 4인의 특채 유학생들은 몇 달 뒤 모두 게이오의숙으로 옮겼다.<sup>477)</sup> 이들이 게이오의숙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본에 돌아온 사노 젠레이가 중단 내의 비판에 직면하여 ‘교화적 한국경륜(敎化的 韓國經綸)’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사정과 관련 있지 않을까 한다.<sup>478)</sup>

동경전문학교 정치학과 졸업생 안명선은 1900년 12월에 체포되었다. 안명선은 1900년 10월 귀국하는 길, 시모노세키(馬關)에서 증남포(甌南浦)로 오는 배 위에서 오성모(吳聖模)를 만났다. 오성모는 1895년 5월에 일본유학생으로 선발, 일본에 건너가 1900년 9월에 졸업하고 귀국하는 길에 고베에 가서 박만서(朴晩緒)와 함께 박영효의 집을 방문하였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오성모가 우리나라의 광산, 철도 등 이익이 전부 외국인의 것이 되고 있음을 개탄하자 박영효가 정부를 개혁하면 이러한 이익을 외국인에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자금으로 이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오성모는 철산(鐵山)에 사는 자신의 동향인 삭주(朔州) 거부(巨富) 오희선(吳熙善)을 추천하고, 박영효에게 서찰을 써 줄 것을 부탁하였다. 오성모는 귀국하는 배 안에서 현제창(玄濟昶), 안명선을 만났고, 오성모는 박영효 서찰에 대해 안명선에게 털어놓았다. 안명선은 1900년 12월 취중에 “평양의 병정(兵丁)이 상경하여 궁궐을 숙위(宿衛)

475) 속음청사 권철, 고종 32년 을미 4월 17일.

476) 高橋亨(1973), p.892.

477) 서정약(徐廷岳)은 1895년 7월 22일 게이오의숙에 들어왔고, 조병주(趙秉柱)와 이하영(李廈榮) 또한 1895년 7월 24일 게이오의숙의 체조시간에 불참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전에 입숙했음을 알 수 있다. 전술했듯, 안명선은 1895년 8월 24일에 사노 젠레이 장학생 4인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게이오의숙에 합류했다. “유치형일기”(1983), p.161, 162, 165.

478) 高橋亨(1973), p.901.

하면, 권세의 총애를 받는 경우가 많아 병정에서 하사(下士)로, 하사에서 위관(尉官)이 되기가 모두 용이하다고 들었다. 내가 만약 병정으로 참여하면, 사람됨이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으니 진급을 할 길이 있을 것이다.”, “나는 장차 결교취당(吾將結交聚黨)하여 개혁정부(改革政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현제창이 듣고 평양 경무서에 고발함으로써 안명선과 오성모가 체포되었다. 오성모(吳聖模)는 『대명률(大明律)』 「적도편(賊盜編) 모반대역조(謀反大逆條)」의 모반(謀反) 및 대역과 공모한 자는 주모자와 추종자를 구분하지 않는 데 관한 율(律)에 따라 참형(斬刑)에 처해졌고, 안명선은 『대전회통(大典會通)』 「추단조(推斷條)」의 임금에게 불온한 말을 하여 정상으로나 사리로나 몹시 해로운 자에 관한 율에 따라태형(笞刑) 일백 대에 종신 유배를 받았다가 취중에 한 말이고 초범임을 참작하여 태형 1백대에 유배 십년으로 감해졌다.<sup>479)</sup>

윤병희는 이 일을 안명선을 평양 군부에 잠입시켜 자신의 거사에 참여할 군인을 포섭하려 했던 박영효의 기획으로 보았다.<sup>480)</sup> 오성모와 안명선이 모두 1895년 관비유학생 출신이며 게이오의숙에서 함께 수학했음을 고려하면, 배 위에서 처음 만났다는 두 사람의 말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게다가 안명선의 후원자였던 안경수는 쏜원과 박영효, 유길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sup>481)</sup> 1900년 5월 선처 해주겠다는 조선 정부와 일본 공사의 말을 믿고 귀국했다가 투옥, 처형되었다.<sup>482)</sup> 또한 안명선이 왕실 안보와 직결되는 궁궐 숙위로 침투하려 했던 점, 무리를 모아 정부를 개혁할 뜻을 가지고 있었다

479) 한국근대사자료집성, 1900년 10월 24일, 機乾第一〇五號, [http://db.history.go.kr/url.jsp?ID=hk\\_002\\_0050\\_1850](http://db.history.go.kr/url.jsp?ID=hk_002_0050_1850); 각사등록근대편, 1902년 7월 25일 질품서 제 30호, [http://db.history.go.kr/url.jsp?ID=mk\\_035\\_035\\_000\\_0430](http://db.history.go.kr/url.jsp?ID=mk_035_035_000_0430).

480) 윤병희(2004), p.220.

481) Ponce(1965), pp. 41-42.

482) 고종실록 1900년 5월 27일(양력) 2번째 기사.

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처음부터 박영효의 1900년 혁명 계획에 직접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청일전쟁 이후 러일전쟁까지 제일 조선인 망명자와 유학생은 조선 왕조에게는 정권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서, 암살, 처형, 투옥, 유배의 대상이었다. 이들 조선의 망명 정치가, 유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귀국하고 신원되는 것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확정된 이후이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통감정치가 시작됨으로써 왕조 권력과 궁정정치세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봉건적 신분사회와 왕조 체제의 현상 유지가 조선의 근대로의 진입 혹은 역사발전을 저해한 내적 요인이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 왕실은 정치적 개혁과 청산의 대상이었다. 왕조체제에 대한 희망이 최후로 버려지는 시점이 중국의 경우 1898년 무술정변의 실패였다면, 한국의 경우는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이다. 이미 1899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해산 시점에서 고종을 통한 근대적 국가 개혁은 어렵겠다고 판단되지만, 젊은 개명 군주 의친왕을 내세운 입헌군주제 자체는 폐기되지 않다가, 1907년 시점에서는 본격적 민주공화주의가 대두되는 것이다.

1904년 러일전쟁으로 풀려난 많은 정치범들과 더불어 석방된 안국선은 진도군 금갑도로 유배되었다가, 1907년 3월에 해배된다.<sup>483)</sup> 그 직후인 1907년 4월, 원래 이름 ‘안명선(安明善)’을 ‘안국선(安國善)’으로 바꾼다.<sup>484)</sup> 안국선은 1907년에만 『비율빈전사』 이외에 『외교통의(外交通義)』, 『정치원론(政治原論)』, 『연설법방(演說法方)』을 단행본으로 발표하였다. 안국선은 왜 사회에 복귀하자마자 이런

---

483) 각사등록근대편, 1904년 3월 12일 보고서 제 30호, [http://db.history.go.kr/url.jsp?ID=mk\\_035\\_043\\_000\\_0220](http://db.history.go.kr/url.jsp?ID=mk_035_043_000_0220).

484) 황성신문 1907년 4월 10일.

책들을 냈을까?

### 3. 혁명과 정체(政體): 안국선의 『정치원론』

1907년 황성신문사에서 인쇄하고 안국선이 발행한 『정치원론』은 1889년 일본에서 나온 이치지마 겐키치(市島謙吉)의 『政治原論』을 번역한 것이다.<sup>485)</sup> 이 책은 “만국이 경쟁하는 때를 당하여 정치가 완비되지 못한 나라는 국(國)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정치학이 생겨났다.”는 정치학의 목적을 밝히면서 시작된다. 이어서 정치학의 대상이 되는 ‘정치(政治)’의 개념 정의가 뒤따른다. 정치란, 한 마디로 “법률로 상하의 명분을 정하는 것”이다.<sup>486)</sup> 그리고 “상(上)이 하(下)를 통(通)하는 대권(大權)”이 곧 ‘주권(主權)’이다.<sup>487)</sup> 5장에서는 이러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정체(政體)의 구별이 다루어진다. 몽테스키외(孟德斯鳩)는 주권의 소재(所在)로 정체를 3분하였다. 주권이 인민 전부에게 있는 것은 ‘공화정체’이다. 주권이 일정법칙을 준수하는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은 ‘군주정체’이다. 주권이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은 ‘군주전제정체’이다. ‘공화정체’는 다시 주권이 국민전부에게 있는 ‘민주정체’와 주권이 국민의 일부분에게 있는 ‘소수정체’의 2종으로 나뉜다.<sup>488)</sup>

주권은 한 나라의 최상정권이라서 결코 분열될 수 없지만, 주권자의 숫자나 계급적 구성은 정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군주정체는 1인에게 주권이 귀속된 1인정체이고, 공화정체와 민주

---

485) 안국선, (정치원론(政治原論)) (경성: 황성신문사, 1907.10); 市島謙吉 著, (政治原論) (水原町, 新潟県/東京: 万松堂/大鵬館, 1889. 6); 김효전, “해설”, (정치원론) (서울: 관악사, 2004), pp.6-7, 11-14.

486) 이상 인용은 (정치원론)(2004), p.1

487) (정치원론)(2004), p.37.

488) (정치원론)(2004), p.43.

정체는 동질적인 여러 사람에게 주권이 귀속되는 동류(同類)다수정체, 입헌정체와 군민공치(共治)정체는 신분이 차이나는 여러 사람에게 주권이 귀속되는 이류(異類)다수정체이다. 저자는 그에 따라 정부형태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중국, 러시아, 터키에서 보이는 1인정체의 경우 입법, 행정, 사법의 분별이 없고 정치의 대강(大綱)을 1인이 장악한다. 주권이 귀족에게 있는 동류소수정체의 예로는 고대 로마가 있다. 이류소수정체의 경우 주권이 군주와 귀족에게 있어서 국왕과 의원(議院)이 주권을 분유(分有)한다. 또한 국왕의 권력이 항상 다른 주권자에 비해 강하다. 동류다수정체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모두 주권자가 되는 정체로서, 북미합중국과 프랑스가 그 예이다. 이류다수정체는 그 주권이 국왕과 상의원, 그리고 하의원의 선거를 주관하는 자에게 있다. 영국과 독일과 일본이 여기에 해당한다.<sup>489)</sup>

이제, 한 나라 정치의 대권을 가진 주권자가 모든 정무(政務)를 행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권의 대리’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따라서 주권이 인민의 전부나 일부에 귀속된 경우, 재상 이하 모든 관리는 다만 주권의 대리자이고, 주권자는 되지 못한다. 이러한 주권의 대리는 기한과 권한에 따라 다시 유형이 분류된다. 첫째, 미국과 프랑스의 대통령은 주권 대리의 기한과 권한이 모두 법률로 정해져 있는 유기유한제에 해당한다. 이들 대통령은 재위 중에 항상 헌법을 준수하여 정무를 집행하다가 임기가 다하면 퇴직한다. 둘째, 영국과 프랑스의 대의사(代議士), 즉,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그 의결하는 사건과 대리의 자격에 대해서는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는 유기무한제에 해당한다. 셋째, 영국의 왕위에는 기한이 없지만 그 특권은 제한되어

---

489) (정치원론)(2004), pp.45-48.

있다는 점에서 무기유한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대리의 무기무한제는 이미 대리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만, 이론상으로는 로마의 민정(民政)이 제정(帝政)으로 변할 때, 제왕이 한 나라의 주권을 대리하는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sup>490)</sup>

6장에서는 1인정체를 도부(都府)군주정체, 동양전제군주정체, 극동전제군주정체, 종교군주정체, 로마제정정체(羅馬帝政政體) 다섯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선의 전통적 혁명개념과 관련하여 ‘극동전제군주정체’에 대한 설명이 주목을 요한다. 해당 부분을 옮겨 보자.

“極東의 帝王은 上으로 天의 子라 하며 下으로 民의 父라 하여 人民에 對하여는 責任이 雖無하나 天에 對하여는 責任을 不免하느니 其, 施治는 專制로되 天下는 天下의 天下오 一人의 天下가 아니라 하는 原則은 敢히 顯悖하여 任意妄行치 못하고 苟或, 暴虐無道하면 一夫라 하여 臣民이 此를 廢黜할 權이 有하니 此를 明言치는 아니하였으나 相爲默許함이니라.”<sup>491)</sup>

명백히 조선왕조실록의 혁명개념과 ‘응천순인’의 정당화 논리를 상기시키는 이 대목에서, 한국의 전통적 혁명개념은 근대 정치학의 분류법에 따라 “인민에 대해 책임이 없는”, 주권이 군주 1인에게 귀속된 전제정체와 연결된다. 그러나 전통적 혁명개념이 열어놓고 있는 정당한 정권 전복의 가능성은 조선의 전제군주정에 있어 군권(君權), 신권(臣權), 민권(民權)의 역사적 배분율과 관련하여 중요하면 서도 난해한 문제이다. 특히 그것이 유럽의 귀족에 해당하는 조선의 문무 신료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원용됨으로써 실제로 왕권을 제한

490) (정치원론)(2004), pp.48-51.

491) (정치원론)(2004), pp.53-54.

하는 효과를 발휘했다면, 천명론은 일종의 불문(不文)헌법과 유사한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본 논문의 역량을 벗어나며 별도의 연구를 요한다. 적어도 이 논문이 다루는 대상시기 대상자료의 혁명개념은 압도적으로 서구 근대적인 것이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1인정체의 또 다른 형태인 ‘로마제정정체’를 설명하면서, 저자는 1799년 쿠데타를 일으킨 뒤 1804년 제정을 선포할 때까지 공화인민의 대리자라고 칭했으나 군주의 권력을 가졌던 나폴레옹을 예로 들면서, 외면으로는 주권이 인민에게 있지만 실제로는 주권이 한 사람에게 있다는 점에서, “민권(民權)을 가탁(假託)하는 군주정체”라고 규정한다. 군주정체는 문명진보의 속도에 따라 진화정체(進化政體), 완진정체(緩進政體), 부진정체(不進政體)로 3분될 수 있다. 진화정체는 인민의 지식발달로 인해 군권이 점차 줄어들고 참정권을 인민에게 부여한 것으로 구주에 융성한 군주국들이 대개 여기에 속하며 그 문명의 진보가 한량이 없다. 완진정체는 군주의 위권이 강대하여 참정권을 인민에게 빨리 이양할 수 없기 때문에 문명의 진보가 지체되고 개혁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경우로, 중국과 한국의 군주제가 여기에 속한다. 부진정체는 종교로 군주를 세워 군주가 곧 천제(天帝)가 되고 인지가 발달하거나 인민이 참정권을 가질 여망이 전혀 없는 경우이다. 어쨌든, 야만사회에서는 강력한 군주정체가 필요불가결하지만 민력이 증진되고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군권은 축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또한 저자는 군주제에서 왕위 계승 방법을 세습제와 선립제(撰立制)로 양분한 뒤, 블룬츨리(伯崙知理)를 인용하여 정치적 안정과 통합의 측면에서는 세습제가 더 낫다고 주장한다.<sup>492)</sup>

---

492) (정치원론)(2004), pp.54-58.

8장 다수정체론에서 먼저 동류다수정체로서 공화국과 민주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근대의 민주국은 주권재민이라는 공화제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주권자의 대리인에게 정치를 시키는 대의제를 모두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의제가 본래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인민에게 자치와 공익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저자는 인민의 자질의 유무에 따라 대의 민주제의 결과가 갈린 나쁜 예로서 프랑스혁명을 들고 있고, 좋은 예로서 미국혁명을 들고 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프랑스혁명 이전의 프랑스 인민은 전제정치 하에 있어서 공공정신과 자치의 습속이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프랑스혁명의 경우, 이론에 의해 격발되어 하루아침에 구제도를 타파하고 공화정체를 세운 결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 그 뒤에 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전복하는 제 2, 제 3의 혁명이 거듭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비해 미국인민은 합중국을 건설할 때 이미 자치의 습관이 충분히 쌓여 있었기 때문에 혁명 뒤에도 조세, 화폐, 공채 등 정부 행정이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다만, 인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허용하는 공화정체의 특성상, 자유평등만 알고 정치적인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다수에게 정치권력이 넘어갈 우려가 있다.<sup>493)</sup>

이러한 공화정체의 폐해를 교정할 수 있는 정체가 두 번째 다수정체 유형인 ‘이류(異類)다수정체’이다. “왕실과 귀족과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자가 주권을 공유”하는 이 정체가 통칭 ‘입헌정체’이다. 입헌정체에는 왕실이 있어서 소수정체와 공화정체에 부족한 ‘시정(施政)통일의 리(利)’를 피할 수 있고, 귀족정과 공화정의 요소가 함께 있어서 1인정체의 독단성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귀족을 통해 재능 있는 자를 정치에 참여시키면서도 정치적 격변을 방어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함으로써 1인정체와 공화정체가 가지기 어려운 양면을 모두

---

493) (정치원론)(2004), pp.62-66.



가질 수 있다. 이것이 폴리비우스(保利卑士)가 가장 좋은 정체로 본 “군주와 귀족과 공화의 삼정을 혼합하여 만든” ‘혼합정체(混合政體)’이다. 혼합정체는 “황실과 귀족과 평민의 3자가 상보상제(相補相制)하여 권형(權衡)을 호보(互保)”할 수 있다. 즉, 왕과 귀족과 평민이 상호 보완하고 상호 견제하여 권력의 균형을 서로 보유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합정체도 해당 인민의 정치적 관습 사상과 역사에 걸맞아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의 좋고 나쁨은 인민 지덕과 관련된다. 그것이 중국은 전제정치로 사직이 위태로운데 러시아는 독재로 국위를 떨치고, 영국은 입헌정체로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으나 프러시아는 입헌정치로 관민이 알력을 부리게 된 이유이다. 동일한 정체가 어떤 나라에는 이롭고 다른 나라에는 해로운 것이다. 주권은 ‘전제권(專制權)’이다.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 위로는 전제가 없어서는 안 되고, 아래로는 자유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입헌정치는 전제와 자유가 서로 견제하고 서로 돕는 것이다.<sup>494)</sup>

정치문화와 국제환경이라는 구조적 변수 속에서 정치지도자의 균형 감각을 강조하는 성향은 안국선의 이전 글들에서 이미 엿보인다.

1896년 친목회회보에 기고한 「정치의 득실(得失)」이라는 글에서 그는 정체(政體)를 입헌정체(立憲政體), 즉, 대의정치(代議政治)와 전제정체, 즉, 군주재정치(君主裁政治) 둘로 나눈다. 입헌정체는 중치정부(衆治政府)라서 인민이 각각 자유의 권을 가지기 때문에 불평이 누적되지 않고, 전제정체는 독단정부(獨斷政府)라서 민은 자유를 얻지 못하고 위에 의뢰하여 그 정치가 포악하면 불평이 폭발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입헌정체가 우월하다. 독단정치는 1인의 정치

---

494) (정치원론)(2004), pp.67-70.

이고 대의정치는 중인(衆人)의 정치이다. 독단정부라 하는 것은 군주 1인이 생살여탈지권을 자임(自任)해서 일국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一人으로 一國을 治 함”이다. 그에 비해 대의정치는 일국민(一國人民)으로 대의사(代議士)를 선거하여 인민의 이해를 권형(權衡)하여 정사(政事)를 참의(參議)할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一國으로 一國을 治함”이다. 그러나 독단정부라도 그 군주가 영명하여 선량한 정치를 베푼다면 인민에게 이롭고, 합중정부라도 그 나라 국회의원이 무능력해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 공화정치였지만 쇠망한 로마처럼 나라에 해롭다. 동양에서는 일본이 가장 먼저 입헌정치를 행하였고, 그 법이 모두 서양 나라들에서 옮겨온 것이지만, 각국의 풍토와 기후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서양 법과 다른 바가 많아졌다.<sup>495)</sup>

1897년 1월, 독립협회의 기관지인 대조선독립협회회보(大朝鮮獨立協會會報)에 쓴 미국독립혁명에 관한 글에서도, 안국선은 미국의 병력, 민주적 선거, 자치와 통합, 프랑스의 지원, 혁명 이후의 헌법 제정 등 미국의 독립을 가능하게 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통찰한다. 자주독립(自主獨立)의 실(實)이 있어야만 완전한 독립국이 될 수 있다는 그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의 “만세독립(萬世獨立)을 보존(保存)할 방침”으로서 교육, 법전 제정, 외교, 군비 확장 등 국가기구 다방면의 제도적 근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西曆 一千七百七十六年에 至호야 大勇大憤을 發호야 兵을 舉호야 英을 背호실 華盛頓을 選舉호야써 將軍을 슴고 同年 七月四日에 獨立호난 宣告文을 英國에 送호고 各殖民地 十三國을 슴호야 北亞米利加合衆國이라 稱호고 高名호 후랑구린 을 佛國에 派遣호야 救援

495) 안명선, 「政治의 得失」, 친목회회보, Vol.3 (1896.6); 차배근(2000), pp.644-645.

을 請호니 佛國이 應援호고 兵을 送호야 合衆國을 救助호니 於是에 華盛頓이 兵을 率호고 勢를 堅히 호야 英兵을 擊破호고 能히 獨立을 專호하며 憲法을 制定호야 一大 共和國을 成호얏 더니 今日에 至호야 文明의 治가 歐洲에 卓冠호지라.”<sup>496)</sup>

1897년 6월 친목회회보에 실린 「정도론(政道論)」에서 안국선은 정치학자와 정치가를 구별하면서, 정치학자가 정치에 통달한 자인데 비해, 정치가는 “政을 治호는 家”, 즉, “事에 當호는 者”로서 “實을 行호는 者”라고 정의한다. 이를 위해 정치가에게는 “國家民生의 利害를 察호고 政綱治道の 得失을 知호고 時事機微의 舉動을 知호고 世界大勢의 如何함을 通호야 治國平天下의 方略을 遂行”할 수 있는 자질이 요구된다. 이러한 본분을 망각하고 일신(一身)의 이해(利害)와 명성, 정권만 쫓는 것은 정도(政道)가 아니라 관도(官道)에 불과하다. 이어서 안국선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한다. 국가에는 정정체(正政體)와 사정체(邪政體)가 있다. 좋은 국가는 사회의 이익에 힘쓰는 반면, 나쁜 국가는 주권자 1인의 이익에만 힘쓴다. 즉, 천하를 우선하는 것이 정(正)이고, 일신을 우선하는 것이 (邪)이다. 정체를 정과 사로 구별하면 1인정치와 개인정치와 다수정치는 정정체(正政體)이고, 이 세 정치가 문란해지면 사정체(邪政體)가 된다. 1인정치는 변해서 독재정(tyranny)이 되고, 개인정치는 변해서 과두정(oligarchy)이 되고, 다수정치는 변해서 민주정(democracy)이 된다. 민주정은 옛날에는 나쁜 정체였지만 지금은 좋은 정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그런데 정치를 좋거나 나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정치가이다.<sup>497)</sup>

496) 안명선, 「北米合衆國의 獨立史를 閱호다가 我大朝鮮國獨立을 論호미라」, 대조선독립협회회보, Vol.4 (1897년 1월 15일).

497) “政體를 區別호야 正邪를 言호면 一人政治와 個人政治와 多數政治는 正政體오 또 此三政治가 亂호야 邪政體가 되느니 一人政治는 變호야 (시라니)가 되고 個人政治는 變호야 (오루가루기)가 되고 多數政治는 變호야 (데모구라시)가 되느니라

안명선의 정치학에서는 압도적으로 몽테스키외의 영향이 느껴진다. 몽테스키외의 화두는 프랑스 절대왕정의 전제군주를 입헌군주로 전환시키기 위해 군주권을 제한하고 군주정의 개선 방안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또, 군주정의 반대쪽 극단인 민주정에 의해 시민들이 ‘극단적인 평등의 정신’을 가지게 되어 스스로 위탁한 권력도 인정할 수 없고 만사를 스스로 하려고 해서 행정이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 또한 경계하였다. 실제로 몽테스키외가 우려했던 민주정체의 부패 상태는 프랑스혁명 과정에서 국민공회와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가 시작되기 전에 시민들이 직접 정치를 실행했던 ‘봉기의 정치’로 나타났다. 몽테스키외는 권력분립에 의한 혼합정을 제시하고, 군주나 인민에 의해 권력이 독점되는 것을 막는 매개 권력으로서 귀족 집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절대주의 왕정에서 입법, 사법, 집행의 세 기능이 전제군주에 의해 독점되고 있었다면, 몽테스키외는 권력의 세 가지 기능적 분립을 계급 간의 권력 분할과 연결시킴으로써 전통적인 혼합정부의 사고와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다.<sup>498)</sup>

안국선이 번역한 『정치원론』은 이제까지 살펴본 『미국독립사』의 1787년 미국헌법, 『법국혁신헌법』의 1795년 프랑스헌법, 1898년 독립협회의 중추원 관제 개편안에서 제시된 헌법들이 모두 ‘혼합정체’를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왕권과 신권이 서로 견제해 온 한국 정치문화에서, 군주나 인민에게 권력을 독재시키는 군주정이나 공화정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웠다. 1895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타파되었지만, 여전히 문벌과 세도가 남아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독립협회는 칙령의 실행 기관에 지나지 않

---

(「데모구라시」라 호는거슨 古時에는 邪政體를 云함이나 今世에는 善政體를 指호야 稱함이라) 一人政體를 行호다가 「시라니」政治로 變호면 此는 政治家가 政을 邪道로 行호는 거시오.” 안명선, 「政道論」, 친목회회보, Vol.5 (1897.6); 차배근 (2000), p.784.

498) 홍태영, (몽테스키외 & 토크빌) (파주: 김영사, 2006), pp.67-93.

는 내각과 전제군주 사이에 양원으로 이루어진 중추원이라는 매개 권력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몽테스키외가 프랑스 절대군주의 권력을 법률에 의해 제한하고 보다 온건한 형태의 입헌군주로 변화시키고 싶어했던 것처럼, 독립협회 또한 민주정과 귀족정과 군주정의 장점을 고루 갖춘 혼합정 형태를 통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독립협회의 이러한 정체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칭제건원을 통해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대한국국제」를 반포함으로써 황제의 절대권력을 성문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8세기 중·동부 유럽에서 널리 유행한 ‘개명군주독재’라는 역사적 유형을 주목하게 된다. 이것은 프리시아,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자본주의 맹아가 내재적 발전만으로 성숙되지 않은 유럽의 주변국가들에서 목격된다. 이들 국가의 근대적 변혁 과정에는 봉건사회 내부의 모순에 더하여 외부의 압력이 추가작용을 하며,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가들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변혁을 권유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이들 주변국 군주들은 선진모델에 동화하는 개혁을 시도하지만, 계몽철학이나 사회·경제개혁은 외면하고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개명군주론에 이념적 기반이 된 것은 부국강병적 개혁안을 제시한 케네 등 프랑스 중농학과와 디드로 등의 백과전서파이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중농학과는 루이 15세 및 16세를 개명시켜 위로부터의 개혁을 성취하는 데 실패했다. 군주는 신민의 이익을 위해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고, 귀족은 평민과 평등해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명군주가 출현한 중·동부 유럽에서 군주들은 중앙집권제를 강화하고 농민 각자를 직접 지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조세수취권을 확장하기 위한 이러한 개혁은 봉건영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무효로 돌아갔

고, 개명군주들은 농민봉기가 일어났을 때 이를 탄압하였다. 개명군주론은 구체제를 유지하며 부국강병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프랑스혁명 이후 유럽에서 완전히 사라졌다.<sup>499)</sup>

1895년 이래 대한제국 내에서 출판물을 통해 혁명개념을 구사하던 급진개혁 세력이 지향한 체제 개혁의 방향은 혼합정의 형태를 취한 입헌군주정이었다. 박영효 또한 젊은 의친왕을 옹립하는 ‘혁명’을 통해 이러한 체제 변혁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에 비해, 유길준을 대표로 하는 온건개혁 세력이 현실적으로 대한제국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정치체제는 개명군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단, 유길준의 『정치학』에서 보이는 ‘근세천제군주제’에 대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 개명군주는 법률을 준수하는 국가의 ‘관리자’여야만 한다. 개혁세력 내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양쪽이 발행한 정치 팸플릿에서 채택된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와 프러시아라는 상이한 역사적 전범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군사 및 토지·식산·농업 분야에 주력한 광무개혁의 내용으로 보아 고종은 개명군주 모델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한한 군권(君權)’(대한국국제 3조)의 ‘전제정치’(대한국국제 2조)를 선포한 1900년 대한국국제에서 알 수 있듯, 대한제국은 개명군주국이 아니었고 전제군주 고종의 부국강병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개명군주의 모델이 된 러시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자체가 나폴레옹전쟁과 자국의 내란과 혁명을 겪으면서 이러한 체제를 유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1900년대 전반 황성신문 지면을 통해 연일 보도된 러시아 전역의 혁명 봉기 소식에 의해 이미 그 조짐이 보였고, 1905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함으로써 확증되었다.

---

499) 주섭일, (프랑스혁명과 한말변혁운동 I) (서울: 일월서각, 1987), pp.38-40.

#### 4. 헌법혁명: 식민지 인민주권의 행방

『비율빈전사』는 “필리핀인이 스페인의 굴레를 벗어날 목적으로 일으킨(比人이 西班牙의 羈絆을 脫할 目的으로 起함)” “혁명전쟁(革命戰爭)”<sup>500)</sup>이 발발한 1896년 7월부터 1899년 1월 필리핀 제 1공화국의 헌법 공포까지를 다루고 있다. 책은 서두에서 “본국 인민은 자유를 향유하고 식민지 인민은 균점하지 못할 때에는 강력으로 본국과 분리함을 얻을지니”<sup>501)</sup>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식민지의 무장독립투쟁이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의해 정당화됨을 역설하고, 그 역사적 선례로 미국혁명을 들고 있다. 필리핀 독립군은 1898년 8월 1일 점령지역의 지방장관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각기대표한 인민의 지망(志望)을 표명하고 인민이 위탁한 임무와 각자 직무의 책임으로 전세계에 향하여” 필리핀군도의 독립을 선언한다. 혁명정부의 대통령으로는 에밀리오 아귀날도(Emilio Aguinaldo) 장군을 공인하였다. 이에 필리핀혁명정부의 대통령은 8월 6일 각국 정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필리핀인민의 ‘교전권(交戰權)’과 독립의 승인을 청구하였다.<sup>502)</sup> 여기에 함께 첨부한 필리핀 독립선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余는 比律賓國 革命政府의 大統領으로 權能을 行使하야 比國人民의 代表者로 先進文明諸國에 對하야 扶助를 求하고 革命軍의 交戰權과 獨立을 承認하기 切望하노니 此는 各強國이 人類無限의 進歩上 完全한 正義를 表明實行하고 弱者를 扶持하며 强者를 箝制하야 人民間의 權衡을 保維함에 在하니 此는 上帝께서 劃定하신 勢力이 有함 이로다.”<sup>503)</sup>

500) (한국개화기 문학총서: 역사·전기소설 5)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8), p.275.

501) (한국개화기 문학총서: 역사·전기소설 5), p.273.

502) (한국개화기 문학총서: 역사·전기소설 5), pp.299-302.

1899년 1월 21일 공포한 필리핀 공화국헌법은 불란서헌법을 가장 많이 본떴고, 벨기에, 멕시코, 과테말라, 니카라과, 마스타리카 등의 헌법을 참작하여 제작한 것이었다.<sup>504)</sup> 이 헌법은 “一國統治에 職責을 任함에는 國家最高權, 卽, 行政, 司法, 立法에 關하여 「몬테스큐」의 卓識으로 基礎를 作하여 一定한 範圍內에 各自 獨立케 하여 偏輕偏重한 弊害를 防禦하며 互相間의 均衡을 保維케 하고 普通選舉制度和 陪審制度를 設定”하였다.

“其헌법의 정신은 일반個人權의 卽 교육과 출판과 집회와 결사와 起業과 상업 등의 자유를 認許하고 개인互相의무의 卽 협동부조와 修學과 취업과 재산 등에 關한 事와 각자 생존을 유지함에 필요한 권리의무를 규정하였스니 其헌법은 彼「푸쎄랜타넷트」王統의 영국왕顯理二世가 「크라렌돈」회의에 在하여 영국 신민에게 허여한 일반자유와 「마꾸나칼타」(대헌장)중에 규정한 諸種자유와 佛國王「안리」四世가 「나트」칙령으로 공포하여 불란서혁명선언의 확정한 一切자유를 併하여 比國인민에게 부여하니라”<sup>505)</sup>

“一國통치에 職責을 任함에는 國家최고권 즉 행정사법입법에 關하여 「몬테스큐」의 卓識으로 기초를 作하여 일정한 범위내에 각자 독립케 하여 偏輕偏重한 폐해를 방어하며 互相間의 均衡을 保유케 하고 보통선거제도와 部審제도를 설정하니라”<sup>506)</sup>

“此공화국의 헌법은 上述한 성질이 有한 故로 全然히 민주주의를

503) (한국개화기 문학총서: 역사·전기소설 5), p.303.

504) (한국개화기 문학총서: 역사·전기소설 5), p.318.

505) (한국개화기 문학총서: 역사·전기소설 5), pp.318-319.

506) (한국개화기 문학총서: 역사·전기소설 5), p.319.



채용흡인즉 정부는 인민의 정부라 인민을 賴호야 立호고 인민을 爲호야 存함이오 주권을 인민에게 專屬호니 인민을 대표호는 입법부는 법률제정을 掌호고 행정사법의 二部는 其법률의 집행을 司호니 인민이 卽 일반권력과 국가주권의 淵源이라 고로 피선거인은 인민의 주권을 집행호는 대표자니라”<sup>507)</sup>

“비율빈공화국헌법 제 1장. 공화국

제 1조 全비율빈인민의 정치단체는 一國民을 조직호야 其국가를 비율빈공화국이라 칭함

제 2조 비율빈공화국은 자주독립함

제 3조 주권은 인민에게 專屬함”<sup>508)</sup>

일본이 러일전쟁의 강화조건으로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으리라는 소식이 전해진 뒤<sup>509)</sup> 두 달 후, 황성신문에는 헌정연구회에서 저술한 『헌정요의(憲政要義)』라는 소책자가 연재되기 시작했다. 이 책자를 저술한 취지는 “국민이 먼저 국가가 성립하는 요령을 깨달은 후에 정치의 사상이 시동(始動)하고, 정치의 사상이 동(動)한 후에 헌정(憲政)의 본의를 연구하고자 하는 이유”에서였다. 모두 10회에 걸쳐 게재된 이 연재기사에서 가장 먼저 실린 부분은 ‘국가의 본의(本義)’이다. 글은 “국가는 국민 만백성(國民萬姓)의 공동체(共同體)이니 군주 일인의 사유물(私有物)이 아니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며, 제왕은 군주국의 정치조직에 불과함을 강조한다.<sup>510)</sup> 두 번째 연재기사 ‘국가와 황실의 분별(國家及皇室의 分別)’에서도 국가를 군주와 떨어뜨려 추상화하는 사유 작업은 계속된다. 군주는 국가의 통치자

507) (한국개화기 문학총서: 역사·전기소설 5), p.319.

508) (한국개화기 문학총서: 역사·전기소설 5), pp.321-322.

509) 황성신문 1905년 5월 4일, 「日本の 媾和란 說」.

510) 황성신문 1905년 7월 15일, 「寄書 憲政研究會員梁漢默」.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국가의 사유자(私有者)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또, 국가는 국호(國號)나 정체(政體)의 변경, 왕실의 흥망에 의해 멸망하지 않는다. 국가가 망했다고 하는 것은, 근세의 폴란드처럼 국토가 분열되어 타국의 군현이 되고 그 군민이 노예가 되어 타국의 신첩(臣妾)이 된 경우로만 제한된다. 저자는 프랑스 루이 14세의 “짐의 몸이 곧 국가다(朕身이 卽國家).”라는 말과 프러시아의 프레드릭 대왕의 “짐은 국가의 상등공용인(上等公用人)이며 국고의 관리자”라는 말을 대비시켜, 국가와 황실의 분별을 명확히 보여주는 후자가 헌법의 원조(元祖)가 되었다고 평가한다.<sup>511)</sup>

다음으로 ‘주권(主權)’ 개념이 개진된다. “국가는 중민(衆民)의 합성체(合成體)이며 주권은 중민(衆民)의 합성력(合成力)”이다. 군주가 그 합성체되는 국가를 대표하게 되면 그 합성력인 주권을 지니게 되지만, 민주국에서는 의원에 주권이 귀속되기도 하고 군주국이라도 군주와 의원이 함께 나눠 가지기도 한다.<sup>512)</sup> 마지막으로 국민의 양대 의무로 병역과 조세의 의무를 든 뒤<sup>513)</sup>, 병역의무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고용되어 급료를 받는 용병이 아닌, 마땅한 국민의 의무로 일정한 기간 병역을 담당하는 국민개병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sup>514)</sup>

헌정연구회(憲政研究會)는 1905년 5월, 독립협회와 공진회(共進會)와 개신유학자들이 모여 설립하였다. 헌정연구회는 평의장직을 맡아 헌정연구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윤효정(尹孝定)이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체결된 데에 항의한 건으로 체포됨으로써 해산되었다.

511) 황성신문 1905년 7월 18일, [寄書 憲政要義 第二回].

512) 황성신문 1905년 7월 27일, [寄書 憲政要義 第六回].

513) 황성신문 1905년 8월 2일, [寄書 憲政要義 第七回].

514) 황성신문 1905년 8월 3일, [寄書 憲政要義 第七回(續)].

석방된 윤효정은 1906년 3월 대한자강회의 창립을 주도하는데, 여기에는 윤효정을 비롯하여 이준(李儁), 심의성(沈宜性), 홍필주(洪弼周), 이원궁(李源兢), 이기(李沂), 노일수(盧日壽), 윤병(尹秉), 유진형(兪鎭衡), 최강(崔岡), 김우식(金宇植) 등 헌정연구회에 참여했던 인물이 다수 참가하였다. 대한자강회에는 회장 윤치호를 비롯하여 지식영(池錫永), 정교(鄭喬), 이상재(李商在) 등 독립협회 계열의 인사와, 황성신문사(皇城新聞社)의 장지연(張志淵), 신채호(申采浩), 제국신문사(帝國新聞社)의 이종일(李鍾一), 남궁준(南宮濬), 정운복(鄭雲復), 대한매일신보사(大韓每日申報社)의 양기탁(梁起鐸), 박은식(朴殷植) 등 신문 관련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sup>515)</sup> 대한자강회는 1907년 헤이그밀사 사건으로 고종이 양위되고 황태자의 대리청정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반대하여 격렬하게 시위하다가 1907년 8월 21일 보안법이 적용되어 강제 해산되었다. 대한자강회가 해체된 뒤 상당수의 회원들은 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의 설립과 운영에 참가하였고<sup>516)</sup>, 남궁준, 윤효정, 장지연, 정운복, 홍필주는 1907년 11월 대한협회(大韓協會)를 창립하였다.<sup>517)</sup>

헌정연구회-대한자강회-대한협회는 인적 구성과 활동 면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연구회나 협회 등 학회의 이름을 내걸고 있었지만, 정치적 성격이 강했다. 대한자강회는 소수 지식인으로 이루어져있던 헌정연구회와는 달리 전국적 대중조직을 지향하면서 본격적인 계몽운동을 전개하였고, 다른 계몽운동단체, 학회 설립의 매개가 되기도 하였다. 대한협회의 경우 당시 일본 헌병대의 기밀문서에서 ‘정당’으로 분류될 정도였다.<sup>518)</sup> 같은 시기 청국에서 헌정연구

515) 최기영, “헌정연구회에 관한 일고찰”, 조항래 편저, (1900년대의 애국계몽운동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2), p.34.

516) 정관, “구한말 애국계몽단체의 활동과 성격”, 대구사학, Vol.20.21 (1982), pp.25-26.

517) 이현종, “대한협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성격”, 조항래(1992), p.146.

회가 혁명파에 비해 개량적이고 유보적인 정파였던 데 비해, 준 식민지 상황의 대한제국 말기에 ‘헌법’을 논하는 것은 매우 급진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1919년 3월1일 이후 만들어진 한성, 상해, 러시아령의 임시정부에서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헌법 제1조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서 서희경은 ‘민주공화국’,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이라는 근대 입헌주의의 핵심원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물었고, 그 답을 “장기간에 걸친 한국의 헌법혁명의 역사적 진화”에서 찾았다. 이것은 1948년 건국헌법이 근대헌정체제를 등장시키기 위한 한국사회의 거시적인 헌법혁명의 귀결의 의미를 가진다는 박명림 주장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 1910년대에 발표된 총 61개의 독립선언서를 분석한 김소진은 한국의 민주공화정체지향이 “갑오개혁 이후 독립협회를 거쳐新民회에 이르는 동안 발전하여온 내재적인 이념의 변화”라고 연구 발표한 바 있다.<sup>519)</sup> 제헌헌법에 새겨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주권재민의 조항과 각종 국민의 권리 조항들, 권력분립의 정신을 ‘헌법혁명’의 결과물로 파악할 때, 1907년이라는 문제적 시점에 출판된 『비율빈전사』에 그 전문이 게재된 필리핀 제 1공화국 헌법의 역사적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

518) 조항래(1992), p.182.

519) 박명림(2003); 서희경, 박명림(2007); 서희경(2008).

## 제 6장. 결론

최초로 ‘프랑스혁명(佛蘭西革命)’이라는 말을 국내에 소개한 것은 1896년의 『만국약사(萬國略史)』이다. 『만국약사』에는 ‘혁명(革命)’이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되었다. 첫 번째는 프랑스대혁명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고, 두 번째 ‘혁명(革命)’은 1852년 프랑스의 제 2 제정 수립을 가리킨다. 오늘날 혁명이라고 부르는 1830년의 7월혁명이 ‘내란(內亂)’이라고 표현되었고 1848년의 2월혁명은 ‘봉기(蜂起)’라고 표현된 데 비해, 루이 나폴레옹의 황제즉위를 ‘혁명(革命)’으로 지칭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국약사』는 프랑스혁명 과정의 폭력성과 합중정치가 야기한 정국 불안정과 공화국에 대해 부정적이며, 나폴레옹 1세와 나폴레옹 3세가 이룬 대내적 통합과 대외적 강성함에 호의적이다. 『만국약사』의 저자가 구사하는 혁명개념은 이중적 층위를 가진다. 『만국약사』가 제시하고 있는 프랑스 역사의 선례에서, 두 번의 혁명은 민권을 억압하고 정치에 실패한 전제 왕조에 대한 전복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왕을 처형하고 기득권자를 살육한 프랑스혁명의 폭력적 과정과 합중정치는 부정적으로 서술되고, 강력한 황제 중심의 입헌정체가 혁명의 최종적 형태로서 옹호된다. 이러한 『만국약사』 속 혁명개념에는 1889년 제국헌법을 공포하여 군주제 입헌국가로 거듭난 뒤 1895년 청일전쟁에 승리한 메이지 일본의 경험공간이 반영되어 있다.

갑오내각이 붕괴한 뒤 학부 발행 외국사 교과서에서는 ‘혁명(革命)’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18세기에서 19세기 중반까지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서술하고 있는 『아국약사』의 경우, 프랑스대혁명과 7월혁명에 대해 모두 ‘민란(民亂)’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만국약사』보다 2년 뒤에 나온 1898년의 『아국약사』에서 ‘혁명’이라는 말이

삭제되고 ‘민란’으로 대치된 것은, 인민에 의한 정치 체제변혁에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저자 혹은 번역자의 보수적 이념을 나타낸다. 『만국약사』가 입헌군주제로의 정치체제 변화를 권유하는 온건 진보적 개혁의 교과서라면, 『아국약사』는 전제왕조의 정치체제 유지를 위한 보수적 개량의 교과서이다.

『만국약사』의 혁명개념과 나폴레옹전쟁 서사는 역내에서 가장 먼저 입헌군주제로 변모한 일본의 조선 진출 의도가 19세기 아시아 지역 질서의 패권적 현상 변경에 있었음을 드러낸다. 갑오개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본인 고문관이 쓴 『만국약사』를 통해 ‘프랑스혁명’이라는 말이 들어왔지만, 학부를 통해 발행된 관찬(官撰) 외국사 교과서들은 1900년까지 전통적인 혁명개념을 고수하며, 정치체제 변경을 목적으로 한 인민 폭동을 ‘민란’이라고 개념화하였다. 이처럼, 이 시기 혁명개념은 서로 다른 역사해석과 정치적 전망의 교차점이자 전선으로 작용하였다. 혁명이라는 어휘의 채택 여부와 혁명을 서술하는 서사의 방식과 논조에서 저자의 정치적 진영을 가늠하게 되는 것이다.

1895년에 발행된 유길준의 『서유견문』에는 ‘혁명(革命)’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다. 『서유견문』에는 혁명의 결과로 이루어진 정치체제에 대한 정태적 기술이 있을 뿐, 체제변동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동태적 서술이 전무하고, 혁명이라는 단어나 개념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서유견문』에서 유길준은 합중공화보다 군민공치의 입헌군주정을 선호한다. 이것은 갑신정변의 경험을 통해 유길준이 가지게 된 급진적 정치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제왕권을 인식한 자기 검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만국약사』 이후 외국사 단행본에서 ‘혁명’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한 때는 1899년 중반이다. 1899년 6월 황성신문사에서 번역, 간행된 『미국독립사』에서 영국의 청교도혁명을 ‘혁명’으로 언표한 사례가 처음 보인다. 『미국독립사』의 저자는 미국 독립전쟁을 영국 청교도혁명의 연장전 상에서 파악, 그 근본이념으로 ‘자유평등주의’를 제시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독립전쟁을 ‘혁명’으로 개념화한다. 정치적 자유와 평등이라는 청교도혁명의 이념은 미국독립혁명에서 국제적 수준에 투사되어 민족적 자주와 독립의 이념을 탄생시켰다. 또한 1896년 『만국약사』의 혁명개념이 입헌군주정으로 귀착된 데 비해, 『미국독립사』의 혁명개념은 ‘평민정치’, 혹은 ‘합중정치’, 즉 민주정으로 수렴된다.

1899년 6월에 발행된 『미국독립사』에 실린 미합중국헌법의 내용과 1899년 8월에 반포된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를 비교해 보면, 일단 그 형식적 유사성이 눈에 띄고, 그로 인해 내용의 차이가 더욱 도드라진다. 미합중국헌법은 선거에 의한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국회, 법원, 행정부 간에 삼권분립이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과 국회가 상호 견제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다. 또, 대통령의 관리 임용에는 원로원의 승인이 요구된다. 그에 비해 대한국국제에서 대한제국은 전제정치이며, 황제가 무한 불가침의 군권을 향유하여 입법 · 사법 · 행정 · 선전(宣戰) · 강화 · 계엄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자의 형식적 유사성과 내용상의 극명한 대조는, 정부가 합중정치와 입헌을 주장하는 개혁 세력에 대한 대응으로써 대한국국제를 입안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1900년 6월 황성신문사에서 발행된 『법국혁신전사(法國革新戰史)』에서 프랑스혁명은 인민에 의한 직접통치가 아니라 “군민공치와 유

사”한 헌법, 즉, 총재에 대한 통치권의 위임과 대의제로 귀결된다. 프랑스에서 대혁명 초기의 사상적 계기가 루소였다면 혁명의 정착과 제도화 단계에서는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과 ‘균형’ 이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실제로 민선의회의 헌법 제정을 위해 설치된 11인 위원회에서 1791년과 1793년 헌법은 권력의 균형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고 비판되었고, 미국 헌법을 모델로 한 혼합정체 모델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온건공화파와 입헌군주주의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주장한 혼합정체는, 양원제를 통해 입법부에 민주주의와 귀족주의 요소를 모두 반영하고, 행정부에는 군주제적 요소를 남겨둔 것이었다.

독립협회 해산 직후 황성신문사에서 연달아 출판된 『미국독립사』와 『법국혁신헌전사』는 정부에 의해 좌절된 독립협회의 개혁 구상안을 계몽하고 선동하기 위한 정치 팸플릿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의 교훈으로 도출된 정치체제를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조선에 구현하려 했던 독립협회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독립협회의 개혁운동이 보수정권의 무력 탄압으로 좌절되고 1년 6개월 뒤 나온 『법국혁신헌전사』에서 프랑스의 혁명 세력은 루이 16세를 처형하였다. 이전 시기의 정치언어에서 ‘혁명’이라는 말이 금기시되고 체제변동의 지향점이 입헌군주제였던 반면, 1899년을 기점으로 대한제국의 서양사 단행본과 황성신문 지면에서는 ‘혁명’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 이것은 1898년 말 독립협회 해체를 계기로 한국의 개혁 세력이 왕조를 통한 체제 전환의 희망을 버리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건양과 광무 초기 대한제국의 개혁 세력은 우리 정치사회에 적합한 “군주, 귀족, 평민간의 권력균형”을 구현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모색



하고 있었다. 독립협회와 박영효로 대표되는 급진적 개혁론자들은 1787년 미국 헌법과 1795년 프랑스 헌법으로부터 군주, 양반, 계몽된 평민의 일부가 권력을 분점하는 혼합정을 구상하였다. 그에 비해 유길준 등의 온건 개혁론자들은 근대 이행기에 국가 근대화에 드는 비용을 확보하고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의 통일성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프로시아의 계몽전제군주정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왕실과 권문세대로 이루어진 기득권 보수 세력은 개혁의 수준을 넘어서는 제도 차원의 개혁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었다. 오히려 개혁 세력의 대중 운동과 민권 신장에 위협을 느끼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개혁의 요구를 억압하였다.

1900년 박영효는 ‘인권론(人權論)’에서 민본(“民維邦本”)과 탕무혁명이라는 전통적 혁명 레토릭을 통해 인민의 자유와 권리 및 저항권이라는 근대 혁명의 이념을 개진한다. 그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탕무와 결주라는 전통적 혁명 레토릭을 통해(“古에 桀紂의 亡국은 그此를 奪은 者요 湯武의 興국은 그 奪치 아니한 者”) 프랑스혁명 인권선언의 정신을 역설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1900년 인권론에서 박영효가 겨냥한 청중이자 동원하려는 대상은 일반 인민이다. 정치변동의 주체 및 방법에 대한 박영효의 결정적 인식 전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혁명’이라는 개념은 특정한 시공간이 낳은 역사적 발명품이지만, 인쇄 자본주의 발달은 후발지역의 정치공동체에서 이것을 ‘표절’하여 새로운 변종을 주조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자본주의적 민주 혁명의 시초인 프랑스 혁명 자체는 조직되고 계획된 것이 아니었지만, 불세비키 혁명은 프랑스 혁명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나름의 조직적인 이론화와 실천적 실험을 통해 ‘계획된’ 혁명이었다. 산업자본주의의

기반이 존재하지 않았던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혁명이 주조된 덕분이었고, 볼셰비키 혁명은 다시 중국의 마오쩌둥에 의해 후발사회 혁명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이처럼 혁명은 “조립되고 이전될 수 있다.” 박영효에게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 이념을 제공한 것이 일본의 출판물이었다면,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실패를 경험한 박영효에게 한국적 혁명 창출의 가장 현실적인 모형으로 다가온 것은 중국이었다. 박영효는 1899년 이래 쑨원과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중국과 한국의 혁명운동을 공조하고자 하였다.

박영효가 이 시기 혁명론의 중심이었다면, 혁명에 반대하지만 개혁을 주장하는 개량론의 중심에는 유길준이 있다. 유길준은 미간행 원고 『정치학(政治學)』에서 프랑스대혁명 이래 프랑스의 정체변동과 헌정사를 기술하는 저자의 태도는 호의적이지 않다. 무엇보다도 혁명 이후 설립된 민주 의회가 통일성 있는 권력을 창출하지 못함으로써 인민의 뜻에 의해 전제군주정으로 회귀하는 양상이 반복되는 것을 비판한다. 유길준이 라트겐의 『정치학』을 번역한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생각된다. 첫째, 군주권력이 약한 영국보다 군주권력이 강한 대륙국가들의 탈봉건 체제변동 과정이 대한제국의 현실에 더 적절했다. 둘째, 프랑스혁명이 유럽에 미친 영향과 나폴레옹전쟁의 침략성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메이지유신 이후 청일전쟁에 나선 일본이 아시아에 미칠 영향과 대한제국의 대응방법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 결과 유길준은 조선에 적합한 권력균형의 모델을 근세천제군주제, 즉 프러시아식 계몽절대군주에서 찾고 있다.

1900년까지의 혁명개념이 서양사 번역서 단행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면, ‘폐쇄시대’, 즉, 1899년에서 1904년 사이에는 신문지면, 특히 황성신문을 중심으로 세계 각처의 혁명 소식이 전해졌다. 이 시

기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변화는 세계 곳곳에서 혁명이 임박했거나 혁명이 일어났다는 기사들의 대거 출현이다. 이 시기 혁명 세력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폭동’, ‘봉기’, ‘소요’, ‘내란’, ‘분란’, ‘반란’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지만 핵심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혁명운동’이다. ‘혁명운동’이라는 말의 출현은, 이제 혁명이 귀족이나 왕족에 의해 궁중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위정치가 아니라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사회운동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혁명세력에 대해서는 ‘단비(團匪)’, ‘반도(叛徒)’ 등 부정적인 표현과 ‘혁명당(革命黨)’이라는 중립적 표현이 혼용된다. 혁명지도자에 대해 초기의 ‘역범(逆犯)’이나 ‘수괴(首魁)’에서 ‘수령(首領)’, ‘영수(領首)’로의 인식 변화가 눈에 띈다. 1903년 이후에는 ‘혁명군(革命軍)’, ‘혁명전쟁(革命戰爭)’ 등의 표현이 부쩍 늘어남으로써, 혁명 집단이 자체적인 전쟁능력과 전술을 갖춘 무장세력으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것은 18세기와 19세기에 혁명과 전쟁을 통해 커진 국가의 진압 능력에 대항하여, 혁명세력 역시 더욱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폭력수단을 취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인민과 국가와 자유의 적에 대한 처단으로서 행해지는 황제나 정부 요인들에 대한 암살을 통해, 전제왕조가 반역자들에게 자객을 보내던 앞 시기의 정치적 논리가 역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자유만세”, “전제정치 파괴”, “황제주의 타파”를 위한 혁명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은 혁명운동이 비밀결사에서 벗어나 공공연한 ‘선언서’를 채택하고 발표하도록 추동했다.

애국계몽기 혁명담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루소가 부각되면서 인민의 일반의지와 천부적 자연권에 기반한 혁명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혁명의 선취요건으로 민지(民智)를 강조, 실력양성론으로 귀결된다. 둘째, “혁명유신(革命維新)”이라는 일본말 어휘가 출현하면서 혁명의 급진성이 부인되고, 한국의 현 상황에서 혁

명의 불가능성이 강조된다. 의병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신문지법에 의한 통감부의 언론 검열 속에서 ‘혁명’을 직접적으로 찬성하고 선동하는 언설을 지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세 종류의 글에 주목하게 된다. 첫째, 1907년 발행된 『비율빈전사』와 그 속에 전문이 기재되어 있는 민주공화헌법이다. 둘째, 러시아와 중국 혁명당의 혁명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일련의 외국 단신들이다. 셋째, 이러한 프로그램의 한국적 수용이라고 할 수 있는 1909년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관련 논설이다.

1895년 이래 대한제국 내에서 출판물을 통해 혁명개념을 구사하던 급진개혁 세력이 지향한 체제 개혁의 방향은 혼합정의 형태를 취한 입헌군주정이었다. 박영효 또한 젊은 의친왕을 옹립하는 ‘혁명’을 통해 이러한 체제 변혁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에 비해, 유길준을 대표로 하는 온건개혁 세력이 현실적으로 대한제국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정치체제는 개명군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단, 유길준의 『정치학』에서 보이는 ‘근세천제군주제’에 대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 개명군주는 법률을 준수하는 국가의 ‘관리자’여야만 한다. 개혁세력 내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양쪽이 발행한 정치 팸플릿에서 채택된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와 프러시아라는 상이한 역사적 전범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군사 및 토지·식산·농업 분야에 주력한 광무개혁의 내용으로 보아 고종은 개명군주 모델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한한 군권(君權)’(대한국국제 3조)의 ‘전제정치’(대한국국제 2조)를 선포한 1900년 대한국국제에서 알 수 있듯, 대한제국은 개명군주국이 아니었고 전제군주 고종의 부국강병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개명군주의 모델이 된 러시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자체가 나폴레옹전쟁과 자국의 내란과 혁명을 겪으면서 이러한 체제를 유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1900년대 전

반 황성신문 지면을 통해 연일 보도된 러시아 전역의 혁명 봉기 소식에 의해 이미 그 조짐이 보였고, 1905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함으로써 확증되었다.

1907년 고종의 강제 양위를 기점으로 체제개혁 구상에서 입헌군주제는 완전히 폐기되고 민주공화주의가 대두한다. 1907년 발행된 안국선의 『정치원론』은 이제까지 살펴본 『미국독립사』의 1787년 미국 헌법, 『법국혁신헌법』의 1795년 프랑스헌법, 1898년 독립협회의 중추원 관제 개편안에서 제시된 헌법들이 모두 ‘혼합정체’를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왕권과 신권이 서로 견제해 온 한국 정치문화에서, 군주나 인민에게 권력을 독재시키는 군주정이나 공화정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웠다. 1895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타파되었지만, 여전히 문벌과 세도가 남아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독립협회는 칙령의 실행 기관에 지나지 않는 내각과 전제군주 사이에 양원으로 이루어진 중추원이라는 매개권력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몽테스키외가 프랑스 절대군주의 권력을 법률에 의해 제한하고 보다 온건한 형태의 입헌군주로 변화시키고 싶어 했던 것처럼, 독립협회 또한 민주정과 귀족정과 군주정의 장점을 고루 갖춘 혼합정 형태를 통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1907년의 『비율빈전사』는 1895년 이래 축적된 역사적 의미를 전면적으로 드러내면서 대한제국기의 혁명개념의 종합이자 정점을 보여준다. 장장 몇십 페이지에 걸쳐 전문이 게재된 비율빈 제 1공화국 헌법은 “주권은 인민에 전속함”(2조)이라고 하여 분리될 수도 박탈될 수도 없는 주권의 소재로서 ‘인민’을 표상한다. 또, “민주대의제”와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을 못박고 있다. 이제, 인민의 직접적 정치참여를 의미하는 ‘민주’라는 말을 통해서 제한권력과 입헌권

력은 통합된다. 같은 시기 청국에서 헌정연구회가 혁명파에 비해 개량적이고 유보적인 정파였던 데 비해, 준 식민지 상황의 대한제국 말기에 ‘헌법’을 논하는 것은 매우 급진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적 자유와 독립을 위한 폭력 투쟁이 역사 진보의 불가피한 방향임을 보여주는 러시아와 중국의 혁명 동향 기사가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1909년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였다. 그리고 해외 무장독립투쟁 단체들이 스스로를 ‘한국혁명군’과 ‘조선혁명당’으로 개념화하기 시작한다. 이제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의 이념은 러시아, 중국, 필리핀의 혁명 현실과 결합하여 한국적 혁명의 프로그램을 낳기에 이르렀다. 1910년대에 발표된 독립선언서들은 거의 예외 없이 민주공화정체를 지향한다. 1920년대 한성, 상해, 러시아령의 임시정부들 헌법에서도 일제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천명한다. 이와 관련해서 서희경은 ‘민주공화국’,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이라는 근대 헌법의 핵심원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물었고, 그 답을 장기간에 걸친 한국의 헌법혁명의 역사적 진화에서 찾았다. 1948년 제헌헌법에 새겨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주권재민의 조항과 각종 국민의 권리 조항들, 권력분립의 정신은 이러한 ‘헌법혁명’의 결과물로 파악될 수 있다.

대한제국에는 혁명이 없었다. 그러나 혁명의 언어는 면면히 살아남아 역사적 의미의 충위를 더해가며 그 자체로 또 다른 혁명적 현실을 추동하였다.

[표 1] 대한제국기 외국정치사 번역서 일람

1895년에서 1910년 사이에 단행본으로 발간되어 관립·사립 신식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된 외국 정치사 번역서는 다음과 같다.<sup>520)</sup>

- \* 마간서 원본, 리제마태 번역, 채이강 술고, 학부편집국 역, 『태서 신사』 상, 하 (1897.5)
- \* 關裴迪(英) 저, 학부편집국 현채 초역(抄譯), 『俄國略史』 (1898.4)
- \* 저자 미상, 학부편집국 역, 『中日略史合編』 (1898.4)
- \* 林樂知(美)·蔡爾康(淸) 공역편(共譯編), 현채(玄采) 중역(重譯), 『中東戰記』 상, 하 (皇城新聞社, 1899.3)
- \* 澁江保(시부에 다모츠) 저, 현채 역, 『美國獨立史』 (황성신문사, 1899.6)
- \* 澁江保(시부에 다모츠) 저, 어용선(魚瑑善) 역, 『波蘭末年戰史』 (搭印社, 1899.11)
- \* 澁江保(시부에 다모츠) 저, 역자 미상, 『法國革新戰史』 (황성신문사, 1900.6)
- \* 梁啓超 찬(撰), 현채 역, 이기(李琦) 교(校), 『淸國戊戌政變記』 (학부편집국, 1900.9)
- \* 원저자 미상, 박영무(朴永武) 역, 『日露戰記』 (博文社, 1904.6)
- \* 柴四郎(시바 시로) 저, 中國 麥鼎華 역, 장지연(張志淵) 중역, 『埃及近世史』 (황성신문사 번간, 1905.9)
- \* 岡本監輔(오카모토 간스케) 저, 현채 역편, 『萬國史記』 (皇城中署, 1905)

---

520) 유탁일, “개화기교과용도서총목록”, 한국학논집, Vol.2 (1980), pp.16-17;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75), pp.170-171; 강윤희, (개화기의 교과용도서)(서울: 교육출판사, 1973).

- \* 馬旅西(英) 저, 李提摩太(美) 역, 현채 중역, 『法蘭西新史』 (興學社 발행, 1906.7)
- \* 梁啓超 저, 현채 역, 『越南亡國史』, (현공림, 1906.11/1907.5)
- \* 원저자 미상, 현채 역, 『東西洋歷史』 (補文館 발행, 1907.5)
- \* 鹽川一太郎 저역, 현채 역, 『美國獨立史』 (황성신문사 발행, 1907.5)
- \* 棒時 저, 안국선(安國善) 역, 『비율빈전사(比律賓戰史)』 (보성관, 1907.7)
- \* 원저자 미상, 현채 역, 『日本史記: 附 維新史』 (현채, 1907.12)
- \* 松井廣告 저, 김덕균(金德均) 역, 『意大利獨立史』 (鄭喜鎮 발행, 1907.5)
- \* 野々村金五郎 저, 류문상(劉文相) 역, 『拿破崙戰史 上』 (義進社 발행, 보성사 인쇄, 1908.8)
- \* 박문서관 편집부 역술, 『拿破崙戰史 全』 (박문서관 발행, 탑인사 인쇄, 1908.1/ 1908.2)
- \* 유옥겸(兪鈺兼) 저, 유성준(兪星濬) 교(校), 『東洋史教科書』 (廣韓書林, 1908.8)
- \* 山内正瞭(야마우치 마사아키라) 著, 이채우(李埰雨) 역술, 원영의(元泳義) 교열, 『世界殖民史』 (이채우[李埰雨] 발행, 1908.5)
- \* 澁江保(시부에 다모츠) 저, 유길준 역술, 『普魯士國 厚禮斗益大王七年戰史』 (廣學書館, 1908.5)
- \* 松井廣告 저, 유길준(兪吉濬) 역, 『英法露土諸國哥利米亞戰史』 (廣學書鋪, 1908.6)
- \* 張宗良 口譯, 王韜 輯撰, 현채 번역, 『普法戰記』 (玄公廉 발행, 1908.8)
- \* 高桑駒吉(다카쿠와 고마키치) 저, 유승겸(兪鈺兼) 編述, 『中等萬國史』 (唯一書館, 1907/1909.8)



\* 김상연(金祥演) 찬술, 『정선 만국사(精選萬國史)』 (廣韓書林, 1909.9)

\* 유옥겸(兪鈺兼) 저, 유성준(兪星濬) 교(校), 『西洋史教科書』 (廣韓書林, 1910.3)

## 참고문헌

### 1. 1차문헌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각사등록 근대편

국역 승정원일기

국역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석파학술연구원 편, 2005, 『홍선대원군사료회편』, 서울: 현음사

김용구 편, 1995, 『한일외교미간극비사료총서 8』, 서울: 아세아문화사.

속음청사

윤치호일기

정교, 2004, 『대한계년사』, 서울: 소명출판.

황현, 1996, 『매천야록』, 서울: 교문사.

“유치형일기”, 1983, 서울대학교, 『법학』, Vol. 24, No.4.

한성주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해조신문

신한민보

신한국보

해조신문

친목회회보

대조선독립협회회보

대한자강회월보

학부편집국, 1896, 『만국약사』.

野々村金五郎 저, 1908, 류문상 역, 『拿破崙戰史 上』, 의진사.

박문서관 편집부 역술, 1908, 『拿破崙戰史 全』, 박문서관.

감배적 저, 학부편집국 현채 초역, 1898, 『俄國略史』, 발행자 불명.

鹽川一太郎 저역(著譯), 1899, 『美國獨立史』, 황성신문사.

澁江保 저, 역자 미상, 1900, 『法國革新戰史』, 황성신문사.

안국선, 1907, 『比律賓戰史』, 보성관.

\_\_\_\_\_, 1907, 『政治原論』, 황성신문사.

신재일 편, 『정치원론』, 2004, 서울: 관악사.

유길준 지음, 한석태 역주, 1998, 『정치학』,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李能和, 大正7[1918], 『朝鮮佛教通史』, 신문관.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1996, 『만국사기』,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1978, 『한국개화기문학총서 II: 역사·전기소설』, Vol. 2,3,4,5,9, 서울: 아세아문화사.

유길준전서편찬위원회 편, 1971, 『유길준전서』, Vol. 1,3,4,5, 서울: 일조각.

이능화 편, 조선불교통사역주편찬위원회, 2010, 『역주 조선불교통사 2』,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Ponce, Mariano, 1932, *Cartas Sobre La Revolución 1897-1900*, Manila: Bureau of Printing, 1932.

\_\_\_\_\_, 1965, *Sun Yat-Sen: the Founder of the*

*Republic of China*, Manila: Filipino-Chinese Cultural Foundation, Inc.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미디어가온 고신문검색 [<http://www.mediagaon.or.kr>]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DB [<http://www.jacar.go.jp>]

## 2. 2차문헌

### (1) 단행본

#### A. 국내문헌

강만길, 1995, 『한국사 24: 한국사의 이론과 방법 2』, 서울: 한길사.

\_\_\_\_\_, 2008, 『한국민족운동사론』, 파주: 서해문집.

강운호, 1973, 『개화기의 교과용도서』, 서울: 교육출판사.

교수신문 기획 엮음, 2005/2008, 『고종황제 역사청문회』, 서울: 푸른역사.

구선희, 1999, 『한국근대 대청정책사 연구』, 서울: 혜안.

김경집, 1998, 『한국근대불교사』, 서울: 경서원.

김도형, 1994, 『대한제국기의 정치 사상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김병철, 1975, 『한국근대변역문학사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김소진, 1999, 『한국독립선언서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김순석, 2003,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서울: 경인문화사.

- 김용구, 1997,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서울: 나남출판.
- 김용섭, 1975, 『한국근대농업사연구』, 서울: 일조각.
- 김학준, 2000, 『한말의 서양정치학 수용연구: 유길준, 안국선, 이승만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효전, 2000,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국권회복과 민권수호』, 서울: 철학과현실사.
- 김홍수, 1990, 『한국 근대역사교육 연구』, 서울: 삼영사.
- 박성진, 2003, 『(한말~일제하) 사회진화론과 식민지사회사상』, 서울: 선인.
- 박종근 저, 박영재 역, 1989, 『청일전쟁과 조선』, 서울: 일조각.
- 박찬승, 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민족주의 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 서울: 역사비평사.
- 배경한, 2007, 『쑨원과 한국: 중화주의와 사대주의의 교차』, 파주: 한울.
- 신용하, 1981 [1976], 『독립협회연구』, 서울: 일조각.
- 우림걸(牛林杰), 2002. 『한국 개화기문학과 양계초』,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유영익, 1990, 『갑오경장연구』, 서울: 일조각.
- \_\_\_\_\_, 1998, 『동학농민봉기와 갑오경장: 청일전쟁기(1894~1895) 조선인 지도자들의 사상과 행동』, 서울: 일조각.
- \_\_\_\_\_, 2002, 『젊은 날의 이승만: 한성감옥생활(1899~1904)과 옥중잡기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윤건차, 1987, 『한국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 서울: 청사.
- 윤병희, 1998, 『유길준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왕현종, 2003,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서울: 역사비평사.
- 이광린, 1999[1969], 『한국개화사연구』, 서울: 일조각.

- \_\_\_\_\_, 1992, 『유길준: 닫힌 사회에 던진 충격』, 서울: 동아일보사.
- \_\_\_\_\_, 1993, 『개화기의 인물』,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_\_\_\_\_, 2002, 『한국사강좌5: 근대편』, 서울, 일조각.
- 이삼성, 2011[2009],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2: 근대 동아시아와 말기조선의 시대구분과 역사인식』, 파주: 한길사.
- 이중환, 이두영, 양문길, 양평 지음, 2001, 『우리출판 100년』, 서울: 현암사.
- 이해경, 1997, 『나의 아버지 의친왕』, 서울: 도서출판 진.
- 전복희, 1996,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구한말을 중심으로』, 서울: 한울.
- 정세현, 1977, 『근대 중국 민족운동사 연구: 손문의 반청혁명과 회당』, 서울: 일지사.
- 정용화, 2004, 『문명의 정치사상: 유길준과 근대한국』,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정관, 1995, 『구한말기 민족계몽운동 연구』, 서울: 형설출판사.
- 조항래, 1992, 『1900년대의 애국계몽운동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 주섭일, 1987, 『프랑스혁명과 한말변혁운동 I』, 서울: 일월서각.
- 차배근, 2000, 『개화기 일본유학생들의 언론출판활동연구(I) 1884~1898』,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천정환, 2004, 『근대의 책읽기: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서울: 푸른역사.
- 최기영, 2003, 『한국 근대 계몽사상 연구』, 서울: 일조각, 2003.
- 한국경제사학회, 1970, 『한국사시대구분론』. 서울: 을유문화사.
- 한상일, 2002, 『아시아 연대와 일본제국주의: 대륙낭인과 대륙팽창』, 서울: 도서출판 오름.
- 홍태영, 2006, 『몬테스키외 & 토크빌』, 파주: 김영사.

\_\_\_\_\_, 2008, 『국민국가의 정치학』, 서울: 후마니타스.

## B. 외국문헌

Anderson, Benedict. 2005, *Under Three Flags: Anarchism and the Anti-colonial Imagination*, London, New York: Verso.

Armstrong, David. 1993, *Revolution and World Order: The Revolutionary State in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ell, Duncan ed., 2007, *Victorian Visions of Global Order: Empir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Nineteenth-Century Political Though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rlik, Arif. 1991, *Anarchism in the Chinese Revolu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pistola, Silvino V. 1996, *Hong Kong Junta*, Quezon City: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Howland, Douglas. 2002, *Translating the West: Language and Political Reason in Nineteenth-Century Jap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_\_\_\_\_ 2005, *Personal liberty and public good: the introduction of John Stuart Mill to Japan and China*,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Jensen, Marius B. 1970[1954], *The Japanese and Sun Yat-sen*,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Karl, Rebecca E. 2002, *Staging the World: Chinese Nationalism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Duke University Press.

Lackner, Michael. Amelung, Iwo., Kurtz, Joachim. eds. 2001,

*New terms for new ideas : Western knowledge and lexical change in Late Imperial China*, Leiden; Boston: Brill.

Liu, Lydia H. 1995, *Translingual practice: literature, national culture, and translated modernity—China, 1900–1937*,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Long, David. and Schmidt, Brian C. ed, 2005, *Imperialism and Internationalism in the Discipline of International Relation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ugach, Noel H. 1979, *Paul S. Reinsch: Open Door Diplomat in Action*, New York: KTO Press.

Palonen, Kari. 2003, *Quentin Skinner: History, Politics, Rhetoric*, Cambridge: Polity Press.

Richter, Melvin. 1995, *The History of Political and Social Concepts*, Oxford University Press.

Skinner, Quentin. 1998, *Liberty Before Liberal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1978.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Vol.1,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_\_\_\_\_. 2002, *Visions of Politics Vol.1: Regarding meth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mid, Andre. 2002, *Korea between empires 1895–1919*,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Schroeder, Paul W. 1994, *Transformation of European Politics 1763–184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kocpol, Theda.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Teschke, Benno. 2003. *The Myth of 1648: Class, Geopolitics, and the Making of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 New York: Verso.

Williams, Raymond. 1983,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London: Fontana.

굴리엘모 카발로·로제 샤르티에 편, 이종삼 옮김, 2006, 『읽는다는 것의 역사』, 서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로제 샤르티에, 백인호 옮김, 1998, 『프랑스 혁명의 문화적 기원』, 서울: 일월서각.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2002[1983].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출판.

에릭 홉스봄, 정도영·차명수 옮김, 1999[1962], 『혁명의 시대』, 서울: 한길사.

제임스 탈리 엮음, 유종선 옮김, 『의미와 콘텍스트-퀸틴 스키너의 정치사상사 방법론과 비판』, 서울: 도서출판 아르케.

高橋亨, 昭和48[1973], 『李朝佛教』, 東京: 國書刊行會.

花立三郎, 1982, 『徳富蘇峰と大江義塾』, 東京: べりかん社.

山室信一, 1994, 『法制官僚の時代 國家の設計と知の歷程』, 東京: 木鐸社.

———, 2001, 『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 基軸・連鎖・投企』, 東京: 岩波書店.

陳德仁·安井三吉, 2002, 『孫文と神戸』, 神戸: 神戸新聞総合出版センター.

青木功一, 『福澤諭吉のアジア』(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1)

기다 겐, 김신재·심정명·윤여일 공역, 2005, 『현대사상지도』, 서울: 산치림.

마에다 아이, 유은경·이원희 옮김, 2003, 『일본 근대 독자의 성립』,

서울: 이룸.

미조구치 유조, 마루야마 마츠유키, 이케다 토모히사 공저, 김석근, 김용천, 박규태 옮김, 2003, 『중국사상문화사전』, 서울: 민족문화문고.

한석희 지음, 김승태 옮김, 1990, 『일제의 종교침략사』, 서울: 기독교문사.

호리가와 테츠오 저, 왕재열 편역, 1985, 『손문과 중국혁명』, 서울: 역민사.

陳建華, 2000, 『革命的現代性: 中國革命話語考論』,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리찌허우, 2005, 『중국현대사상사론』, 파주: 한길사.

진관타오, 류칭핑 지음, 2010a[2008], 『관념사란 무엇인가 1』, 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진관타오, 류칭핑 지음, 2010b[2009], (관념사란 무엇인가 2), 서울: 도서출판 푸른역사.

## (2) 논문

### A. 국내문헌

강만길, 1978, “대한제국의 성격”, 창작과 비평, Vol.48.

강동국, 2004, “조선을 둘러싼 러.일의 각축과 조선인의 국제정치인식: ‘공아론(恐俄論)’과 ‘인종중심의 국제정치론’의 사상연쇄”, 일본연구논총, Vol.20.

구대열, 2003, “자유주의 열강의 한반도 진출과 그 성격(1870-1910)”, 한국사상과 문화, Vol.21.

- 김경창, 1985, “갑신정변수모자의 망명 10년의 행적: 김옥균·박영효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Vol. 11.
- 김기주, 2004, “개항기 조선정부의 대일유학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Vol.29.
- \_\_\_\_\_, 2006, “갑오개혁기 조선정부의 대일유학정책”, 역사학연구, Vol.27.
- \_\_\_\_\_, 2008, “아관파천 후(1896~1903) 한국정부의 유학정책”, 역사학연구, Vol. 34.
- 김성학, 1995, “초기(1895-1910) 서구 교육학의 도입과 그 성격”, 교육사회학연구, Vol.5 No.1.
- 김영훈, 2010, “개화기 교과서 속의 세계와 역사: 만국지리(萬國地理)와 만국사(萬國史)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Vol.16, No.2.
- 김용섭, 1976, “서평 『독립협회연구』”, 한국사연구, Vol.12.
- 김용흠, 2006, “인조반정(仁祖反正)의 명분과 정권의 정통성 논쟁: 인성군 이공 처벌 논의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Vol.27.
- 김종준, 2010, “광무양안의 자료적 성격 재고찰”, 한국문화, Vol.51.
- 김현숙, 1998, “한말 고문관 러젠드르(李善得)에 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Vol.8.
- \_\_\_\_\_, 1999, “한말 조선 정부의 고문관정책(1882~1904)”, 역사와 현실, Vol.33.
- \_\_\_\_\_, 1999, “한말 조선 정부의 고문관정책(1882~1904)”, 역사와 현실, Vol.33.
- 김현철, 1999, “박영효의 「1888 년 상소문」에 나타난 민권론의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Vol.33, No.4.
- \_\_\_\_\_, 2000a, “제 1차 일본 망명시기 박영효의 활동과 갑신정변 가담 개화파”,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1, No.2.
- \_\_\_\_\_, 2000b, “제 2차 일본 망명시기 박영효의 행적과 정변시도”,

- 현대사연구(구 근현대사강좌), Vol.11.
- 김흥수, 1999, “개화세력의 교육사상”, 국사관논총, Vol.83.
- 나인호, 2002, “언어혁명과 유럽사회의 근대화: 코젤렉 개념사의 테마”, 한국사학사학보 Vol. 6.
- 노연숙, 2009, “안국선의 『比律賓戰史』와 번역 저본 『南洋之風雲』 비교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Vol.29.
- 도면희, 1993, “근대=자본주의사회 기점으로서의 갑오개혁”, 역사와 현실, Vol.9.
- \_\_\_\_\_, 1996, “정치사적 측면에서 본 대한제국의 역사적 성격”, 역사와 현실, Vol.19.
- 박결순, 1992, “한말 학부의 편찬사서와 그 역사인식”, 충북사학, Vol.5.
- 박명림, 2003. “한국의 초기 헌정체제와 민주주의: ‘혼합정부’와 ‘사회적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1.
- 박종성, 1995, “갑오농민봉기의 혁명성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12.
- 박찬승, 1984, “활빈당의 활동과 그 성격”, 한국학보, Vol.10, No.2.
- \_\_\_\_\_, 2001, “1890년대 후반 관비유학생의 독일유학”, 『근대교류사와 상호인식』, 서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백옥경, 2010, “한말 세계사 저·역술서에 나타난 세계 인식”, 한국사상사학 Vol.35.
- 백종국, 1995, “니카라과의 혁명과 민주화,” 라틴아메리카연구, Vol.8.
- 변승웅, 1992, 「근대사립학교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영희, 1990, “1894-1904 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 한국사론, Vol.23.
- 서희경, 2006, “대한민국 건국헌법의 역사적 기원 (1898-1919)”,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5.

송병기, 1976, “광무개혁 연구: 그 성격을 중심으로”, 사학지, Vol.10.

신연재, 1991, “동아시아 3국의 사회진화론 수용에 관한 연구:加藤弘之, 梁啓超, 신채호의 사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1994,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사회진화론과 자유주의”, 국제정치논총 제 34집 1호.

\_\_\_\_\_, 1999, “동아시아 3국의 서구문명 수용과 그 사상적 영향: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 9권 2호.

신용하, 1976, “서평 『한국근대농업사연구』”, 한국사연구, Vol.13.

\_\_\_\_\_, 1991, “프랑스 혁명에 비추어 본 1894년 동학농민혁명운동”, 미셸 보벨, 민석홍 외 지음, 1991, 『프랑스혁명과 한국』, 서울: 일월서각.

안외순, 2003, “‘애국계몽운동’과 준 식민지에서의 자유주의: ‘계몽’의 양면성” 한국사상과 문화, Vol.21.

양정현, 2001, “근대 개혁기 역사교육의 전개와 역사교재의 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우남숙, 1999, “한국 근대사에서의 사회진화론 수용 양식: 장지연·박은식·신채호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21권 1호.

\_\_\_\_\_, 2000, “한국 근대 국가론의 이론적 원형에 관한 연구: 블룬츨리와 양계초의 유기체 국가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22, No.1.

\_\_\_\_\_, 2008, “사회진화론과 한국 민족주의”, 동양정치사상사, Vol.7, No.2.

유탁일, 1980, “개화기 교과용 도서 총목록”, 한국학논집, Vol.2.

윤명구, 1973, 「안국선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윤병희, 1994, “제 2차 일본망명시절 박영효의 쿠데타음모사건”, 『이기백선생 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 (하)』, 서울: 일조각.
- \_\_\_\_\_, 1995, “일본망명시절 유길준의 쿠데타음모사건”, 한국근현대사연구, Vol. 3.
- \_\_\_\_\_, 2004, “갑오개혁 이후 박영효의 행적과 활동”, 유병용 외 지음, 『한국의 인물과 사상: 박영효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윤정, 1997, “조선 중종 전반기 정국구도와 정책론”, 역사와 현실, Vol.25.
- 왕현중, 1990. “동학농민전쟁 용어 및 성격 토론: 1894년 농민봉기, 어떻게 부를 것인가”, 역사비평, Vol.12 (8월).
- 왕현중, 2009, “조선 갑오개혁 정권의 대일 전략과 종속의 심화”, 왕현중 외 4인 지음, 『청일전쟁기 한·중·일 삼국의 상호전략』,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이광린, 1981, “구한말 진화론의 수용과 그 영향”, 『한국개화사상연구』, 서울: 일조각.
- \_\_\_\_\_, 1986a, “개화초기 한국인의 일본유학”, 『한국개화사의 제문제』, 서울: 일조각.
- \_\_\_\_\_, 1986b, “황성신문 연구”, 동방학지, Vol.53.
- \_\_\_\_\_, 1999[1969],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 대한 일고찰”, 『한국개화사연구』, 서울: 일조각.
- 이만열, 1996, “개화기 언론과 중국”, 정진석 외 공저, 『한국근대언론의 재조명』, 서울: 민음사.
- 이송희, 1992, “한말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전개”, 부산사학 제 22권 1호.
- 이승렬, 2003, “광무정권의 화폐·금융정책과 대한천일은행의 영업”, 한국사연구, Vol.123.
- 이윤상, 1992, “광무개혁'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와 현실, Vol.8.

- 이현미, 2004, “대한제국의 영웅 개념”, 세계정치, Vol.25, No.2,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 이현중, “대한협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성격”, 조항래, 1992, 『1900년대의 애국계몽운동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 임지연, 1990, “한국서양사학의 근현대의 변혁운동과 90년대 한국서양사학의 반성과 전망: ‘시민계급적 관점’에서 ‘민중적 관점’까지”, 역사비평, Vol.10.
- 전봉덕, 1978, “박영효와 그의 상소 연구서설”, 동양학, Vol.8.
- 전재성, 2010, “동맹의 역사”, 하영선 편, 『21세기 신동맹: 냉전에서 복합으로』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정관, 1982, “구한말 애국계몽단체의 활동과 성격”, 대구사학, Vol.20·21.
- 정광호, 1988, “일제의 종교정책과 식민지불교”, 불교사학회 편, 『근대한국불교사론』, 서울: 민족사.
- 정중환, 1965, “박영효 상소문”, 아세아학보, Vol.1.
- 조재곤, 1990, “한말 근대화과정에서의 보부상의 조직과 활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진오, 1990, “한국 근대 부르조아지의 형성과정과 위로부터의 개혁의 역사적 성격”, 주종환 편, 『한국자본주의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 차경애, 2003, “한국인의 의화단운동 인식 및 이를 통해서 본 세계인식”, 동양사학연구, Vol. 84.
- 천관우, 1954, “갑오경장과 근대화”, 사상계 (12월호).
- 최기영, 1991, “안국선의 생애와 계몽사상(상)”, 한국학보, Vol.17, No.2.
- \_\_\_\_\_, 1992, “헌정연구회에 관한 일고찰”, 조항래 편저, 『1900년대의 애국계몽운동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_\_\_\_\_, 1995, “초기 신문사 연구의 새로운 자료: 「황성신문사규칙」·「황성신문사총회회록」 해제”, 한국근현대사연구, Vol.3.

최덕규, 2008,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와 러시아의 대한정책”, 한국사학보, Vol.30.

최준, 1970, “을미망명자의 나환(拿還)문제: 한일 양국간의 외교분쟁”, 백산학보, Vol.8.

함동주, 2009, “메이지 초기 서양사수용과 프랑스혁명관의 사회문화사”, 동양사학연구, Vol.108.

\_\_\_\_\_, 2010, “일본제국의 성립과 박물관의 출판활동”, 동양사학연구, Vol.113.

## B. 외국문헌

Hatto, Arthur. 1949, “Revolution: An Enquiry Into the Usefulness of an Historical Term”, *Mind*, New Series, Vol.58, No.232.

Bell, Duncan S. A. 2001, “The Cambridge School and world politics: critical theory, history and conceptual change”, [www.theglobalsite.ac.uk](http://www.theglobalsite.ac.uk): first press.

Bowsma, William J. 1981. “Intellectual History in the 1980s: From History of Ideas to History of Meaning”,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12.

Burke, Peter. 1997, “Book Review”, *History of European Ideas*, Vol. 23.

Dunn, John. 1968, “The Identity of the History of Ideas”, *Philosophy*, Vol.43.



- \_\_\_\_\_. 1995, "Revolution" in Ball, Terence eds., *Political Innovation and Conceptual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rmassi, Elbaki. 1976, "Toward a comparative study of revolution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18, No.2.
- Kant, Immanuel. 1970, "What is enlightenment?", in Hans Reiss ed., *Kant's Political Writing*, London: Ward Lock.
- Koselleck, Reinhart. 1992, "Einleitung",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Historisches Lexicon zur politisch-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 Band 1 A-D, Stuttgart: Klett-Cotta.
- \_\_\_\_\_. 2006, "Conceptual history, memory, and identity: an interview with Reinhart Koselleck", *Contributions to the History of Concepts*, No.1, Vol.2.
- Mojares, Resil B. 2009, "Early "Asianism" in the Philippines", *IDEYA: Journal of the Humanities*, Vol.11, No.1.
- Richter, Melvin. 1999, "Begriffsgeschichte Today—An Overview", *Conceptual Change & Contingency, Finnish Yearbook of Political Thought Vol.3*, Jyväskylä: SoPhi.
- \_\_\_\_\_. 2001, "A German Version of the 'linguistic turn': Reinhart Koselleck and the history of political and social concepts(*Begriffsgeschichte*)", Dario Castiglione and Iain Hampsher-Monk eds.,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in National Contex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5, "More than a two-way traffic: analyzing, translating, and comparing political concepts from other cultures", *Contributions*, Vol.1, No.1.

- Palonen, Kari. 1999, "Rhetorical and Temporal Perspectives on Conceptual Change", *Conceptual Change & Contingency, Finnish Yearbook of Political Thought Vol.3*, Jyväskylä: SoPhi.
- Pocock, J.G.A. 1962,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A A Methodological Enquiry", in P. Laslett & W. G. Runciman ed., *Philosophy, Politics and Society*, Oxford: Blackwell.
- Pocock, J.G.A. 1996, "Concepts and Discourses: A Difference in Culture?" in Lehmann. Hartmut, and Richter. Melvin, ed. *The Meaning of Historical Terms and Concepts: New Studies on Begriffsgeschichte*, Washington: German Historical Institute.
- \_\_\_\_\_. 2004, "Quentin Skinner: The History of Politics and the Politics of History", *Common Knowledge*, Vol.10 No.3.
- Skinner, Quentin. 1969, "Meaning and Understanding in the History of Ideas", *History and Theory*, Vol. 8.
- \_\_\_\_\_. 1971, "One Performing and Explaining Linguistic Actions", *The Philosophical Quarterly*, Vol.20.
- \_\_\_\_\_. 1985, "What is Intellectual History?", *History of Ideas*, Vol.35, No.10.
- Skinner, Quentin. 1995, "Language and political change" in *Political Innovation and Conceptual Change* ed. Terence Ball, Cqmbri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kinner, Quentin. 1998, "A Reply to my Critics" in James Tully ed., *Meaning and Context: Quentin Skinner and his Critics*, Oxford: Polity.
- Toews, John E. 1987, "Intellectual History after the Linguistic Turn: The Autonomy of Meaning and the Irreducibility of Experience",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92, No.4.

Snow, Vernon F. 1962, “The Concept of Revolution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The Historical Journal, Vol.5, No.2.

라인하르트 코젤락, 한철 옮김, 1998[1979], “개념사와 사회사”, 『지나간 미래』, 서울: 문학동네.

롤프 라이하르트, 최용찬 옮김, 2009, “역사적 의미론: 어휘통계학과 신문화사 사이”,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서울: 소화.

루치안 휠서, 김성호 옮김, 2009, “개념사의 개념과 「역사적 기본개념」”,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서울: 소화.

Edward W. Wagner, 1980, “정치사적 입장에서 본 이조(李朝) 사화(史禍)의 성격”, 역사학보, Vol. 85.

青木功一, 1969, “朝鮮開化思想と福澤諭吉の著作”, 朝鮮學報, Vol. 52.

\_\_\_\_\_, 1976·1977, “朴泳孝の民本主義・新民論・民族革命論”(1)(2), 朝鮮學報, Vol.80, 82.

리샤오통(李曉東), 2010, “중국 근대지식인에게 있어서의 전통과 혁명”, 정치사상연구, Vol.16, No.1.

리쩌허우, 김형중 옮김, 2005, “계몽과 구망의 이중변주”, 『중국현대사상사론』, 파주: 한길사.

# **Abstract**

## **A Conceptual History of “Revolution” in Korea, 1895–1910**

Hunmi Le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is concerned with the question of when and how the modern concept of revolution was formulated in Korea. It was the Japanese who first adopted the classical Chinese term “革命” to translate “revolu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traditional word “革命” had been used to refer to a violent dynastic shift with the mandate of Heaven. The replacement of the Koryŏ by the Chosŏn Dynasty was the most typical usage of “革命” in Korea. Originally, the concept of “革命” did not problematize the monarchy system itself. However, as the French Revolution was introduced as “革命” in Korea from 1896 on, the old term developed into a newly controversial concept with a clear orientation toward constitutional and democratic forms of government.

**keywords : revolution, conceptual history, Korea 1895–1910,**

**Park Young-hyo, Yu Kil-chun**

***Student Number* : 2004–30900**